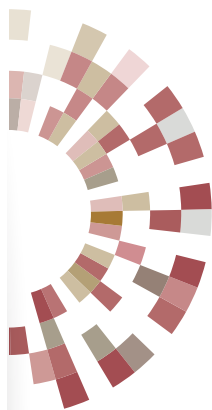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러두기

이 책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용어들을 선정하여 사전(事典) 방식으로 배열하였다. 선정된 용어들을 자모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뜻과 어원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사전이 아니고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기 힘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일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였다. 북한 체제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래 개념어를 이해할 때에는 그 전반적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념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념어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그 개념의 의미를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전 방식의 책 편찬을 시도하게 된 것은 북한 용어들

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인식·사용되기 보다는 막연하게 전달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들의 보도는 북한체제 선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이 북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북한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적 기초 개념에 부딪혀 시간을 허비하는 애로를 덜어주는 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또 하나의 목적이다. 관련 용어들이 사전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 용어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의미 등을 매듭을 이어가듯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북한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용어들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만, 그 용어에서 파생되거나 그 용어와 연관된 다른 용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북한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수록범위와 표제어 선정

-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주요 정책, 주의·주장, 기관(단체), 행사, 사건 등의 용어를 수록하였다.
- 중·고교 교과서, 통일교육 기본교재, 북한 관련 전문서적,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비교적 빈도가 높은 것을 참고하였다.

표제어의 배열

- 사전 형식의 한글 자모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하였다.
- 숫자로 시작되는 표제어의 경우 표기는 숫자를 쓰되 순서는 소리 나는 대로 한글 자모순에 편입하였다.

* 예: 3대혁명소조운동 → 삼대혁명소조운동으로 순서 배열

표제어 설명 기술 방법

- 표제어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많거나 부문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제목(중간제목)을 설정하였다.
- 표제어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그 연원과 배경에 이어 주요 내용과 경과를 설명한 다음 그 의미와 특징을 평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각 표제어별로 연관되는 표제어가 있거나 그 개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제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검색어’를 부기하였다.
- 표제어 및 북한의 원전은 우리말식으로 고쳐서 표기하였다. 다만 인명은 북한식으로 표기하였다.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 중 우리식 표현이 없거나 북한의 고유명사인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북한 표현 그대로 표기하였다.
- 한국을 표기할 경우에는 한국, 남한, 우리 등으로 그 설명방식에 적합한 표기를 혼용하였다.

목 록



ㄱ

감자농사혁명	020
강성대국론	023
개성공업지구	027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031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034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038
고난의 행군	042
고려성군관	044
고리형순환생산체계	046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049
과학기술총연맹	053
광명성	056
교차생산	058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061
국가계획위원회	068
국가과학원	070
국가반항공방어체계	072
국가보위성(구 국가안전보위부)	074
국가우주개발국	077
국무위원회(구 국방위원회)	079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082
국방성(구 인민무력성(부))	085
국정가격/시장가격	087
국정환율/시장환율	090
국제친선전람관	093
국토환경보호사업	095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098
군사칭호	100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군사동원국	103
군자리정신	105
군축 및 평화연구소	107
궤도전차/무궤도전차	109
금강산관광지구	112
금수산태양궁전	116
기간공업(4대 선행 부문)	118
기념일	123
김일성고급당학교	126
김일성광장	129
김일성군사종합대학	131
김일성-김정일주의	134
김일성종합대학	138
김일성화-김정일화	141
김정일애국주의	143
김책공업종합대학	147
김책제철연합기업소	149

ㄴ

나래카드/전성카드	154
남북연석회의	157
남조선 혁명론	159
내각책임제	162
노농적위군(노농적위대)	165
(조선)노동당	167
노동당 군정지도부	171
노동당 규약	173
노동당 규율조사부·법무부	177
노동당 대표자회	180

노동당 대회	184
노동당 비서국(정무국)	189
노동당 정치국	192
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195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198
노동당 중앙위원회	203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6
노동당 책임비서	210
노동당 총비서	212
노동신문	215
농민시장	218

ㄷ

단군릉	224
답사행군	227
당세포, 당세포비서대회	230
당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234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237
대안의 사업체계	240
대외문화연락위원회	243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245
대흥단정신	248
독립채산제	251
돈주	255
돌격대	257
땀기발	263

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68
만경대학명학원	270

만수대의사당	273
만수대창작사	275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277
명절(민속명절, 사회주의명절, 국가명절 등)	279
모자이크 벽화(쪽무이그림)	283
미래상점	285
미사일 개발	287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290
민족대단결 5대 방침	292
민족유산보호법	294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296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299
민주기지론	301
민주조선	303

ㅁ

반동사상문화배격법	308
배급제	310
백두산대학	314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316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318
벼랑 끝 전술	321
보위국(보위사령부)	325
보천보전자악단/은하수관현악단/모란봉전자악단	328
보천보전투	332
부동산사용료	334
북·러조약	336
북·일 수교협상	339
북·중조약	343
북남경제협력법	346

북조선인민위원회	349
북조선인민회의	352
북한 헌법	354
북한 훈장	360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363
분조관리제	372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375
비물질문화유산	378
비사회주의 그루빠	381
비상방역법(코로나 대응 관련)	384



4.25문화회관	390
4대 군사노선	392
4대 전략적 노선	395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397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부))	399
사회의무노동제(금요노동, 생산노동)	403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406
사회주의 강성국가	409
사회주의 경쟁	413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415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418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421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424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429
사회주의 대가정	432
사회주의 문명국(강국), 사회주의 문화	434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437
사회주의 법치국가	440

사회주의 상업	44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12.1 경제관리개선 조치)	447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452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주체사실주의	455
사회주의적 소유	457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460
살림집(하모니카 주택(땅집) 등)	463
살림집이용허가증(주택 입사증)	465
3대 혁명역량 강화	46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472
3대혁명소조운동	476
삼지연관현악단(삼지연극장(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480
상업은행	482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486
생활총화	492
서해갑문	495
선군경제건설 노선	497
선군정치	500
선군혁명문학예술	504
선전선동부	507
소년단	509
소조활동	512
속도전	514
속도창조운동	519
수령론	523
수령형상문학	527
순천린(인)비료공장	530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6.12 북미공동성명)	533

ㅇ

연합기업소	538
열성자 대회	541
영변 5MWe 원자로	544
예산납부금(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547
5대 교양	550
왕재산예술단(왕재산경음악단)	553
우리농 농축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공장	555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558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562
우리민족끼리(인터넷 선전매체)	567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569
우리식 사회주의	574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양덕온천관광지구, 삼지연시꾸리기사업)	578
위성과학자주택지구	582
유일사상체계	584
유일영도체계	588
유훈통치	591
음악정치	594
의사담당구역제	597
인간개조사업(사상개조사업)	600
인민경제계획	604
인민경제대학	609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민위천)	611
인민대학습당	614
인민반	617
인민생활공채	619
임남댐(금강산댐)	622

ㅈ

자강력 제일주의	626
자력갱생(자력부강, 자력번영)	629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632
재자원화	635
전민군사복무제	639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64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646
정찰총국	649
정치범수용소	652
제2경제위원회	656
조국통일 3대 헌장	659
조국통일 5개 방침	663
조국통일 5대 강령	667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7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74
조선그리스도교연맹	676
조선농업근로자동맹	678
조선문학예술총동맹	681
조선불교도연맹	683
조선사회민주당	685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구 조선민주여성동맹)	687
조선선보	690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69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695
조선중앙은행	697
조선직업총동맹	700
조선천도교청우당	702
조선혁명박물관	704

조직지도부	707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709
종자론	713
종파주의	716
종합시장(장마당, 통일거리시장 등)	718
주식	723
주체농법(밀식재배)	726
주체무기/주체철/주체비료/주체비날론	729
주체문예이론	733
주체의 사회역사관	736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738
지방예산제	742
직통생	744
집금소	746
집단주의	749

大

창성연석회의	754
천리마운동	756
침입식 사상사업	760
청년영웅도로	762
청산리정신·방법	764
초급당(위원회), 초급당비서대회	766
총정치국	769
총참모부	772
최고인민회의	77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78

三

타도제국주의동맹(ㄷ·ㄷ 동맹)	786
탄소하나 화학공업	789

태양절	792
토지정리사업	794
통일전선부	796
통일전선전술	798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801

표

8.3 근로자	810
8.3 인민소비품	813
8월 종파사건	816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820
평양 표준시(時)	823
평양국제상품전람회	825
평양종합병원	828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830
프롤레타리아 독재	835

ㅎ

항일 빨찌산 정신	840
핵개발(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법령)), 핵실험	842
혁명가극	849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852
현지지도	855
협동농장	858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861
후위사령부	864
화폐개혁	866
황색바람	870
후방(공급)사업	872
회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874



감자농사혁명	국정환율/시장환율
강성대국론	국제친선전람관
개성공업지구	국도환경보호사업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군사칭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
고난의 행군	군사동원국
고려성군관	군자리정신
고리형순환생산체계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궤도전자/무궤도전자
과학기술총연맹	금강산관광지구
광명성	금수산태양궁전
교차생산	기간공업(4대 선행 부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기념일
국가계획위원회	김일성고급당학교
국가과학원	김일성광장
국가반항공방어체계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국가보위성(구 국가안전보위부)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우주개발국	김일성종합대학
국무위원회(구 국방위원회)	김일성화-김정일화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김정일애국주의
국방성(구 인민무력성(부))	김책공업종합대학
국정가격/시장가격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감자농사혁명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감자의 주식화'를 목표로 감자농사 확충과 생산량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 양강도 대흥단군을 중심으로 감자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북한은 감자농사에서 종자혁명을 일으켜 대대적인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려 한다.

배경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자 북한은 식량난 해결 차원에서 농업생산 증대가 절실했다. 이에 1998년 10월 김정일이 대흥단군 현지 지도에서 그동안 '밭곡식의 왕'이었던 옥수수를 감자로 대체하고 '감자농사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지시하면서 '감자농사혁명'이 강조되어 왔다.

1999년 1월에는 양강도를 '감자도'로 지정하였고 2000년 7월에는 농업성에 '감자생산국'을 신설했다. 이후 수천 명의 제대 군인들을 양강도 삼지연군과 대흥단군에 강제 집단 배치하는 등 감자 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결 차원에서 감자의 주식화를 목표로 감자농사 확충과 생산량 증가를 정책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농업생산을 늘리는 데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방법과 재배면적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자농사혁명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감자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적정지역에 감자를 심어 기본적으로 정보당 60~70톤씩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자는 서늘한 조건에서 잘 자라므로 북한의 평균기온과 지대를 고려할 때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다. 벼와 옥수수가 잘 자라지 않는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늘리면 감자의 생산량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감자농사 확대의 정당성을 돼지 사육과도 연관 짓는다. 감자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돼지 먹이로 이용하고, 돼지를 기를 때 나오는 거름을 다시 감자농사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감자와 돼지 생산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이는 또한 인민들에게 육류 섭취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식량문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감자농사와 돼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양강도 대흥단군은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 감자산지이다. 대흥단군에서의 농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가리켜 '대흥단식과 학농법'이라고도 한다. 그 특징으로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제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한다.

평가 2020년 10월 현재 주요 감자생산지인 양강도에서 감자수확이 끝났고, 특히 대규모 생산지인 삼지연시에서 “18개의 다수확작업반, 수백명의 다수확자들이 배출된 속에

강성대국론



강성대국(強盛大國)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1998년 2월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강성대국론은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에 즈음하여 제시된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비전과 국가목표였다.

배경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지 않은 채 김일성의 권위에 의존하는 '유훈통치'를 실시했다. 이 기간은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로 인정한 '고난의 행군' 시기로, 김정일은 새로운 지도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등식 하에 '김일성식대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해 나감에 따라 체제 정비와 함께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백두산 1호)하면서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함께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강성대국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정권의 건재를 과시

올해 감자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감자는 식용을 제외하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과 대흥단군감자가공공장에서 2차 가공을 통해 저장성을 높인다. 감자농사는 북한 농업정책의 '주타격전방', 즉 쌀, 옥수수농사와 함께 주요한 분야로 생산계획의 무조건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료, 에너지, 비닐, 농기계 등 생산요소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검색어 ▼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대흥단정신

해야 할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에 경제위기가 겹쳤던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민심 수습을 위한 분위기 쇄신과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한다. 사상강국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사상의 위력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는 나라,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시대발전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은 “영도자의 주위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튼튼한 정치적 역량에 의거하여 철저한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군사강국은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도 일격에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경제강국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들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다.

북한이 밝힌 강성대국 건설론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건설, 둘째로 수령중심의 강성대국 건설, 셋째로 선군정치,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기존의 주체노선을 유지·고수하는 것으로 선(先)사상·군사 건설, 후(後)경제건설 방식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상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혁명의 기둥으로서 군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통해 정치·사상강국을 실현하였고 강대한 군사력을 통해 군사강국을 실현했으므로 경제강국 실현만 남았다고 선전하면서, 2012년을 강성대국 실현 목표 연도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1년에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를 ‘강성국가’로 수정하였다.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용어로의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강성대국론은 김정일 정권 시기 북한 체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통치이데올로기적 기능과 국가전략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통치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강성대국론은 주민동원을 위한 정당화의 기능, 비전과 희망 제시를 통한 일체화의 기능,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결속화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성대국이 추구하는 이상과 북한이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강성대국론이 갖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점차 잠식하였다.

강성대국론은 21세기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으로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완수되었으므로 경제강국만 실현되면 강성대국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경제 회생에 필요한 내부자원과 재원이 부족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는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 시장경제 실험의 장,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 제시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하여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황이다.

배경 개성공업지구 사업(이하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0년 8월 22일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의 성과를 토대로 외화벌이와 남한의 자본·기술 도입 등의 목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개성공단 사업을 3대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 추진을 위해 2002년 1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발표하였으며, 이후 하위규정과 사업 준칙 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며… 하부구조 건설 부문과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주요 내용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식 이후 2004년 6월에 시범단지 9만 3천㎡(28,000평)에 15개의 시범업체가 선정·입주하면서 가동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첫 시제품으로 ‘개성냄비’가 출시되었다. 이후 2005년 10월 28일 남북한은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설치하면서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남북한은 당초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6km²(총 2,000만 평, 공단 600~800만 평)을 개발하여 입주기업 2,000개, 북한 고용인력 35만 명, 연간 생산액 160~2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첨단공업지구는 물론, 금융·상업·관광·물류 지구 등이 추가된 ‘종합형 경제특구’와 ‘복합자유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후 10여 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가동 중단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총 124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였으며 생산액도 2013년의 잠정중단 시기를 제외하면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5년 1,490만 달러를 생산한 이후, 2012년 4.7억 달러, 2015년에는 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개성공단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1억 7,700만 달러로 16.7%에 불과했으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2015년에는 99.6%를 차지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win-win)의 경협 사업으로 북측 근로자 5만 4,800여 명과 남측 관리자 800여 명이 함께 일하는 경제공동체와 생활공동체로 발전하였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

은 매년 5% 임금 인상 원칙하에, 2015년 말 기준 기본급(최저임금) 월 73.87달러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월 180~190달러를 받았다.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에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해외공단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제공하였고, 북한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북핵 문제 등으로 수차례의 부침을 보여 왔다. 개성공단은 2013년 3월 말에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잠정 가동 중단된 후, 160여 일 만인 동년 9월 16일에 재가동되기도 하였다. 2016년 2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우리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평가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개성공단은 북한경제 및 주민 생활 향상, 시장경제 학습의 실험장 역할, 교육훈련 등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과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큰 보탬이 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군사·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중단 시에도 경제교류협력을 유지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완충 및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기도 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공단의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

과 상호 이해 증진,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시험장 운영으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먼저 개성공단 사업은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원산지 규정과 전략물자 통제 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공단 운영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3통(통행·통관·통신)문제, 4대 경협합의서 등의 제도적 이행 부족, 북한 근로자 고용 안정성 문제와 인사 배치·해고 등에 대한 남한 기업 노무관리의 자율성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 사업 재개 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을 통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 그리고 상기 제약 요인의 해결이 필요하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건설과 국방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 부문보다 군사 부문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 노선의 채택 이후 군수공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에 따라 차츰 민생경제는 만성적인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배경 북한이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회주의 진영 내 이념분쟁 및 중소분쟁이었다. 특히,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북한은 크게 실망하였다. 당시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은 미국과 타협하여 사회주의 약소국 쿠바의 안보 문제를 도외시켰을 뿐 아니라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 북한의 군사적 지원 요청도 거절하였다.

또한 쿠바 사태 해결 이후에도 1965년 남한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매듭지음으로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갖추고, 베트남전쟁 발발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력증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1960년대 중소분쟁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고조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하나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망치를 들고 조국을 보위하며 동시에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196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2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66년 10월 열린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시기에 국방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많은 물질적·인적 자원을 국방으로 투입하게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군사비는 1960년 내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1960년 북한 전체 예산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공표했던 군사비는 1967년부터 30% 내외의 비율로 상승하게 된다.

년도	1960	1963	1966	1967	1968	1969	1970
국방비 (%)	3.1	2.1	11.8 (추정)	30.4	32.4	31.0	29.2 (추정)

출처: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p. 212.

평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 추진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이다. 즉,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군수산업은 별도로 구성된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됨으로써 북한 경제구조는 민간경제와 군수경제로 이원화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군수산업으로 투자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이다. 이 노선이 채택된 이후 북한 총예산에서 군사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관련검색어 ▼

4대 군사노선, 제2경제위원회,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김정은 정권이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가전략으로 추진한 노선이다. 명칭처럼 경제건설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핵무력 건설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경제건설 부문에서는 제대로 된 가시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경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차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상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김정은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등의 대외적 여건 하에서 1960년대 제시된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

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했다.

경제건설과 관련한 과제는 △인민경제 선행 부문 및 기초공업 부문 생산력 향상 △농업 및 경공업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생활을 최단기간에 안정·향상 △독자적 원자력 산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력 문제 해결 △우주 과학기술 발전 추진 및 통신위성 등 개발·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 및 대외무역 다각화·다양화, 투자유치 촉진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완성 등이다.

핵무력 건설과 관련한 과제는 △핵보유의 법적 고착 및 세계 비핵화 실현 전까지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강화 추진 △군의 전쟁억제력 및 전쟁수행전략에서 핵무력의 역할 향상 및 전법·작전 완성, 핵무력의 정상적 전투준비태세 완비 △수평적 핵확산 방지 및 세계 비핵화 실현 기여 등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안전보위, 사법검찰, 인민보안 기관과 당시의 인민내무군에게 병진노선을 ‘총대’와 ‘법’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노동당 및 근로단체, 정권 기관 역시 병진노선 관철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다음날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 신

설 및 우주개발법 채택을 결정했으며, 다음날에는 원자력중국 대변인이 5MWe 흑연감속로 재가동 등 현존 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동년 4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공업성’ 신설을 결정했다.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한 뒤 북한은 3차례(2016.1.6(4차), 2016.9.9(5차), 2017.9.3(6차))에 걸쳐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사거리 연장을 추진해나갔다. 특히,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일단의 성과를 거둔 뒤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천명한 지 5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전환된 것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제 핵무기 불사용 및 핵무기·핵기술 이전 불가 △경제발전 추진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적극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당중앙위 제7

기 제3차 전원회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는 등 국가전략노선을 새롭게 전환했다.

평가 김정은이 2018년 4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2013년부터 5년여에 걸쳐 추진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가시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사실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핵개발, 미사일 개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방침이며, 북한은 1964년에 계획의 일원화를, 1965년에 계획의 세부화를 도입했다.

배경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칙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화 체계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부 경제단위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의 일원화는 단일한 수직적 계획사업체계를 통해 인민경제계획을 국가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실행하고자 한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단위에서 노동력, 설비, 자재의 낭비와 사장을 없애고 계획수행에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내용 계획의 일원화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이는 모든 부문과 단위의 계획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국가가 모든 부분의 경제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국가적 범위에서 생산의 물질·인적 조건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 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뜻한다.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계획지표들의 수행에 법적 의무성을 부여한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를 위해 1964년 전국적인 계획기구를 개편하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지구계획위원회를 각 도에 신설해 계획사업을 관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구역)·군 계획과, 공장·기업소 계획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들 기관들이 각각 자신의 해당 상급기관과 국가계획위원회에 이 중으로 종속되도록 체계를 확립했다.

이때 최상위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의 계획체계 중심으로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계획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통제한다. 그리고 각 도·시(군)·기업소의 계획부서는 국가계획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계획업무를 수행한다.

계획지표는 작성단위별로 국가계획위원회 지표, 성 지표, 연합기업소 지표, 지방 지표 등으로 나뉘고, 측정방법에 따라 현물지표(생산량 목표)와 금액지표(생산총액)로 구분되며, 포괄범위나 중요성에 따라 종합지표와 세부지표, 기본지표와 부

속지표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단위별 계획지표가 수립되고, 각 생산단위에 하달된 생산량 목표는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된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수립되는 생산부문별 계획은 매우 엄격하고 경직적이어서 조정의 여지가 없다.

평가 계획에 의한 생산목표 달성에서 국가의 경제명령은 종종 기업 간 내부교섭, 형식적 장부기입 등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발생시킨다. 또한 생산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개별경제 단위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축적하고자 하기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는 항상 공급을 초과하여 만성적인 부족 상태가 초래된다. 월말이나 분기 말, 연말과 같이 계획지표 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생산을 비정상적으로 집중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과 의미는 상실된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권적 계획화가 실효성을 잃게 되고 계획경제 시스템의 양대 축인 자재공급체계와 배급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중요 전략산업(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부문 등)의 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그 외는 해당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북한 경제는 제도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제도와 현실경제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최근 북한 계획경제 하에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검색어 ▼

국가계획위원회, 대안의 사업체계,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북한이 체제 위기 상황을 1938년 겨울 항일유격대의 행군에 비유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원래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흑산과 굽주림 속에서 중국 몽강현 남파자로부터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로 100여 일간 강행군을 했던 것을 일컫는다. 이후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시기를 의미할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세 번 있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의 행군이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한 시기부터 천리마운동을 전개한 시기이다.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이다.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96년 신년사를 통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1990년대 계속된 경제난과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주민들의 희생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세 번째를 의미한다.

북한은 1996년 공동사설 발표 이후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하면서 군인건설자들을 경제건설 전면에 내세웠다. 이 시기 청년들이 안변청년발전소와 원산-금강산 철도 등을 건설하여 국가에 헌납하였다. 이 외에도 체육, 과학, 문예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며 사회적 동원에 참여하였다.

이후 고난의 행군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전후하여 북한 사회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전반적 경제 위기로 배급이 중단되다시피 하였으며,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오면서 장마당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경제 위기는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등장을 촉진하였다.

평가 고난의 행군이 어려운 시기를 사상과 의지로 돌파하자며 내세운 구호였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국가의 배급중단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 이후로 ‘고난의 행군’은 절박한 위기를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어가 되었다.

관련검색어 ▼

배급제, 농민시장, 종합시장, 선군정치

고려성균관



고려성균관은 황해북도 개성시 방직동에 있는 대학으로 개성경공업종합대학으로 시작하였다. 개성의 고려인삼과 관련한 의약, 식품 분야 등 경공업 분야로 특화된 계열 종합대학이다.

김일성은 1992년 5월 5일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 국학(國學)기관인 성균관을 방문하였다. 당시 성균관 건물은 고려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에 김일성은 고려박물관은 다른 곳에 짓고 고려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하여, 개성경공업대학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그 명칭을 고려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고려성균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고려성균관의 창립연도를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이 설립된 992년 9월 1일로 지정했다. 대학에는 김일성이 친필로 새긴 대학명판비가 있다.

대학 산하에는 고려인삼학부, 고려도자기학부, 고려방직학부, 고려수예학부 등 7개 학부와 19개 전공학과가 있고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고려박물관 옆에 교사와 체육관, 도서관, 실습공장, 기숙사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9월 19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2012년 9월 1일에는 고려성균관 창립 1020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리형순환생산체계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남한에서는 보통 '자원순환형농업(Resource Cyclical Agriculture)'이라고 하는데, 고리형순환체계는 Cyclical System의 북한식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가축의 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여기서 나오는 발효액과 찌꺼기로 채소 재배, 양어, 버섯, 먹이풀 기르기, 축산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경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 농업, 축산업 등에 투입되는 요소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생산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2012년 신년사와 1월 22일 노동신문에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순환고리들을 합리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축산-농산의 두 고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축산-축산-농산 세 고리를 연결할 수도 있으며 공생고리결합방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정당성을 내세웠다.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면서 농업 부문에서의 ‘유기농 장려와 고리형순환생산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농업과 축산업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방식

으로, 최근에는 양어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가축의 배설물을 논밭에서 이용해 농산물 생산을 늘리고 이렇게 얻어진 농부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업과 축산업에 순환을 가져와 생산을 함께 증대하는 체계이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기질 비료의 생산과 이용이다. 유기질 비료는 농부산물과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과 같은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비료로, 농작물의 영양분이 될 뿐 아니라 지력을 높여 식량 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알곡과 채소, 고기, 알, 축산물, 버섯, 생선 등의 부업 생산물이 생기고 가축 배설물, 지렁이, 메탄가스 발효찌꺼기 등이 토양에 반입되는데, 이는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메탄가스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메탄가스 생산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유기질 비료생산과 전력 생산, 농촌 땀감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기계화·전력 생산에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메탄가스는 살림집의 전기 생산과 연료로도 이용되며, 발효액에 의한 수경재배를 진행해 물 윗면에서는 채소 생산, 아래에서는 양어를 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고리들을 합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축산-농산 두 고리의 연결이다. 이것은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의 배설물을 논밭에서 이용하고 농부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는 순환체계이다. 다음으로 축산-축산-농산의 세 고리 연결이다. 가령 닭 배설물을 미생물 처리하여 돼지먹이로 이용하고 두엄은 논밭에 이용하며, 가금털로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를 만들어 종자 처리와 잎덧 비료주기에 이용하고 생산된 농산물 또는 부산물을 닭과 돼지의 먹이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생고리결합방식이 있는데, 북한은 논에 오리를 놓아기르는 것을 예로 들면서 병해충 구제효과가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평가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다소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과 축산업 등의 생산성 향상과 증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집단영농과 집단축산, 그리고 투입 자원 부족과 영농 현대화 미흡 등으로 획기적 생산 증가를 가져오지 못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검색어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감자농사혁명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북한은 김정일이 1997년 9월 총비서로 추대된 이후 '과학중시사상'을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면서, 1998년 3월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5년씩 네 번(1998~2002년/2003~2007년/2008~2012년/2013~2017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일반산업 부문의 실용적 기술발전보다는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 부문의 발전에 더 큰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배경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3차 7개년 경제발전 계획시기(1987~1993년)에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7~1991.6),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7~1994.6)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북한의 정책 시도는 1990년대 심각한 경제위기로 그 성과가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단기간 내 과학기술발전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인재 양성과 첨단과학 부문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먼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전망목표를 설정하고, 그 계획실행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과학기술만이 경제의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수립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중심 내용은 첨단과학기술의 수준 확보이다. 이에 기초과학을 포함한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전 시기 과학기술발전 계획이 전자, 기계, 생물, 화학공업 등 주요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이전 시기와 달리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1차 과학기술발전 계획기간(1998~2002) 동안인 1999년 3월 북한은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8년 만에 개최하고,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했다. 제1차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식량 등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면서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북한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결산하고,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제2차 계획(2003~2007)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우선 힘을 기울이며 기계, 금속, 열기술 공학을 발전시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식량문제, 전력문제 등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4차 5개년 계획(2013~2017)은 김정은 시대에 수립되어 추진되면서 식량 문제 및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식경제를 위한 첨단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1차 (1998~2002)	2차 (2003~2007)	3차 (2008~2012)	4차 (2013~2017)
인민경제	에너지 문제 해결 (6개 부문)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8개 중요 부문 53개 대상)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에너지문제 해결 (전력생산, 전기절약)
기술재건	기간산업 정상화 (5개 부문)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공업 주체화, 현대화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건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인민생활 개선 (6개 부문)	인민생활 향상 (7개 부문)	인민생활 향상 (7개 부문)	식량문제 해결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먹는 문제 해결 (농업, 축산, 과수, 수산)
기초, 첨단기술 (5개 부문)		첨단과학기술 (5개 부문 37개 대상)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플라즈마)	첨단기술 비중 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기초과학 (4개 부문)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출처: 이춘근·김종선,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9쪽.

과학기술총연맹



과학기술총연맹은 우리의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준하는 조직으로,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총망라된 사회단체이다. 이는 산하 부문별 협회와 연계하여 기술혁신현상 모집, 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배경 과학기술총연맹은 인민경제 부문별 협회들과 과학기술 부문별 학회들의 연합조직으로서 광범위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들을 망라한 사회단체이다. 1946년 4월 14일 과학발전과 기술혁명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공업기술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이후 1951년 10월 ‘조선공업기술연맹’으로 개칭되고, 1986년 1월 ‘조선과학기술총연맹’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주요 내용 김일성은 광복 직후인 1946년 4월 14일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한 ‘공업기술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업기술협회는 1946년 11월 산하에 인민경제 부문별 협회를 갖게 되면서 ‘북조선공업기술연맹’으로 발전했고, 1951년 10월 ‘조선공업기술연맹’으로 개칭됐다. 김정일은 1986년 1월 24일 조선공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년 1월 발사된 ‘광명성-4호’ 인공위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규모의 과학자·기술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행사를 통해 첨단기술 도입과정에서 외부사조의 영향을 받게 될 과학기술자들의 이완된 규율을 바로잡고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현장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국방공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김정일 시대를 관통했던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선군시대의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가 담겨있는 것이다.

관련검색어 ▼

과학기술총연맹, 국가과학원

업기술총연맹을 공업뿐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자연과학 부문의 협회와 학회들 그리고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고급기능공들을 망라하는 ‘조선과학기술총연맹’으로 발전시켰다.

북한은 과학기술총연맹이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회원들을 무장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협회와 학회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며 회원들의 과학기술적 식견과 자질,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교양 사업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과학기술총연맹은 과학기술토론회, 과학기술발표회, 과학기술축전, 기술혁신전시회 등 과학기술 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강연, 해설담화를 비롯한 과학기술 지식 보급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나라 과학기술단체들 및 국제기술기구들과의 대표단 교류, 국제과학기술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과학자 개인들의 초청강의를 알선하고, 과학기술 도서 및 자료 교환 등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총연맹에는 조선기계공업협회, 조선전력공업협회, 조선전자자동화협회를 비롯한 협회들과 조선기계학회, 조선물리학회를 비롯한 10여개의 학회들이 속해 있다.

평가

북한은 과학기술총연맹이 각종 과학기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진작·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과학기

술자들을 지도·통제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총연맹을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총연맹은 노동당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과학기술자들에게 지도·전달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관련검색어 ▼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국가과학원

광명성



광명성이란 북한에서 김정일을 부르는 별칭이며 백두광명성이라고도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태양'으로,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칭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배경 북한에서 광명성이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2년이다. 당시 김일성은 김정일의 50세 생일(2.16)을 축하하며 <광명성찬가>를 썼는데, <광명성찬가>에서 김정일의 출생에 대해 '광명성탄'이라고 적고 있다. 1992년 발행된 <조선어대사전>에는 광명성에 대하여 “① 환하게 빛나는 별 ② 항일혁명투쟁시기 환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이르는 말. 최근에는 '백두광명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고 표기하고 있다. 그 이전에 출판된 <조선어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주요 내용 북한은 김정일이 1942년 2월 백두산 밑영의 귀틀집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 시 '백두광명'이 떠올랐다고 선전한다. 김정일이 백두의 혈통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광명성이라는 용어는 1989년 12월 노동신문에 등장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백두산 일대에 김일성을 잇는 김정일의

탄생에 대한 '구호나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백두산에 김일성 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 “삼천리강산에 밝은 빛을 비추이는 백두광명성 만세” 등의 구호 역시 김일성의 백두혈통을 김정일이 잇는다고 강조·선전하며 김정일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듬해인 1990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7년 7월 8일 북한의 주요 5개 기관인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현 내각)의 공동결정서 공표를 통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채택하고 출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사후인 2012년 1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의 출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평가 김정일의 '광명성' 별칭은 김일성의 '태양' 별칭에 조응하는 것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를 통해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광명성이라는 명칭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이 쏘아올린 로켓과 인공위성에 광명성 이름을 붙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광명성무역총회사', '광명성경제연합회' 등이 있다.

관련검색어 ▼

태양절, 백두혈통, 김정일애국주의

교차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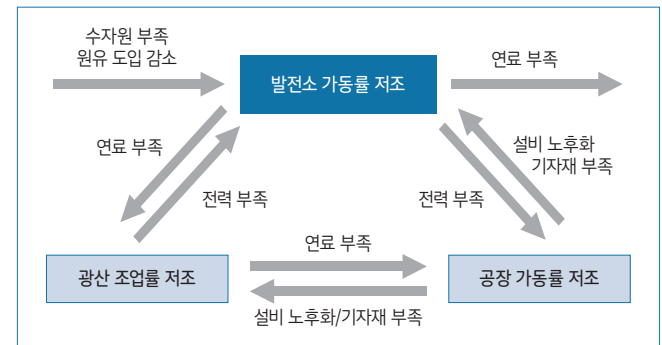
교차생산은 전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각 공장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 받아 교대로 가동하는 형태로, 부족한 전력량으로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 전력 수요자들의 전력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전력 생산과 공급 및 소비를 교대함으로써 제한된 전력량으로 각 공장에서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경 2005년 11월 26일 북한은 ‘전기석탄공업 부문 일꾼대회’를 개최하여 교차생산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이 대회에서 △발전소와 탄광시설 현대화 △새로운 생산능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기·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전력공업 부문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풍력·태양력·지열을 이용한 동력자원을 적극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송변전 부문에서는 전력계통 현대화, 전력손실을 줄이는 기술적 대책 강구, 교차생산 등으로 전력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은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전력 증산을 촉구하며 부족한 전력 생산량으로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생산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 전력난은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북한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이다. 전력난이 해결되어야만 공장과 광

산 등이 정상 가동되어 제품을 생산·수출함으로써 산업설비와 식량, 연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 활동에 재투자하여 발전소와 공장을 정상 운영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 북한도 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전력을 ‘산업의 쌀’이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거의 매년 신년사에서 석탄, 금속, 철도·운수와 함께 북한경제의 4대 선행 부문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전력 문제 해결을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도 전력 문제 해결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전력난의 악순환 고리



북한은 부족한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부터 각 공장마다 교차생산 시간표를 짜서 실행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교차생산은 전력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마련한 전력 생산능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개별 설비와 직장, 기업소 등 수요자들의 소비를 조정하고 전력 부하가 골고루 퍼지게 해 전력 소비와 공급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평가 교차생산은 부족한 발전량으로 부문별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잉여 전력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을 이용하는 임시방편적 방안으로,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전력난 원인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에너지 정책과 이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신규 투자 부진, 연료 부족 등에 기인한다. 발전설비의 약 70%가 70년대 중후반에 건설되었으며,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의 발전설비(1,700만 kW) 및 발전량(1,000억 kWh)이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기본 수요량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 822만 kW와 239억 kWh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난 역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자 및 기술 도입, 설비 현대화,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해법이다.

관련검색어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기간공업(4대 선행 부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2016년 5월 6일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은 이른바 '경제강국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에 해당하며, 향후 5년간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배경 북한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향후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하는 등 당대회를 통해 국가의 굵직한 경제계획을 제시해 왔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개년 전략의 큰 방향으로

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 전략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부문별 과제는 △전력 부문 △운수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대외경제관계로 나뉘볼 수 있다. 특히 전력은 4대 선행 부문의 하나로 특별히 강조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선보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합영·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진기술을 수용해야 하며,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내각 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박봉주 총리의 상무위원 선임과 신설된 정무국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총 9명)에 경제관료 4명이나 포진해있었던 것은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구체적인 거시경제 및 부문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 부문 및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하면서 개발에 대한 독려와 원칙적인 방

향 제시 등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당대회 이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6. 29)에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청사진 제시 없이 당대회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번 5개년 전략은 그동안 당대회를 통해 발표된 경제계획들과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획’이란 용어대신에 ‘전략’이란 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이는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개혁 의지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향후에도 경제·핵 병진노선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결국 인민경제의 주체화, 국산화, 자강력 제일주의 등 자립경제 노선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원 중심의 경제발전과 노력 동원의 속도전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표출한 것이다.

북한의 역대 중장기 경제계획 실시 기간 및 목표

기간	계획명	목표			발표행사
		국민 소득	공업 생산	곡물(조곡) 생산	
1954~1956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	1.75배	2.6배	'49년 대비 1.19배	당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 (1953. 8)
1957~1961 (1960)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주1)	1.5배	2.6배	376만 톤	3차 당대회 (1956. 4)
1961~1967 (1970)	인민경제발전 제1차 7개년 계획(주2)	2.7배	3.2배	600~700 만 톤	4차 당대회 (1961. 9)

기간	계획명	목표			발표행사
		국민 소득	공업 생산	곡물(조곡) 생산	
1971~1976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1.8배	2.2배	700~750만 톤	5차 당대회 (1970. 11)
1978~1984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계획(주2)	1.9배	2.2배	1,000만 톤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 (1977. 12)
1980~1990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 목표	전력, 석탄, 철강, 곡물 등 10대 생산목표 제시			6차 당대회 (1980. 10)
1987~1993	제3차 7개년 인민경제 발전계획	1.7배	1.9배	1,500만 톤	최고인민회의 8기 2차 회의 (1987. 4)
2011~2020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전력, 철도, 도로 건설, 지역 개발, 농업, 석탄 등 주요 사업 투자 목표 제시			내각결정 (2011. 1)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보다는 큰 방향과 역점 과제 제시			7차 당대회 (2016)
2021~2025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보다는 큰 방향과 역점 과제 제시			8차 당대회 (2021)

자료: 김석진,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제13차 KINU 통일포럼, 2016. 5. 16), pp. 66~67;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11), pp. 354~355.

※ 주1: 제1차 5개년 계획은 당초에는 1961년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1960년으로 앞당겨 완료하고 1961년부터 새롭게 7개년 계획을 실시함.

주2: 제1차 7개년 계획은 당초 1967년까지였으나 1970년까지 3년 연장 실시되었고, 제2차 7개년 계획은 조정기(1985~86)를 거침.

제8차 당대회에 발표된 '새로운 5개년 계획'과 평가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는 수사를 통해 제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하였음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핵실험 및 미사일 고도

화로 인한 제재 장기화, 장마철 수해 피해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및 다수의 이재민 발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감소 등 이른바 '경제의 삼중고'는 북한 경제가 성장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러한 객관 요인(환경의 제약)에서 실패의 요인을 찾는 것과 함께 주관 요인, 즉, 당 사업 내부의 결함이 계획 달성 실패의 주 원인임을 함께 강조했다(이미 북한은 2020년 11월 개최한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들의 당 사업에서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였으며, 경제정책집행 단위(내각)의 강화를 위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당 조직 사상사업의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새롭게 발표된 북한의 국가계획은 당적 규율 수립 및 하부 단위 통제 강화 조치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발전 전략의 수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 선군혁명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국가발전전략노선은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국방 과학 분야에 자원 우선 배분을 이끌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력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광업과 금속공업, 철도, 기계,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대외무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의 수행은 ① 핵무기의 고도화 ② 순천리비료공장 및 삼지연지구 등 주요 대상건설 결속 ③ 농업 부문 알곡 생산량 증가 등의 일부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대외로부터 자원과 기술의 확보가 차단되고, 인민생활 향상에 즉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원료의 자

립화, 국산화를 추진할 전력, 화학공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결과와 함께 계획의 미달로 이어졌다.

따라서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금속-화학공업 중심의 국가 자원 우선투자를 통한 농업과 경공업의 우선 성장 기조로 전략이 현실화, 세부화되었다. 김정은은 지난 경제발전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자립적 경제의 토대를 다지는데 성과가 있었으며, 새로운 계획은 이를 완비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종자(핵심)로 하는 현실적 정책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① 금속 부문의 주체철생산체계 완성 및 철강재 증산 ② 화학공업 자체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화학제품 증산 ③ 조수력 발전소 건설 및 핵동력공업창설(원자력발전) 준비를 통한 전력 생산 강화 ④ 검덕지구 2만 5,000여 세대 살림집 건설을 포함한 지방, 농촌 단위 경제 생활 향상 정책 추구 등이 발표되었다.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에서는 당-국가의 통일적 지도 실현을 위한 기강 확립, 국가 일원화통계체계 강화, 하부 단위 경영활동조건 개선 및 계획의 개선, 금융, 가격 등 경제적 공간의 활용 등이 발표되며 시장과 통제가 공존하는 형태로 북한 체제가 변화할 것임을 발표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기존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5개년 전략과 비교해 볼 때, 자립적 경제 건설 지속을 위한 금속, 화학공업 중심의 자원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 발전, 그리고 지

역경제 활성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과거의 전략이 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 자강력제일주의, 선군혁명노선으로 구체화되었다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부각된 키워드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이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의 빠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 당국이 경제 문제를 장기 전략의 기조 하에 시스템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기간공업(4대 선행 부문), 자강력 제일주의, 자력갱생, 특수경제지대, 인민경제계획,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 경제정책의 기획, 수립, 지도, 감독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46년에 발족된 북조선임시위원회의 계획부서에서 출발하여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시 공식 출범한 행정기관이다. 북한의 행정기관 중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정권 수립 시부터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65년 9월 23일 발표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에 따라 각급 단위의 계획부서들은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되어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처들에도 계획부서가 있지만 여기서 작성한 모든 계획들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국가계획위원회, 지구계획위원회, 내각의 성·위원회 계획부서, 도(시) 계획부서, 군(구역) 계획부서,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수직적인 체계로 되어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또한 ‘계획의 세부화’ 원칙에 따라 북한 경제에 있어서 산업 부문 간, 공장·기업소 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북한의 계획 경제 운영에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체계에 따라 북한 경제의 공식 부문을 운영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는 건설·경공업·과학교육·광업·금속공업·기계공업·노동·농업·도시경영·발전·운수·연유 등 부문별 계획 담당부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경제조사·기준제정·재정원가 등의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검색어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인민경제계획, 독립채산제, 배급제

국가과학원



국가과학원은 북한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정책 집행과 연구 등을 총괄하는 내각 산하의 최상위 기관으로, 1952년 12월 1일 창립됐다.

북한은 국가과학원의 기본사명이 '나라의 모든 과학연구 기관들과 과학연구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며 나라의 과학발전과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가과학원 창립 당시에는 사회과학부문위원회, 자연기술과학부문위원회, 농학의학부문위원회 등 3개의 부문위원회와 물리수학연구소, 화학연구소, 농학연구소, 의학연구소, 경제법학연구소,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물질문화사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8개 연구소로 구성되었다. 이후 과학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1956년 농학연구소와 의학연구소가 과학원에서 분리돼 농학과학원과 의학과학원으로 발족됐다.

김일성은 1962년 11월 각 부와 위원회(당시의 성)에 소속된 연구기관들을 과학원에 2중 종속시키고 과학연구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과학원 내에 이과대학을 설립

하라고 지시했다. 1964년에는 사회과학 부문 연구소들이 분리돼 사회과학원으로 독립했으며, 1994년 과학원은 '국가과학원'으로 개칭하고 자연과학 부문의 과학연구기관들이 모두 과학원에 소속되거나 2중 소속되게 됐다.

국가과학원에는 자연기술과학 부문의 2개 연구원(농업과학연구원, 의학과학연구원)과 함흥분원, 전자자동화과학분원, 생물분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건설건설분원을 비롯한 10개의 분원, 그리고 물리학연구소, 수학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열공학연구소, 공업미생물학연구소를 비롯해 채취, 금속, 화학, 경공업, 철도운수, 수산, 산림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200여 개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원은 하달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구목표 등을 수립해 산하 연구소에 하달하고, 다른 기관에서 제기한 중요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도 수행한다.

관련검색어 ▼

과학기술총연맹,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국가반항공방어체계



북한은 '적 항공기의 침습을 물리치며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을 반(反)항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에서 '적이 공중습격과 공중정찰을 못하게 하며 적의 공중습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방어대책'을 통틀어 '반항공방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의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2년 5월 기존 공군사령부의 명칭을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변경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인 '반항공', 즉 방공 수단으로 고사포 및 고사총 등을 전역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공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대공 미사일 능력 강화, 포병부대 강화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저·중·고고도 등 방공망을 다층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은 1950-60년대 개발돼 실전배치된 것으로, 항공기 요격용으로 남한이 보유한 호크(Hawk) 및 나이키-허큘리스(Nike-Hercules) 등과 유사한 성능을 지니지만 지대지 탄도 미사일 요격용인 패트리엇 PAC-2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3년 3월 김정은이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자행고사로켓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자행고사로켓’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가장한 대상을 요격하는 데 이용됐다. 북한이 2013년 4월 6일 조선중앙TV의 기록영화를 통해 공개한 ‘자행고사로켓’은 전차 또는 장갑차 차체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등을 탑재한 모습이다.

북한이 갖추고 있는 국가 차원의 방공체계로서 평양과 주요 거점 중심의 다층적 방공망을 갖추고 있으나, 구식 무기체계가 대부분이어서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대체로 소련에서 지대공 미사일 등을 수입해 방공망을 구축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신형 요격체계를 도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의 방공체계는 대지(對地) 공격용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제한되며, 항공기 요격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검색어 ▼

총참모부, 주체무기, 국방성

국가보위성 (구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 보위규율 기관의 하나가 국가보위성이다. 우리의 국가정보원과 대비될 수 있지만,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북한 특유의 체제 보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간첩 및 반혁명분자 색출, 주민들의 사상적 동향 감시, 대남 정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배경(연혁) 국가보위성은 북한 정권 수립 전인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하였으며 정권 수립과 함께 내각에 소속되었다. 이후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이 창설되면서 이 기구에 편입되었고, 1952년 10월에 내무성으로 이관되었다가 1962년 10월 사회안전성에 다시 소속되었으며, 1973년 5월 사회안전성 내의 비밀사찰기관이었던 정치보위부에서 분리되어 국가정치보위부로 독립하였다. 국가정치보위부는 1982년 4월 당시 정무원 산하에서 독립하면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가, 1993년에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으며, 그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위성(1996년), 국가안전보위부(2010년)로 개칭되었다.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창립일을 1945년 11월 19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김일성이 남포에 있던 보안 간부 훈련소를 이날 처음으로 현지지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기구가 공식 독립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출범한 시기는 1973년의 국가정치보위부 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김정일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 체제를 옹위하고 체제의 확립과 유지에 저해되는 모든 장애요소들을 적발·색출·제거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였다. 한마디로 김정일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 기구가 독립 재편된 실질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그 명칭을 국가보위성으로 개칭하고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이 되었다.

주요 내용(기능) 국가보위성은 국가의 정보기구로 기본적으로 반탐업무와 해외정보 수집 및 공작, 체제 저해요소 색출·제거, 대남 접촉·회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에 근거하여 사상동향 감시, 반체제 사범 및 지도층 비방사건 수사, 정치범 관리 등 체제유지와 정권 위협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반탐활동이 핵심 임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보위성은 국방성 및 사회안전성과 함께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과거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무력성(현 국방성) 및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과 함께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

서 그 산하에 소속되었다. 국가보위성은 당·정·군뿐 아니라 공장·기업소 단위에게까지 파견되고 있고, 지방조직까지 설치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다. 국가보위성의 중앙기구는 국가보위상 아래 제1부상 및 부상 등이 있고, 정치국 등 기능별 부서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하 행정체계에 따라 각 시도 보위부 및 시(구역)·군 보위부와 인민군 내 보위국을 두고 있다. 최말단 지방조직으로는 농촌의 리 단위와 인민반까지 보위부원이 상주하고 있어 철저한 주민감시망을 갖추고 있다. 군대에는 중대급까지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여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대내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부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의 군부대 명칭은 첫 숫자를 ‘1’로 시작하고 있으며, 북한의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조선인민군 제10215 군부대’는 국가보위성의 본부를 의미한다.

국가우주개발국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에서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발사 등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발사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 각각 있는 우주발사체 발사장, 평양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도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으로 내각 산하에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였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세우며 각종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2012년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돌입했으며, 2016년에는 2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었다. 1998년 10월 25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우주공간기술위’가 ‘미사일, 탑재 로켓 및 위성 등의 연구개발과 그에 상응하는 시험 등을 통일적으로 주관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09년 2월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09년 2월 25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 대변인 담화’

국무위원회 (구 국방위원회)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며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북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북한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며,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이다.

배경 북한은 과거에 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1998년 개정 헌법),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2009년 개정 헌법)으로 규정하였던 바 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을 존치하는 대신 신설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한 것은 이른바 ‘김정일 유훈 통치’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제 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라고 명시했다. 과거 북한에서 국

형식으로 ‘광명성-2호’, ‘시험통신위성’ 발사 준비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후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12년 3~4월과 동년 12월에도 ‘대변인 담화’와 ‘보도’ 등의 형식으로 ‘광명성-3호’ 1호기 및 2호기 발사와 관련한 소식을 각각 발표했다.

김정은은 2015년 5월 3일(보도일자)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 했고, 북한은 2015년 5월 8일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이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운반로켓인 ‘광명성호’가 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만인 9시 9분 46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우주연맹(IAF)에 국가우주개발국이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았지만, 2015년 10월 IAF 제66차 연례총회 최종 심의에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가입 승인 결정이 취소됐다.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을 대내외에 내세우며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발사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3월 채택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과 이 기관의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련검색어 ▼

미사일 개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국가과학원

방위위원회가 선군정치라는 기반 위에서 군대를 앞세우며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국무위원회 체제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추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되는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이다.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전반 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최고인민회의 법령 및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 공포, 국가의 중요 간부 임면, 다른 국가에 주재하는 북한의 외교 대표 임면, 중요 조약 비준·폐기, 특사권 행사, 비상사태·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의 권한을 갖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동년 9월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서 서명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서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회는 중요 정책 토의·결정, 위원장 명령 및 국무위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 감독과 대책 수립,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에 내각 총리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등 임면 등의 권한을 갖는다. 기존에 국방위원회가 행사하던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 군사칭호제정권 등은 국무위원회

권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현재 국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정은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 김덕훈 부위원장(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 내각 총리)을 비롯해 당·정·군의 주요 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책국, 산림정책감독국, 설계국 등을 직속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북한이 김정은 시대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강행군'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도기적 비상 체제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군정치를 했던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고, 국방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국무위원회를 신설해 국정 운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역시 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 무력 최고사령관 등 북한의 당·정·군에서 최고 직위를 독점하며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북한 헌법, 노동당 총비서, 최고인민회의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북한은 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 하에서 기존의 중공업 일반에 대한 강조보다 국방공업과 직접 관련된 기계공업이나 전자공업 등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켜 선군정치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려 하였다.

배경 199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난은 북한이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는 군수산업 및 군경제에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한은 재원을 국방공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김정일 입장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방공업 부문에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 부문을 경제회복의 토대로 삼아야 기본 경제구조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 부문들도 회복되고 이른바 '단번도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수립 이후 '경제발전의 기본노선'으로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수해 왔다. 1962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도 그 기본노선은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론'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제시된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중공업 부문에서도 국방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분야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써 전략적 노선변경을 의미한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북한은 국방공업 부문에 기계설비와 자재, 연료와 동력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군수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때 군수생산이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생산물로서 각종 무기와 탄약, 군사 장비들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일반적 중공업 부문과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국방공업 부문에 대해 우선적 보장, 우선적 정상화, 우선적 현대화 정책시행으로 나타났다.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표방한 2002년 이후 북한은 중공업 도시인 함경북도 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월28일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청진광산금속대학에 우선적으로 기술개건사업을 전개했고, 또 다른 중공업 도시인 자강도 내 공장·기업소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했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본보기 공장으로서 하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

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낙원 기계연합기업소 등이 우선적으로 기술개건사업에 착수했고, 2.8 직동청년탄광,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과 같은 특급기업 소들 역시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다.

평가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과거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을 확대·변형시킨 것으로,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민생경제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일찍이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재원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북한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부족을 겪어 왔는데,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전체적인 북한 경제의 불균형성을 확대·심화시켜 주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검색어 ▼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국방성 (구 인민무력성(부))



국방성(구 인민무력성(부))은 북한에서 군대와 관련된 대외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배경(연혁) 현재 북한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방성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채택 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현 내각)에서 분리되었으며, 1986년 제8차 내각 출범 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1998년 헌법 개정 및 후속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 이어 동년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후 인민무력부의 명칭이 인민무력성으로 다시 바뀌었으며, 2020년 10월 명칭이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바뀌었다.

국정가격/시장가격



북한에서 가격은 상품에 대한 노동 가치를 화폐적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은 가격제정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계획적으로 책정하는데, 이를 국정가격이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고 비공식영역에서 국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품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때 작용하는 가격을 시장가격이라 한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상품의 가격은 국가가 결정하는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저발전된 경제력을 급속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며 계획경제를 추구한다. 최대한 많은 이윤을 확대재생산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동자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게 된다. 이때, 당국은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도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의 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다(가격제정의 원칙). 이렇듯 국가에 의해 계획되어 책정된 상품의 가격을 국정가격이라고 지칭한다. 국가의 통제를 바탕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판매 지역, 상점에 관계없이 북한 내 상품의 가격은 동일하다(가격의 일원화).

북한은 가격을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사회적 노동 가치를 화폐적으로 계산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가격의 종류

주요 내용(기능) 북한의 군사조직과 군 지휘체계는 제도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다. 국방성은 외형상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의 기능과 권한 면에서 우리 국방부와 매우 다르다. 북한의 군사조직과 제도를 보면, 우선 북한 헌법상 북한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 결정하는 기관이며, 국방성은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면서 군 인사권 등 실질적 군정권을 행사하고, 총참모부는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방성은 총정치국 및 총참모부와는 의견상 수평관계를 유지하면서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 비해 위상과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북한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로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성 산하 조직 가운데 핵심적인 부서는 '후방총국'이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에게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 전체를 '후방사업'이라고 부르며, 후방총국은 보급품·군수물자의 지원과 전시 대비 비축물자 확보 및 조달업무를 담당한다. 후방총국 외에도 국방성은 산하에 군사건설국, 군사동원국, 기술총국, 대외사업국, 군사재판국, 군사검찰국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검색어 ▼

국무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소 간 생산수단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도매가격, 생필품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소매가격,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국가가 수매할 때 평가되는 수매가격, 그리고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되는 운임·요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국정가격을 지칭할 때는 소매가격을 의미한다.

국정가격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기간 동안은 큰 문제없이 작동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전체에 공급되는 상품이 노동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정가격제도는 위기를 겪는데, 북한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국정상점에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배급제의 위기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발생시켰다. 고난의 행군 시기 생필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공식 경제 영역인 암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 체제를 벗어나거나 아사하게 되었다. 이때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계획에 통제를 받는 대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었다. 이 가격을 시장가격이라 한다. 가격의 일원화가 발휘되던 북한에서 비공식적인 시장가격이 거래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평가 시장가격은 국정가격에 비해 높은 시세를 형성하였는데,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확대 성장하지 못한 상

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만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일을 하는 ‘8.3 근로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북한 당국은 국정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가격 현실화 및 사적 영역에서 유통되는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2002년 7.1 조치와 이후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달러, 위안화 선호현상(달러라이제이션)은 더욱 심화되었다.

관련검색어 ▼

인민경제계획, 종합시장, 화폐개혁, 국정환율/시장환율

국정환율/시장환율



북한은 국가에 의해 국내 화폐(원)의 타국 화폐와의 교환비율이 결정된다. 재정성과 무역은행에 의해 결정, 발표되는 환율을 국정환율이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비공식영역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국정환율과는 상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원화-달러화의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데 이를 시장환율이라 한다.

북한의 환율제도와 공식환율(국정환율) 북한에서 <중앙은행법>이 2004년 채택된 것과는 다르게, 화폐유통에 관한 법은 1998년 11월 「화폐유통법」이 제정되며 제도화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 상업활동에서 원화를 제외한 외화의 유통은 금지된다. 또한 국가에 의해(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재정성'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은행권과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환율 결정의 주체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외화 관리와 유통에 관한 조항은 1993년 1월 수립된 「외화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서 재정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화 역시 국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되는데, 외화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1959년 중앙은행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은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합법적

으로 외화를 획득한 공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외화사용(무역, 비무역 거래 및 은행거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재정성이 계획에 따라 결정한 고정 환율을 토대로 외화교환 시세표를 작성 및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환율 결정 및 관리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환율은 2001년까지 공정환율(국가 결정)에 기초하여 무역환율과 비무역환율의 교환 비율에 차이가 있었지만, 2002년 「외화관리법」 개정 이후 공식 환율(국정환율)로 통합되었다.

달러라이제이션과 시장환율(비공식환율)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암시장에서 통용되던 위안화, 달러화의 가치는 국정환율과는 별개로 시장의 수요-공급에 기초한 시장환율(비공식환율)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에 의한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계획에 의한 가격기능이 제한되었고, 북중 국경지역에서 반입된 소비품에 의해 위안화가 주로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당국의 공식환율 현실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국민들의 자국 원화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제한적 환전 조치), 외화가 국가의 공식 통화를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심화되며 시장 환율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대다수 장마당에서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은 시장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북한을 찾는 관광객, 평양 등 대도시 주민들에 한해서만 국정환율이 기능하고 있다.

국제친선전람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계곡에 위치한 국제친선전람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각국의 국가수반이나 저명인사들로부터 받은 기념품이나 선물을 모아 놓은 전시관이다.

배경 국제친선전람관은 1978년 8월 26일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계곡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있다. 김정일이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곳은 연건축면적 4만 6천㎡에 2층 규모의 서양식 건물로 1989년 3월 31일 개관하였다. 전람관의 전시면적은 총서관으로부터 6층까지 약 100여 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별, 국가별로 나누어 전시되어 있다. 이 곳에는 김일성이 180여 개국의 인사들로부터 받은 22만여 점의 선물이 국가별로 진열되어 있다. 김정일이 받은 선물은 2007년 당시 5만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 전시품으로는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에 보낸 방탄 리무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보낸 박제된 곰의 머리, 리비아의 카다피가 보낸 금장 검, 중국의 장쩌민이 보낸 수에

평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2020년 이후 환율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연말 시장환율이 1달러당 8,320이었으나, 1년 뒤인 2020년 12월에는 6,600원대를 기록하며 약 20% 하락했다(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등 참조). 이는 같은 기간 약 6%가 하락한 우리 경제와 비교해 볼 때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밀한 해석은 제한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감소하고, 최근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환율 변화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북한 시장화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검색어 ▼

인민경제계획, 종합시장, 화폐개혁, 국정가격/시장가격

화와 도자기 꽃병, 쿠바의 카스트로가 보낸 악어가죽 가방, 미국 빌리 그래엄 목사의 박제된 새, 어떤 독일 작가의 베를린 장벽의 벽돌조각 등 오래 전에 받은 선물들이 있다. 2000년에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마이클 조던의 서명이 있는 농구공을 선물하였고, CNN의 창시자 테드 터너는 시계를 선물했다. 남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모아 놓은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

평가 북한은 국제친선전람관을 ‘독특한 민족건축술이 집대성되어 있는 표본으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의 요구가 가장 옹기 구현된 기념비적 건축의 본보기’로 평가한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받은 명품 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북한의 지도자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친선전람관은 북한 주민과 군인·학생 대표들이 견학하는 우상화 순례지일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인사들의 참관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금수산태양궁전

국토환경보호사업



국토환경보호사업은 토지정리를 비롯한 도로, 하천, 산림 및 자연보호 등 국토의 개발과 보호·관리사업을 종합적으로 일컫는다.

배경 북한은 1984년 김정일 저작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한 이후 국토관리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토관리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사업으로 1996년 10월에 처음 실시한 대규모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사업이 있다. 사업 기간 동안 나무심기, 도로정비, 강·하천 정비, 제방건설, 강바닥 파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된 것은 나무심기 사업이다.

북한이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고 전 주민을 동원하면서 대대적인 국토정비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산림 남벌로 인한 국토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농경지 확대를 위해 ‘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농경지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자연재해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1995년 대홍수 이후 매년 자연재

해(냉해, 가뭄, 홍수 등)를 경험하면서 국토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관리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김정은 체제에서는 원립화, 수립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국토관리를 위해 1996년 10월에 내각에 전문부서(국토환경보호성)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3월 2일을 식수절로,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하면서, 국토환경보호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환경보호 사업은 두 측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기간(2001~2010년)’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수립화·원립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설정하여 매년 봄(3~4월)과 가을(10~11월) 연 2회에 걸쳐 국토관리사업에 대중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이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는 ① 화재·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성사진 분석능력 향상 ② 산림자원 데이터베이스화 등 업무의 전산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소학교부터 대학생, 일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동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문 일꾼대회를 비롯해, 궤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국토관리총동원 사회주의경쟁요강’을 채택해 국토관리사업에 등수를 매기고, 모범 단위에 대해서는 자동차

를 비롯한 상품을 내려주기도 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주창되면서 생활환경 개선까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국토환경 보호와 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담화를 발표했다고 밝혔으며, 집권 이후 두 번째 발표한 이 담화가 동년 5월 8일 열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검색어 ▼

재자원화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인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의 사항이다.

배경 ‘군무생활 방침’은 1977년 11월 30일,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의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연설에서 발표되었다. 이는 군대의 정치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인들 속에서 군사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제시되었다. 김일성이 동 연설을 통해 강조한 ‘군무생활 방침’을 김정일이 직접 ‘10대 준수사항’으로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첫 번째는 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군인들이 내무규정과 규율규정을 비롯한 군사규정들에 대한 학습의 강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무기에 정통하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지휘관들이 내리는 명령을 반드시 집행하는 기풍을 말한다. 네 번째는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부여한 임무를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지시한 과업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각급 당조직과 사로청 조직에서 준 과업을 반드시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기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사회주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농민, 병사, 사무원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군사정치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군민일치’에 의거해서 군인들이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임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국가 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절약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군대 안의 상하가 일치단결하는 미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군관은 병사를 사랑하고, 병사는 군관을 존경하며, 군관과 병사들 모두가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군인들에게 군무생활 10대 사항을 준수시키기 위해 군대 안의 선동원, 선동원 등의 정치일꾼들이 군인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군의 밑바닥에서부터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군대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항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준 임무의 어김없는 집행’에서 보듯이 최고지도자가 당을 통하여 군권을 장악하고 군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전민군사복무제

군사칭호



북한에서는 군인의 계급을 '군사칭호'라고 부른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군사칭호를 “군인의 군사적 전문 부문과 자격 및 상하급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가 제정하는 칭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의 계급구조는 서방국가는 물론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도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계급장은 소위에서 대장까지 각급 군관과 장성이 모두 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의 숫자와 크기 및 바탕무늬로 계급과 군이 구별된다. 차수는 '특대성'(왕별)을 계급장에 사용하고 있으며, 원수는 '특대성(特大星)'과 함께 북한의 '국장'을 사용하여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칭호는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크게 원수, 장령, 군관으로 분류된다. 원수급은 (대)원수, 차수이며, 장령급은 대장, 상장, 중장, 소장이다. 군관급에서 좌급군관(영관급)은 대좌, 상좌, 중

좌, 소좌이고, 위급군관은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구분된다.

원수급은 북한 특유의 군사계급으로 원수와 차수로 나누어 지는데, 6·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1952. 12)에 의거해 김일성과 최용건 민족보위상이 각각 '원수'와 '차수'에 올랐다. 특히, '대원수' 계급은 1992년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공동 결정으로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함으로써 최초로 등장한 계급이다. 김정일은 70회 생일이자 사망 후 첫 생일을 맞아 2012년 2월 16일 대원수에 추대되었으며, 김정은은 2012년 7월 17일 원수로 추대됐다.

한편, 인민군 사병은 사관(하사관)과 병사로 나뉜다. 사관에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 있으며 병사는 상등병, 전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1998년 4월 사병 계급체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전사와 상등병의 2단계를 전사 → 초급병사 → 중급병사 → 상급병사의 4단계로 세분하고 군 복무기간을 13년으로 연장했다.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전민 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 10년, 여성은 지원 시 7년으로 의무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다. 특수부대의 경우 13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기본 계급체계 외에 1957년부터 '초기복무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복무사관은 별도의 계급체

계가 아니고 레이더, 통신기기 등 특수 분야에서 복무하던 사병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장기 복무시켜 공백 기간 없이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제도이다.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군사동원국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은 북한에서 연유(연료용 기름), 식량, 군복류, 자동차, 타이어 등 군대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전시보급물자의 비축을 담당한다. 국방성 산하의 군사동원국은 북한군 상비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초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군사동원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동원총국의 주된 임무는 해당 도, 시, 군, 구역 산하 사유기관을 포함한 일체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를 관리·비축·운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국방성 양식국에서 군사용 비축미를 관리하고, 민군 공용은 군수동원총국에서, 민수용 비축미는 내각 양정부 2호 관리국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군수동원총국은 각 도에 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관리국은 각 군에 2~3개의 관리소를 두고 있다. 도에 있는 군수동원총국 관리국은 공습이 어려운 산간지대이면서 교통이 용이한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북한의 전시물자 비축에서 가장 말단 단위인 관리소는 관리물자의 특성상 비밀에 속하거나 대량의 전시보급물자를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은 3~4년, 천과 피복류는 7~8년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군수동원총국의 중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4호 물자(전시 소비품과 소비품 원자재) 비축을 위한 지도활동이다. 4호 물자 비축은 군수동원총국이 주관하고, 매년 징수할 4호 물자 계획을 국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상업관리소나 공장·기업소에 하달하며, 내각의 각 성·부를 통해 생산된 4호 물자를 징수한다. 군수동원총국은 전시물자 마련을 위해 외화벌이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동원국은 국방성 산하 기관으로서, 북한군에 필요한 병력을 징집하는 기관이다. 북한에서는 17세부터 연간 초모계획에 따라 신체검사 및 기초체력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 지역의 군사동원부이다. 우리의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국방성, 전민군사복무제, 후방(공급)사업

군자리정신



군자리정신은 6·25전쟁 시기 평안남도 속천군 군자리(君子里)에서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각종 탄약과 무기를 생산해 낸 사례를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다.

6·25전쟁 당시 군자리 노동자들은 물자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바탕으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해 전선에 보내줬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북한은 군자리 주민들이 지하갱도 속에서 손으로 기계를 돌려가며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던 박격포직장, 공구직장 등의 공장 모습을 재현해 ‘군자혁명사적지’로 조성했다. 북한은 1952년 군·면·리를 통·폐합하며 군자리를 속천군 쌍운리에 편입시켰다.

김정은은 2015년 4월 ‘평양약전기계공장’을 방문해 ‘군자리정신’을 강조하며 첨단무기 개발을 독려했으며, 2016년 신년사에서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2016년 3월에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내 2월11일 공장을 현지지도하며 ‘1950년

대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6년 4월 7일 정령을 통해 군자리 노동계급칭호 쟁취운동에서 모범적인 군수공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표창하기 위해 '군자리 노동계급 훈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는 '군자리정신'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무기 개발·생산 및 군수산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자리 노동계급칭호 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군자리 노동계급칭호 쟁취운동'에 대해 "군수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1950년대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노동계급의 혁명적 본태를 고수하고 북한을 새로운 공업국가로 비약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축 및 평화연구소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북한 외무성 산하의 단체로 대내외 각종 초청회나 학술회의 등에 참석해 외교 및 군사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1988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주요 관심 분야는 군축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국제평화 문제 등이며, 주요 업무는 각종 국제회의에 요원을 선발·파견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서방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외교 및 군사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소장과 부소장, 연구원 등 50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비상설기구이며 북한 외무성을 주축으로 대남 및 군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는 외무성 내에서 남북문제를 관장하는 '조국통일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국'의 군축과, 미국국, 일본국, 노동당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와 남조선문제연구소, 인민무력성 등의 군축 전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동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군축 문제에 대한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게 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 들을 초청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을 선전하기도 한다.

또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1998년 2월에는 영국 외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윌튼 파크(Wilton Park)’가 “동아시아 안보: 한반도와 여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4자회담의 주 의제는 미·북 간에 해결해야 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문제이며, 4자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은 옵서버 자격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북한)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배치되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했으며, 2016년 6월 29일에도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에 대해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20년 6월에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맞서 힘을 계속 키울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불룩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궤도전차/무궤도전차



전차는 노선 상부 공중에 설치된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달리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및 관광도시(강계, 김책, 남포, 원산, 청진, 함흥 등)에서 주로 운영된다. 궤도전차는 노면에 설치된 궤도(레일)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유럽의 트램과 비슷하며, 무궤도전차는 레일이 없는 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트롤리버스와 유사하다.

배경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평양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무궤도전차를 선택했다. 김일성은 평양 복구계획에서 무궤도열차의 설계를 1959년까지 마쳐야 함을 언급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북한은 1961년 10월 10일 최초로 설계된 무궤도전차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천리마 9.11’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1년 뒤인 1962년 5월 평양에서 무궤도전차가 처음 운행하였다. 이에 따라 무궤도전차는 평양의 중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궤도전차는 평양에서 1990년 사동-만경대 20km 구간이 개통되며 운행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무궤도전차/궤도전차는 다음과 같은 운행의 장점을 지닌다. 첫째, 여객수송능력이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 높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

면 신형 무궤도전차 1량에 탈 수 있는 승객의 수는 약 170-180명 정도이며, 소형의 경우 약 50명이 탑승 가능하다. 둘째, 전력을 사용함에 있어 연유(기름)에 비하여 친환경적이며 운영비가 낮다. 국영운영 무궤도전차의 경우 운행 요금은 5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산업은행, 2021), 적극적 균형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당국에게 낮은 운영비를 발생하는 무궤도전차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낮다. 특히 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궤도전차보다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평양에 지하철이 1973년, 궤도전차가 1990년에 개통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평양 이외에도 강계, 김책, 남포, 원산, 청진, 함흥 등 주요 도시 및 관광도시에서 무궤도전차를 운행하였으나, 전력난이 악화되면서 그 운행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북한의 무궤도전차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다. 이미 무궤도전차가 도입된 평양에 2015년 10월 평양역-과학기술전당까지 운행 구간이 증설되었다. 김정은은 또한 2018년 2월과 8월, 2019년 2월 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며 인민생활 편의 보장을 위한 여객운수문제 개선에 무궤도전차/궤도전차가 큰일을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무궤도전차는 북한의 관광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광용축전지차”, “2층빠스”와 함께 강원도 원산 등 북한의 관광지에 도입, 운영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고 북한의 관광산업이 재개될 경우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검색어 ▼

기간공업(4대 선행 부문)

금강산관광지구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2008년 7월까지 해상 및 육로관광 누적 인원이 196만 명에 달했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약 40여개에 이르는 남측 기업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특구 개발 사업에서부터 골프장, 면세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라는 민관 합동의 관광협력 모델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남한 민간인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배경 김일성과 김정일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 금강산관광은 이뤄지지 못했고, 김정일 시대 들어 김일성의 유훈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이 군사항인 장전항에서 온정리까지 철조망을 치면서도 금강산을 개방한 것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외화벌이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조선대성은 행 이사장 겸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 고문 최수길의 ‘금강산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진출에 관한 의정서’(1989. 1)를 체결한 후 10여 년만인 1998년 11월 18일에 금강호가 첫 출항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하고, 11월 13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및 외화 수입 확대를 도모했다. 한국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금강산관광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해 남한 관광객이 피격·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남북간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다.

주요 내용(경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1998년에 시작되어 다소의 부침이 있긴 하였지만, 2008년 중단되기 약 10여 년간 운영되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에 해로관광으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육로관광이 실시되었으며, 2008년 3월에는 승용차관광 시대가 열리는 등 관광방식의 다변화가 진행되었다. 관광 일정도 2004년부터 당일 관광, 1박 2일 관광, 2박 3일 관광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관광코스도 초기의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강과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방되었다. 2007년부터는 내금강 관광코스로 확대되면서 2005년부터는 30만 명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2008년 7월 중순에는 비로봉 관광이, 7월 말에는 골프장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금강산관광 지구에는 약 40여개에 이르는 남측 기업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특구 개발 사업에서부터 골프장, 면세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라는 민관 합동의 관광협력 모델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연도별 금강산관광객 추이

(단위: 만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연도별	1	15	21	6	9	7	27	30	24	35	19
누적	1	16	37	43	52	59	86	116	141	176	196

1989~98년까지 10년간의 방문 인원은 총 5,722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2008년 7월까지 총 누적 관광객이 196만 명에 달하였다. 특히 총 18차례에 달하는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 가운데 4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강산에서 이루어져 이산가족 상봉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금강산 공연과 금강산 마라톤 대회, 금강산 콘서트 등 각종 예술·체육·종교 교류 등은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제공하였다. 특히 금강산관광을 통한 각종 법률 정비는 4대 경협합의서와 개성공단과 여타 남북경협의 법·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광 중단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 국면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책임 있는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이 이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재개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과 재산을 몰수하고 체류인원을 전원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1년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데 이어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여 남측의 관광 참여를 배제하였고, 2011년 11월에 중국을 통한 국제관광을 시작했다. 2014년 6월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신설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2015년 5월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남북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남

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용의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정체 국면에서 접어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19년 10월에는 김정은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협의하여 짝 들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평가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의 단순 관광을 넘어서 많은 상징적 의미와 성과를 남겼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중단 이후 북한이 취한 몰수·동결된 투자 자산과 개발업자의 독점적 사업권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북한 당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획일적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자율적 관광 등의 허용이 요구된다.

관련검색어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법, 특수경제지대

금수산태양궁전



금수산태양궁전은 1977년에 건설되어 김일성의 관저로 사용하였던 금수산의사당(주석궁)을 김일성 사후에 그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시설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1994.7.8) 이듬해인 1995년 6월 12일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현 내각) 연명으로 김일성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구히 안치하도록 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사망 1주기인 1995년 7월 8일 개관하여 2012년까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불렸으며, 2012년 2월 김정일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의 시신도 이곳에 함께 안치되어 있다.

이 건물이 자리 잡은 곳은 평양 대성구역 미산동 모란봉의 연봉인 금수산 기슭으로 평양 중심가에서 약 8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총 부지면적은 350만㎡에 달한다. 북한은 1996년 7월 27일부터 김일성 시신을 일반에 공개해 왔고, 외국인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는 어떠한 소지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입장객이 멈춰 서서 보는 것은 허가되지 않

는다고 한다. 건물 내부에는 김일성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도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사후에도 동 시설을 개보수하여 김정일 시신의 참배 공간과 유품 전시실도 마련하였다.

건물 앞에는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광장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상징하는 폭 415m, 길이 216m의 크기로 조성되어 있다. 이 광장은 김일성광장과 함께 각종 정치적 행사에 활용되는 대표적 장소로서 김정일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열렸다. 2012년에 북한 당국은 이 광장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 대규모의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광장의 공원화는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편의 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시신을 참배하게 함으로써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라며 신성시해 왔다. 앞으로도 주요 계기시에 김정은이 당·정·군 요인과 각계 대표를 대동하고 참배하는 관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광장,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화-김정일화, 김정일애국주의

기간공업 (4대 선행 부문)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문은 북한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역점을 뒀야 할 부문을 제시한 것으로 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가리킨다. 북한은 이를 통해 생산과 건설에 필수적인 동력과 연료, 기본 자재와 원료, 수송을 보장하고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배경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1987~1993)의 주요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후 3년간(1994~1996)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북한은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라는 ‘3대 제일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공업 등의 선행 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공업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생산 증대와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도 거의 매년 신년사에서 4대 선행 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7차 당대회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4대 선행 부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가리킨다. 4개 분야는 생산과 건설에 필수적인 동력과 연료, 기본 자재와 원료, 수송을 보장하는 경제의 선행 부문으로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는 부문이며, 경제 전반의 물질적·기술적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공업 부문으로서 인민생활 향상에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력은 북한 경제난과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요 현대산업의 기본 동력이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4대 선행 부문의 다른 부문과 구분하여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전력 문제 해결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하면서 발전소 개선, 송배전망 개선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은 석탄공업 부문을 중시하고 있는데 석탄공업의 생산 증대를 가져와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제때 공급해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속공업 중시는 경공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다. 기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북한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소비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요구되는 철강재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은 철도·운수 부문의 발전이 생산한 물품들의 수송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 부문의 활력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경공

업과 농업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은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인민생활 향상과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4대 선행 부문 개선을 시발로 중공업, 경제건설 등 모든 전선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4대 선행 부문

	주요 내용
전력 공업	- 발전설비 효율 제고: 생산공정과 시설의 정비·보강, 기술 개선 - 국가적 통합전력관리체계 구축, 교차생산의 합리적 조직 - 전력 손실 최소화: 송배전망 개건 보수, 전압 단계 상향 등 - 건설 중인 발전소의 조기 완성, 원자력 중소형 발전소 건설 - 자연에너지 이용 확대: 풍력, 조수력, 태양에너지 활용 등
석탄 공업	- 공급 확대: 유리한 탄광에 집중 투자, 능률적 채탄방법 수용, 갱내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 선탄공정 완비, 신규 탄광과 갱의 개발 등
금속 공업	- 제철·제강·압연 공정의 기술장비 수준 제고 - 철광산 생산능력 확장, 원료·연료 동력 보장으로 생산 확대 등
철도 운수	- 수송 조직의 과학화·합리화, 철도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관리운영의 정보화 - 철도 수송의 신속성·정확성·원활성·안전성 보장 - 철도공장기업소들의 기술 개선, 철도망 완비, 철길의 증량화·고속도화 - 현대적 철도수송 수단 확대

자료: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 5. 9).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발전을 앞세우는 기간공업 우선발전 원칙(제8차 당대회)의 등장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공업 부문 자원 우선 배분의 기조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그 근본적 원인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되었던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 진행된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제7차 당대회에서 강조되었던 국방공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반면,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자립의 핵심 고리를 담당할 공업 분야인 금속, 화학 등 기간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전면 등장하게 되었다.

금속공업의 경우 코크스를 수입할 수 없는 가운데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 철강재 생산 체계인 ‘주체철’의 생산체계를 완비하고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선철 생산에 있어 갈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개발을 특히 강조한 바 있다.

화학공업의 경우 석유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다양한 유기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탄소하나화학공업 중심의 화학공업구조 개선과 생산 원료를 통한 인민소비품 생산체계 정상화, 순천인비료공장 중심의 화학비료 대량생산 및 공급을 통한 농업 분야의 증산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력 부문의 경우 제7차 당대회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공업 전반을 정상화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조수력발전소건설 및 핵동력공업창설(원자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계획 수립을 강조함에 따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이 지속 개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업 분야 우선 배분 기조의 변화(기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에서 금속, 화학, 전력 중심)는 김정은 체제가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평가, 반영하여 국가 경제발전전략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북한은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4대 선행 부문, 기간공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경제력 및 산업구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다. 2015년 기준 북한의 선행 부문을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과 비교해보면, 철도·운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년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크게 밀리고 있다(한국은행, 2021).

남한과 비교하면 북한의 기간공업은 석탄과 철광석 등의 일부 원재료와 철도(95%가 단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는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영, 왜곡된 자원 배분 등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원부자재 부족, 외국자본 및 선진 기술 도입 미흡 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 등에 기인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와 경제운명을 지속하는 한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4대 선행 부문, 기간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검색어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자력갱생

기념일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날을 비롯하여 북한 최고지도자, 주요 기관, 사회 단체, 우리 민족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어 기념하는 날이다.

주요 내용 기념일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북한에는 사회주의와 관련한 기념일,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기념일, 주요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관련한 기념일,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는 기념일 등이 있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와 관련한 기념일로는 1910년 코펜하겐 제2차 국제 여성노동자회의에서 채택된 3·8 국제 부녀절, 국제 아동절(6월 1일), 빨럭불가담운동의 날(9월 1일), 세계 청년절(11월 10일) 등이 있다.

북한 체제와 관련한 기념일로는 공화국창건일(9월 9일), 조선노동당창건기념일(10월 10일), 조선인민군창건일(2월 8일), 조선올림픽위원회결성일(10월 31일)을 비롯하여 '전반적 무상 치료제' 시행일(1월 1일), 「사회주의노동법」 공포일(4월 18일),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일(4월 29일), 조선소년단창립절(6월

6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결성일(11월 18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결성일(1월 1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결성일(1월 31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결성일(4월 14일), 조선직업총동맹(직맹)결성일(11월 30일) 등이 있다.

북한의 주요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관련한 기념일인 탄부절(4월 24일), 철도절(5월 11일), 건설자절(5월 21일), 지방공업절(6월 7일), 포병절(6월 20일), 공군절(8월 20일), 선군절(8월 25일), 해군절(8월 28일), 청년절(8월 28일), 국토환경보호절(10월 23일), 체육절(10월 10일), 방송절(10월 14일), 항공절(11월 29일), 로케트공업절(11월 29일), 출판절(11월 1일), 화학공업절(12월 6일), 장애자의 날(6월 18일), 해양의 날(7월 12일), 국제평화의 날(9월 1일), 민족면역의 날(10월 20일), 어머니날(11월 16일) 등이 있다.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기념일로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공화국 대원수’ 칭호 수여일(2월 14일), 김일성 ‘대원수’ 칭호수여일(4월 13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12월 24일)을 비롯하여 김정은과 관련한 기념일로는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일(4월 1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위원장’ 추대일(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일(6월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12월 30일)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는 기념일로는 광복절인 ‘조국해방의 날’(8월 15일), ‘훈민정음 창제 기념일’(1월 15일) 등이 있다.

기념일은 성격과 의미에 따라서 기념식 행사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국제 부녀절’, ‘조선소년단창립절’, ‘공화국창건일’, ‘조선로동당창건일’ 등의 기념일에는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보고회를 비롯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특별방송도 편성하며, 주민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지기도 한다.

평가 시기에 따라서 기념일이 새로 추가되고, 기념일의 위상도 달라진다. 김정은 체제 이후로는 김정은 관련 기념일이 많아졌고, 김정은 관련 기념일의 행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명절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고급당학교는 당 일꾼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는 당 교육기관이다.

배경 북한은 정권 초 체제형성기에 국가건설과 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간부와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었다. 김일성은 권력 장악과 함께 인사정책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갔다. 당시 제시된 간부정책의 방향은 노동계급을 정치엘리트로 충원하되 이들의 약점인 교육수준을 보장하며, 기존 체제의 수혜자들인 기술전문 엘리트들을 전문 분야에 충원하되 이들의 약점인 사상을 개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북한은 정권 초기 부족한 간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찌산 측근들을 내세워 군사정치 간부양성기관인 평양학원을 설립하고, 중앙당학교(현재의 김일성고급당학교) 등 간부양성기관들을 창설하였다. 또한 김일성대학 등 북한 각지에 여러 대학과 전문대학을 설립하였다.

주요 내용 김일성고급당학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1946년 6월 1일 북조선공산당 중앙당학교로 발족했으며, 1972년 4월 김일성의 회갑을 맞아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다. 현재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대원 2동에 위치하고 있다. 창립 당시에는 2개월반으로 시작해 점차 3개월반, 6개월반, 1년제와 2년제로 확대했으며, 1955년에는 3년제 기본반과 4년제 통신학부를 설치해 고등교육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으로 변화하였다. 또 1973년에는 맑스-레닌주의학원을 통합, 3년제 연구원의 학제까지 갖췄으며 1983년에는 3년제 기본반을 4년제로 개편했다. 이 학교는 1978년부터 학내에 당간부양성기관지도국을 설립하여 전국 당간부양성기관의 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 당간부 양성기관으로는 도(시) 공산대학, 군(구)의 당학교들이 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로 배치된 후 고위 간부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이 학교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1991년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5주년을 맞아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이나 공산대학을 나오고 몇 해 동안 현직에서 일을 잘하는 전망성 있는 일꾼들을 선발하여 공부시키는 체계를 세워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간부정책을 관장하면서 수차례 현지지도를 하였고, 1972년과 1996년 두 차례 ‘김일성훈장’을 수여할 만큼 북한 지도부의 관심을 받는 기관이다. 김정은은 정권 들어서도 201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에서

명선영 고급당학교 교장은 김정은이 “당 일꾼 양성의 최고전당답게 김일성-김정일주의 교육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학교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광장



평양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구역에 인민대학습당 앞에 있는 광장으로 북한의 주요 기념일, 명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군중집회를 진행한다.

배경 김일성광장은 평양시 중구역의 남산재 동편에 있는 광장으로 ‘전후복구건설’시기인 1954년 8월에 사회주의 수도 평양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조성이 시작되었다. 화강석으로 포장된 넓은 직사각형 주광장과 보조광장, 대주석단 등으로 구성하여 각종 행사에서 극장무대처럼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넓이는 75,000㎡이며 10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요 내용 광장의 머리 부분이 인민대학습당과 접해 있으며, 정면 맞은편으로 대동강을 넘어 주체사상탑을 바라보고 있다. 광장 주변에는 내각 종합청사와 외무성 청사,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제1백화점이 들어서 있어서 무대의 가림막 역할을 한다. 인민대학습당을 무대의 뒤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대동강 건너 주체사상탑이 있어서

정치적 상징성과 정치적 연출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 퍼레이드, 군중집회, 경축야회 등의 정치적 연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1996년에 북한 도로망의 출발점, 즉 ‘나라길 시작점’인 도로원표를 김일성 광장의 주석단 아래로 옮겨왔다. 도로 원표를 의미하는 ‘평양 나라길 시작점’ 비석도 여기에 있다. 이 비석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평양 중구역 중성동 승리거리에 있는 해방산여관 앞마당에 세워져 있었으나, 이후 평양 중구역 평양성 중성(中城) 출입문 가운데 하나인 함구문으로 바꿨다가, 1996년 김일성광장 주석단으로 옮겼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북한 최고의 종합군사학교로 ‘김일성군사대’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고급 장교 양성을 위한 군사교육기관이다.

배경 소련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0월 28일 ‘고급군사학교’로 문을 열었다. 이후 1954년 8월 ‘김일성육군대학’으로 잠시 개명되었다가, 1956년 10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중대장급 이상의 군사 지휘관에 대한 직무별 보수교육 전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최상급군 교육기관으로 남한의 육·해·공군대학 및 국방대학원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북한 문헌에서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인민군 부대와 연합부대의 중견 군사간부들은 모두 이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그들은 인민군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은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이 대학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운영하며, 본과와 연구원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과는 고급 군관 양성을 목적으로 대위에서 중좌(소령에서 중령 사이)까지의 현역 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간은 보병, 정찰, 포병 병과의 경우 3년이며, 통신, 공병, 화학 병과의 경우 4년이다. 본과 교육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1계급 진급과 함께 상위 보직에 배치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원 과정은 상좌(중령에서 대령 사이) 이상의 육·해·공군 고급 간부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1년이다.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등 초급 지휘관 양성 목적의 기관이 사병 가운데 입교생을 선발하는 것과는 달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연구원 과정은 군 장교 가운데 입교생을 선발한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약 30만 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고,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연구실, 강의동, 실습동 등 제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직원은 약 600여 명, 학생 수는 2,0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많은 군 고위인사들이 거쳐 간 이 대학은 2003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때 김정일이 이 학교에서 투표했을 정도로 선군정치 시대에 중시되었던 기관이다. 2012년 10월 설립 60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이 대학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는 ‘정령’을 발표하였고 훈장 수여식도 거행되었다. 또 설립일인 10월 28일에는 이 대학 연구원을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명명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창립 60주년 기념연회도 이례적으로 개최되어 김정은의

특별 배려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은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 학교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에 직접 참석하여 연설하고 기념촬영까지 하였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김정일군정대학,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 언급됨으로써 군사교육과 관련한 이들 대학의 설립 역시 공식 확인되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종합대학, 총참모부

김일성-김정일주의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취지 하에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제시한 사상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후계 구축기간이 짧아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더십 구축을 위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었다.

배경 북한은 2012년 4월 6일 발표한 이른바 '4.6 담화'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을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규정하는 결정서를 발표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 높이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며 모든 사업을 김일성 동지식대로, 김정일 동지식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은 2021년 1월 개정된 당규약을 통해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2012.4.11)에서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노동당 규약의 서문을 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했다.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며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아 세계 각국의 친북단체들을 초청해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채택한 '평양선언'은 "위대한 수령들의 혁명업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지도이념에 대한 해석권은 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몫이다. 김정은은 2013년 2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 전당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주장했고 이후에는 한동안 노동신문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이틀에 한 번꼴로 나왔다.

이어 김정은이 2013년 6월 발표한 노작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으며,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발전풍부화하셨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놓은 이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이 이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4년 5월 ‘기자, 언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힘 있게 뿜어주는 선도자,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6년 5월 6일 개최된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해야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다”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6년 8월에 열린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이름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개최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서는 기존의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이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으로 다시 변화하였다.

평가 북한의 지도사상은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화하였다. 이는 시대적 요구와 국내외 정세, 지도자와 지도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 시기 주체사상이나 김정일 시기 선군사상처럼 김정은 정권이 표방한 지도이념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이념이라기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표방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그들의 이름으로 재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퇴조하고 그나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조차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유지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도 사실상 사회주의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선대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혼을 이행하고 유업을 발전시키는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주체사상, 선군정치, 유혼통치, 노동당 대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평양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북한의 주요 분야의 핵심 일군의 상당수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다.

배경(연혁) 북한은 광복 후 민족 간부 육성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먼저 종합대학을 설치하고 종합대학을 모체로 각 분야의 대학을 설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광복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1945년 11월에 대학건설기성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1946년 5월 25일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1946년 7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대학설치 결의’를 채택하였고, 교사 건축을 진행하여 1946년 10월 1일 김일성 종합대학을 개교하였다. 평양시 대성구역 용남산 기슭에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은 설립 초기 7개 학부, 24개 학과, 학생 1,500명 정도의 규모였다. 1948년에 일부 학부들을 분리하여 평양공과대학(현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사리원농업대학(6·25전쟁 전에 원산으로 옮겨진 현 원산농업대학)을 새로 만들었다.

주요 내용 김일성종합대학은 이후로 대학의 규모도 커지고 부속 시설도 확장하여 156만m²의 부지에 본관, 1호 교사, 2호 교사, 도서관, 자연박물관, 출판사, 인쇄공장, 기숙사, 병원, 야간정양소 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2호 교사는 22층에 연건평 5만 2천m², 200여 개의 강의실과 170여 개의 실험실, 강좌실 등 모두 600여 개의 방, 500석과 200석의 합동강의실이 갖추어져 있다. 부속 시설로 150여 정보의 실습장, 3,300정보의 학술림 등이 있다.

대학 구성은 15개 학부에 60여 개의 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는 경제학부, 역사학부, 철학부, 법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수학적학부, 물리학부, 원자력학부, 자동화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지질학부, 재교육학부 등이 있다. 부설연구소로는 자연과학 부문의 계산연구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전자물리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촉매연구소, 생물공학연구소, 분석연구소, 과학실험기구연구소, 원자에너지기연구소 등의 연구소가 있다.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별도의 단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자동화학부 등을 통폐합하여 컴퓨터과학대학으로, 법학부를 법률대학으로, 조선어문학부를 문학대학으로, 경제학부를 확대하여 재정대학으로 각각 승격시켰다. 2010년에 평양의학대학과 평양농업대학, 계몽상농업대학 등 3개 대학이 소속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단과대는 7개로 늘었다. 대학생 수는 12,000명, 교직원 수는 5,500명 정도라고 한다. 한편 2020년 경에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 등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다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인문사회 학부와 자연과학 학부가 있는 종합대학이다. 수업은 학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인문사회과학부의 수업 연한은 4년 6개월, 자연과학부의 수업연한은 5년 6개월이다. 종합대학에 모집된 학생들은 정규 수업연한과 별도로 먼저 1년간의 예비과정을 거쳐야 분과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한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마다 9주이다. 북한의 대학에서는 학년 학과제를 실시하여 종합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에 총 24~35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동시에 실험실습이 요구되는데, 사회과학부에서는 30%, 자연과학부에서는 50%를 차지한다.

대학조직은 총장 아래 제1부총장, 교무부총장, 과학부총장, 경리부총장 등 10여 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다.

김일성화·김정일화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 식물원에서 품종개량한 난과의 꽃으로 1997년부터 김일성화로 불리고 있으며, 김정일화는 베고니아과의 꽃으로 1982년부터 김정일을 상징하는 꽃으로 불리고 있다.

주요 내용 김일성화는 1977년 4월에 처음 알려진 꽃으로 난과의 열대·아열대성 다년생 화초이다. 인도네시아 식물원장이 200여 회의 실험 끝에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 1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하면서 김일성화가 시작되었다. 1975년 1월에 김일성의 지시로 평양의 식물원에 옮겨 심었고, 1977년 4월부터 ‘김일성화’로 공식 명명하였다. 1977년 8월에는 <김일성화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1929년에 중앙식물원에 김일성화의 생산과 보급,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온실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재배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정일화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꽃으로 1988년 2월 김정일의 46회 생일 때 등장하였다. 당시 평양의 언론들은 “이 꽃은 일본의 원예학자인 가모 모도데루가 남미가 원산지인 베고니아 뿌리로 20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 냈으며 조선인민과 일

김정일애국주의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강조한 김정일애국주의는 권력승계 정당화 및 정권 안정 차원에서 활용된 실천담론의 성격을 가졌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통해 김정일의 애국정신에 보답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실천담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배경 북한의 지도사상은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진화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그의 사상을 김정일주의로 규정하고,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한다고 당규약을 개정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일종의 하위사상 또는 실천지침을 필요로 했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매개로 전국적 차원의 일색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3월 2일 김정은은 전략로켓사령부(현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아버이 장군님(김정일)의 모범을 따라 배워 ‘김정일식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정일식 애국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2012년 5월 1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5월 14일 조선중

본인민들 사이의 우호와 연대성, 세계평화 위업에 공헌하고 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흠모하여 그의 존함과 결부시켜 꽃의 이름을 ‘김정일화’로 명명하고 1988년 2월 16일에 즈음하여 그 꽃을 김정일 동지에게 바쳤다”고 선전한다. ‘불멸의 꽃’으로도 불리는 김정일화는 진한 붉은 색이며 한포기에 수꽃과 암꽃이 따로 핀다. 개화시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에 피도록 개량하였다. 꽃의 높이는 30~40cm 정도이며, 꽃술의 직경은 최고 25cm까지 자란다. 1989년부터는 김일성화 재배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전국에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을 마련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연구와 보급을 위한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연맹’이 결성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와 각급 기관, 주요 기관이나 단체, 군부대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온실이 있으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비롯한 명절에는 전시회를 진행한다.

평가 북한에는 공식 국화(國花)인 목란이 있으나 목란보다 더 많이 재배하고, 활용하는 꽃이 김일성화·김정일화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제일주의 애국교양과 관련하여 국화에 대한 강조도 많아지고 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김정일주의, 금수산태양궁전, 태양절

양방송의 사설 “모두 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자”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한평생을 애국으로 수놓아오신 장군님의 업적과 위대성을 특징짓는 사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은의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7.26)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정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송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부강조국 건설의 실천 활동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하게 된 김정은은 선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선대수령의 업적과 사상의 계승을 김정은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논문과 기사들을 다수 공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김정일애국주의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부강조국 건설’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일애국주의는 크게 송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송고한 조국관은 조국 보위와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조국과 수령을 동일시한다. 따라서 조국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수령에 대해 충실하는 것과 같고 이는 곧 애국주의의 최고 표현이다. 송고한 인민관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김정일의 애국신조를 강조하며 인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

고 한다. 마지막으로 송고한 후대관은 자기 세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 수 있게 모든 일을 완벽하고 훌륭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모두가 헌신적인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의 헌신성을 따라 배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체질화해 나갈 것을 주민들에게 독려했다.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일꾼들 속에서 특전과 특혜를 바라는 현상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당 간부들을 질타하였다. 이는 김정일애국주의가 당조직생활의 이완 현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의 개념을 초기에는 조국사랑과 인민사랑에서 출발하여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점차 저변을 확장시켰다. 2012년 6월 소년단 창립 66주년을 계기로 김정일애국주의 차원에서 김정은의 후대관과 미래관을 선전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에 김정은의 활동을 접목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만경대 유희장 및 능라유원지 등 놀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 개선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병원시설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12년 의무교육제 실시를 의제로 선정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 교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북한의 선전매체에서 간헐적으로만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삭제되었다.

평가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안정화를 위해 선대의 사상을 계승하는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표하였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수령이자 최고지도자로서 연령의 한계 및 후계자 수습과 계승의 불충분한 시간 등 김정은의 약점을 보완하고, ‘아버이’로서의 인격을 인민들에게 자리매김하도록 역할을 한 실천담론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확립되면서 점차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관련검색어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으로 컴퓨터공학, 기계공업, 중공업 분야에서의 최고 종합대학이다.

배경 1948년 9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와 철도공학부를 모체로 평양공업대학으로 출발하였으며, 초기에는 금속공학부, 전기공학부, 야간학부 등 9개 학부였다. 이후 1951년에 김일성의 항일 빨찌산 동료이자 6·25전쟁 시 전선사령관으로 사망한 김책의 이름을 따 김책공업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8년에 대학 설립 40주년을 맞아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90년에는 ‘조선컴퓨터센터’의 일꾼을 양성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강동분교가 창설되었다.

주요 내용 김책공업종합대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학교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15층 규모의 본관 건물과 15층의 기숙사 시설, 집적회로 실습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신축하였다. 현재 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3개의 단과대학과 11개의 학부, 박사원이 있다. 3개 단과대학은 컴퓨터과학대학, 기계과

과학기술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이며, 11개 학부는 공업경영학부, 광업공학부, 금속공학부, 자동화공학부, 동력기계학부, 재료공학부, 전자공학부, 전기공학부, 선박공학부, 체신학부, 열공학부이다. 공업과 관련한 대학으로 학부와 연계된 지질, 광업, 금속, 재료, 로봇, 전자계산기, 반도체직접회로, 물리공학 부문별 연구소를 비롯하여, 전자계산소, 종합분석소, 종합실습공장 등이 있다.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 따라 1990년대에 컴퓨터 프로그래밍학과, 정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젊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소도 설치하였다.

13,000여 명의 학생과 3,000명의 교직원이 있다. 박사원에서는 준박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전공하는 학생 700여 명이 있으며, 야간 과정과 6개월~1년 코스의 재교육학부, 기술교원양성반 등의 특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월에는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은 16,000㎡의 면적에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12개의 전자열람실을 비롯한 28개 열람실이 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사봉동에 있는 북한의 대표적 특급기업소이다.

배경 1938년에 설립된 일본제철주식회사 청진제철소가 모체이며, 1951년 2월 김책제철소로 개칭되었다. 그 후 기업소의 생산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1974년부터 관련업체들을 통합하여 김책제철연합기업소로 그 기구체계를 개편했다.

주요 내용 이 기업소는 근처에 위치한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철도와 장거리 정광수송관을 통해 공급하는 철정광을 처리하여 선철로부터 압연강재까지 흐름식으로 생산하는 북한 최대의 종합야금 생산기지이다.

6·25전쟁 후 제철소를 개건 확장하며 1954년 10월에 제1호 해탄로를, 1955년 5월에 제1호 용광로(25만 톤)를 복구하여 조업했다. 1958년 11월에는 제2호 용광로(25만 톤)를 복구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40만 톤 능력의 강철직장을 건설하여 처음으로 강철을 생산했다.

이후 계속 시설 확장을 서둘러 1960년 소련으로부터 기술 도입에 의한 철광소결공장(鐵鑛燒結工場)과 구단광공장(球團鑛工場)이 각각 설치되었다. 1968년 북한 당국의 ‘대야금기지’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971년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100만 톤 능력의 강철공장 및 85만 톤 능력의 압연공장 등 대대적인 시설 확장공사를 통해 일관제철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4년에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 150만 톤의 제철 생산능력을 240만 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2단계 공사를 추진했다.

1990년대 경제난 시기 코크스가 부족하여 6개의 용광로 중 3개만 가동될 정도였으나, 현대화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이후 자체 개발한 연료로 선철 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중국 자본의 북한 지하자원 투자가 배경이 되고 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용광로종합직장·해탄종합직장·강철직장·내화물직장·압연분공장·열간압연직장·냉간압연직장·소결직장 등 수십 개의 직장으로 구성된 모체기업소와 대보수사업소·관수송사업소·청암광산·무산광산 등 관련업체, 강철설계사업소와 금속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철과 여러 가지 압연강재, 록스 및 수십 종의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기업소에는 또한 후방공급을 위한 농·목장과 수산사업소, 병원, 요양소, 정양소, 그리고 노동자회관, 공장대학 등 보조시설이 있다.

한편 무산광산이 재가동되면서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받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와 선철증산에 기여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 총생산능력은 선철 128.6만 톤, 강철 240만 톤, 압연강재 147만 톤 등으로 철강생산능력이 북한 전체 능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 ‘자력자강’을 강조해 온 북한은 수입 원료인 코크스(Cokes)가 필요 없는 소위 ‘주체철’ 공정을 2018년 9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완공했다고 발표했다. 주체철 공법은 철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해 철강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철 생산을 위해 철광석에 무연탄과 산소, 석회석을 혼합해 선철을 뽑아내는 공법인 ‘산소열법용광로’를 개발해 황해북도 송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도입했다.

관련검색어 ▼

연합기업소, 순천린(인)비료공장



나래카드/전성카드
남북연석회의
남조선 혁명론
내각책임제
노동적위군(노동적위대)
(조선)노동당
노동당 군정지도부
노동당 규약
노동당 규율조사부 법무부
노동당 대표자회
노동당 대회
노동당 비서국(정무국)
노동당 정치국
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노동당 책임비서
노동당 총비서
노동신문
농민시장

나래카드/전성카드



나래카드와 전성카드는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외화 및 내화 직불카드이다.

배경 북한이 사회주의적 금융 제도를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게 화폐의 공급 및 유통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이루어졌다. 국가, 기업의 거래는 ‘월에 의한 통제’에 따라 계산으로만 구입·지출이 집행되었고, 주민들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지급받은 화폐를 농민시장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개인들의 사적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남한 사회가 1980년대 신용카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사적 금융활동이 진작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은 요원하였으며 현금의 유통조차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월 「상업은행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면서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가 공식적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북한 내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사적 영역, 특히 시장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존과는 다르

게 화폐의 유통 및 활용이 증가된 것에 대한 북한 당국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상업은행법」이 채택된 지 4년 만에 전자결제카드 ‘나래’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현금 사용을 통한 거래 활동이 공식 영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 조선무역은행이 2010년에 발행한 ‘나래’카드는 외화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충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직불카드이다. 사용자가 결제시스템이 도입된 외화상점에서 카드를 통해 물건값을 결제하면, 충전된 외화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환율로 계산되어 원화로 평가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2015년에는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성’카드가 SNS 및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기존 나래카드가 외화 충전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 원화의 충전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나래카드와 전성카드 외에도 고려은행에서 발행한 ‘고려카드’, 황금의 삼각주은행이 발행한 ‘선봉카드’ 등이 북한 사회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 2015년 12월 13일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서 공개된 김정은의 서한에는 우리식 재정금융관리체계의 개선 강화를 위한 방도로 ① 재정은행사업 강화를 통한 재정원천 확보 ② 화폐유통 공고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전

자결제시스템 확대는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화 신뢰도 하락 및 외화 사용 풍조를 안정화함은 물론, 국가로 편입되지 못하는 개인의 여유자금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여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과 제재 국면으로 상품의 생산 및 소비는 물론 외국 관광객 유입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의 확산과 북한 금융체계의 발전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연석회의



남북연석회의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남북한 문제를 논의하던 의사 결정체다. 북한의 제의에 김구와 김규식 등이 참가하여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는 북한의 일방적 진행으로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배경 남북연석회의는 1948년 4월 19~23일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한의 단독 총선거 반대 투쟁을 결의한 것이 시초이다. 당시 북한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총선거 실시라는 유엔 결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가로 막았으며, 내부적으로는 인민회의에서의 헌법 초안 마련, 인민군 창설,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조 작업을 진행하여 독자 정권 수립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조선노동당을 비롯한 9개 정당·단체의 이름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의했다. 이는 마치 남북한 주민 대표들의 의사인 것처럼 포장하여 남한의 총선거를 저지하고 나아가 그들이 창설하는 정권에 대해 정통성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었다.

주요 내용 김구와 김규식 등은 회의 참가를 위해 북행길에 올랐으나, 이 회의는 북한이 미리 준비한 각본에 의해 일방적

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은 북한 요인들과의 회담을 제의했고 김일성, 김두봉과의 회담과 15명이 참가한 ‘남북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가 열렸지만, 4월 30일 외국군대 철수, 임시정부 수립, 총선거 등을 내용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쳤다.

북한은 이후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체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당국 간 회담인 남북조절위원회가 가동되어 불완전하나마 사실상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후에도 이 연석회의의 주장은 계속되었다. 그 명칭은 시기에 따라 바뀌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남북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집합하여 결론을 낸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남한의 대표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6년에도 북한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남한의 청와대 실장들, 국무총리와 장관관들을 비롯한 당국자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관계자들 및 정당의 주요관계자들, 통일운동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관련검색어 ▼

통일전선전술, 민주기지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남조선 혁명론



‘남조선 혁명론’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이다. 이 전략은 1960년대 지역혁명론으로 제기되었으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이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배경

북한의 ‘민주기지노선’은 북한의 혁명역량(정치·경제·군사 방면)을 강화하고,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남조선 혁명론’은 남한의 노동자·농민 등 근로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혁명을 수행한 후, 남한의 애국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의 합작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에서의 혁명 승리 후 조국통일이라는 단계를 설정한 것은 무력통일의 한계와 남북한 사회성격 격차 때문이다. 북한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동원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으로 인해 남북한 간에 사회성격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남조선 혁명론은 ‘북반부 혁명기지’의 강력한 지원을 받지만,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역량의 강화와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은 1960년대 대남정책에서는 혁명역량의 준비와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남한 내에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건설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는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기초해서 남한의 ‘혁명세력’을 지원하였다. 먼저 1964년 3월 5일 지하정당인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케 하였으며 1969년 8월 25일에는 당중앙위원회를 창립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지적인 군사도발도 감행하였다. 1968년에 발생한 북한 무장계릴라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지적인 군사적 모험도 서슴지 않았다. 1968년에 발생한 북한 무장계릴라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1968년 7~8월에 남한에서 김종태 등 통일혁명당

관련 핵심지도 인물들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북한의 혁명적 지하당 건설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실현 구상은 좌절되었다. 최근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의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전국적 범위의 당면목적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완수”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개정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가 삭제됨으로써, ‘남조선 혁명론 폐기’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관련검색어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민주기지문, 3대 혁명역량 강화

내각책임제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되고 김정일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만들어진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내각이 국가관리를 위한 행정경제사업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경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내각을 설치했다가 1972년 주석제를 신설하면서 폐지했다. 북한은 199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정무원 대신 내각과 내각총리를 다시 만들었다. 2016년 6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된다. 또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정부를 대표하며 전원회의를 열어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통해 전원회의가 위임한 사항들을 토의결정하기도 한다.

주요 내용 내각책임제는 내각이 국가관리, 특히 경제운동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제도이다.

조창덕 전 내각 부총리는 1998년 내각 신설 직후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지도기관을 새롭게 구성하고 기구체계를 우리식대로 개편한 후 경제지도사업에서 개선된 것이 많다”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옹계 실현돼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 통일적 지도가 더 잘 보장되고 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이 보다 강하게 섰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시작된 내각책임제는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면서 ‘경제=내각’이라는 등식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인 201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상대로 내놓은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제 내각책임제’를 다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2016년 1월 신년사에서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 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공답게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하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노농적위군 (노농적위대)



노농적위군(노농적위대)은 1959년 1월 14일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이다. 평상시에는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군대와 함께 지역 방어임무와 같은 정규군 보충 및 군수품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이후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배경(연혁) 북한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이 1958년 4월부터 철수함에 따라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사회안전부의 지휘를 받던 자위대를 해산하고 1959년 1월 14일 노동자, 농민, 제대군인, 학생 등 약 50만 명으로 노농적위대를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나, 1962년에 '전인민 무장화' 정책에 따라 18~45세의 남자와 18~35세의 미혼여성까지 편입시켜 조직을 확대하였다. 1971년에는 노농적위대 해당 연령을 50세로 연장하고, 다시 17~60세의 남자와 미혼여성 가운데 교도대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을 모두 편성대상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농적위대는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 이후 노농적위군으로 개칭되었다.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이 공식 등장하였고, 이후 북한은 '노농적위군'으로 호칭하고 있다.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야"한다며 내각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제8차 당대회 이후 내각총리를 비롯해서 내각관료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제7기 이후 내각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선임은 포함해서 부총리 전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제8기에 새로 선임된 내각상 전체가 당중앙위원, 후보위원에 인선되었다.

평가 내각책임제는 김정일 정권에서도 언급되었으나 김정은 정권 들어 인민과 경제 중시가 주요 국정 의제로 제기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총리의 경제 현장 점검과 지도도 '현지요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 시기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가 강조되면서 정치 논리에 몰입된 노동당 중심의 경제운용보다는 변화된 경제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대규모 인적 쇄신과 내각의 강화된 권한이 테크노크라트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당의 행정 대행, 당-정-군의 특수기관문제 등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시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북한 헌법, 7.1경제관리개선조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주요 내용(기능) 노동적위군은 당중앙위원회의 통제 하에 평시 사회안전성을 지원하는 민방위 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의 경계, 지역방위, 대공(對空)방어 등을 주요임무로 하며 지역 예비군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사시에는 정규군 보충 및 군수품 수송 등을 담당하고, 특수 적위군은 새로 편성되는 사단에 배속되어 정규군과 함께 게릴라 활동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총 대원이 약 570만여 명에 이르는 규모면에서 가장 큰 군사조직이다. 조직체계는 노동적위군 총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도 및 직할시 노동적위군(군단급), 시(구역) 노동적위군(연대급), 리(동) 노동적위군(대대급), 부락 및 직장 노동적위군(중대 또는 소대급) 등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제대별 지휘관은 해당 직장 및 지역의 당 책임비서가, 부지휘관은 사회안전성의 지역 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모든 대원이 개인화기로 100% 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일반 적위군을 제외한 2급기업 이상의 직장 단위 및 학교에 편성된 특수 적위군은 대공포와 대전차포, 탱크 등으로 중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 무력 열병식’에서는 노동적위군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국방성, 총참모부, 전민군사복무제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은 북한에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권력기구이다. 북한의 모든 정책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배경 북한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 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후 1949년 6월 30일에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주요 내용(기능)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규약 서문에는 노동당이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로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영도적 정치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를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 왔다. 북한 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제1, 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제시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또한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삭제하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의 성격을 김일성 개인의 정당으로 변화시켰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5대 교양)과 인민중시 및 청년중시 방침, 특히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견지 등을 명문화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인을 직접 우상화하는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당회의체를 제도화하여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강화하였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하면서 김정은의 독립적 지도자 위상을 제고하였다.

당규약에 따르면 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일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사업단위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조선)노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다.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이 신설되면서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변

경하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김정일 정권 이후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한편,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와 비서국을 복원하여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평가 (조선)노동당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사실상 유일정당으로 당국가체제 하에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제로 변화되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이 군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내세움에 따라 군대와 당의 우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당을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군대는 당의 군대로 명명하였다. 더구나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바뀐에 따라 당·군 관계 논란은 정리되었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규약, 노동당 대표자회, 노동당 대회, 노동당 비서국(정무국), 노동당 정치국,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총비서, 노동신문

노동당 군정지도부



김정은 정권은 당-국가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 산하 전문부서 중 하나인 군사부를 군정지도부로 개편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전문부서 가운데 하나인 군사부를 2019년 말 개편해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노동당 군사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사업을 보좌하며, 군사업무를 당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당 군사부의 주요 기능은 △국방성이 관장하는 각 군종 및 병종 사령부의 사상무장 실태 지도 △당의 군사정책 집행 상황 점검 △당의 4대 군사노선 집행 검열 등이다. 그러나 당 군사부는 김정일 시대 이른바 '선군정치'가 이뤄지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김정은 정권이 기존의 노동당 군사부를 노동당 군정지도부로 개편한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통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당 군정지도부의 초대 부장은 기존의 노동당 군사부장

노동당 규약



북한 노동당 규약(이하 당규약)은 당의 성격, 당조직 및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국가에 우선하므로, 노동당 규약이 북한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경과) 노동당 규약은 1946년 8월 28일 최초로 채택된 이래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규약은 북한 체제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체제의 합리화를 위해 변화하였다.

개정 시기별 당규약 전문을 살펴보면, 당의 성격이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1956, 1961)에서 “노동계급과 노동대중의 선봉적 조직부대이며 우리나라 노동대중의 모든 조직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197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1980),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2010),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2016)으로 바뀌어 왔다.

2010년 개정된 당규약은 3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북한의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발견된다. 당

이었던 최부일이었으나, 2019년 말 치러진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오일정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3남인 것으로 알려진 오일정은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중앙위 위원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당중앙위 부장으로 선임됐다. 오일정은 2021년 1월 중순 제8차 당대회에 이어서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 당중앙위 군정지도부장에 임명됐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국

의 위상과 관련하여 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 최고 정치조직,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의 국가 영도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가 부문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는 노동당의 목적도 변화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로,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당규약 개정에도 당대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당대표자회에서도 가능하게 하였다.

총비서의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총비서 선거 절차는 수령제와 부합되지 않았는데 2010년 당규약에서 교정되었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을 먼저 총비서에 ‘추대’하고 당연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정치국원·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의 핵심 3가지를 들자면, 첫째,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김일성을 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라고 규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업적’에 대

하여 보충하였다. 둘째, 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며, 김정일의 영도 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노동당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노동당 제1비서는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나간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노동당 위원장 직위를 신설하면서 제1비서직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하면서 비서국을 폐지하는 한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명시하였다. 5년 뒤인 2021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총비서 직위와 비서국을 복원하고 당중앙위원회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자력갱생’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강조한 국가발전노선을 명시했다.

평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정치가 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작동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북한 체제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정권도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그들이 표방하는 사회와 당시에 구축된 체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당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

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 등에 대한 사실상의 최고지침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당규약의 개정은 새로운 당적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 체제의 향방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제7차 당대회의 개정 당규약의 기본적 특징은 사당화·군사화·권력집중화였다. 그런데 제8차 당대회의 개정 당규약의 특징은 사회주의 보편성과 제도화를 추구하여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특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하여 김정은의 독립적 지도자상을 부각하였다는 점이다.

노동당 규율조사부·법무부



김정은 정권이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내외에 대한 지도·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 산하 전문부서로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른바 ‘당-국가 체제’, 즉 노동당을 중심에 두고 전반적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차가 되는 2021년 1월 치러진 제8차 당대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당 내 혁명적 규율 수립’이 그것이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당이 현재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제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정은 정권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을 통해 당중앙위 검열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에 당중앙위 검열위원회가 갖고 있던 당원의 당규율 위반 행위 조사·처리 권한을 당중앙검사위로 이관했다. 당중앙검사위는 기존에 갖고 있던 당 재정관리사업 검사 권한과 함께 당원과 당조직 및 당기관 내 부서에 대한 당

규율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제8차 당대회에 이어서 치러진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당 내 새로운 규율 감독체계 수립’이 중요한 의제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당 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규율 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던 바 있다.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고 당안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조사사업을 전문적으로 맡고 그 실현을 담보하는 기구적 대책으로 집행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노동당 규율조사부를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는 당중앙위뿐 아니라 도, 시, 군 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규율 위반 문제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도 결정했다.

노동당 규율조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은 박태덕은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지만 당중앙검사위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 위원 등에 임명됐다.

한편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폐지된 당중앙위 검열위원회가 갖고 있던 ‘당원의 신소청원 처리’ 권한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이관하며 일반적인 ‘신소청원 처리’로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된 당적 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노동당 중앙위 산하에 전문부서 중 하나로 법무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신설된 노동당 법무부는 국가기관인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사법기관인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 등 법 집행 관련 기구에 대한 지도·통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초대 당 법무부장을 맡은 김형식은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 위원에도 임명됐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대회, 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노동당 대표자회



노동당 대표자회는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임시 당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

1. 기능 및 역할

당대표자회 대표자들은 당중앙위원회가 정한 선출 비율과 선거 절차에 의하여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또한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특히, 당대표자회의 당중앙지도기관 소환·보선 규정은 1958년과 1966년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 개최 현황

제1차 당대표자회는 1958년 3월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1957~1961)과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었으며 당 조직 문제 등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당의 통일과 단결, 조직문제는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벌어진 소련과 및 연안파 등의 반김일성 세력의 제거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을 정비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1956년 8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당 내 검열과 총화 사업을 통해 당 내에서 김일성 반대파는 거의 대부분 정리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1958년의 당대표자회는 김일성 노선의 승리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은 소련과 및 연안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자주외교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제2차 당대표자회는 1966년 10월에 개최되었다. '현 정세와 당의 과업',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한 결정과 베트남 문제에 대한 성명이 채택되었다. 특히, 쿠바 사태와 중소 갈등의 와중에서 북한으로서는 계획했던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이 사실상 목표에 미달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를 3년 연장하였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국방비에 대한 투자 증대, 4대 군사노선의 본격적인 추진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당의 조직도 지금까지의 위원회 체제에서 비서 직제로 바꾸면서 김일성이 총비서로 등극하여,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제3차 당대표자회는 2010년 9월에 개최되었다. 제2차 당대표자회 이후 44년 만에, 제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열리

면서,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고 당규약을 개정하였으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특히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하여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전까지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이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30년 만에 개정된 당규약은 당대표자회에도 당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제4차 당대표자회는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앞두고 2012년 4월에 개최되었다. 이는 김정일 사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규모 있는 회의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제1비서직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였다. 조직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룡해, 정치국 원으로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비서에 김경희를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당대표자회	1958. 3. 3	·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 당조직 문제
제2차 당대표자회	1966. 10. 5	·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 당조직 문제(당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9. 28	·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 당규약을 개정(당대표자회에도 당규약 개정권한을 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당대표자회	2012. 4. 11	·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 제1비서직을 신설 ·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규약, 노동당 대회

노동당 대회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며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한다.

주요 내용(기능) 당대회는 초기에는 북한의 건국 문제, 노동당의 강령 및 규약 등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보고 등의 의제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당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자 선거 절차와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표자는 차하급의 당조직인 도(직할시) 당대표회에서 선출한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5,000명(당중앙기관 250명, 각급 대표 4,750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0명의 발언권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 일꾼대표 1,959명, 국가행정경제 일꾼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일꾼대표 44명,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

부문 일꾼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455명이었고 전체 대표자들 가운데 여성은 501명이었다. 한편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또는 전략 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는 임시 당대회인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당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③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결정한다 ④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⑤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한다.

개최 현황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당대회의 현황과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945년 10월 10일 개최된 제1차 당대회의 의제는 북조선공산당 당 창건 선포 및 당조직노선과 정치노선 채택 등이었다. 1948년 3월 27일 개최된 제2차 당대회의 의제는 북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었다.

1956년 4월 23일 개최된 제3차 당대회의 의제는 당중앙위원회·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당규약 채택, 당중앙위원회 기관 선거, 평양통일선언문 채택,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등이었다. 1961년 9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회의 의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당중앙위원회·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계가 구축된 이후인 1970년 11월 2일 개최된 제5차 당대회의 의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의

원 선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선거, 총비서(김일성) 및 비서, 정치위원 및 후보위원 선거,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노동신문 편집주필 임명, 당검열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거 등이었다.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제6차 당대회의 의제와 주요 결정사항은 김정일의 후계 지위 공식화(김정일을 당대회 집행위원회 29명 중 서열 5위로 선출),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제안, 비동맹 자주노선 등이었다.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위원장과 정무국 신설 등 직제 개편,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명문화, 핵보유국 입장에서의 대외관계 재정립,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채택 등이 이루어졌다.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와 비서국 복원 등 직제 개편,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수정,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출, 대미협상원칙으로 '강대강 선대선' 제시 등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당대회 개최는 당규약 상 규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제8차 당대회는 당시 당규약에 당대회 소집 시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7차 당대회 개최 이후 5년 만에 열렸고 이후 당규약에 이 내용이 적시되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될 전망이다.

당대회와 당대표자회

북한이 2010년과 2012년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 대신 '임시 당대회' 격인 당대표자회를 개최한 것은 당조직 개편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 6차 당규약에 따르면, 당대표자회는 당대회 사이에 소집되는데 당의 노선과 정책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제명·보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규약상 당대회와 당대표자회의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60년대 이래 10년 단위로 개최된 당대회는 북한의 장기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북한은 1990년대 전후로 대외정세가 불투명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동안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다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5년 만에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구분	규모	임무
제1차 당대회	1945. 10. 10	· 당 창건 선포 · 당 정치노선 · 조직노선 채택
제2차 당대회	1948. 3. 27	·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3차 당대회	1956. 4. 23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4차 당대회	1961. 9. 11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5차 당대회	1970. 11. 2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구분	규모	임무
제6차 당대회	1980.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당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제7차 당대회	2016. 5.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명문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 당규약 개정(당 위원장직과 정무국 신설,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폐지)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은 당 위원장 선출, 정무국 구성)
제8차 당대회	2021.1.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총화(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제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명문화) · 당규약 개정(총비서와 비서국 복원, 당중앙위원회 강화 및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은 총비서 선출, 비서국 구성)

노동당 비서국(정무국)



노동당 비서국은 분야별 계획 수립과 집행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노동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다.

배경 북한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비서국을 신설했다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했는데,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어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복원하였다.

주요 내용 노동당 비서국은 당 내부사업에 관한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비서국은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당의 중추기관이었다.

비서국은 1966년 10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데, 이때 종전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당의 최고 실권자인 총비서와 비서로 구성되는 비서국을 두게 되었다. 당시 총비서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규약, 노동당 비서국(정무국), 노동당 대표자회

제의 도입으로 김일성의 유일지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서국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즉 당의 최고지도기관들이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위상이 하락한 것과 반대로 당의 모든 정책은 비서국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비서국 회의는 총비서 또는 조직비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당과 국가, 군대, 행정 및 경제 등 모든 부문의 고위간부들의 임명 및 해임 등 중요 인사업무에 대한 결정, 모든 당적 조치들의 채택 등을 주관하고, ‘비서국 결정’, ‘비서국 지시문’ 등을 전당에 하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정치국이 본래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자 비서국은 김정일 시대보다 그 역할이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와 비서국이 부활하면서 동시에 신설된 것이 ‘총비서의 대리인’인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신설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주장, 김정은 유고 시 대비책이라는 주장, 후계자의 지위라는 주장 등이 있다.

평가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국을 두고 있으며, 정치국은 지도기관, 비서국은 최고집행기관의 성격を 가지고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형식상 당의 최고기관으로 되어 있지

만 심의에 제기된 정책안들은 비서국의 지도를 받는 집행부서들이 작성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정책안의 비준 또한 담당비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은 비서국 성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점차 당중앙위원회와 당정치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정치국,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정치국



노동당 정치국은 당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이자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권력 서열이 높은 간부들의 집합체이다.

배경 노동당 정치국은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양당 합당대회(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 합당)에 이어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노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이 신설되면서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변경하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

직·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원회의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만에 개최되고, 회의도 수백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회의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모인 정치국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국은 정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치국이 당규약상 북한 최고권력의 핵심체이자 절대권력 기관이므로 이들은 북한 당·정·군의 핵심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정치국 회의가 열렸다는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다. 이 시기 당규약상 당의 최고지도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 영도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체제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권력을 이끄는 핵심그룹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다시 당의 위상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과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이전까지 공식이 많았던 정치국과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채워 재정비한 것이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 재정비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정치국은 2011년 12월 30일 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당 구호를 심의하였고, 2012년 1월에는 특별 보도를 통해 김정일의 유해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2년 7월 15일에는 회의를 통해 리영호 군 총참모장 해임안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정치국 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7차 당대회 기간 5년 동안 20여 차례의 정치국 회의가 열린 것이다. 더욱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명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특히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평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강화는 당의 제도화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비서국(정무국),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당 재정관리사업 검사 권한과 함께 기존에 노동당 검열위원회(제8차 당대회 계기로 폐지)가 가졌던 당원의 당규율 위반 책임 추궁 및 신소 심의·처리보다 강화된 권한, 즉 '당규율 위반행위를 감독·조사하고 당규율 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변화했다.

배경 김정은은 2021년 1월 10일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당이 영도력과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당 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해 규율 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전당에 엄격한 규율과 혁명적 기강을 세워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북한에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가 각각 존재했다.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당중앙위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에게 당적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 문제와 관련한 도당위원회의 제의와 당원의 신소를 심의하고 처리"하는 기관이었고,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위와 같이 밝히며 당중앙위 검열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에 당중앙위 검열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제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 규율 위반 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율 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북한은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당 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조사 사업을 전담하는 집행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노동당 규율조사부와 법무부가 바로 그것이다. 신설된 당 규율조사부장(박태덕)과 법무부장(김형식)은 모두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 규율조사부장은 당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평가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의 당중앙검사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가 가졌던 권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왜

냐하면 기존의 당중앙위 검열위원회가 당규율 문제와 관련해 당원에게 당적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의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율 위반 행위 및 문제 등에 감독·조사 권한을 당원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대상을 향해 행사할 수도 있게 됐다기 때문이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규율조사부 법무부, 노동당 규약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서, 노동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등 군사 분야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이다.

배경 북한이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중앙위원회 산하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3년 4월 26일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승격되어 당중앙위원회와 위상이 같은 동격 조직으로 분리·격상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등 각급 단위의 당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북한의 군사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 총비서가 겸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기본적인 군사정책이나 전략수

립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업무는 당 군정지도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등에서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정기회의 및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 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기존 당규약에는 없던 내용으로,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중요한 군사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군수 관련 사항 정도를 결정하는 등 당시 국방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김정은 시대 들어 ‘당-국가체제’가 복원되면서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활성화되고, 이 회의에서 안보 및 군사 분야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국가적인 주요 결정 등을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나 권위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의 직책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의 후계체제는 당을 근간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상황 하에서 당과 군의 가

교역할을 담당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후계체제 구축 과업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에 “국방사업 전반을 단적으로 지도”한다고 명시하여 최고 군사기관으로 격상하였다.

김정은은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해나가는 형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군관계의 변화의 중심에는 달라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을 지도하고, 군의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대체로 군부 원로들로 구성됐던 반면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야전 군인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동시에 당시 내각 총리였던 박봉주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변화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8차 당대회와 이어진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리병철과 오수용(제2경제위원장) 등 군수산업 관련 인사, 조용원(당 비서) 등 당 인사, 북한에서 무력을 관장하는 인사(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국방상 및 부상, 정찰총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등)만 포함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주요 당중앙군사위 관련 회의 개최 현황(2021년 12월 기준)

시기	행사명	주요 논의내용
2021년 6월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2차 확대회의	· 군사력 강화, 주요 지휘관 임면
2021년 2월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 군대 내 도덕규율 확립, 주요 지휘관 임면
2020년 9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6차 확대회의	· 함남 검덕 지구 태풍 피해 복구 대책
2020년 7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확대회의	· 지휘관 사상 문제 및 당적 교양 지도 강화, 새세대 지휘관 사상 무장 강화, 주요 지휘관 임면, 중요 군수생산계획지표 심의 승인 등
2020년 6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화상)	·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 상정 안건 검토,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등
2020년 5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 총화분석 및 대책,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검토 및 수정 문제, 새로운 부대 조직·편성 문제, 포병 화력타격능력 강화 문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및 주요 지휘관 임면 등
2019년 12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 대내외 정세 변화, 군사력 강화, 조직 문제 등
2019년 9월	당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 태풍 13호 피해 방지 및 복구 대책, 조직 문제 등
2018년 5월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	· 군의 군사정치적 강화, 방위사업 전반 개선, 당중앙군사위 위원 및 주요 지휘관 임면 등
2015년 8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 남북 8.25 합의 이후 대책, 나선 홍수 대책, 당중앙군사위 위원 임면 등 조직 문제 등
	당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 준전시상태 선포 등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관련 대책
2015년 2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 방위사업 전환 관련 전략적 문제, 조직 문제 등

시기	행사명	주요 논의 내용
2014년 4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 군사력 강화 문제, 조직 문제 등
2014년 3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 군인생활문제 해결, 군사력 강화, 조직 문제 등
2013년 8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 군사력 강화 관련 실천적 문제 및 조직 문제 등
2013년 2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 군사력 강화 문제, 조직 문제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배경 당중앙위원회는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립 대회에서 처음 조직되었다.

주요 내용 당중앙위원회는 당과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 임무'로 하고 있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당중앙위원회의 조직기구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위원, 후보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한다. 1980년 제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위원은 145명, 후보위원은 103명이었다. 이에 비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위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대회, 노동당 대표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군정지도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원은 124명, 후보위원은 105명이었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정위원이 김정은을 포함해 129명, 후보위원은 106명이었고,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정위원이 김정은을 포함해 139명, 후보위원은 111명이었다.

또한 2021년 7월 현재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경공업부, 경제부, 과학교육부, 국제부, 군수공업부,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 근로단체부, 농업부, 당역사연구소, 문서정리실, 민방위부, 법무부, 신소실, 재정경리부, 총무부, 통일전선부, 38호실, 경제정책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때로는 중앙과 지방의 당·정 기관 및 경제 기관 등의 책임자들이 참가하는 확대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산하의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그러나 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

회의 개최 후 17년 만인 2010년 9월에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노동당이 아니라 군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전원회의가 1년에 1~2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평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당중앙위원회가 강화되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1년에 1차례 개최되었던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2019년 2차례(제7기 4차, 5차), 2020년 1차례(제7기 6차), 2021년 4차례(제8기 1차, 2차, 3차, 4차) 등 개최되어 당의 주요 결정을 하고 있다. 더구나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해 당대회에서 선출했던 당중앙검사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상불란한 위계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부서 신설과 당규약 수정 권한을 갖게 된 것도 당중앙위원회의 위상 강화라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규약, 노동당 정치국,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각급 단위의 당 조직에서 주요한 인사들이 참석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이자 의사결정기구이다.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고, ‘당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또한 개정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는 대체로 당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당중앙검사위 위원 등이 참석하며, 당중앙위 간부 및 내각의 성·위원회 등 중앙기관 간부, 도·시·군 등 지방의 당 및 행정 관련 주요 인사, 주요 군 간부 등이 방청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도, 시, 군의 당조직과 관련해 도·시·군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인 도·시·군 당대표회는 해당 단위 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당대회 등 상급 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도 당위원회는 4개월에 1회 이상, 시·군 당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도·시·군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시·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시·군 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또한 1개월에 2차례 이상 개최되는 ‘도·시·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해당 단위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도·시·군 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특히 중앙당 차원의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회의체이자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집권기에는 거의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열린 1993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공개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와 함께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약 17년 만에 다시 공개적으로 개최됐다. 이를 시작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수시로 개최되며 주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 및 기능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위 제7기 전원회의는 202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최됐으며,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2021년 1월 이후부터 동년 12월까지 당중앙위 제8기 전원회의가 4차례 개최됐다.

김정은 집권 전후 개최된 주요 당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현황(2021년 12월 기준)

시기	행사명	주요 논의 내용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 전원회의	·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및 비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위원, 당중앙위 부장 등 임면
2013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	·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 등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및 당중앙위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 부위원장 등 임면, 정무국 및 당중앙군사위 조직 등
2017년 10월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 정세 토의 및 대책 결정,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 위원 등 소환·보선 등
2018년 4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 및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선언 등
2019년 4월	당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 자력갱생 강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 주요 당 인사 임면 등
2019년 12월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 자력갱생 등에 기반한 정면돌파전 천명, 주요 당 인사 임면 등

시기	행사명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8월	당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 제8차 당대회 2021년 1월 개최 결정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및 당중앙위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 주요 당 인사 임면, 당중앙검사위 권능 강화 및 관련 집행부서 신설 결정 등
2021년 2월	당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 관련 2021년 사업 계획 토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강화, 당중앙위 구호집 수성, 개정 당규약 해설 심의, 주요 당 인사 임면 등
2021년 6월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 2021년 상반기 정책 추진 현황 및 대책, 농업 및 비상방역 대비, 경제 및 민생 관련 최고지도자의 '특별명령서' 발령, 대외 정세 분석 및 대응 방향, 주요 당 인사 임면 등
2021년 12월	당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21년 집행정형 총화 및 '22년 사업계획 · '21년 국가예산집행정형 및 '22년 국가예산안 ·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 당규약 수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1년 하반기 당조직사상생활 정형 · 조직문제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규약

노동당 책임비서



노동당 책임비서는 북한의 지방당, 즉 도·시·군 당위원회의 책임자를 의미한다.

2021년 1월 치러진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도, 시, 군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 도, 시, 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한다. 또한 개정 당규약은 하급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비서, 부비서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상급 당위원회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지방당인 도·시·군 당위원회 전원회의가 “도, 시, 군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처를 조직”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지방 당위원회 체계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서 책임비서 및 비서로 변화한 것은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존의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 체계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무국에서 제1비서와 비서, 비서국으로 바뀐 것과 관련된다.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의 중앙조직에서 최고직책은 ‘노동당 위원장’, 다음으로 중요한 중앙당 직책은 ‘당중앙위 부위원장’이었고, 지방조직인 도·시·군 당위원회의 최고직책은 ‘도·시·군 당위원회 위원장’, 다음 직책은 ‘도·시·군 당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그러나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이 다시 개정되며 북한 노동당의 중앙조직에서 최고직책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음 직책이 ‘제1비서, 비서’로 바뀌었고, 지방조직인 도·시·군 당위원회의 최고직책 역시 ‘도·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 다음 직책이 ‘도·시·군 당위원회 비서’로 바뀌었다.

북한의 중앙당 및 지방당 조직이 위원장 체계에서 비서 체계로 바뀐 것은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이 개정되기 이전 상황으로 환원된 것이다. 김정은이 후계수업을 받던 시기인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중앙당의 최고직책은 ‘노동당 총비서’, 다음 직책은 ‘비서’였으며, 지방당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당위원회의 최고직책은 ‘책임비서’, 다음 직책은 ‘비서’였다. 1980년 치러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은 중앙당의 최고직책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다음 직책을 ‘비서’로, 지방당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 당위원회의 최고직책을 ‘책임비서’, 다음 직책을 ‘비서’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대회, (사·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초급당(위원회), 초급당비서대회

노동당 총비서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 따르면,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의 수반'이고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영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며,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의 수반'이고,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영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6년 5월 치러진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됐던 당규약의 관련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제7차 당대회 시 개정 당규약에 따르면,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추대'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후계수업을 받던 기간으로 보이는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대회에서 '추대'되는 '노동당 총비서'가 '당의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영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북

한 노동당 중앙조직의 최고직책으로 평가되는 '당중앙위 총비서'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거하고, '당중앙위 총비서'가 당의 수반이거나 최고영도자이며 당을 대표한다거나 전당을 영도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제6차 당대회 이후 제8차 당대회까지 당규약에 나타난 북한 노동당의 최고직책 관련 내용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제6차 당대회 (1980)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제7차 당대회 (2016)	제8차 당대회 (2021)
최고직책 명칭	'당중앙위 총비서'로 추정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선출 기관 및 방식	당중앙위 전원회의 선거	당대회 추대	당대회 추대	당대회 선거
최고직책에 부여한 의미	-	당의 수반	당의 최고영도자	당의 수반
최고직책의 권한	-	당을 대표, 전당을 영도	당을 대표, 전당을 영도	당을 대표, 전당을 조직영도

한편,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 '당중앙위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된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당중앙위 제1비서'라는 직책이 등장한 것이 처음이고, 더구나 '당중앙위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역시 처음이기 때문이다.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노동신문사가 편집 발행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일간 신문이다.

배경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신문의 사명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그 기본 임무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고 전당과 인민을 김정일 동지의 주위에 묶어세우며 당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은 대내외의 주요 현안 및 정론이나 사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사는 1972년 11월부터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현재의 청사에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1974년부터 6면으로 늘렸으며, 현재 발간 부수는 150만 부로 알려지고 있다. 연중

북한은 2012년 4월 12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김정운을 ‘노동당 제1비서’라는 최고직책을 신설해 각각 추대했다. 그리고 김정운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의 최고직책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변화할 때까지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사용했다. 김정운이 2012~2016년 유지한 ‘노동당 제1비서’는 북한 매체에서 ‘노동당의 최고수위’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 명시된 ‘당 중앙위 제1비서’는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의 최고직책인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 즉 2인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대회, 국무위원회(국방위원회), 주석

무휴로 발간되고 편집형태는 전면 가로쓰기를 채택하며 모든 기사는 한글전용이다. 사진과 활자는 특간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흑백으로만 인쇄됐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컬러인쇄를 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이름은 글자를 크게 하고 진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발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글자체도 다르게 하고 있다.

신문의 1면과 2면은 정치면으로 북한 고위층의 동정, 찬양 등 관련 기사와 정책 관련 사실, 정론 등이 고정적으로 실리고 있다. 3면은 경제면으로 각 지역의 경제 관련 소식이, 4면은 사회면으로 북한 내 사회·문화·체육 소식이 소개되고 있다. 간지인 5면은 남한 및 통일 관련 기사, 6면은 국제 뉴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5면과 6면이 대내 기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동신문사에서는 당보를 발간하는 일 외에 당 일꾼들을 위한 참고 자료들을 편집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국제 주요일지>, <노동신문 주요 사론설집> 등 도서들도 발행하고 있다.

노동신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기사는 최고지도자의 동정과 사실 및 논평이다. 이 가운데 사실은 당의 방침이고 논평은 정세에 관한 당의 입장으로, 여타 매체들은 노동신문의 논조를 기준으로 편집 방향을 결정한다. 한국 등 서방 나라들의 보도 경향과 달리 노동신문에서는 생활정보 기사나 범죄 등의 사건 기사, 정책비판 기사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사회 내부의 사건·사고 기사는 한 줄도 없는 반면, 한국의 시위나 파업, 부정적인 사건들의 동향은 지면을 할애

하여 보도하고 있다.

노동신문사는 편집국, 당역사교양부, 당생활부, 혁명교양부, 공업부, 농업부, 과학교육부, 남조선부, 국제부, 보도부, 대중사업부, 사회문화부 등의 부서들을 두고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민주조선, 조선신문

농민시장



농민시장이란 텃밭이나 부업밭, 돼기밭 등을 통해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나 부업을 통한 생산물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농촌의 장터이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회주의적 상업'의 한 형태이다.

배경 북한은 농민시장을 1958년 이후부터 허용해왔다. 사회주의 초기에는 아직 생산력의 발전이 높지 않아 일부 부식물과 일용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으므로,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농민시장을 자본주의의 잔재로 보면서도 국가가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하고 공급할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경리나 개인부업을 통하여 나온 생산물을 농민시장에서 팔게 함으로써 협동농민, 노동자, 사무원에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텃밭의 규모를 30~50평 정도로 제한하여 일부 농민들이 공동노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개인경리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통제했다. 또한 식량

이나 공업제품 등 일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농민시장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들이 조장되지 않도록 했다.

주요 내용 농민시장은 인민위원회 상업과의 지도에 따라 도시에는 구역마다 농촌에는 군마다 설치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장세를 받으면서 운영되었다. 평양 등 대도시에는 상설화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군단위로 1~2개 장소에서 10일장으로 개장되었다. 지방에서 농민시장이 10일장 형식으로 개장되는 이유는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매달 1일, 11일, 21일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1958년 이후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던 1970년대까지는 농민시장의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농민시장 이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 경제난에 따라 농민시장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골목 어느 곳에서나 장이 서며, 지방의 10일장도 매일장으로 바뀌었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가내작업반, 부업반, 텃밭, 개인부업밭, 개인돼기밭 등이 확산되어 사적 생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유통 통로인 농민시장도 확대되었다. 또한 농민시장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점차 암시장으로 변질되어 갔다. 거래가 금지된 곡물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가내수공업 제품만이 아니라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소비재나 수입품이 국영유통망을 벗어나 농민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1987년, 1988년, 1992년, 1994년, 1999년에 농민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조치를 취했으나

데, 그때마다 주민들의 반발과 중하층 관료들의 비협조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농민시장의 규모와 시장 참여 주민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었고 거래품목과 거래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대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1990년대 배급제 및 국영유통망 붕괴가 더해지자 농민시장은 식량과 소비재 영역에서 국영 유통망을 대체해갔다.

결국 2003년 3월 북한은 농민시장을 확대 개편하여 ‘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시장의 설립과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만들고, 6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적 상업시장인 ‘지역(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했다.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시장은 공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면서 생산재 시장이 운영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종합시장은 전국적으로 2010년 200여 개에서 2015년에는 406개로 2배로 증가했으며, 길거리에 형성된 장마당까지 합하면 상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는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주민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약 83%에 달하며 시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70~80%, 지출은 소득의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돼기발, 배급제, 종합시장



단군릉
답사행군
당세포, 당세포비서대회
당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대안의 사업체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대홍단정신
독립채산제
돈주
돌격대
땀기밭

단군릉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과 단군 부인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무덤이다.

배경 현재 북한의 단군릉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단군릉을 개건한 것이다. 1994년 10월 11일 구전으로 전해 오던 단군릉이 있던 곳에서 3km 정도 떨어진 평양직할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 기슭에 화강석 1,994개를 다듬어 높이 22m, 한 변의 길이 50m의 사각형으로 새로 조성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단군조선(고조선)은 기원전 30세기에 일어난 세계 최초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고조선의 역사는 약 3천년으로 보고 전조선(단군조선, 1,500년), 후조선(1,200년), 만조선(100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는 신화가 아닌 실제적인 역사로 설명한다.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은 ‘박달종족연맹의 주장’이었으며, 어머니는 다른 종족 주장의 딸로 추정한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이나 광복 직후인 1946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담장으로 울타리가 쳐지고 단군릉이라고 적힌 비가 있는 규모가 큰 무덤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 역사계에서는 구전으로 단군릉이라고 전해지던 옛무덤에 대해서 1993년 1월 조사를 벌였다.

북한은 1993년 10월 2일 사회과학원의 ‘단군릉 발굴 보고’를 통해 고구려 양식의 돌칸 흙무덤에서 두 사람 분의 유골 86개와 금동왕관 앞면의 세움장식, 돌립띠 조각 등이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유골을 감정한 결과 하나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무덤의 유물을 근거로 그 유골이 5011년 전 단군과 그 부인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전문연구기관에서 이 유골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5011년 전의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국보유적 제174호로 지정하였다.

단군릉 발굴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994년 1월에 ‘단군릉 복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라미드 형태로 단군릉을 개건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개축공사를 추진하여, 1993년 10월 11일 준공식을 갖고 단군릉에 대한 대대적인 개축 작업을 거쳐, 이듬해인 1994년 10월 11일에 준공하였다.

남한 역사학계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연대추정 방법 등의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동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북한이 처음부터 단군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단군릉 발굴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단군신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단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발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답사행군



답사행군은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한 행적이나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를 따라서 답사하는 행군이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혁명 역사를 배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하기 위해 진행한다.

배경 답사행군은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행적이나 혁명 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명승고적 등을 따라서 진행되는 답사이다. 답사행군의 중심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다. 답사행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0년대 이후 김정일에 의해서이다. 김정일은 수령의 혁명 역사를 따라 배우는 차원에서 답사행군을 정례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이 정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대학생들에게는 백두산혁명전적지와 왕재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정례화되었다. 이후 북한의 주요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 기관 등 단위별로 답사행군이 하나의 정치행사로 자리 잡았다.

주요 내용 답사행군은 최고지도자의 ‘혁명전통’을 교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소학교부터 시작하는 답사행군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북한에서는

관련검색어 ▼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민족유산보호법

대상과 시기, 규모 등 다양한 형식의 답사행군을 조직하여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거의 모든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원될 수 있게 하였다.

답사행군은 전국적 범위를 포괄하는 형식과 지역별 또는 기관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형식이 있는데, 참가 대상과 답사 대상지는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답사는 혁명전적지 답사이다.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어은·장자산혁명사적지 답사행군, 왕재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주로 대학에서 학년 단위로 진행하며 소속 학생들을 전부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복의 천리길’은 김일성이 1925년 1월 22일 고향 만경대를 떠나 평양역을 출발하여 2월 3일 압록강가의 포평나루터에 이르기까지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중국 장백현 8도구까지 걸었다고 하는 길이다. ‘배움의 천리길’은 김일성이 1923년 3월 16일 중국 장백현 8도구를 출발하여 3월 29일 만경대에 도착하기까지의 노정으로 포평나루, 월탄, 오가산령, 화평, 흑수, 강계, 성간(당시 별하), 전천, 고인, 명문고개, 청운, 희천, 향산, 구장, 개천, 만경대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우등생 또는 출신성분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학교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쌓은 학생이어야 한다. 답사행군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김일성의 ‘업적’을 학습하고 발표모임과 결의모임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상문, 참관기, 기행문 등 글쓰기를 하고 사진촬영 등의 창작활동과 혁명전적지와 혁

명사적지를 꾸미는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는 답사행군 역시 답사를 통해 혁명사상을 학습하고, 회의, 감상문 발표, 귀환 보고회, 창작품 전시회 등을 통하여 개인의 답사행군을 통한 실제경험과 느낌, 감회 등을 발표한다.

평가 답사행군은 혁명사상 교양의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를 직접 체험하고, 혁명사적물을 비롯한 자료들을 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혁명교양이 이루어진다.

특히 김정일의 공식적인 등장 이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은 ‘백두산밀영’을 비롯한 백두산혁명전적지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로도 이어져 군 지휘관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단체들이 답사행군을 하고 있다. 북한은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백두산혁명전적지를 잘 꾸리고 보존하여 그를 통한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담보”로 설명한다. 즉 답사행군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김일성 일가의 혁명전통 계승성과 최고 권력자로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의례의 본보기이다.

관련검색어 ▼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밀영, 고난의 행군

당세포, 당세포비서대회



당세포는 북한 노동당의 말단 기층조직을 생명체의 세포에 견주어 이르는 표현이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세포는 일반적으로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배경 북한은 당세포에 대해 당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교양훈련을 통해 조직·사상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 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기본조직, 전투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당세포의 기본임무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지도하여 당원들을 혁명과업 수행에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 가운데 최하위 말단 조직인 당세포는 ‘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 있는 단위’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이 3~4명 있거나 30명이 넘어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도록 당규약은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당원수가 적어 당세포 구성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다른 당세포에 소속되거나 사업의 성격과 인접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 단위의 당원들을 합해 1개의 당세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거나 당원이 3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라졌다.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은 당세포가 “당의 말단 기층조직”으로서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직접적 전투단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당세포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에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 사람의 입당보증서를 소속 당세포에 제출해야 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 문제를 심의해 결정을 채택한 뒤 시·군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식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후보당원 2년을 거쳐야 하는데, 후보당원이 2년을 채우면 당세포총회에서 입당 문제를 심의·결정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 연장 및 후보당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군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세포총회에서는 잘못을 범한 당원에게 부여하는 책벌을 심의·결정하고, 책벌을 면제하거나 제명을 결정한 뒤 시·군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원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 당규약은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영도적 기능이 헌법에까지 명문화되어 있는 북한

에서는 고위간부에서부터 말단 평당원까지 모두 당세포에 소속되어 생활하며, 당 총화를 통해 평가받는다. 평가내용은 상부에 보고되어 각 개인의 평가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판과 처벌까지 받게 된다. 즉, 당원의 모든 생활은 당세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당세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당세포비서 행사는 1991년 5월 '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 1994년 3월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2007년 10월 '전국 당세포비서대회', 그리고 2013년 1월 28~29일 '전당 당세포비서대회', 2017년 12월 21~23일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2021년 4월 6~8일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등 총 6차례 개최되었다. 당세포 책임자의 명칭이 기존에는 '비서'였으나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는 '위원장'으로 바뀌었다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서는 다시 '비서'로 환원됐기 때문에 2017년 열린 제5차 대회의 명칭만 전후 대회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을 개정하며 당중앙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당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한다고 명문화했다.

1991년 노동당 조직비서를 맡고 있던 김정일은 '전국 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세포가 건전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라고 당세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리고 1994년 대회 때는 김일성이 참가자들에게 '당 중앙(김정일 지칭)의 유일적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라'는 내용으로 된 '당세포의 5대 과제'를 제

시하였다. 제8차 당대회 이후 개최된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일은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였다.

평가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07년에 전국 당세포비서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1차 핵 위기 때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에 개최된 제2차 전당당세포비서대회(1994.3) 이후 1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이 참여하는 전국 집체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당세포조직의 이완 현상과 일탈 상황을 점검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13년, 2017년, 2021년 등 3차례에 걸쳐 1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 전역의 당세포 책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가 '당세포비서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최고지도자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당세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북한 전역의 당세포 책임자가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규약, 노동당 대회, 초급당(위원회), 초급당비서대회

당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제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재정사업 총화보고를 통해 재정수입, 지출, 당재정 관리의 유일적 통제를 강조했다.

배경 제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제7기 기간동안 당 재정통제와 검열이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당 재정수입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자립적인 당재정토대가 강화되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당 안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출을 보장하면서도 많은 예비를 조성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 재정에 대한 유일적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재정을 “자의대로 처리하는 현상”, “계획된 한도 안에서만 쓰며 계획에 없는 자금과 물자를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당 재정은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며, 감독과 검열 역시 중앙검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당위원회가 검열 대상이었다.

당 재정 수입항목과 항목별 수입이 증가한 요인은 첫째, 근

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백만 당원들의 당비수입이 증가했으며, 둘째, 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영관리가 개선되고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 당 출판인쇄 부문의 출판물 발행이 늘어나면서 예산납부금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당 재정의 지출항목과 지출이 증가한 요인은 첫째, 당의(선전선동사업 등) 사상공세를 보장하는데 지출되었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조선혁명박물관 조성과 관리운영 사업,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당역사수룩사업, 혁명역사와 업적을 연구 고증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보장”했고, 당원, 근로자, 청소년학생들의 “필수 5대교양과 자력갱생교양, 사회주의교양 등 선전교양비”가 증가했다. 둘째, 주요회의의 회의비가 대폭 증가했는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과 대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지출”했다. 셋째, 최고지도자와 당의 대외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제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당 재정은 인민복지 사업에도 지출되었는데, 첫째, 여명거리와 삼지연시, 어랑천발전소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과 같은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에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둘째, 2020년 홍수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함경남북도 피해지역 모포 지원, 자연피해지역의 시멘트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제8차 당대회 총화를 통해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재정의 유

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당재정경리 부서들은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빠짐없이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의대로 처리하는 현상”과 “예산항목에 준하여 계획된 한도”내에서만 당 재정이 사용되도록 통제 감독하고, 또한 “당 재정 규율을 단폭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당비 수납규율”을 강화해 “당재정 예산수입과제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납부계획을 반드시 수행”토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확인된 노동당의 경제 관련 부서로, 내각 부총리급 인사가 실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조직의 책임자가 노동당내 경제관련 부서장의 역할과 내각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당과 내각의 경제계획 및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 2019년 연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과 경제 생산단위의 경제 사업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제8차 당대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 경제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당-정-군 등 권력기관들이 경제 관련 권한을 서로 분산해서 행사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대와 당이 경제 관련 기관, 기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관련 권한의 분산은 국가 주도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이 본연의 통일적 기능을 담당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당의 행정대행, 당-정-군의 특수기관 통제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

관련검색어 ▼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진해왔다. 기본적으로는 당과 내각의 경제 관련 권한을 통합, 조율,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경제정책실이 신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전현철이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그의 직함을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장으로 게재하였는데, 1년 전 지시되었던 경제관리사업 개선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실무조치의 결과로 경제관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담당자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내각 부총리로 공개된 것이다(내각책임제 참조).

주요 내용 및 평가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과 관련해 2021년 12월 현재까지는 어떤 공식 문건이나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인, 검토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 및 북한의 공식회의, 그리고 노동신문 게재 자료 등을 볼 때 그 기능 및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제8차 당대회 직후 노동신문에 기고된 전현철의 글을 토대로 해당 조직이 향후 북한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며 사업을 추진할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정책실은 내각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하부 경제 기관의 보신, 태공(태업)현상을 통제, 검열 및 관리하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자립적 경제건설을 위한 경제의 정비, 보강 및 이를 위한 경제관리제도의 개선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금속, 화학공업 중심의 자원 배분 및 하부 단위의 증산을 위한 감독통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검색어 ▼

당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노동당 중앙위원회,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란 경제관리운영에 당적지도를 도입한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을 말한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를 뜻한다.

배경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 전기공장(남포시 대안구역)을 방문하여 지시한 공업 부문 관리방법이다. 김일성의 현지지도 이전까지 대안전기공장은 공장 지배인을 중심으로 한 지배인 유일관리제였다. 이 체제 아래 공장 지배인은 생산을 포함한 공장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통해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관료주의적·기관본위주의적·이기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공장관리 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공장 당위원회로 넘겼다.

주요 내용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 중시,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당 간부와 지배인의 생산현장

지도 강화를 포함한 군중노선 관철, 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 독립채산제 실시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은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해 “공장·기업소들이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며 생산자 대중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경제관리체계”라고 강조했다.

공장 당위원회에는 당 간부, 행정 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생산 핵심당원) 등이 참여하여 기업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한다. 이때 공장 당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으로 그 기업을 집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기업 활동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또한 생산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지식을 갖춘 기사장을 중심으로 계획부, 생산지도부, 공무동력부 등 단일한 지도체계로 결합시켜 계획작성, 생산조직, 기술지도 등 전 과정을 일원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이것은 공장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원료와 자재공급을 일원화하여 필요한 공장에 제때에 공급하며, 쓸모없이 배정된 인원을 줄임으로써 원부자재의 공급, 누수, 손실 등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유동을 막기 위해 기업소가 근로자와 주민에게 생활필수품을 직접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했다.

평가

대안의 사업체제는 1962년 이후 북한의 공업관리체제로 정식화되어 당조직의 집중지도가 모든 공장·기업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제는 경제 관리에 대한 당의 지배를 제도화함으로써 당조직들이 당 사업보다 경제캠페인에만 치중하면서 행정을 대행하는 현상을 파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보다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공장 지배인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공장 자율권을 박탈하고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은 김일성 시대이후 강조했던 ‘대안의 사업체제’와 ‘청산리 방법’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기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헌법」 33조)라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대안의 사업체제가 국가와 당 중심의 경제관리방법이라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시장경제 방식의 경영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검색어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대흥단정신, 청산리정신·방법, 천리마운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북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비정부급 민간 외교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이며, 1956년에 대외문화연락협회로 출범하였다.

배경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다른 나라들과의 비정부급 민간 외교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이다. 1956년 4월 3일 대외문화연락협회로 출범하였고, 1980년대 들어 현재의 명칭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로 개명했다. 내각의 외무성이 외교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외교를 담당하고, 노동당 국제부가 다른 나라 정당과의 외교를 각각 전담한다면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다른 나라들의 비정부급(NGO) 기구와 단체, 친북조직과 친북인사들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 선전활동은 공식적 외교채널 외에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보조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

해외 일선에서 민간외교를 수행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당의 외곽기구로 민간차원의 학술·문화 교류를 통

해 상호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노동당 국제부의 지도하에 주로 미국과 서유럽, 제3세계 나라들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등의 친북단체들을 조직하거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여 친북화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연대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나라와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사회 문화적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선발대로서 길을 개척하면 외무성이 따라가며 수교 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당의 방침에 따라 친선대표단을 구성, 해외 각국을 순방하기도 하고 문화교류협정을 맺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선전 책자를 해외에 배포하는 등 각종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카드섹션인 배경대미술을 바탕으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결합된 대규모의 공연 퍼포먼스로 2000년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을 기점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는 별도의 장르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카드섹션인 배경대미술과 집단체조, 예술공연이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지는 종합 퍼포먼스이다.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매스게임에 예술공연이 결합되면서 집단적 위력을 보여주는 대규모 형식이 자리 잡은 것은 2000년이였다. 그 이전에도 수천 명이 출연하는 대형 공연이 있었으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기본은 집단체조이다.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1930년 김일성이 창작·지도했다는 ‘꽃체조’ <조선의 자랑>을 기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복 이후인 1946년 5월에 열린 <소년들의 연합체조>를 시작으로 집단체조가 행사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고, 규모가 조금씩 확대되었다.

이후 체육과 예술이 융합된 공연으로서 하나의 장르로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대집단체조와 예

술공연은 체육과 예술이 융합된 것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대공연’ 등 기존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종합공연예술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은 2000년에 들어서 창작됐는데, 첫 선을 보인 것이 2000년 10월 12일부터 5.1경기장에서 진행된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다. 이 작품은 처음으로 체육과 예술이 결합되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저녁에 공연을 함으로써 조명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등 새로운 형식과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출연자 규모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10만 명을 기록했다.

현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음악, 카드섹션, 군무, 체조, 연극, 무대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총망라된 대규모 종합공연예술로 2002년에 처음 공연을 시작하여 공연 명칭을 바꾸지 않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변경해 가면서 김정은 시기인 2013년까지 공연하였다. 같은 제목으로 10년 넘게 공연한 것은 <아리랑>이 처음이었다. <아리랑>은 2002년 6월에 예술분야에 수여하는 최고상인 김일성상을 받았고, 2007년 8월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2018년 <빛나는 조국>, 2019년 <인민의 나라>, <불패의 사회주의>, 2020년 <위대한 향도> 등이 진행되었다.

평가 김정일은 “집단체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시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체육과 예술을 결합한 선군시대의 독특한 종합예술로서 예술공연이라는 장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표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형식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책들을 대거 반영함으로써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외화벌이 수단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관련검색어 ▼

4.25문화회관, 김일성광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대흥단정신



대흥단정신은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 정신을 담고 있는 정치적 구호이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뤄야 한다는 사상적 구호이다. 대흥단정신은 감자생산에서 크게 혁신을 일으킨 양강도 대흥단군 농업근로자들의 노력과 끈기의 정신을 뜻하며, 단순히 농업 증산만이 아니라 자재와 기계, 전력 등 농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배경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대흥단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며 농업근로자들은 돌 위에도 꽃을 피우는 ‘대흥단정신’, ‘대흥단 일본새’로 21세기 농사에 풍작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대흥단정신은 전국의 농업생산 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사상적 구호로 제시되었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자력갱생 모델을 수립하여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강도 대흥단군은 감자 생산의 중심지이다. 김정일이 1998년 10월 양강도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할 때 “감자는 흰쌀과 같다”며 감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자를 비롯한 농업 증산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것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감자 증산을 이룩한 것이 대흥단정신의 모태가 되었다.

주요 내용 김정일은 1998년 대흥단군 종합농장과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시찰 시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면서 ① 식량문제, 먹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고 ② 농업생산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구현해야 하며 ③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종자혁명을 통해 농업생산의 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계기로 대흥단군 감자농사에 과학자, 기술자가 파견되고 제대군인 수백 명이 배치되었다. 북한은 이들로 하여금 자력갱생 혁명정신으로 감자 증산의 혁명을 이룩할 것을 촉구했다.

대흥단군 내 감자연구소에는 2·17과학자·기술자돌격대(유사시 인민경제 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는 과학기술 부문의 전문가집단)가 파견되어 영농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다. 특히 북한이 강조하는 종자혁명, 바이러스 없는 감자 개발에 주력했다. 또 100여 대의 감자 가공 설비를 설치한 감자 가공식품 공장을 건립하여 감자를 원료로 한 국수, 쌀, 빵, 순대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감자 음식물을 생산하였고, 감자과종기, 감자선별기, 감자수확기 등을 개발·지원했다. 이외에 대흥단군 내에 자체발전시설 및 전분공장을 건설하고 화물차, 트랙터 등도 지원했다. 무엇보다 대흥단군에 제대군인 수백 명을 배치했으며 이들이 이곳의 농업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대흥단군의 협동농장들이 감자생산의 비약적 증산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방법을 말한다.

배경 북한에서 본래적 의미의 독립채산제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농업 부분에서는 1960년부터 ‘작업반우대제’나 ‘작업장 독립채산제 및 상금제’라는 이름으로, 공업 부분에서는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완전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실시했다. 이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는 독립채산제 실시문제’가 토의된 결과,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장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84년 5월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 개정작업이 착수되어 동년 8월에 기업관리 운영규정이 마련되면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자주권의 부분적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광범위하게 연합기업소 형

을 이루게 되자 북한 전역에서 감자농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0년 11월 평양에서 ‘전국 감자 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002년 6월에는 ‘전국학술토론회’가 열렸으며 2004년 초에는 북한 최초로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가 열렸다.

감자농사가 활성화되면서 감자를 이용한 음식도 대대적으로 보급되었다. ‘농마(녹말)국수’, ‘농마지깬’, ‘언 감자국수’, ‘감자파배기’, ‘감자토장국’, ‘언 감자떡’을 비롯해 1천여 가지의 요리가 등장했다. 아울러 감자 가공 공장에서는 감자를 원료로 하는 전분, 분당, 엿, 술 등도 생산하고 있다.

대흥단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대를 이어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흥단군의 성과에 대한 북한의 각종 선전홍보와 대흥단 지역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생전에 대흥단군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였으며,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2013년 10월에 ‘감자혁명 15주년’을 맞아 대흥단벌에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으며 세계감자대회에서 대흥단 감자가 으뜸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전했다. 또한 2013년 북한 당국은 대흥단 감자캐기에 동원된 지역 주민들에게 2012년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양(560kg, 약 8개월분)의 감자를 분배하였으며, 모란봉악단의 지방 순회공연 때에는 대흥단군이 빠지지 않고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있다.

관련검색어 ▼

자력갱생, 감자농사혁명, 고난의 행군

태가 확대되면서 연합기업소를 이중독립채산제, 각종 기관들을 반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가의 지원폭을 줄이고 기업단위의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려는 입장에서 독립채산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는 독립채산제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 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관리 운영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독립채산제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체제에서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과생되는 문제점들, 즉 기업운영 및 생산조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 국가재산 애호정신 결핍, 개인 이기주의, 기관 및 지방 분위주의적 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 의식 결여를 해결하고, 노동력과 자재·자금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 축소, 노동생산성의 제고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채산제는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 형식으로도 실시되는데, 반독립채산제는 운영자금의 일부만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고, 이중독립채산제는 생산조직과 상위의 관리조직이 별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기업 재산운용에 있어서 기업소의 노임자금, 상금, 기업소기금의 적립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를 정확히 규정하고 고정재산의 관리 및 이용을 제도화하여 재정의무수행

및 기업소의 실적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의 본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독립채산제와 이중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란 비생산 부문의 기관기업소들 가운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 적용되는 독립채산제의 한 변형이다. 즉 반독립채산제는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는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부분적 독립채산제로서 대상 기관 및 기업소들의 수입을 제고시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중독립채산제란 중간 관리조직인 연합기업소·총국·관리국 등이 산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장·기업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계획단위·생산단위·집행단위로서 기능함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부 단위조직인 공장·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조직인 연합기업소·총국·관리국 등도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중적인 독립채산제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7.1 조치를 취했다. 핵심 내용은 가격 및 임금의 대폭 인상, 배급제 개편,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특히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 자율권을 확대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경영지표를 생산량에서 '번수입'(수익)으로 전환하고, 번수입의 자체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계획 외 생산을 30% 보장하고 시장판매를 허용했으며, 기업소는 자체 시장판매 제품의 가격결정권을 가지며 노동자에 대한 일률적 임금제도 역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는 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세금 납부 및 생산활동 정상화, 이윤창출의 책임을 지는 범위가 증대했다.

돈주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암시장,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배경 북한에서 장기적 경기 침체 및 경제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인 배급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공식 영역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시장의 확산은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유통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국가의 화폐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밀돈(시초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출현한다. 이때 주로 상업 및 기업 경영활동에서 자본을 활용해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계층을 돈주라 지칭한다.

주요 내용 및 평가 일반적으로 돈주는 북한사회의 신흥자본가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들이 모두 상업의 영역에서 부를 축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암시장이 확산될 무렵 밀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사회 중·상류층, 특히 외화

별이일군이나 당 고위 간부, 해외에서 부를 확보한 친인척을 보유한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암시장에서의 상업 활동을 통해 시초 자본을 축적한 세력 또한 존재하지만 오직 이들만이 돈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밑돈을 확보한 돈주라도 이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돈주들은 사금융 뿐 아니라 실물 경제 분야에서 투자활동도 하고 있다. 초기에는 시외버스·택시·물류 등 지방운수, 도소매, 국영상점 등 유통·물류 부문에 투자했으나 점차 건설, 채굴, 제조업 분야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은 공장·기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직접 경영에 나서기도 한다. 공장·기업소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돈주들은 자원이 부족한 북한 사회에서 대규모 경제건설에 필요한 화폐를 제공하거나, 국가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비공식 무역 활동을 수행하면서 권력층과의 공생을 이어가고 있다. 돈주에 대한 국가의 검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법적 영역 및 뇌물을 통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돈주들은 여전히 북한 경제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검색어 ▼

종합시장, 배급제, 국정가격/시장가격, 국정환율/시장환율

돌격대



돌격대는 주로 건설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된 단위로 '청년 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 등이 있다. 건설이나 각종 사업 수행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다.

배경(연혁) 북한에서 '돌격대'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돌격대는 주로 건설현장, 노동현장을 비롯한 각종 사업 현장에서 특별히 조직되는데, 사업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구 소련에서 스탈린 시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28-1933년) 동안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주도하며 전위대 역할을 수행했던 돌격대가 있었다.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집단적 노력 동원 조직을 지칭하는 의미로서의 돌격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기한의 단축, 조직력의 과시, 규율 확립을 통해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북한에서 돌격대 운동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46년 2월에 개최된 평양철도공장 종업원대회였다. 이 자리에서 '3·1운동 기념 생산돌격대운동' 조직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후 시간적 흐름과 더불어 돌격대 운동에 관한 언급은 점차 많

아졌는데, 크게 봐서 6·25전쟁 전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6·25전쟁 이전에는 공장이나 광산 등지의 ‘생산돌격대’, 농촌 지역의 ‘(양곡)성출완수돌격대’, 보통강 개수 공사에 동원된 ‘야간돌격대’ 등이 조직됐다. 그리고 이러한 돌격대 운동은 주로 청년층 당원 및 일선 행정기관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즉, 청년 노동자층의 체계적인 조직화와 동원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전후 복구 시기와 1960년대에는 북한 사회 전역을 집단주의 규율이 지배하고, 생산 및 건설 현장에서 개인별·집체별 노력경쟁과 집단적 혁신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시기 돌격대 건설 사업의 대표적 성과는 ‘해주-하성 간 광궤철도’ 공사였다. 김일성은 1958년 8월에 있었던 철도 개통식 연설에서 ‘건설사업의 속도와 양적 성과’를 강조하였는데, 청년돌격대가 군대식 편제에 따라 조직되어서 군대 규율을 준용한 노동 규율에 기초하여 돌격대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격대는 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한다. 돌격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청년돌격대’이다. ‘청년돌격대’는 해방 직후 북한이 추진한 ‘대자연개조사업’과 ‘보통강개수공사’에 ‘민청청년돌격대’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명칭이 변해왔다. 6·25전쟁 때에는 ‘전선지원청년돌격대’, 1954년에는 ‘수도청년건설대’, 1958년에는 ‘기술혁신청년돌격대’, 1968년에는 ‘수도건설청년돌격대’, ‘수도건설전국청년지원돌격대’, 1970년에는 ‘전국청년돌격대’,

1973년에는 ‘4.25 청년돌격대’, 1975년에는 ‘속도전청년돌격대’ 등이 있었다.

주요 내용

1. 구성 및 조직

돌격대는 당의 정책을 가장 충직하게 온몸으로 돌파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돌격대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도 당(黨), 군(軍)과 함께 청년조직이 북한 체제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돌격대를 조직해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청년돌격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 ‘속도전청년돌격대’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4년 3월 말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지시한 속도전 운동에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2월 16일에 조직됐다. 이후 청년돌격대는 도로, 발전소, 철도, 아파트 등 중요 시설들의 건설을 도맡아 왔다. 속도전청년돌격대 창설을 계기로 이전까지는 주로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졌던 돌격대가 상설 조직화돼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4.25돌격대는 1975년 5월 16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속도전청년돌격대’로 개칭했다.

청년돌격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속기관인 속도전청년돌격대 지도국의 지휘·통제 하에 중앙에 청년돌격대 지

도국 산하 14개 여단과 지방에 각 도 청년동맹 지방위원회 산하 11개 여단 등 총 25개 여단이 있다. 지휘부에는 대열, 재정, 시공, 안전, 후방(후생), 자재, 운수 부서와 참모 등이 있으며 기동예술선전대와 군의소도 있다. 여단 예하는 대대, 중대, 소대 등 군대식으로 편성돼 있고, 대원들의 직급도 전사에서 대좌까지 군사칭호를 부여한다.

이들은 정규군은 아니지만 군사조직과 같이 운영하며 제복을 입는다. 제복 왼쪽 앞가슴 김일성 배지 아래 직급표식을 달아야 한다. 1990년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현역 중좌 1명을 각 여단에 군사지도원으로 배치함에 따라 대원들은 1개월에 10일씩 사격술, 총검술, 100리 행군 등 정규군 못지않은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청년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 외에도 북한은 1978년 2월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 분야별로 '2.17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등을 조직해 생산현장에 파견하고 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1980년 1월 조직된 '5.19 과학기술혁신 돌격대'는 동년 11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4.15 기술혁신돌격대'로 확대·개편돼 자강도 희천시에 있는 '희천공작기계공장'에 최초로 파견된 이후 자체적인 신기술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1990년대 강원도에서 청년수원지와 원산수력발전소, 원산역 건설 등을 담당했던 '강원도 7월 31일 청년돌격대'와 1991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함경남도 함흥-부전 간

철도전기화 공사를 위해 구성된 '9월 6일 청년돌격대', 2000년대 초반 평남북부탄전 개천지구 탄광 산하 무진대청년탄광의 새탄층 개발에 기여한 '12.1 청년돌격대'와 2001년 신의주시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시설물 공사에 참여한 '6월 24일 청년돌격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투입돼 성과를 도출한 '9.18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이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돌격대는 산업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삼수발전소 및 고산 과수농장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며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6.18 건설돌격대', 2012년 창설돼 세포등관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된 '9.22 건설돌격대', 2015년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토지정리 사업에 참여했던 '토지정리돌격대' 등과 같이 건설·토목 부문에서 돌격대를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돌격대는 보통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이나 진지 강화 등에 동원되어 단기적 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년돌격대는 창립 이후 중요 기념비적 창조물과 중요 대상건설을 완공했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하반기 5년 동안에는 12만여 개의 청년돌격대가 조직되어 경제 각 부문에 투입됐다. 청년돌격대는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광거리와 광복거리 등에 세워진 아파트, 원산-금강산 철도공사 등을 비롯해 2000년 10월 완공된 평양-남포 고속도로, 평남 개천-태성호 수로공사, 2002년부터 시작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2·3호 발전소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2009년 150일 전투 기간에도 청년돌격대는 양강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현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황해북도 예성강발전소, 미루벌 물길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사 현장에서 일해 왔다. 또 2009년부터 시작된 평양 10만 호 주택 건설,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2016년 려명거리 건설에도 청년돌격대가 동원되었다.

관련검색어 ▼

속도전, 속도창조운동, 청년영웅도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3대혁명소조운동

뚨기밭



뚨기밭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큰 토지에 딸린 조그마한 밭”을 의미하며, 북한에서 뚨기밭은 매우 작은 규모의 농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텃밭이나 농장·기관·기업소의 부업지 중에서 작은 규모의 것은 모두 뚨기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개인 뚨기밭 경작 현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배급체계가 약화됨으로써 활발해졌다. 1980년대 말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한 동안 통제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식량난의 악화로 당국의 묵인하에 다시 활성화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보위부원, 심지어 군당 비서까지도 불법적인 개인 농사를 지을 정도로 뚨기밭의 경작이 확산되었다.

이 가운데 개인경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텃밭이나 부업밭 이외에 야산에서 화전 등을 일궈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것은 ‘개인뚨기밭’이라 칭한다. 경제난 이후 불법적인 개인뚨기밭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뚨기밭 용어가 경작 주체로서 ‘개인’, 합법성 여부에서는 ‘불법’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규모와 관련 없이 불법적·사적 경작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

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돼기밭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반환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예컨대 당국은 개인돼기밭 경작을 적발하고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르는 채 내버려 뒀다가 수확 시기가 오면 ‘돼기밭 검열 그루빠’를 만들어 돌아다니며 수확량을 계산해서 협동농장에서 분배할 때 그만큼 공제하고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방식은 2002년 7.1 조치를 통해 돼기밭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군 인민위원회 소속의 ‘집금소’에서 부동산 관리 등을 하며 주택의 땅값(건평과 건평의 100%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땅에 대해)으로 세금을 걷는데 이때 개인돼기밭 또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개인경작자는 매년 11월경 세금을 지불하고 경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개인영농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같은 돼기밭의 허용정책은 중하층 관료와 사적 경작자 간의 결탁과 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명학원
만수대의사당
만수대창작사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절(민속명절, 사회주의명절, 국가명절 등)
모자이크 벽화(쪽무이그림)
미래상점
미사일 개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민족유산보호법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주기지론
민주조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동에 있는 방과후 학생교육시설로 예술 분야, 체육 분야, 과학 분야의 영재들을 교육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학생소년궁전이다. 학생소년궁전은 소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들이 수업 후 과외활동을 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육시설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을 ‘학생소년궁전’이라고 하는데, 평양학생소년궁전과 함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유명하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북한 최고, 최대의 학생소년궁전으로 1986년 9월 5일 착공하여 1989년 5월 2일 준공하였으며, 하루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팔을 벌리고 감싸 안은 모양으로 좌우 대칭의 구조로 길이는 270m, 폭은 190m, 높이는 60m이며, 건축면적은 103,000㎡이다. 건물 내부에는 2,000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체육·문화예술 등 각 부문의 소조실과 활동실 200여 개가 있다. 이밖에 체육관과 수영장 및 과학기술제품 전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건물 밖에는 자동차실·트랙터실·전자계

산기실·녹화강의실·천체망원경실 등이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2015년에 전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하루 평균 5,000명의 평양시내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하여, 과학토론회·실험실습·실기훈련·제작활동 등을 통해 1인 1기를 습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500여 명의 상근 교직원에게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밖에 각 연구기관과 대학의 교수·부교수·과학자·기술자들이 객원교사 및 교육보조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컴퓨터 수재 교육체계를 운영해 금성제1중학교, 금성학원과 함께 컴퓨터 수재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더불어 평양의 대표적인 어린이·청소년 시설로서 단순한 교육기관 차원을 넘어 예술과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를 양성한다.

관련검색어 ▼

소년단, 소조활동,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혁명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혁명학원이다. 혁명학원은 북한체제 수호에 기여한 소위 공화국영웅이나 군인, 대남공작원 등 혁명유가족의 자녀들과 당·군·정 간부의 유자녀들이 입학하는 특수 교육기관이다.

배경 만경대혁명학원의 출발은 1947년 10월 12일 평안남도 대동군에 설립된 ‘혁명자유가족학원’으로 시작하였으며, 1948년에 현재 위치인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교사를 신축·이전하였다. ‘혁명학원’은 일제강점기에 항일투쟁을 하다가 죽은 ‘혁명열사’의 유가족 자녀들을 핵심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전쟁영웅의 유자녀까지 입학대상에 포함하였고, 이후대남공작원,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군인이나 주민의 유자녀들이 입학한다.

주요 내용 초기에는 항일운동가 유자녀들이 많아 우리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후 유자녀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학제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기본 학제는 우리의 중·고등학교 과정 6년으로, 11세부터 17세까지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김

정일의 지시에 따라 특수학제로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 과정을 만들기는 했지만, 극소수의 대남공작원 유자녀들만 엄선해 특수학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는 각지의 소학교 졸업반에서 공화국영웅이나 대남공작원의 유자녀, 북한체제에 기여도가 큰 군인이나 주민의 유자녀를 선발해 기본 학제인 중학교 과정에 입학시키고 있다. 이 학원은 다른 학교와 달리 교육성이 아닌 인민무력성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군 복장을 하고 의무적으로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은 사회정치과목, 군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외국어 등 일반기초과목 등이 있다. 학교 교육시설로서는 현대적인 교육 설비를 갖춘 여러 개의 교육관 건물들과 체육관, 수영장, 문화회관, 도서관이 있으며 기숙사, 식당, 병원, 종합편의시설을 비롯한 실습공장, 온실 등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은 졸업 후 필수적인 군복무를 거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등 정치군사 분야 대학에 진학하거나 당·군·정의 초급 간부로 진출한다. 혁명학원 출신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찌산 투쟁을 했거나 북한체제를 위해 일하다가 일찍이 사망한 사람들의 자녀인데다 북한당국이 체제의 골간, 미래의 핵심간부 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 지원 등으로 자부심도 높고, 충성심도 커서 일찍부터 북한 정권의 주요 간부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이후

부터 권력층에 등용되었던 인사로는 강성산, 김국태, 김병률, 김시학, 김유순, 김환, 립수만, 리길송, 리용익, 리철봉, 박송봉, 방철갑, 방철호, 심창환, 연형묵, 오극렬, 한상구, 현철규, 현철해, 최창환, 최영립 등이 있다.

만수대의사당



만수대의사당은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양시 중구역 만수대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서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중요한 정치 행사가 열린다.

1984년 10월 완공된 만수대의사당은 지상 4층 규모이며, 연 건축면적은 45,000m²이다. 내부에는 2,000여 석의 대회의실을 비롯해 소분과 회의실, 면담실, 휴게실 등이 있다. 만수대의사당의 벽과 기둥은 천연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장식돼 있는 등 북한은 조선혁명박물관,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대학습당과 함께 이른바 대기념비적 건축물로 내세우고 있다.

평양에는 만수대 대기념비, 만수대예술극장, 만수대예술단, 만수대창작사 등 ‘만수대’란 이름이 붙은 기관이나 건축물이 많다. 만수대란 평양시의 중심부 대동강 오른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언덕으로 해발 60m이며, 모란봉의 남쪽 능선에 연결되어 솟아 있다. 여기에 김일성 동상과 혁명박물관이 소재해 있어 북한에서는 신성시하는 지역이다.

만수대의사당은 최고인민회의의 회의장으로 사용되며 이 외에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외국 인사들을 면담하는 장

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의사당에서 양측 간 면담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만수대창작사



만수대창작사는 미술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미술 창작단체이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최고, 최대의 미술창작단체로 천리마 동상 제작을 기점으로 1959년 11월 17일에 창립되었다. 이후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 초 조각창작단을 모체로 중앙미술 제작소를 비롯하여 미술 창작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미술창작단이 되었다.

만수대창작사라는 이름은 김정일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 미술작품 창작에 주력하며, 이른바 ‘혁명미술창작의 산실’로 불린다. 만수대창작사에는 조선헌화창작단을 비롯하여 공예, 도안, 도자기, 벽화, 보석화, 수예, 유화, 조각 등 20여개의 분야별 창작단이 있다. 만수대창작사 전문인력은 인민예술가·공훈예술가 90여 명을 포함, 1,000여 명이다.

만수대창작사의 주요 작품으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비롯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1967년)과 인민상 계관작품 ‘천리마동상’(1961년), ‘만수대기념비’(1972년), ‘주체사상탑’(1982년), ‘개선문’(1982년), ‘대성산혁명열사릉’(1985년),

‘서해갑문기념비’(1986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1993년) 등이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또한 기념탑 및 건축물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조선화, 주제화와 풍경화도 제작하였다. 평양지하철의 벽화들과 인민문화궁전,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건축의 장식미술, 길거리 미술도 대부분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다.

만수대창작사는 1990년대부터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와 주민 사상교육에 필요한 각종 작품 창작에서 나아가 다양한 작품 창작 및 제작을 통해 외화벌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창작단 내에 만수대윈드합작회사 등 대외판매를 겨냥한 회사들을 설립하고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도자기, 조선화, 보석화, 수예품 등의 미술작품을 비롯하여 목걸이, 팔찌 등 각종 액세서리도 판매하고 있다. 2008년에는 통일거리에 만수대창작사 산하 종합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만수대창작사는 만수대 해외개발사그룹(MOP,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해외 판매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형 조각 창작을 수주하였다. 2015년 말에 개관한 캄보디아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이 있다. 2016년 8월 10일에 만수대창작사 혁명사적관이 개관되었다.

관련검색어 ▼

인민대학습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북한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관광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기관으로, 2011년 북한 당국이 금강산특구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바꾸고 관련법을 제정하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 변경하였다.

배경 북한은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를 2006년 5월 ‘명승지종합개발회사’로 이름을 바꾼 데 이어 2006년 12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으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개칭 당시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관광 사업이 활성화되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상위 기관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대남 경제협력 기구인 내각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변경하기도 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관광과 함께 남북한 관광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개성관광 관련 업무도 관장했으며, 이 외에도 평양 등 지역에서의 인쇄물 및 TV 광고 제작, 평

양관광 등에도 관여했다.

북한은 2011년 6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면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인의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바꾸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11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에도 북측에서는 황호영 국장 등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관계자들이 참가했었다. 그런데 2019년 10월 25일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의 발신 주체가 금강산국제관광국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이 조직이 금강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관련검색어 ▼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법,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명절

(민속명절, 사회주의명절, 국가명절 등)



북한에서 명절은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명절이 있다. 중심은 사회주의 명절로는 노동당창건일을 비롯한 7대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민속명절로는 음력설, 추석, 한식, 단오 등이 있다.

주요 내용 민속명절은 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에 따라 24개 나누었던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다. 민속명절로는 한 해가 시작하는 설날, 농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하는 정월대보름과 추석, 일년중 양기가 가장 강한 음력 5월 5일인 단오 등이 있다. 명절에는 명절에 맞는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차려 먹고, 가무를 즐겼다.

민속명절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두었던 것은 설, 한식, 단오, 추석이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이 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이웃을 찾아 한 해의 안부를 기원하였다. 추석이면 한 해 농사를 돌보아 준 조상을 찾아 감사드리고, 이웃과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즐겼다. 북한에서도 민속명절의 전통은 유지되었다. 명절에 이웃이나 친척을 찾아 인사를 나누며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새해를 맞이하는 양력설에는 웃어른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눈다. 이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바치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새로운 세배 풍습'으로 전통화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을 국가명절로 하여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지만, 추석을 명절에서 제외하거나 성묘를 금지한 적은 없다. 북한이 봉건유습 타파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외치며 조상숭배와 민간풍속을 봉건적 잔재로 매도했던 1960년대 말~1980년대 중반에도 추석은 그대로 유지시켜 추석 당일은 휴일로 지정하였다. 민족 최대 명절이었던 추석을 일반 민속 명절로 퇴색시키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매년 추석이면 성묘를 다니기도 한다.

설은 김일성이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봉건잔재'로 규정하여 1946년께 양력설(신정)을 공식적인 설로 선포하였다.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쟁 이후부터 음력설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1989년부터 음력설이 부활하였고, 연날리기, 팽이 치기 같은 민속놀이와 윷놀이, 씨름 등 민속경기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에서는 2002년까지 양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부르며 크게 쇠었지만, 음력설은 당일 하루만 휴식하는 휴일이었다. 2003년부터는 음력설에 3일간 휴식을 주고 과거에 크게 쇠던 양력설에는 1~2일만 휴무하고 있다.

북한은 단오와 추석을 예전의 명칭인 '수릿날', '한가위'로 부르면서 남북이 '같은 전통, 같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속명절이 있지만 명절이라고 하면 국가 명절을 떠올릴만큼 국가명절 비중이 높다. 명절 중에서 중요한 명절은 사회주의 7대 명절이다. 김일성 생일(4.15), 김정일 생일(2.16), 국제노동자절(5.1), 정권창립일(9.9), 노동당 창건일(10.10), 해방기념일(8.15), 헌법절(12. 27) 등이다.

여러 명절 중에서도 특히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크게 지낸다. 김일성 생일은 50회 생일인 1962년부터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고, 1968년부터는 정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72년 환갑을 계기로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격상되었으며, 1997년 이 날을 '태양절'로 제정하였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휴무일이다. 김정일 생일은 33회 생일인 1975년 2월 16일부터 임시공휴일로, 그 다음해인 1976년에 정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86년부터는 생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연장하였고, 1995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격상되었으며, 2012년 '광명성절'로 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예술 공연, 체육 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일성·김정일 사망 후에도 생존 시와 같이 생일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명절은 노동 여부와 의미에 따라 쉬는 날, 휴식일, 기념일로 나뉘기도 한다. 쉬는 날은 노동하지 않는 날로 설, 김일성(4.15)·김정일 생일(2.16), 인민군 창건일(2.8), 국제노동절(5.1), 정전협정 체결일(7.27), 해방기념일(8.15) 등이

다. 휴식일은 해당 일은 쉬지만 앞뒤 일요일에 보충 노동을 하는 날로 음력설, 추석 등 민속명절이 이에 속한다.

평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속명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복원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전통문화, 전통의학과 관련하여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을 지정하였고, 조선옷과 조선요리에 대한 행사도 많아졌다. 전통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비중이 높은 것은 노동당창건일을 비롯한 사회주의 명절이다. 최근에는 김정은 관련한 기념일이 생겨났고, 기념행사도 많아졌다. 명절도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관련검색어 ▼

태양절, 광명성,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김일성화-김정일화

모자이크 벽화 (쪽무이그림)



북한에서는 모자이크 벽화 또는 쪽무이 그림이라고 한다. 모자이크 벽화는 작은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벽화이다.

배경 야외에 설치된 미술 작품의 가장 큰 고민은 변색이나 탈색이다. 햇빛이나 비, 바람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탈색이 되거나 색이 바랄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보석화, 모자이크 벽화와 같은 형식이 발전하였다. 조선보석화는 여러 빛깔을 가진 천연 돌가루를 이용한 그림이며, 모자이크 벽화는 작은 타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그림이다. 변색이 잘 안되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요 내용 모자이크 벽화는 주로 야외나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는데, 모자이크 벽화로 사용하는 타일은 1,200℃에서 구워낸 색유리와 타일, 가공한 천연석을 사용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견고하고 변

색이 안 되는 타일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념비적 미술 제작에 많이 활용한다. 이 외에도 야외, 공장, 기업소 등에서도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한다.

모자이크 벽화는 야외에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민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인민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최고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이다. 최고지도자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당을 통해 인민들을 혁명으로 이끌며, 인민은 최고 지도자를 온 몸으로 보위하며 믿고 따르는 존재로 드러내야 한다. 이런 교양 사업에서 미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의 영도와 정치성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북한 미술은 거리나 지역 곳곳에 탑, 그림, 조각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모자이크 벽화는 관리도 어렵지 않아서 여러 지역과 단위에서 모자이크 벽화를 설치한다. 모자이크 벽화는 작은 모자이크를 섬세하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대부분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모자이크 벽화(쪽무이그림)는 직관적으로 정치성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화-김정일화

미래상점



평양 보통강 기슭에 위치한 과학, 기술자 전용 상업봉사기지(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이다. 2012년 개점하였으나, 김정은의 1월 현지지도에서 “미래상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약 4년 동안 신규 이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이후 4월 개장해 운영되고 있다.

배경 북한은 2019년 4월 개정 「헌법」 20조에서 과학 기술 주도 경제건설을 명기하고, 40조에서 “전민 과학기술인 재화”를 추가하는 등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강조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김정일, 김정은 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당국은 평양 시내 과학, 기술자 전용 거주 공간 및 생활편의시설을 건설하고, 과학자, 기술자를 대상으로 영웅 칭호 및 군사 칭호를 부여 또는 상향시키는 등의 조치를 지속했다. 이러한 북한의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건축물이자 시설 가운데 하나로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미래상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사후 2012년 1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 현지지도를 통해 과학자, 기술자 및 인민대중을 위한 당의 모범적 봉사기지 단위로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 평양 보통강기술에 신규 증축된 미래상점은 과학자, 기술자를 위한 상업봉사기지(소비품 판매점)로 기획되었으나, 최근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일반 인민들도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신축된 미래상점에 대해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오늘의 과학기술시대를 상징하듯 날아오르는 로케트와 지구의 모양의 기둥들이 천정을 떠받들고 세계적 추세에 맞게 다님길들의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상품들을 진렬”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건축 미학과 특색을 발휘한 건축물이라 선전하고 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미래상점에는 가정용 전자제품, 화장품, 식료품 및 다양한 소비재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민위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미사일 개발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으며 1990년대부터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2017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전략노선으로 추진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진력했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 지구권 타격 로켓 개발 추진을 천명했다.

배경(연혁) 북한은 1980년대 초반 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이집트에서 제공받은 소련제 스커드(SCUD)-B(사거리 300km) 미사일을 모방한 것이 시작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지만 1970년대 남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과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84년 스커드-B를 자체 제작한 데 이어 2년 뒤에는 사거리가 500km에 이르는 스커드-C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 지역 전역을 미사일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방법은 새로운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사일 추진 체계 여러 개를 묶거나 확대 제작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방식 등을

통해 북한은 1990년대 사거리 1,300~1,500km, 탄두중량 600~700kg의 노동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작전 배치했다.

동시에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다단계 미사일인 대포동 1호(사거리 2,500km)와 대포동 2호(사거리 10,000km 이상)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1998년 8월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했으며,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은하 2호)을 발사하였다. 계속해서 2012년 4월에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2년 12월에 다시 발사하여 성공하였으며, 2016년 2월에도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북한은 2016년 들어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을 7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했지만, 1차례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2009년, 2013년에는 각 한 차례, 2016년에만 두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핵탄두 운반 수단으로써 미사일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수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에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대내 정치적 환경과도 상관이 있다.

1998년의 대포동 1호는 강성대국으로의 진입 선포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에 맞춰 이루어졌다. 2012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관련한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을 타격하기에 충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트 사령부로 확대·개편한 뒤 2014년 전략군으로 다시 격상했다.

북한은 현재 단·중·장거리 등 다양한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개발·보유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인 화성-16형을 비롯하여 ‘북극성-4s’으로 표기된 신형 SLBM,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 전술미사일을 공개하였으며, 2021년 1월 14일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s’이라고 표기된 신형 SLBM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구분	SCUD-B/C	19-1 SRBM	19-4 SRBM	19-5 SRBM	SCUD-ER	노동	무수단	대포동 2호	북극성/북극성-2형	북극성-3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사거리(km)	300~500	약 600	약 600 미만	약 400	약 1,000	1,300	3,000 이상	10,000 이상	약 1,300	약 2,0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탄두 중량(kg)	1,000	미상	미상	미상	500	700	650	500~1,000	650	미상	650	미상	1,000
비	작전 배치	시험 발사	시험 발사	시험 발사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발사	시험 발사	시험 발사	시험 발사	시험 발사	시험 발사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2020), p. 297.

관련검색어 ▼

핵개발, 국가우주개발국,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는 북한에서 대남 민간경협을 담당하는 기구로, 1990년대 정무원(현 내각) 시절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단체로 출발했다.

배경 민경련은 1998년 5월 이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활동해오고 있고, 2000년대 남북경협이 비교적 활발한 시기에 남한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와 함께 경제 관련 단체들의 대북교역 협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주요 내용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광명성총회사는 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분야에서 대남경협을 전문으로 하고, 삼천리총회사는 주로 전자, 지하자원, 화학 분야에서의 투자와 교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회사 간 분야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들어 개최된 남북회담에는 민경련 대표가 북측 회

담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 공식면담에 정운업 민경련 대표가 배석하였고,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 허수림 민경련 총사장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민경련은 중국지역에서의 한국기업들과의 경협협의를 사실상 전담했는데, 한때 중국의 베이징, 단둥, 옌지에 대표부를 두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10월부터는 남북합의에 따라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민경련 소속 인원들 10여 명이 동 사무소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근무 인력은 북한의 각종 대남도발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개성 현지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 말 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업을 비롯한 민경련 관계자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당하면서 기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민경련은 남측의 대북지원단체 등과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검색어 ▼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법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은 김일성이 1993년 4월 6일 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내용을 기초로, 김정일이 1998년 4월 19일 압축적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배경 김정일은 1998년 4월 18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제의의 서한을 보냈으며, 여기에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하였다.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 제시된 시기는 김정일이 유신헌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여는 준비과정과 맞물려 있다. 김정일은 1997년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발표하여 대남·통일정책과 관련한 기본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임을 밝혔지만, 이를 김정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통일지도자상을 과시하려 한 것이다.

주요 내용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애국애족의 기

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③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남과 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핵심이 되는 민족대단결론은 북한 정권이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통일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민족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앞세워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탈냉전이라는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내부 정비의 시간을 벌고,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 북한은 외세와의 공조 파기, 국가보안법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선행 실천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간 접촉·왕래·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북한은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관련검색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5대 강령

민족유산보호법



민족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제정한 법으로 2018년에 내용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배경 북한에서 민족문화보호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누어져 있었다. 무형문화재는 주로 역사학, 민속학 차원에서 연구되었고, 법적인 보호는 유형문화재가 중심이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1994년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다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에 민족유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2015년에 「민족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 조항을 확대하면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은 2012년에 제정한 「문화유산보호법」을 확대하여 보호 범위를 넓힌 법이다.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민족유산’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여 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은 전체 6장에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8년 11월 개정하면서, 6장 73개 조항

으로 11개의 조항이 늘어났다. 전체 6장으로 장의 숫자는 같지만 구성은 달라졌다. 2015년 법에서 제2장과 제5장으로 나누어 있던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과 ‘민족유산의 복원’이 2018년 개정된 법에서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복원’으로 통합되었다. 그대신 2015년 법에서는 제4장의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으로 통합되어 있던 ‘관리’와 ‘리용’은 2018년 개정법에서는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으로 분리하였다.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호대상인 민족유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족유산의 개념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여 있으며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비물질유산의 범위를 넓혀 전통의학과 전통기술을 추가하였으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평가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 문화를 이용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문화에 대한 경제적 활용도가 높아졌다.

관련검색어 ▼

단군릉,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 비물질문화유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이다.

배경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1960년대의 남조선 혁명론을 더욱 구체화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민족해방이란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우선 1단계로 남한 내 노동자, 농민 등이 주체가 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한 다음, 2단계로 남북한 정권 사이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 즉 연공정권의 수립을 통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5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남조선 혁명의 기본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혁

명가들과 인민대중의 중요한 과업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적 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폭력적 혁명역량 준비와 남한 정권의 타도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 남조선 혁명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김일성은 또 남조선 혁명에서 ‘평화적 이행’은 있을 수 없고, 평화적 통일은 남조선 혁명 후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이 초창기 민주혁명기지 전략에서 이처럼 단계적인 지역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6·25 남침의 실패로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 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무력통일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의 우군으로서 남한 내 친북 혁명세력의 생성과 자생력 확보를 통해 혁명기지 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남한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인을 남한 주민 자신이라고 선동하는 것과 혁명역량의 편성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구분하면서 주력군 편성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력군이란 노동자, 농민과 그 속에 뿌리박은 노동계급의 당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혁명적 당의 건설을 선차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시도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의 통일혁명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등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주한미군철수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한국 사회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개칭되었다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 이 또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바뀌었다.

관련검색어 ▼

남조선 혁명론, 민주기지론, 통일전선전술, 3대 혁명역량 강화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북한의 정당,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어 조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접촉 창구 및 대남사업 등을 담당한다.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는 북한의 정당,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어 조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접촉 창구 및 대남사업 등을 담당한다.

북한은 1998년 6월 10일 평양에서 ‘정당·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같은 해 8월 15일 판문점에서 ‘통일대축전’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당시 김용순 조선노동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조국광복 53돌에 즈음하여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가 참가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축전’을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 회의가 개최된 날 남북 교류와 대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된 ‘민족화해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했

민주기지론



민주기지론이란 북한의 초기 단계 대남 전략으로 북한지역에서 공산주의 혁명기지를 강화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공산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 북한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기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초기 단계의 대남 전략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북한 지역에서 먼저 민주기지를 강화해서 이를 토대로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민주기지론이다.

주요 내용 원래 민주기지란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 공산주의 방식으로 정치·경제·군사적 역량을 강화하여 하나의 근거지로 삼고, 다시 타 지역으로 이러한 혁명을 수출하는 스탈린의 세계혁명 전략에서 유래된 것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혁명의 참모부인 노동당을 먼

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단체에 대해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과 해외 여러 단체 및 인사들과의 내양과 접촉,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남 접촉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화협은 당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호를 회장으로 하고 10명의 부회장과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김영호 회장은 2002년 8.15 민족공동행사에 ‘김영대’라는 이름으로 북측 대표단을 인솔해 서울을 방문한 후 여러 차례 남북공동행사시 북한 대표단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민화협은 이후 실제로 남북 민간교류에서 창구역할을 해 왔으며, 여러 대북지원단체와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2007년부터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대남비난에 앞장서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법

저 건설하고 그 무장력으로서 인민군을 창설하였으며, 이어 1948년 9월에 정권 수립을 선포하였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이 같은 혁명기지 전략의 결정적 실행 수단이었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며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인 민주기지론은 1970년부터 이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의 기초가 되었다.

관련검색어 ▼

남조선 혁명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3대 혁명역량 강화, 통일전선전술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이다.

배경 1945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의 기관지로 만들어진 『평양일보』를 개편하여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 후 1948년 9월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공동기관지로 발전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의 조선백과사전에 따르면, 민주조선 신문의 사명에 대해 “인민정권기관일꾼들과 국가경제기관일꾼들을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돌레에 굳게 묶어세워 당정책 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민주조선』은 민주조선사에서 대형판으로 월요일 제의 주 6회 통상(4면 화요일과 금요일 또는 김일성·김정일 생

일 등 특별한 날에는 6면)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내각 기관지라는 성격에 맞게 편집에서 행정실무와 관련된 문제 등을 많이 취급하는데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그리고 내각의 결정과 지시, 법령, 시책, 규정, 법규 등을 소개한다. 1972년 12월부터 헌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관 체계에 의한 정부 대변지의 임무를 수행해오다, 1998년 9월부터 다시 새로 개편된 국가기구체계에 맞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책임주필을 최고 책임자로 하고 그 밑에 15명 내외의 부주필을 두고 있으며, 편집국과 국제부, 이론선전부, 인민행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검색어 ▼

노동신문, 조선신보, 최고인민회의, 내각책임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배급제

백두산대학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벼랑 끝 전술

보위국(보위사령부)

보천보전자악단/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전자악단

보천보전투

부동산사용료

북-러조약

북일 수교협상

북-중조약

북남경제협력법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회의

북한 헌법

북한 훈장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분조관리제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비물질문화유산

비사회주의 그루빠

비상방역법(코로나 대응 관련)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내에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사상과 문화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제정한 법이다.

배경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대외환경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내부적으로 사회풍조를 다 잡을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와 관련한 처벌 근거로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상정하였고,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외부정보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유포되는 방송, 영상, 도서 등과 정보통신 매체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대내적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이나 문화를 적극

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체제가 2020년 이후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체제 위기의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통제는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규율조사부·법무부,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배급제



배급제란 국가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식량)의 분배와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식량)을 판매 공급하는 제도이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배급제를 통해 공급했다.

배경 배급제는 물질적 재화에 대한 국가의 중앙공급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경제적 수단은 배급제도이다. 또 북한에서 배급제는 단지 물질적 통제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주민이동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 배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제한된 투자조건 속에서 중공업 우선의 축적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소비를 강력히 억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비롯한 개인의 기본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소비를 통제하며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주요 내용

1. 배급 기준과 방식

북한은 1947년 1월 6일 식량배급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세칙으로 ‘식량배급에 관한 조례’를 작성하여 식량배급대상과 배급기준, 대상자 결정절차와 배급사무 절차들을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명시했다. 북한은 또한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계층 분류에 따라 배급정책과 사회보장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1952년 3월 내각결정 제56호로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5월부터 공식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식량배급제는 1957년 11월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결정 102호가 채택된 이후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배급은 각 직장의 경리부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량배급표’를 지급받아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정해진 날짜에 따라 지정된 거주 지역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와 식량대금을 지불하고 배급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은 1957~1958년 양곡을 제외한 일체의 소비품들에 대한 배급을 폐지하고 국정가격에 의한 판매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제한된 물품을 할당받는 형태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배급제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절에는 대다수 북한 주

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했다.

주택의 경우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주택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고 거주한다. 주택은 크기 및 부대시설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지위와 계층, 소속 등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게 된다.

2. 경제난 이후 배급 방식의 변화

북한의 식량 공급제도는 식량을 정해진 날짜에 국가공급량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10%를 감축하고, 다시 전쟁 비축미라는 명목으로 12%를 감축하는 등 그 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배급도 한 달에 2번씩 하도록 되어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두 달씩 건너뛰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배급제도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급기야 1995년 말에 이르러 특정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 식량과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북한 전역을 휩쓴 장사바람으로 인해 출신성분에 기초한 배급제도의 유용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식량의 국정가격을 현실화(쌀 kg당 8전→44원)함으로써 종래 무상에 가까운 배급제를 적절한 가격의 배급제로 전환했다. 또한 2004년 3월 군인, 국

가안전보위원, 인민보안원 등 체제보위 계층을 제외한 주요 기관, 기업소에서는 식량 자력조달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배급제 정상화 선언 이후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개인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국가가 식량 공급소를 통해 독점적으로 식량을 판매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에는 계획경제 복원의 일환으로 국가배급망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은 도시근로자, 당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배급의 실시, 중단이 반복되거나 평양과 지방의 지역적 배급편차가 보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부 산간지역 또는 농민 등 일부 계층은 시장 구매나 텃밭, 돼기밭 등을 통해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고난의 행군, 농민시장, 돼기밭, 종합시장, 국가계획위원회

백두산대학



백두산 대학은 김정은이 2019년 10월에 이어 12월에 백두산을 올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강조한 이후 2019년 12월 11일자 『노동신문』에 정론 '백두산대학'이 실리면서, 김일성의 항일혁명 정신을 다시 배우자는 의미로 사용한다.

배경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이후 북미협상을 통해 대외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려던 대외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김정은의 리더십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실추된 김정은의 리더십을 복구하고, 혁명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백두의 혁명전통 계승을 강조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2019년 12월 4일 김정은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시찰하고, 백두산에 올랐다. 2019년 10월 16일에 백두산을 오른 이후 두 번째였다.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최측근과 함께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구,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삼지연군 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숙영소, 무포숙영지와 대흥단혁명전적지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교통문제도 풀렸고, 여관 등의 수용 능력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겨울철 답사를 조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겨울철 혁명전적지

답사 조직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이 백두산 답사를 강조한 이후 '백두의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글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2019년 12월 11일자 『노동신문』은 전국 당선전일군들의 백두산 답사 소식을 전하면서 승철진의 정론 「백두산대학」을 게재하였다. 정론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태동한다”, “가자, ‘백두산대학’으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민심이다”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지닐수 있는 최고의 정신이 바로 ‘백두산대학’의 혁명교재 속에 다 들어있다. 누구나 강해지려면,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이런 속에서도 더 높이 솟구쳐 오르는 불사조가 되려면 ‘백두산대학’으로 와야 하며 여기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해 혁명정신을 배우는 것을 ‘백두산대학’의 학생이 되는 것이라면서 당원을 비롯하여 각급 사회단체와 근로자들의 답사가 이어졌다.

평가 2021년 현재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였던 세계화, 만리마의 구호 대신 자력갱생과 천리마 정신을 강조하면서 주민 결속을 다지고 있다. 백두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백두산대학’은 북한 체제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의 정통성을 백두 혈통에 기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관련검색어 ▼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주체사상, 선군정치, 항일 빨찌산 정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김일성 시대에 시작해 김정은 시대에 완공한 수력발전소로, 양강도 백암군에 위치해 있으며 총 발전설비 규모는 10만kW이다.

배경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1980년대에 양강도 백암군 지역의 중소형 발전소로 시작이 되었고 1990년대에는 ‘황토청년발전소’, 2000년대에는 ‘백암발전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규모 발전소로 공사가 확장되었다. 1995년부터 ‘황토청년발전소’라는 명칭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으나 홍수와 경제난 등으로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004년부터 청년돌격대 2만 명이 투입돼 본격 건설이 시작됐으며, 2015-2016년 1호, 2호, 3호기 건설이 완료된 수력발전소이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95년 양강도 백암군에 ‘황토청년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체적 경제난에 빠진 북한은 자재난 등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4년부터 당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현 ‘사회주의애

국청년동맹’)의 핵심 동맹원들로 조직된 백두산청년돌격대 인원 2만 명을 발전소 건설에 투입하고, 발전소 명칭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로 개칭했다.

그럼에도 발전소 건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김정은은 2015년 4월과 동년 9월 현장을 방문해 발전소의 명칭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바꿨다. 이후 북한은 2015년 10월 3일 5만kW 용량의 1호기와 2만kW 용량의 2호기 건설을 완료했다. 그러나 무리한 공기 단축 및 부실공사 등으로 수로 일부가 붕괴되며 시운전이 한 동안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은 3만kW 규모의 3호기 건설을 다그쳐 ‘70일 전투’를 벌이는 등 건설에 매진한 결과, 2016년 4월 완공했다. 그렇지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호기와 2호기도 누수 등으로 2016년 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으며, 3호기는 준공한 지 10일 만에 누수가 발생해 물을 긴급히 방류한 흔적이 인공위성 사진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완공을 ‘청년중시 사상’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청년들의 활약상을 선전하기 위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관련검색어 ▼

속도전, 돌격대, 속도창조운동, 화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북한은 한민족이 성산으로 간주하는 백두산에서 정통성을 찾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유격투쟁을 벌일 때 백두산에 설치한 밀영이 주요한 활동 거점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일성에서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를 ‘백두혈통’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의 국가건설 및 발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이른바 ‘혁명’과 관련해서도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에서 뿌리를 찾고 김씨 일가가 이끄는 ‘백두의 혁명전통’에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2010년 발행된 『조선말사전』에 따르면, 김일성은 항일유격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백두산(양강도 삼지연군 소백수굴)에 귀틀집을 지어 비밀군영(밀영)을 설치하고, 이곳을 이른바 ‘사령부’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등장한 뒤인 1980년대 이뤄졌던 일종의 우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태어나던 1942년 김일성은 김정숙(1940년 결혼)과 함께 당시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김정일의 출생지를 1980년대에 가서야 백두산 밀영이라고 조작했으며, 이를 북한 사회 내에 확산시킨 것이다.

이러한 연장에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당은 수령에 의해 마련된 혈통을 계승해 나가면서 수령의 당을 끊임 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혈통론’을 강조한다.

북한은 ‘혈통’과 관련해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혁명 업적, 투쟁 경험, 사업 방법 등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물학적 혈통이라는 의미가 강해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선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즉, 백두산에 밀영을 설치하고 항일유격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켰던 김일성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난 김정일이 이른바 ‘백두혈통’이며,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논리인 것이다.

이른바 ‘혁명’ 역시 마찬가지인데, 북한에서 ‘혁명’이라는 표현은 국가건설 및 경제발전,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 등과 같은 거시적 사안뿐 아니라 북한 주민 개인의 생활과 삶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백두의 혁명전통’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모든 혁명의 전통을 김일성이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켰던 항일유격투쟁에서부터 찾아야 하며, 이른바 ‘백두혈통’이 혁명을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평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성산이자 영산으로 간주되는데, 북한은 백두산을 의미하는 ‘백두’라는 표현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일가에만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독점한 권력을 신성시하고, 김씨 일가 내에서의 권력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를 조성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극단적인 위협 조치와 협상행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배경 1990년 들어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핵문제 관련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서 종종 강도 높은 위협 조치를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거나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전술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신이 궁지에 몰린다고 판단할 경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반대로 자신의 입장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표현은 북핵문제 외에 북한의 대남정책이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주요 내용 1993년부터 시작된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은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촉

관련검색어 ▼

항일 빨찌산 정신,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타도제국주의동맹(ε·c 동맹), 보천보전투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3월 12일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며 맞섰다. 이후 6월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의 반대 등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자, 북한은 1994년 5MWe급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추출하는 강수를 뚫으로써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6월 평양을 전격 방문하면서 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된 데 이어, 북·미 양측은 10월 21일 북한의 핵활동 동결, 북·미관계 개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인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하였다.

2002년 10월 시작한 2차 핵위기 상황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던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북한은 그동안 취해 온 핵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IAEA 사찰관을 추방하는 한편, 2003년 1월 10일 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5MWe급 원자로 가동에 들어갔다. 그 후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로 북·미 간 대립이 심화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이 지체되자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에는 전격적으로 첫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압박을 가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목록 작성과 검증 문제로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이 신고목록 작성과 검증문제를 이유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2008년 8월 26일 핵 불능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방북하여 검증의정서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북한도 핵 불능화 조치를 재개했다.

그러나 검증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양측 간에 논란을 빚는 상태에서, 2008년 12월에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못하였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6자회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자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6자회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북한의 내부 상황과 남북관계 정체 지속 등으로 6자회담은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

평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비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위협적 행동을 벼랑 끝 전술로 평가하는 것은 북한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갖고 있

는 인식을 북한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반복적인 벼랑 끝 전술 시행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대북 강경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의 단 맛에 빠져, 스스로 경제 회복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인 피해는 북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위국 (보위사령부)



북한군 보위국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중의 하나로 군을 정치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이다.

배경(연혁) 인민군 창건 초기에는 내무성 특수정보처 요원으로 안전군관을 파견하고 문화부(현 정치국) 소속으로 배속시켜 정치사찰 및 반탐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952년 말 정치안전군관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정치안전군관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고, 1953년 말부터 인민군 내 정치안전군관을 대폭 증원하여 사단에는 안전소대, 군단에는 안전중대, 집단군에는 안전대대를 각각 설립하고 수사, 구속, 연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군대 내 안전기관을 강화하여 1956년과 1968년에 군사쿠데타 음모를 적발하고, 특히 김창봉, 허봉학과 같은 군사모험주의자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말에는 총정치국의 지휘·통제 하에 있던 정치안전군관들을 독립시켜 정치안전국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안전국에서 김일성에게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하였다.

1970년대 초 정치안전국을 보위국으로 개칭하고 활동범위도 확대시켰다. 그러나 1973년 3월 15일 국가정치보위부가 창설됨에 따라 동 국가정치보위부 요원들이 군대 내 정치사찰과 반탐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고, 보위국은 국가정치보위부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의 지시로 국가정치보위부는 군에 대한 정치사찰 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보위국이 독립적 부서로서 군대 내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는 군대 내 보위군관 양성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여 보위군관을 양성하였다. 특히 1992년경 프루제 군사대학 사건, 1995년 6군단 사건을 사전 적발하여 1996년경 보위국에서 보위사령부로 증편되었고 위상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6년 3월 김정은의 북한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과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타격연습 현지지도 수행원으로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인 육군대장 조경철”이 보도되고, 2020년 7월 김정은이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는 자리에 ‘조선인민군 보위국장’이 참가한 것을 보면, 2016년에 보위사령부가 다시 보위국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기능) 북한군의 모든 부대에는 보위군관 또는 이들의 비밀정보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단과 사단 보위요원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특히 반체제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한다. 이와 같이 각 군 본부에서 말단부대까지 보위국 요원이 파견돼 있으며, 다른 정보조직과

는 별개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군부 핵심인물 동향과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즉 보위국은 인민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까지 담당하며 간첩 색출, 반체제 활동 관련자 색출, 처벌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군대 안의 반당, 반혁명, 반국가 분자들을 색출 및 검거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방첩임무 △최고지도자의 군부대 방문 시 경호임무 △군대 안의 주민등록 사업 △일반 범죄자들을 색출, 처리하는 것 등이다. 보위국은 군대 안에 조직된 독립적인 방첩·반탐기관으로서 임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총정칙국과 달리 비공개적이고 비밀스런 방식으로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보위국은 북한군 내 각급 단위 부대에 조직돼 있는 보위기관들을 행정적으로 지휘·장악·통제하고 있다.

평가 김일성은 북한군 창설 시부터 군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 첩보기관을 조직했으며, 김정일도 보위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통치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 기구는 현재 각 대학에도 군 보위국 요원으로 구성된 ‘군사대표단’까지 상주시킬 정도로 사회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보위국장이 수행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위국을 북한군 통제 기구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검색어 ▼

국가보위성(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보천보전자악단/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전자악단



보천보전자악단은 1980년대 북한에서 처음으로 전자음악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전자악단이다. 은하수관현악단은 2009년 1월 설명절 경축공연을 통해 알려진 배합관현악을 위주로 전자악기가 결합된 세미클래식 악단이고, 모란봉전자악단은 2012년에 모란봉악단으로 시작한 김정은 시대의 전자음악단이다.

배경 1980년대 세계적으로 전자음악이 유행하면서, 북한도 전자음악을 북한식으로 수용한 전자음악단인 보천보전자악단을 창단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의 전자음악 연주조를 1985년 6월 4일 온전한 전자음악연주단으로 분리하여 ‘보천보전자악단’으로 시작하였다. 보천보라는 명칭은,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이 인솔하는 유격대 부대가 백두산 부근의 보천보에 있는 일본군 주재소를 기습했다는 보천보 전투에서 따왔다.

주요 내용 보천보전자악단은 전자음악을 북한식으로 수용하면서 민족적 색채가 강한 ‘우리 식 전자음악’의 본보기 단체이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 식 전자음악’은 전자악기를 주축으로 음악적 특성에 따라 피아노 등의 양악기와 팽과리와 같은 전통악기도 적절히 혼용하는 음악이다.

보천보전자악단의 전속가수로는 전해영, 김광숙, 리경숙, 리분희, 조금화 등이 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의 노래는 전자음악을 활용한 경쾌한 리듬과 가창력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남한에도 제법 알려진 <회파람>, <반갑습니다> 등을 비롯하여, <여성은 꽃이라네>, <아직은 말 못해>, <도시처녀 시집와요>, <자장가>, <축배를 듣자> 등의 노래가 보천보전자악단의 대표 레퍼토리이다. <양산도>, <밀양아리랑>, <노들강변>, <도라지> 등의 전통민요를 새롭게 해석한 노래도 보천보전자악단의 특색을 잘 보여준 노래로 평가한다.

은하수관현악단은 2009년 1월 26일 설 명절 경축음악회를 통해 존재가 알려졌다. 은하수관현악단은 서양클래식악기와 개량민족악기로 구성된 ‘배합관현악’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전자악기까지 결합된 세미클래식 연주를 주로 한다. 국제콩쿠르와 북한 최고의 음악경연대회인 2·16예술상 수상 경력이 있는 20대의 젊은 예술인 15명으로 시작하였다. 가수로는 김주향, 김옥주(현재는 국무위원회연주단), 김성심 등이 있었다. 은하수관현악단은 2009년 ‘설명절 경축음악회’를 비롯하여, 2012년까지 매년 신년음악회 또는 설명절 음악회를 주도했다. 2011년 7월 16일에는 은하수관현악단 전용극장인 ‘은하수극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김정일과 김정은이 모두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12년 3월에는 프랑스를 방문해 파리의 살플레엘 극장에서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관현악단과 합동 공

연을 하기도 했다.

모란봉전자악단은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범공연을 통해 알려졌다. 모란봉악단은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음악단’으로 김정은이 직접 조직한 악단으로 시범공연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모란봉악단 창단 당시에는 악기조 11명, 중창조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단장은 현송월, 악장은 선우향희였으며, 악기조 11명은 제1전기바이올린(선우향희, 악장), 제2전기바이올린(홍수경), 전기비올라(차영미), 전기첼로(유은정), 신디사이저(김향순, 리희경), 색소폰(최정임), 피아노(김영미), 전자드럼(리윤희), 전기기타(강평희), 베이스기타(리설란)로 구성되었다.

모란봉악단은 기존 북한식 공연과 달리 화려한 조명, 현대적 전자악기, 연주자들의 세련된 의상, 여성 보컬들의 경쾌한 음악을 바탕으로 과감한 무대를 선보였다.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김정은과 함께 관람한 모란봉악단 공연이었다. 모란봉악단은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에 맞추어 화려하고 현란한 연주와 새로운 음색으로 각인되면서 ‘모란봉악단 창조기풍’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모든 단원에서 본받아야 할 혁신적인 본보기 예술단체로 주목받았다.

모란봉악단은 2019년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공연을 진행한 연주단으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예술단이었다. 특히 김정은이 참석하는 명절공연, 경축공연, 화선공연을 진행하였고, 합동공연에서도 빠지지 않고 공연을 주도하였다.

모란봉악단은 2019년 설명절 경축공연에서 ‘모란봉전자악단’으로 소개되었고, 2020년 설명절 경축공연에서도 ‘모란봉전자악단’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2020년 설명절 경축공연 이후로는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검색어 ▼

음악정치, 왕재산예술단(왕재산경음악단), 삼지연관현악단(삼지연극장(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보천보전투



일제 강점기 만주 지역 등 한반도에서 주로 활동하던 김일성이 국내에서 벌인 전투 중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1937년 6월 4일 함경남도 보천보 지역(현 양강도)에서 경찰과 치른 전투이다. 보천보전투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국내에 알리고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이 유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내용 김일성이 항일유격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시기는 그가 19세였던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중국공산당은 만주성 위원회에 항일유격대 창설을 지시했고,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항일유격대 건설에 참여했다. 당시 백두산 인근 안도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일성은 1934년 가을부터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에서 3단 정치위원을 맡았다. 김일성은 1936년 3월 결성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3사 사장이 되었으며, 당시 그가 지휘한 유격대 병력은 600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김일성이 이끄는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6사로 개편됐고, 국경지대인 장백현 일대로 진출했다.

일제는 1936년 겨울부터 대규모 ‘토벌공세’를 감행했다. 김일성은 6사 사장 시절인 1937년 6월 4일 밤, 약 100명의 유

격대 병력을 이끌고 함경남도 보천보 지역으로 진출해 경찰주 재소를 습격하고, 퇴각하던 중에 혜산에서 경찰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바로 이 전투를 북한에서는 ‘보천보전투’라고 부른다. 전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파장은 매우 컸는데,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무기정간에서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동아일보가 1937년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호외를 발행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보천보전투 이후에도 김일성과 그가 이끄는 부대는 일제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했다.

평가 보천보전투로 대표되는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 성과는 광복 이후 그가 귀국한 뒤 북한 지역에서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올라서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선 의용군 총사령 출신으로 당시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 중 한 명이었던 무정 등과의 경쟁에서 김일성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의 항일유격투쟁 경험은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했다. 특히, 당대 유명 작가였던 한설야는 1946년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웅 김일성 장군』을 출판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항일 빨찌산 정신,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타도제국주의동맹(애·국 동맹),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부동산사용료



국가예산납부금 항목 가운데 토지, 건물, 자원 등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화폐비용을 의미한다.

배경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시작으로 1963년 「토지법」이 수립되기까지 토지소유관계 및 토지의 이용 및 보호, 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토지제도를 정비하여왔다. 북한에서 부동산사용료는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전국적 부동산 조사작업의 추진 및 사용료 책정 계획이 밝혀진 이후 2007년 「국가예산수입법」에 반영되며 공식화되었다. 2006년 이전까지 북한의 부동산 관련 납부금은 2003년 신설된 ‘토지사용료’가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07년 관련 법령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됨에 따라 건물, 자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 부동산사용료가 법제화됨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협동단체는 물론, 생산설비, 살림집, 공공시설 등의 부동산 시설 및 해당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를 보유한 기업소와 공장 또한 부동산사용료를 예산기관에 납부하게 되었다. 부동산사용료의 책정은 2006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실사작업이 결정된 이후 부동산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었다. 부동산 세부 분류에 따른 항목 구성은 농경지, 건설 부지, 건물, 어장, 산림, 도로, 지하자원 등이다. 한편, 신규 토지의 개간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토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교육,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농토지 및 자연재해로 이용이 제한되는 농토 역시 부동산사용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민이 사용하는 철도시설 관련 부지, 기업 및 단체에 의해 자체 설립된 생산시설도 부동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 북한은 「토지법」에서 토지를 포함한 국가 재산의 보호, 관리를 바탕으로 물질생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부동산사용료를 포함한 국가예산수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광명대백과사전, 2010). 결국 부동산사용료 역시 부족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마련의 제도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에도 국가의 재정 확대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제도의 수정, 보충이 예상된다.

관련검색어 ▼

상업은행, 국가계획위원회, 당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북·러조약



2000년 6월 체결한 북·러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과학·기술·문화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경 북한과 소련은 1961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우호조약)을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자동군사개입’을 비롯하여 북한과 소련 간의 군사·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1990년 9월 남한과 수교를 맺고, 1991년 8월에는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경제적·정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1995년 9월 조소우호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1996년 조소우호조약은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북·러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평양 방문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연혁) 조소우호조약 폐기 이후 새롭게 체결된 북·러조약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조소우호조약과 달리 새 조약은 제2조에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쟁점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북·러 간 새 조약의 체결은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상호 간 협조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김정일이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북·러 간의 협력관계 복원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 등을 담은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북·러관계의 회복 및 발전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동북아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낙후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군사 원조를 기대했으나, 러시아는 군사협력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이익에 대한 견해차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러관계는 냉전

시기처럼 이념이나 혁명적 연대가 아닌 철저한 국익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북·일 수교협상



북·일 수교협상은 1990년 북한의 노동당,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의 '3당 공동선언'이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일 수교협상의 핵심쟁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식민지배 및 전후 배상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과거사 청산 및 사죄 문제 등이다.

배경 1980년대 말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영향을 받아 서구와의 대외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앞선 기술과 자본이 있어, 경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이 주요대상이었다. 반면 북한의 대일본 접근은 당시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일본 또한 당시 탈냉전 이후 전개될 세계 질서의 재편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989년 3월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수상은 국회발언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뜻이 담긴 '신견해'를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수교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본 사회당은 북한과 일본 정부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3당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인 수교협상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 '3당 공동선언'에 따라 1990년 11월~12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친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 북한 핵개발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북한의 외교 중심은 대일 국교 정상화 노력으로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이동하였다.

북미관계가 호전되고 1995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발족함에 따라 북한의 초청으로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이 방북하였고, 북한 노동당과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7년 2월 여중생 요코다 메구미의 북한 납치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동결하고, 대북 식량지원 유보 등 제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랭하였다.

1999년 9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경제제재 완화 등에 합의함에 따라 북·일관계도 다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의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 김용순 비서와 수교회담을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고,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 은행 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다시 양국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물밑 접촉을 통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제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합의된 '평양선언'은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와 경협 방식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 일본인 납치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핵 관련 국제협약 준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일본 내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따른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2002년 10월 개최된 제12차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2004년 5월 22일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일은 수교회담 재개, 납치 생존자 5명 귀국, 행방불명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 이후 납치자 가족 중 생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일본 내 여론은 다시 젠킨스 가족 귀환 문제와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사건'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결국 2006년 2월 개최된 제13차 회담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북·일간 '스톡홀름 합의(2014.5)'를 이루는 등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4년 동안 중단되었던 북·일 적십자회담 재개(2012.8.9, 중국 베이징), 북·일 정부 간 과장급 예비회담 개최(2012.11.15, 몽골 울란바토르),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이지마 내각 관방 참여의 방북(2013.5), 수차례의 국장급 회담(2014.3, 2014.5, 2014.7)은 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북·일 외교관계

의 진전과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일본이 조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대북송금액 제한 등 요지의 독자제 재안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스톡홀름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재북 일본인 재조사 중단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일 간 대화는 중단되었고 북한은 대일 비난 수위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9년 9월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재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메시지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거사문제, 위안부문제, 독도, 군비증강 등과 관련한 비난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 7월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였다.

북·중조약



북·중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군사자동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동맹조약이다.

배경 1960년 당시 중국은 소련과 갈등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국경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외부적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런 정책 하에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 등의 주변국과 조약을 맺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및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 소련 등과의 동맹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북·중조약은 군사자동개입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북한이 가진 지정학적 특징, 다시 말해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조약은 중국과 북한 모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한편 모두 7개 항으로 이뤄진 북·중조약은 북한이 소련과

‘조소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은 1961년 7월 6일 이후 단 5일 만에 체결된 조약이다. 1961년은 사회주의권 안에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는 시기로 북한은 자신의 노선을 드러내지 않은 때다. 따라서 북한이 소련 및 중국과 맺은 조약의 시대적 배경과 비슷한 내용, 체결 시기가 가까운 점으로 보아 북·중조약을 소련과 중국의 경쟁구조 속에서 북한이 취한 이득의 산물로 분석하기도 한다.

주요 내용 북·중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군사자동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북·중조약 제2조는 군사개입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중국이 북한에 최고지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북·중관계는 상호 완전한 신뢰형성 및 공동의 목표·이익에 기반을 두기보다 상호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로 1992년 한·중 수교로 당시 북·중 양국의 관계가 한동안 소원해지기도 했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들어 북·중 간의 관계를 혈맹에서 국가 간의 일반적인 외교관계로 재규정하려는 흐름이 생기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중조약에서 군사자동개입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과 주변국 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북·중관계에도 균열이 나타날 수 있고, 본 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구도가 대립과 분단의 상태로 유지되는 한, 북·중관계는 양국 간 정책 목표와 견해의 차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검색어 ▼

북·러조약, 북·일 수교협상

북남경제협력법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신의주, 개성, 금강산지구 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2005년 7월 6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남경제협력법」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 경제 분야 전반을 남북경제협력의 정의(제2조)에 포함시키고, 남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적용대상(제3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 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 발전, 상호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 남북경제협력의 원칙 제시(제4조), 남북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기초한 직접거래방식 채택(제7조), 다양한 재산의 이용 및 투자재산의 보호(제16조), 남북경제협력물자에 대한 무관세 원칙(제19조) 등 각종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이러한 승인이 없을

경우 남북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제10조). 이러한 규정을 살펴 보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제 재건 및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본투자 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협력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중요한 것은 상품의 생산 과 판매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의 기업법제 에 의하면 남북협력기업이 생산과 판매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북한에서 남북협력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기에 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북남경제협력법」의 주요 조항과 내용

조항	주요 법안 내용
제1조: 사명	·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민족경제 발전에 이바지
제3조: 적용대상	· 북측은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 · 남측은 경제협력을 하는 법인, 개인에게 적용
제4조: 원칙	· 전민족의 이익,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 상호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
제8조: 협력금지대상	·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미풍양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금지
제16조: 재산이용 및 보호	·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이용가능, 투자재산 보호
제17조: 근로자 채용	· 북측의 근로자 채용 · 남측 또는 제3국의 근로자 채용 시 중앙지도기관의 승인 필요

조항	주요 법안 내용
제19조: 관세	· 무관세
제20조: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 이용, 보험가입	· 해당법규 따름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2월에 창설된 북한의 최고집행기관이다.

배경(연혁) 북한은 북한 지역의 정치·경제적 기반과 통치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인 1947년 2월에 창설되었다가 1948년 9월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모든 권한을 정권에 이양하고 해체되었다.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한국 임시 정부 구성과 신탁통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전국에서 반탁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좌익 진영이 1946년 1월 찬탁으로 태도를 바꿈으로써, 북한 지역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과 좌익 진영 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당시 소련군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을 억

관련검색어 ▼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압함으로써 김일성의 정권 장악을 도왔고, 이에 따라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통일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토지개혁 추진과 함께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을 단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북한은 법적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1946년 11월 3일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도 위원 452명, 시 위원 287명, 군 위원 2,720명 등 총 3,459명의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평남 제57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리고 1947년 2월 17일 평양에서 인민위원회, 정당, 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들로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는 달리 최고 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는 별도로 조직된 최고집행기관이었다. 즉 북조선인민위원회에는 집행기능이, 북조선인민회의에는 주권기능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경우 추후 승인을 조건으로 입법권과 예산안 수립 등을 수행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과 그 이듬해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기초한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고, 인민군 창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세금제도, 예산제도, 사법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화폐교환사업을 통해 인민정권이 시장을 통제하고 상업 금융을 국가계획하에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평가 북한은 1947년 5월 재개된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지방정권 기관들과 인민위원회 형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이 독자적인 분단 정권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한반도 차원의 정권 수립과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1947년 11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구성과 한반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임시헌법을 준비하는 등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관련검색어 ▼

북조선인민회의, 북한 헌법, 최고인민회의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회의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최고 주권기관이었다.

주요 내용 1946년 11월 3일 북한에서의 첫 선거인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듬해인 1947년 2월 17~20일 사이에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하여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 선거, 북조선최고재판소장의 선거, 북조선최고검찰소장의 임명, 대외무역의 결정, 국가안전의 보호, 인민경제계획의 채택, 국가예산의 승인, 행정구역의 신설 및 변경, 대사 실시에 관한 결정의 발표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3개월에 1차례씩 개최되었으며, 휴회 기간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신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 제3차 회의를 열어 전 조선에 적용할 헌법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7년 12월 20일에 임시헌법 초안이 제출되었고, 1948년 2월 6~7일에 열

린 북조선인민회의의 제4차 회의에서 임시헌법 초안을 ‘전 인민적 토의’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입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7월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토의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에 기초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성립되면서 그 임무를 마감하였다.

평가 북조선인민회의는 약 1년 6개월간의 짧은 활동을 하였으나 북한 정권의 기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북조선인민회의는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거와 헌법 등 정권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형식상 한반도의 선거를 표방하였지만 남한 지역의 대표선출을 책임진 남로당의 경우 비밀 지하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 김일성은 북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소련정부의 지원 하에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 및 운영하였다.

관련검색어 ▼

남북연석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북한 헌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2019년 8월 개정하기까지 15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중 대표적 개정은 1972년과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다. 1972년을 경계로 그 이전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그 이후의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불렀다. 그리고 1998년 개정헌법은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였고, 2012년 개정헌법부터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내용

1. 1948년 헌법 채택

1948년 헌법은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인정하는 등 아직 봉건적 잔재와 자본주의적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인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 단계는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과도기의 단계로, 1948년 헌법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까지의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1948년 헌법은 수도를 서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헌법적 구상을 피력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72년과 1992년의 헌법에서는 사라진 부분이다.

2. 1972년 헌법 채택

북한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주석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직위였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김일성이 교시 내지 지도하였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등을 헌법조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북한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수정하였다.

3. 1992년 헌법

북한은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이 김일성 독재 권력 구축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1992년 헌법은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과도적 헌법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권력 구조면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 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를 통해 군정을 국방위원장 산하로 일원화하고 국방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3년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 강화와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를 반영하여 국가 지도이념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는 대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대외정책 추진원칙에 있어서는 종래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 등으로 바꾸어 명시함으로써 이념적 색채를 약화시켰다.

4. 1998년 헌법 개정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대폭 개정하고, 서문을 신설하여 개정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였다. 1998년 헌법은 김정일이 1997년 유혹 통치를 끝내고 당 총비서로 추대되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의 출범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1998년 헌법의 특징은 주식제를 폐지하고 정부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였으며,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체제로 정치의 틀을 바꿨다는 점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 되었으며, 김정일은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된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사적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으며, 기업들의 자율권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5. 2009년 헌법 개정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국방위원장을 국가기구로 별도로 다루면서 ‘최고영도자’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하여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헌법으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김정일의 권력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6. 김정은 시대 헌법 개정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인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서문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면서 핵보유국을 명시, 개정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의 12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하며 서문에 ‘금수산태양궁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12년 의무교육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의 1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김정일 시대 ‘군 중심의 비상관리체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

고 사회주의 당국가체제가 정상화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국가기구에서 일원화된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국무위원장 중심의 국가영도체계’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국가기구가 헌법상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인적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게 만든 것이다. 이미 2017년 최고인민회의 13기 제5차 회의에서 선출한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인 외교위원회도 헌법에 명기되었다.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제시되었고 선군정치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 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국무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 재외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고,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도록 명시했다.

평가 북한은 헌법에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은 당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당이 지배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와

는 헌법이 갖는 의미가 다르며, 헌법의 규정과 현실의 실제 내용도 다르다.

북한의 헌법 채택·개정 현황

연번	날짜	회의	비고
0	1948.09.08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채택
1	1954.04.2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	수정
2	1954.10.30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수정
3	1955.03.11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	수정
4	1956.11.07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수정
5	1962.10.18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수정
6	1972.12.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채택
7	1992.04.0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	수정보충
8	1998.09.0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9	2009.04.0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10	2010.04.0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수정
11	2012.0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수정보충
12	2013.04.0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수정보충
13	2016.06.2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수정보충
14	2019.04.1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15	2019.08.2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수정보충

관련검색어 ▼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국방위원회), 주석

북한 훈장



북한은 체제 유지와 사회주의 건설, 남조선혁명 활동, 북한과 친선관계 발전 등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훈장을 수여한다.

북한의 최고훈장은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이다. 김일성훈장은 1972년 3월 20일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맞아 제정되었다. 빨찌산 출신, 당·정·군 간부와 대남활동에 이바지한 공로자, 교포 등 개인과 공로 있는 기관·기업소·단체·협동농장·군부대 등 집단에게 수여해 왔다. 강선제강소, 성진제강소, 대안전기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을 비롯한 100여 개 단위들에 김일성훈장이 수여된 바 있다. 김일성훈장은 해마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로 수여된다.

김정일훈장은 김정일의 70회 생일(2월 16일)을 앞두고 2012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제정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건설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꾼과 인민군장병, 기관 등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 김정일훈장을 제정한다며 이

훈장은 김일성훈장과 함께 북한 최고 훈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같은 날 정령을 통해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도 제정했다. 북한은 2012년 2월 9일 132명, 10월 9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10월 24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북한 훈장의 종류들을 보면, 북한 최초의 훈장은 국기훈장(1, 2, 3급)으로 1948년 10월 12일 제정되었다. 이외 6·25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7일에는 자유독립훈장(1, 2급), 1950년 7월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순신훈장(1, 2급)을 제정했다. 그 외에도 농촌테제발표30돌 기념훈장, 총련결성기념훈장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제정했다.

북한은 훈장 패용 규칙을 정해놓았다. 초기(1954년)에는 훈장 및 메달은 각 훈장 및 메달 정령에 의하여 패용하되, 훈장 및 메달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급수에 따라 공화국영웅 메달, 노력영웅 메달, 국기훈장 제1급, 자유독립훈장 제1급, 이순신훈장 제1급 등을 순위로 하여 일렬로 맞추어 패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훈장 패용 순서는 이후 좀 더 세분화됐다. 현재 북한의 훈장은 훈장 급수에 따라서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으로 나뉘어 달게 되어 있다. 왼쪽 가슴에 달 수 있는 훈장은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자유독립훈장 등으로 훈장 순위가 높다. 오른쪽 가슴에 달 수 있는 훈장은 정권창건 기념훈장,

인민군창건 기념훈장,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 등으로 훈장 순위가 낮다.

북한이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할 때 표창식을 열며, 각종 언론 매체에 이를 소개한다. 특히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해 훈장을 주요 인사들에게 수여한 것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크게 보도된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변경되었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980년 10월 10일 제 6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공식화되었다.

배경 북한의 통일방안은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1960년 8월에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 당시 북한은 상대적인 경제역량의 우위를 바탕으로 4.19 혁명으로 혼란한 상황에 처한 남한사회에 대남 평화공세 차원에서 두 체제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과도적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제안하였다. 1970년대의 남북 연방제는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제시하고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했으며, 통일전선 형태의 '대민족회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외교·군사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완성형 연방국가를 바로 창립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와 독일통일,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앞선 남한

으로의 흡수통일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지역정부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로 옮겨가자는 소위 ‘느슨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

‘느슨한 연방제’는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현재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는 연합 형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구체화되었다.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적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단계적 통일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1. 1960년대의 남북 연방제

북한의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지만, 남한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당분간 남북한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방제는 지방정부의 내정·외교·군사권을 그대로 존속

시키고, 정부당국의 대표들로 일종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와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하자고 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연합적 성격이 강하였다. 당시 한국사회는 4·19 혁명 이후 백가쟁명식의 통일논의가 전개되는 등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으며, 북한은 이를 ‘남조선 혁명’의 호기로 보고 대남 평화공세 차원에서 이 점진적인 방식의 연방제를 들고 나왔다.

2. 1970년대의 남북 연방제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후사크 환영대회 연설을 통해 이른바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조국통일 5대 강령’의 주요 내용은 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②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③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 실시 ⑤ 고려연방공화국 단일 국호로 유엔 가입 등이었다. 이 연방제 안은 1960년대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어지고 그 대신 통일전선 형태의 ‘대민족회의’를 전면에 부각시켜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외교·군사권 인정 등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이 불명료해지고 ‘과도적 대책’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이 제안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교정책에 관한 특별 선언’(6·23 선언)을 통해 당장의 통일 보

다는 분단현실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날과 같은 날에 나왔다. 북한은 이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이며 분단을 영구화하는 분열주의 노선이라고 비난하였다.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대)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연방국가의 구성과 운영원칙, 10대 시정방침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① 한국의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군사과소정권의 교체 등 군사과소정치청산과 사회 민주화 실현 ②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③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 실현을 제시하였다.

연방국가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통일연방국가를 창립하자면서, 남과 북 동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대외정책노선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실천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으로, △동서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는 자주국가 △민주주의 실시 △남북 경제 교류협력 추구 △과학,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 △교통, 체신의 연결 △인민의 생활 안정 도모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해소 및 민족연합군의 창설 △해외동포의 권익 도모 △연방공화국에 의한 통일 이전 대외 관계의 재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시정 방침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의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 명으로 줄일 것'과 '북과 남의 민간 군사 조직(북한의 노동적위대와 남한의 예비군을 의미)을 해산'하자고 하였다. 특히 군대 규모를 특정하여 감축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군축을 제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1980년대의 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과도적 방안이라는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바로 통일국가를 창립하자는 완성형 연방제이다. 둘째, 남북한 사이의 제반 문제를 협의·조절하는 기구가 없어지고 연방정부가 지역정부를 직접 지도하도록 했고, 특히 정치·외교·군사권을 '연방상설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였다. 셋째, 남한 현 정권의 퇴진과 주한미군 철수 등 남한 체제의 무장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현 남북관계에서 추진이 필요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시정방침에 포함시켜 통일국가 설립 후로 미루었다. 다섯째, 연방국가의 구성과 운영원칙만 있고 연방헌법

등 창설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4.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1990년대)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완성형 연방제 주장에 전술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선 제도통일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을 바탕으로 한 1980년대의 연방제로부터 ‘제도통일 후대론’과 ‘지역자치정부 권한 강화론’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독일통일 등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충격을 받았으며, 체제생존을 위해 정세를 관망하면서 수세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이로 인해 점진적이

고 단계적인 통일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결합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느슨한 연방제’로도 불린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2제도 2정부 형태의 연방제를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을 통해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함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규정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여전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임을 확인하였다.

5. 낮은 단계의 연방제(2000년대)

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밝혔다.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방제 안은 소위 ‘느슨한 연방제’에서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와의 관계가 모호했던 것에 비해 지역정부가 갖는 권한을 보다 명백히 하였으며, 정치·외교·군사권을 지역정부에 맡김으로써 최대한 독자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낮은 단계라고 해도 여하튼 하나의 국가이며 연방헌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연방정부가 완전한 의미의 권능을 확보하고 제도적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과거 완성형 연방제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은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2019년 신년사에서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적극 모색”을 주장하였다. 김정은은 당시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를 보였지만, 이후 남북관계 정체로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1980년에 구체화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호 입장 차이가 뚜렷할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한국의 단계적 통일방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소위 ‘느슨한 연방제’나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단계적 통일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이나 형태 등이 한국이 주장하는 ‘연합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연합제와 연방제를 포괄하여 통일방안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관련검색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3대 한장, 조국통일 5대 강령

분조관리제



북한 협동농장에서 분조(分組)란 협동농장의 최말단 기층조직이다. 따라서 분조 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는 협동농장의 기본적인 운영관리방식이다.

배경 분조관리제는 김일성이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1966년부터 북한의 각 협동농장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도·시·군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때 군 이하 ‘리’ 단위는 1개의 협동농장으로 편제하고, 협동농장별 5~7개의 작업반, 작업반별 4~6개의 분조, 분조별 10~15명이 편성되어 있다. 이때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생산규모와 지역적 조건에 따라 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농기구수리반 등으로 구성된다. 협동농장의 기본 생산단위는 작업반이지만, 작업반의 인원이 15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과 전문성, 노동의욕고취 등을 이유로 분조관리제를 실시해 왔다.

북한은 분조관리제가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여시키는 훌륭한 생산조직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생산의 특성을 감안해

농민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를 철저히 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각 분조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경작지와 근로자, 농기구, 부림소(짐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기 위해 기르는 소), 그 밖의 생산도구 등을 할당하고 국가생산계획에 준하여 수확고 계획과 ‘노력일(勞力日)’ 투하계획을 설정해 준 다음 생산계획량을 달성한 실적에 따라 식량과 현금을 분배해 주는 방식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일부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선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7~8명 선으로 축소하고 친인척과 가족을 포함하여 분조를 구성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리고 생산계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었으며 특히 계획 외의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식량난이 계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증대시켜 보고자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운영한 방식이다. 2002년 7.1 조치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면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포전담당제를 시범적으로 부분 실시하면서 분조단위별 분배권한을 부여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6월 28일에 분조단위를 4~6명 내외(2~3명의 분조도 존재)의 가족 단위로 더욱 축소한, 이른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2009년 12월에 제정된 ‘농장법’을 2012년 11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

년 6월 네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하면서 포전담당제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일단락되었다.

평가 분조관리제의 도입, 분조규모의 축소, 포전담당제의 실시, 소토지 경작의 허용 등은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대체로 분조를 통해 증산된 알곡은 군량미로 군부에서 통째로 걷어가기 때문에 분조원들에게 정상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분조에 출석하지 않는 농장원(협동농장에 적을 두고 출근하지 않는 대신 개인 장사를 하여 운영비를 납부하는 이른바 8.3 농민)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분조관리제의 기본적 형태는 유지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분조원들이 관리자에게 일정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장사행위를 하는 등 그 경영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분조관리제와 포전책임담당제, 책임경영 강화와 분배율 확대 등을 통해 생산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나 과도한 목표 할당과 각종 행사 동원, 원부자재 공급 부족과 주민들의 의욕 저하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배급제,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협동농장,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스 경제관리방법),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블록불가담운동이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기 어느 한 진영에의 가담을 거부하고 대외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중립주의 외교(비동맹 외교)를 추구했던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이 추구한 외교 전략이다.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소련이 주축이 된 냉전 블록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독자외교노선을 취하면서 ‘블록불가담’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들 국가들은 영토보전과 주권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이라는 평화 5원칙에 입각하여 동서분쟁에 관계되는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비동맹외교를 추구해 나갔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55년 4월 반동회의 등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과 결집하고,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표방한 이후 소련, 중국,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이나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외교 다변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되었고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과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에 더해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 등이 강조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71년 당중앙위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의제를 토의하고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1975년 8월 제2차 페루 리마 비동맹외무장관 회의에서 비동맹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79년 제6차 쿠바 아바나 비동맹회의에서는 북한이 조정위원국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가장 활발한 비동맹 외교를 전개하였다. 북한의 비동맹외교는 ‘반제·반미 공동 전선’ 형성,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 확보 등을 위해 진행한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 및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가면서 비동맹 각국도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체제 생존이 급선무였던 북한은 비동맹 외교 강화를 통해 경제지원과 외교적인 지지 등을 얻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행되자,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에 대한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비물질문화유산



비물질문화유산은 물질문화에 대응하는 용어로 1982년에 유네스코 산하에 '비물질유산처'(section for the non-physical heritage)가 설치되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우리의 문화재법에서는 무형문화재로 구분한다. 북한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은 2012년 제정한 「문화유산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규정하는 법적인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경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북한은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한 「문화유물보호법」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 「문화유물보호법」으로는 관리할 수 없었던 무형문화재를 '문화유산'이라는 범주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민족문화전통을 확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비물질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와 보호는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고고학과 민속학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952년에 과학원을 건설하면서, 물질문화사연구소에 고고학, 민속학자들을 배치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물질문화연구소는 1957년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지 『문화유산』을 창간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계속하였다.

2000년 이후 비물질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애국주의 교양 사업'으로서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강조되었고, '민족문화유산을 통한 교양사업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가지고 근로대중에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재조명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하는 사업이 되었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제정에 맞추어 2012년 8월에 비물질문화유산의 발굴, 고증, 심의, 등록, 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구로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유산의 범위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성, 문화성, 보건성, 체육성, 사회과학원과 중앙위원회 및 시군 인민위원회에 관련 기구와 직제가 생겨났고,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구전문학, 예술, 전통과 관습, 민속놀이, 의술 등이 포함된다. 2012년의 「문화유산보호법」 제2조에서는 '비물질유산'을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 전통 및 관습, 각종 의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문화유산보호법」을 근거로 2012년 8월 민요 <아리랑>의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 제1호 등록을 시작으로 ‘김치 담그기 풍습’, ‘막걸리 담그기’, ‘장 담그기’, ‘조선옷차림 풍습’ 등을 ‘국가 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기 시작하였다. ‘비물질민족유산국내목록’은 전설, 의술, 풍습으로 확대하면서 매년 등록 목록을 늘려가고 있다.

평가 북한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무형문화재에 대한 원형 복원과 사회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대회를 개최하면서 애국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도 법으로 규정하여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북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민족유산보호법

비사회주의 그루빠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북한이 1980년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늘어나자, 이를 검열·단속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배경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1992년 10월 북한 내부의 ‘비(非)사회주의적 현상’를 제거 및 감시하기 위해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비상설 검열조직이다. 북한의 모든 지역을 활동 범위로 삼아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를 통제한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북한 당국이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그룹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역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검열하고, 단속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1990년대 초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북한 체제를 이탈하는 ‘사회주의 배신자’, 혹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수정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안전원을 확대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6.4 그루뻘’, ‘노동자 규찰대’,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뻘’ 등의 각종 사상교양조직, 사상적 계도조직, 주민 감시조직들을 결성하였다.

‘비사회주의 그루뻘’은 내부의 반발로 1993년 해체하였다가 2004년 7월 10일부터 국경지역에서부터 ‘6.4 그루뻘’의 활동을 재개하였다. ‘6.4 그루뻘’은 1990년대 초반 6월 4일 조직된 비사회주의 그루뻘에서 유래하였다. ‘6.4 그루뻘’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도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간부, 지역의 보위부 성원들까지 빠짐없이 감찰한다. 국경지역에서 통신 및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하거나 마약 밀매범을 검거하기도 한다.

‘비사회주의 그루뻘’의 역할은 2008년 2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7가지 비사회주의 검열 요강 강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사회주의 범죄 7가지는 ① 인신매매 ② 가족 일부가 월남하는 것 ③ 중국, 한국, 일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 ④ 휴대전화로 중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친척을 찾아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것 ⑤ 마약 장사 또는 중국 거래자들과 밀수하는 것 ⑥ 직업 없이 무직으로 지내는 것 ⑦ 무단 숙박 등이었다.

2010년 10월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100돌 그루뻘’이 조직되었다. 100돌 그루뻘(‘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 당 지도소조 검열대’)는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은 2012년 4월까지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조직되었다. 검열 대상에 따라 ① 마약, 탈북, 인신매매 등 엄중 범죄는 보위부에서

② 강도, 폭력, 도적질 등 치안폭력문제는 보안서에서 ③ 뇌물, 밀수, 불법장사 등 생활범죄는 당에서 교양처리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1990년대 ‘비사회주의 그루뻘’이 처음 조직될 때는 반체제 선전물이나 정치지도자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등의 정치적 현상 적발에 집중하였다.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무직, 건달, 가정교사, 집에서 진찰하는 의사, 간호사, 약장사 등으로 검열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무역 등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국경지역 검열을 강화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행위로는 도박, 사기, 매춘 등의 일반범죄와 고리대 등 불법 영리활동을 비롯하여 관상, 사주, 궁합 등의 미신행위, 서구식 복장 및 머리모양, 한국가요 애창 등의 풍속범죄가 포함된다. 간부들의 뇌물수수, 월권행위, 인사 청탁 등의 비리와 일반 주민들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도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한다.

평가

‘비사회주의 그루뻘’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의 확장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 생활양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일반 주민을 비롯하여 당 간부들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황색바람

비상방역법 (코로나 대응 관련)



「비상방역법」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코로나 대응 법이다.

배경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확산되자 북한은 대내외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경을 전면 봉쇄하였고, 내부적으로도 마스크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면서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대비하였다. 보건위생과 방역 수준이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19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통제의 근거로서 「비상방역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 「비상방역법」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하였다. 보건과 관련해서는 1980년에 제정되어 2012년에 수정보충한 「인민보건법」, 1997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수정보충한 「전염병예방법」이 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자 별도의 법으로 「비상방역법」을 제정하였다.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상방역’을 “전염병위기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적 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 수 있거나 조성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 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방역법」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비상방역 체계를 1급, 특급, 초특급의 삼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전염병 위기 상황이 되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지휘부에서 국가 비상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급은 양성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국경 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북한 내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이다. 특급은 국경이나 북한 내부의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이다. 초특급은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각종 모임과 수업을 중지하거나 전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전염병 의심자가 있으면 신속기동방역조를 파견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1차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봉쇄도 진행하며, 발생지역, 격리지역의 오물, 하수 등을 소독하도록 하였다.

전염병 환자와 의심 환자는 격리시설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

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하는데, 격리 해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비상방역법」은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외국인도 포함된다.

중앙인민보건의도위원회에서 비상방역을 위해 조직하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내각총리를 책임자로 하고, 내각, 인민무력성, 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중앙대의 사업지도기관, 내각의 성, 중앙기관, 의료기관의 책임일군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하여 비상방역지휘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비상방역기간 동안에는 북한 주민과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까지 국가적 비상방역조치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거리유지도 해야 한다. 또한 손 소독을 자주하고 악수는 금지하고, 유언비어날조도 금지사항이며, 집단적인 술판이나 먹자판을 벌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와 오락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5,000원의 벌금을 비롯하여 위반에 대한 벌금 사항도 규정하였다.

평가 북한에서도 유행성 질병이 여러 번 있었지만 법적 체계로 대응한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에서도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피해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가 안

전을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비상방역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안전성, 사회주의 법치국가, 의사담당구역제, 평양종합병원



4.25문화회관

4대 군사노선

4대 전략적 노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부))

사회의무노동제(금요노동, 생산노동)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경쟁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주의 문명국(강국), 사회주의 문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사회주의 법치국가

사회주의 상업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2.1 경제관리개선 조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주체사실주의

사회주의적 소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살림집(하모니카 주택(땅집) 등)

살림집이용허가증(주택 입사증)

3대 혁명역량 강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삼지연관현악단(삼지연극장

(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상업은행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생활총화

서해갑문

선군경제건설 노선

선군정치

선군혁명문학예술

선전선동부

소년단

소조활동

속도전

속도창조운동

수령론

수령형상문학

순천린(인)비료공장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

(6.12 북미공동성명)

4.25문화회관



4.25문화회관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대중문화회관으로 공연이나 군중행사에 사용한다.

‘4.25문화회관’은 북한의 중요 행사, 예술 공연 공간으로 각종 군사·정치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1975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처음에는 ‘2.8문화회관’으로 불리다가 1995년 10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명칭이 변경된 것은 조선인민군 창설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조선인민군이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어서 ‘2.8문화회관’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978년 북한이 조선인민군의 창설일을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한 날인 1932년 4월 25일로 소급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서 ‘2.8문화회관’도 ‘4.25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조선인민군 영화촬영소인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도 같은 이유로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로 바뀌었다.

‘4.25문화회관’의 총 부지면적은 124,000여m², 연건축면적은 80,000여m²의 석조 건물이다. 총 7층 규모이며, 중앙현

관홀, 관람홀, 무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앙현관홀은 2층 관통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 양쪽의 복도에서 사진전 등의 전시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관람홀은 6,000석 규모의 대형극장과 1,100석의 극장, 600석 규모의 영화관이 있다. 무대는 기본무대, 옆무대, 뒷무대 등으로 나뉘어있으며 현대화된 무대설비, 음향설비, 공기청정설비 등을 갖추었다.

‘4.25문화회관’의 외양은 지형적 특성, 평양시의 전반적인 건축설계 구도, 문화건물로서의 상징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처리되었다고 한다. 건물의 바깥 벽 아래층 오른쪽과 왼쪽 및 위층 양쪽에는 모자이크 벽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불패의 혁명대오> 등이 그려져 있다. 실내에도 주석단의 상하 전면과 중앙홀의 좌우 벽면에 여러 개의 이상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관련검색어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4대 군사노선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제시한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의미하며, 이후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본노선이 되었다.

배경 4대 군사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채택한 노선이다. 1962년 12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1966년 10월 제 2차 당대표자회에서 '전군의 현대화'가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다. 1950년대 후반 시작된 소련과 중국 사이의 본격적인 갈등은 북한이 독자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50년대 후반까지 전후복구사업에서 거둔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군비증강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 등거리 외교 노선을 견지하며 양국 모두로부터 군비증강을 위한 물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북한 지역에 많이 남겨져 있던 중화학공업 시설이 군비증강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한 이유는 미국의 배

트남 전쟁 개입,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아시아권에서의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 사이의 갈등,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 및 소련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북한 방기 우려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4대 군사노선은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가지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인민의 무장화'는 인민군은 물론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인민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킨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우리의 예비군과 비슷한 개념인 교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기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으로 구성된 노동적위군이라는 준(準)군사조직을 인민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군의 간부화'는 북한의 인민군 전체를 간부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갖게 하고 간부처럼 조직·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인민군에 우리의 사병에 해당하는 전사로 입대한 뒤 여러 과정을 거쳐 간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전사로 입대한 군인들도 간부와 같은 충성심과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 강력한 사상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 지역의 요새화'는 북한의 모든 영토를 전쟁에 대비해 요새처럼 만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주요 군수공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고지와 같은 주요 거점에 군사적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군의 현대화’는 “인민군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구형무기를 개량하는 것뿐 아니라 신형무기를 도입·개발해 구형무기를 대체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 및 소련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군수산업 발전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무기를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다.

평가 북한은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정립하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천명하면서 국가의 모든 영역을 군사적인 체계로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에 따라 민수산업보다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결국 북한의 이 같은 비생산적인 정책은 1960년대 후반 들어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후반 ‘구조적 경제난’으로까지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2년 개정 헌법부터 ‘국방’과 관련된 조항에 4대 군사노선의 4개항을 ‘자위적 군사노선’이라고 명기하여 헌법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4대 군사노선이 북한 노동당의 군사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규약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검색어 ▼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4대 전략적 노선

4대 전략적 노선



‘4대 전략적 노선’은 김정일이 201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지칭한다.

김정일은 4대 군사노선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4대 전략적 노선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정치사상 강군화’와 ‘도덕 강군화’ 노선은 2014년 8월 선군혁명 영도 개시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2015년 2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일이 언급했던 표현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언급한 김정일은 2015년 6월에는 “당이 제시한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방법을 무단히 갱신”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일이 제시한 4대 전략적 노선은 ‘군력 강화’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군사 부문에 국한된 수준의 노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김정은 집권 초기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북한의 전반적 실태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4대 전략적 노선’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선택적인 재래식 전력 강화 등과 같은 군사력 증강 및 운용은 ‘전법 강군화’ 및 ‘다병종 강군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4대 군사노선, 즉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에 따라 경제를 희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제시된 일종의 국가전략 수준의 군사노선이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의 4대 전략적 노선은 국가전략보다 하위 수준인 군사전략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원자로에서 연소를 마친 이후의 핵연료를 뜻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re-processing)함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등을 분리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명칭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바 있다.

핵연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후 원자로에서 끄집어낸 ‘사용 후 핵연료’에는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우라늄-235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중 하나인 플루토늄-239 등이 남아 있다. 사용이 끝난 연료봉은 냉각 및 방사능 감소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수조에 저장하였다가 재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처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 함유된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분리, 회수하여 우라늄-235를 재사용하는 상업용 재처리와 플루토늄-239를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군사용 재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재처리 능력의 개발을 결정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시도하여 왔다. 1975년 재처리 시설로 의심받던 동위원소가공실험실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화학실험과 건설 중이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영변

관련검색어 ▼

4대 군사노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사회안전성 (인민보안성(부))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부))은 치안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구로서 우리의 경찰청에 준한다.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국가보위성, 국방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체제 보위기구 중 하나로 꼽힌다.

배경(연혁) 북한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보안기관을 창립했으며, 그 후 사회안전기관, 인민보안기관 등으로 명칭을 바꿔왔다. 북한은 1945년 노동당 창당에 이어 11월 19일 정치보안국을 창설하여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정치보안국은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한 뒤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함께 사회안전부로 이름이 바뀌어 정무원(현 내각) 산하로 들어갔으며, 1998년 9월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됐고, 2000년 4월 인민보안성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2010년 4월 인민무력부(현 국방성),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와 함께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인민보안부로 바뀌었으며, 2016년 6월 신설된 국무위원회 산하에 배속되면서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됐다가 2020년 7월 사회안전성으로 다시 개칭된 것이 확인되었다.

5MWe 원자로의 손상된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1985년 착공하여 1995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동결될 당시 70% 공정이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영변에는 방사화학실험실, 즉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이 일부 완공되어 가동 중이며, 몇 차례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239를 추출하여 핵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은 2007년 6자회담에서 체결된 ‘2.13 합의’에 따라 폐쇄·봉인 되었으며, ‘10.3합의’에 따라 영변의 3개 핵시설(영변 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불능화 완료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설비가 해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반발하여 재처리 시설의 원상복구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관련검색어 ▼

영변 5MWe 원자로, 핵개발

1. 기능과 역할

사회안전성의 기본 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다.

사회안전성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체제와 정권 수호를 위해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 관리 및 운반(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치안질서 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본기능을 담당하면서,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 ‘비사회주의 요소’ 적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 유지 및 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 자동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주민의 사상 동향 감시를 담당하면서, 주민 성분분류, 주민의 거주 이동 통제, 공민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자원 보호 등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도 지원한다.

여섯째, 일반 경찰업무 이외에도 소방 관리, 지진 관리, 지하

철 운영관리, 교화 사업, 자체 외화벌이 사업, 주소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 질서 단속, 북한 전역에 있는 교화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안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 현황

사회안전성의 중앙조직은 사회안전상, 제1부상 및 수 명의 부상, 참모장, 참사 등과 함께 여러 개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당조직으로 보이는 정치국, 조직국과 함께 경비총국, 경비훈련국, 공민등록국, 공병총국, 교화국, 도로총국, 외사국, 제4공병국 등의 참모부서를 두고 있다. 체제보안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민보안대학은 2012년 10월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개명하였다.

사회안전성의 지방조직은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안국, 시와 군 및 구역의 보안부, 동, 리의 분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 보안국(우리의 시·도 지방경찰청)은 전국 12개 시·도별로 편제되어 있고, 200여 개의 시·군·구역에 보안부(우리의 경찰서)가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우리의 파출소장격인 전국 분주소장들을 평양에 불러 모아 불순분자 색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회의를 13년 만에 열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찰관을 북한에서는 과거에 ‘인민보안

원' 또는 '보안원' 등으로 부르다가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바뀐 뒤에는 '안전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기존 인민보안부 산하 조선인민경비대의 명칭을 2010년 4월 '조선인민내무군'으로 변경했지만, 인민보안성이 2020년 7월 이전에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선인민내무군도 '사회안전군'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노동제

(금요노동, 생산노동)



북한은 「헌법」에서 실업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29조), 법적으로 8시간 의무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30조). 북한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노동은 사회 전체와 집단의 발전을 추동하기 때문에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북한은 노동활동을 하나의 행사이자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배경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국민의 노동은 집단과 사회, 국가를 위한 신성하고 영예로운 활동이자 의무이다. 1948년에 노동의 의무가 제도적으로 성문화 되었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사회주의노동제는 1959년 3월 채택된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후 노동의 의무 조항은 1978년 4월 최고인민회의 법령 2호인 「사회주의노동법」이 채택되며 보다 구체적인 조문을 갖는 법령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주요 내용 국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며 모든 근로자는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노동법」 4, 5조). 근로자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데(3조), 16세 이상의 국민은 보편적으로 하루 8시간의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2장 15, 16조).

한편 해당 법령은 직업의 종류, 일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7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활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사상적으로 신성하고 영예로운 활동임을 강조한다(2조). 이러한 법적 가치관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데, 직장 내에서 근로활동 이외에 학생, 사무원, 당 간부는 물론 해외 대사관 성원들이 동원되는 의무/친선 노동들이 지속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먼저 ‘금요노동’은 당과 내각의 간부 및 사무원이 참여하는 의무 노동의 하나로, 이들은 매주 금요일 중요 건설장 혹은 환경미화 작업장에 동원되어 노동활동을 수행한다. 금요노동이 당, 정 간부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의무노동의 또 다른 형태로는 학생들이 농번기 방과 후 활동으로 농촌에 동원되어 영농활동을 수행하거나, 식수절 즈음하여 나무 심기활동, 파철 수거나 철길 보수, 토끼 기르기 등의 활동이 있다. 이는 사실상 의무노동의 성격을 띤다. 북한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6세 이상에게만 노동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노동은 꼬마 계획, 좋은 일하기 운동, 일손 돕기 혹은 노동 보조 활동 등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평가 북한은 국가 건설 초기 부족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노동을 의무이자 권리로 설정한 한편, 노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선동 장치를 개발, 보급했다. 노동의 집단적, 사회적 성격이란 담론 역시 이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의무노동 담론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가 절정이었던 시기는 천리마 운동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1950년대 중후반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주민 동원이 일상화되어 피로도가 누적된 현시점에서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부여된 의무를 대체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북한 헌법, 8.3 근로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개인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내용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생명의 중심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다. ‘인민대중’(노동자, 농민, 인텔리)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나누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집단주의 생명관에 기초하여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

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의무와 관련해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이고 마땅한 도리이고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결합된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일반적으로 생명 유기체의 뇌수는 각 기관들과 구조의 내적·생물학적 요구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며, 생명유기체를 이루는 각 기관들과 구조의 모든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지휘함으로써 하나의 방향으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활동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일시켜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수령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또한 생명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생명유기체의 매개요소들의 기능과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일치시켜 나가는 뇌수가 있어야 하고, 뇌수의 지휘와 조절을 실현하는 중추가 있어야 한다. 생명유기체에서 중추는 뇌수의 지휘와 조절을 실현하고 외부의 자극을 뇌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뇌수의 지휘와 조절이 중추를 통하여 실현되고 전달되어야 유기체의 기관과 계통이 움직이고 조직과 세포들이 작용

하여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려면 이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지휘를 실현하는 중추로서의 당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의 지휘를 받고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어야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평가 북한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강조한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명제 아래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영도하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여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유한성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생을 강조함으로써 수령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권 전반의 어려움,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경제난 등 대내외적 위기요인에 직면하여 사회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유일사상체계, 집단주의,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주의 강성국가



강성국가는 김정은 체제 들어 김정일 시대의 강성대국 대신 제시된 국가비전으로, 이미 달성된 정치, 사상,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과 문명강국 등을 이룩함으로써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강성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대내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배경 강성국가라는 용어는 2011년 4월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 현지지도 때부터 사용됐다.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을 지향 목표로 제시했으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맞이하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강성국가를 국가 건설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2012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국가의 달성을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며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달성해야 할 국가의 목표가 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설, 논문, 담화, 축하문, 서한 등에서 김정일 시대의 국가비전인 ‘강성대국’을 언급하지 않고 ‘강성국가’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6년 육성 신년사에서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 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성국가라는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북한이 정치와 사상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특히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핵강국이 됨으로써 군사강국도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과학과 기술을 선진화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도 제시돼 12년제 학제 개편 등 교육개혁뿐 아니라 국토나 생활환경 개선, 생산과 생활문화 확립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의 강국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스포츠 분야의 성장에도 주력하면서 체육강국을 목표로 제시하고 체육의 과학화와 국제화 등도 모색하였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각종 해외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메달 획득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이후 강성국가와 함께 부강조국 건설을 강조했었는데,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 당의 당면목적이었던 사회주의 강성국가 대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설정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외교적 압박 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기적 국가생존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조선혁명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경제사회적,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 자력갱생과 자강력 등을 바탕으로 강성국가를 포괄하는 부강조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강성대국이라는 국가 목표 대신 강성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성’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주요 형용구로 활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강국과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강국건설을 주창하면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국가 전반의 개조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제재와 고립 속에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강성’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발전성과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초 강성대국에서 강성국가로 비전의 수준

을 다소 낮춘 데서도 확인되듯 제시된 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경쟁



사회주의 경쟁은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근로자거나 집단 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진행하는 경쟁운동이다.

배경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소비재 산업인 인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같이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쟁이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쟁’이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 경쟁은 당대회를 비롯하여 당에서 결정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처럼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쟁’이라고 하였다.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잡아먹기 위해 경쟁하지만 사회주의 경쟁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관련검색어 ▼

강성대국론,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선군정치

서로 도와가면서 경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당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앞선 기술과 좋은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발전적으로 진행하는 경쟁으로 설명한다.

사회주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돕는 가운데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기술이나 경험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 시대에 전국적으로 뒤쳐진 청산리협동농장을 찾았던 것처럼 기술이 앞선 단위가 기술이 떨어지는 단위를 도와주고, 기술이 뒤떨어진 단위가 기술이 앞선 단위를 따라잡으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집단주의적 요구를 구현하는 대중적인 혁신운동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쟁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면서 실천을 강조한다.

평가 대외적 여건이 악화된 이후에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면서 경제를 통한 위기 돌파를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 분야의 생산성을 자극하고 업종 간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독립채산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1980년대 북한경제가 도달해야 할 10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목표(전력, 석탄, 강철,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 수산물, 곡물, 해안 간척)를 1980년대 북한경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았다. 이는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에서 자주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0대 전망목표인 전력 1,000억KW, 석탄 1억2,000만 톤, 철강 1,500만 톤, 비철금속 150만 톤, 화학비료 700만 톤, 시멘트 2,000만 톤, 식량 1,500만 톤, 수산물 500만 톤, 직물 8억 미터, 간척지 30만 헥타르 목표가 달성된다면 인민들이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1970년대 진행된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의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10대 전망목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을 제시하면

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은 1985년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의 주요 지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87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최종 달성하기 위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제시했다.

평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이란 구체적인 경제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은 북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구권 몰락과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급격한 대외 무역 위축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자연 재해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등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수치들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치가 10대 전망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데서 드러난다. 강철 생산은 목표치가 1,5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대부분의 목표치는 최근까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다음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일 시대에는 열리지 못하고 김정은 체제 들어 36년 만에 열린 것이다.

한편, 김정은 시대에 다시 ‘10대 전망목표’가 등장했는데, 2019년 1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해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전망목표’와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획이 무산되었거나, 목표 수립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10대 전망목표’ 수립이 제시되었다.

관련검색어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국가계획위원회, 인민경제계획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김정은 체제가 2018년 4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국가전략으로 북한의 모든 역량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경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추진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국가전략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했다.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 결정서를 통해 핵무기 병기화를 실현했기 때문에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며, 북한의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경제발전에서 유리한 대외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도 채택됐다.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것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은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 것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행정적·실무적 조치들을 취할 것 등이다.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1주일 뒤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한반도 정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환은 정체 국면을 지속했다.

대외환경 개선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 등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을 천명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5년 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 경제를 한 단계 상승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두 번째로 제시한 국가전략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은 집권 초기 제시됐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명칭과 달리 사실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선으로 추진되면서 핵무력 건설 부문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건설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2년 4월 15일 제시했던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노동당 전원회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북한 교육체계의 기본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배경 광복 이후 소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북한은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의 독자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7년 이전의 교육 관련 김일성의 지시를 모아 북한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북한 정치사전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람들을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참다운 길을 밝혀 준 주체의 교육현장”으로 정의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9월 5일을 ‘교육절’로 기념한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전문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사회주의 교육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와 협조 등 교육 전반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개괄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 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다. 정치사상 교양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이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 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활용능력을 키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교육은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이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특히 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국방체육을 강화하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 생활의 강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그리고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교육방법이라고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교육제도 부분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

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제도의 역사적 뿌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협조 부분에서는 학교의 사명과 임무, 교원의 위치와 역할을 밝히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평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북한의 모든 교육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그리고 지도자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북한 교육의 목표를 규정한 문건이다.

관련검색어 ▼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즉, 김정은 시대의 기본정치방식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정식화한 것이다.

배경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민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인민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권력승계의 정당성 및 통치 권력의 강화를 추구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로 규정하였으며,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이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치”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신념으로 삼고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선대 수령의 사상을 계승한 최고지도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신만의 정치방식을 정립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기존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던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민

대중제일주의정치를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했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2013년 1월 제4차 당 세포버서대회에서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의 영도에 따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후 김정은의 인민사랑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찬양하였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큼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근본 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이민위천’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근절 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신의 정치신념과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5월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선대 수령과의 차별화보다는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계승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북

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창시되고 심화·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 김정은에 의해 발전·풍부화되어 가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선대 수령의 시대와 차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2021년 1월 개최된 제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정식화했다. 그러면서 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라는 제목의 기사(2021년 4월 28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켜 그들을 가장 힘있는 존재, 힘있는 역량으로 되게 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 둘째,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철저히 일

관시키는 것”, 셋째,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그릇된 경향과의 투쟁을 높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어 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데서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기본 장애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 부패행위들과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라면서 “이것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치를 의식적으로 말아먹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정치이념, 정치방식으로 규정하며, 이를 김정은의 독특한 정치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 모시듯이 하라”며 인민의 가치를 수령의 권위에 빚대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노동신문, 2020년 12월 6일).

평가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선대 수령들의 정치방식과 구별되는 김정은의 기본정치방식을 정식화하였다. 북한이 설명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논리에 따르면, 수령의 인민사랑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방식을 강조하면서 ‘수령=당=인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김정은이 인민사랑 정치를 통해 인민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바탕으로 한 이민위천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하 「농촌테제」)는 북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지도적 지침이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농촌문제의 본질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배경 북한은 6·25전쟁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농촌 부문에서도 사회주의화를 추진했다. 여러 단위에 나뉘어 있는 농장들을 통합하여 협동농장화를 추진한 결과 1950년대 말 농촌 부문에서 사회주의를 완성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면서 협동농장들의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 개혁을 단행(청산리 방법)하는데, 그 결과 ‘군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1961)라는 군(郡)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거점의 통일적 농업 지도체제를 조직했다. 이는 북한식 농촌 부문에서의 자력갱생 전략이었지만 그 결과 북한의 농업은 공업보다, 농촌은 도시보다 더디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하여 김일성은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농촌테제」를 발표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개혁을 다시 단행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주요 내용 「농촌테제」는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농촌문제가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 문제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 때 중국적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테제」의 첫 번째 부분인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에서는 혁명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되는 농촌문제의 기본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인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기본과업’에서는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더한층 촉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기술하고 있다. 기본과업으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농촌기술혁명, 농촌기술간부 육성, 사상교육 강화, 노농동맹 강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인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에서는 군(郡)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군 내 지방공업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인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은 협동농장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에게 더 큰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 「농촌테제」는 농촌의 협동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농촌문제에 관한 종합지침서이다.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인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농업생산량 증가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 전반이 추락하고 1990년대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식량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적되는 현상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에서 「농촌테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적 소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주체농법(밀식재배), 협동농장

사회주의 대가정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1962년 신년사에서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중들이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집단주의 정신을 통해 전체 인민을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대가정론은 등장 이후 ‘붉은 대가정’, ‘혁명적 대가정’, ‘공산주의적 대가정’ 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며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국가의 이미지가 가정의 이미지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가’라는 2차 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 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를 통해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

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동아’와 ‘효자동아’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각 가정의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정성껏 모시는 생활방식을 통해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적 관계로 형성된 국가는 가부장제적이고 유기체적 성격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된 것이다.

본격적인 사회주의 대가정 이념의 강조는 1990년에 들어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약화된 집단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당-대중’을 하나로 묶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을 사회적 의미로 확대함으로써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정당성을 구하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이 주민들의 동요와 이완을 막고 떨어진 수령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배 권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사회를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당 조직과 근로단체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 간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주체사상, 집단주의

사회주의 문명국(강국), 사회주의 문화



‘사회주의 문명국’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북한의 국가발전 목표이다. 북한에서 규정한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배경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2012년부터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에게는 북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김정은은 새로운 주체 100년의 목표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어젠다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 문명국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처음 제시되었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 목표로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경제 발전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교육, 보건, 체육 분야의 수준을 높여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이

며,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풍성을 지닌 선진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였다.

2012년 신년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2년 4월 6일에 김정은과 노동당 중앙책임일군들과의 담화가 있었다. 이 담화는 노동당의 핵심간부들에게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동당이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선대 수령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목표로 위상이 굳어졌다.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이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 규정되었고,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세계문명을 따라 가야’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과학과 교육이었다. 과학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낙후한 사회 전반을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편도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

으로 목표가 주어졌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등일반교육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떠메고 나갈 세계적 수준의 재능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첫 사회개혁으로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현재의 교육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하였다. 대학에 정보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중학교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보급실’ 건설 등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였다.

평가 사회주의 문명국은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야 가능한 목표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력갱생, 사회주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자체의 성장 동력에는 한계가 있다. 대외 상황이 악화된 2020년 이후 천리마 시대를 조명하면서 위기감을 고조하는 것도 북한 자체의 힘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관련검색어 ▼

비물질문화유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비사회주의 그루빠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현금 또는 현물을 매개로 기업이 생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원료 등 생산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생산재 시장을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라 한다.

배경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는 계획경제제도를 발전시키면서 1961년 대안의 사업체계가 등장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따라 내각의 자재공급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유일적인 자재공급’시스템이 보편화되었다. 이때 내각의 자재공급 기관을 ‘상사’라고 부른다. 자재상사의 생산물 공급은 상품의 상업적 거래 형태를 보이나,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거래는 법적으로 차단되며, 상품의 재료가 되는 생산물 역시 상품이 아닌 상품적 형태를 지닐 뿐이므로, 생산물의 공급은 상업적 형태로 보이지만 실체는 국가에 의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러한 북한의 자재공급은 고난의 행군 이후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자재를 가공, 생산, 유통하는 공장, 기업소들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제당국은 7.1 경

제관리개선조치의 단행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재공급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물 확보 과정에서 시장적 조정을 일부 수용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산물 거래 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등장했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은 기업소가 경제적 자율권을 바탕으로 예비 자재를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 현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성되었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은 2004년 ‘김대학보’(김일성종합대학학보)와 『경제연구』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고, 2014년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시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개념과 형태가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의 보도기사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미 외부로 소개되었고, 이는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품목은 ‘경제연구’에 소개된 바와 같이 초과 생산된 물자, 수요를 초과하는 예비 자재, 공급계획 밖의 자재로 생산한 생산품,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합격품, 농장의 농산물 등이다.

한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외에도 생산물시장이 북한사회에 등장하고 있는데, 수입 생산재의 거래를 담당하는 수입물자 교류시장이 2005년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수입물자 교류시장으로는 보통강 공동 교류시장이 있으며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생산물들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평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은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의 직접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국가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는 원부자재를 기업이 서로 교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이외에도 ‘5.30조치’(2014)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물 교환이 아닌 화폐 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시장을 통한 원자재 거래’, 물자교류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공장과 기업소 사이에 직접 교환 또는 구매가 이뤄지는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최근 연간 계획의 정상화보다 생산의 정상화를 우선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이러한 정책 집행 기조는 유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독립채산제, 사회주의 상업,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법치국가



북한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당의 영도 아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 법을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를 관리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배경 북한은 김일성이 1977년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제기한 이후 사상 교양의 부차적 수단으로 법적 통제를 강조해 왔으며, 김정일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준법기풍’의 확립을 제기했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직후부터 사회주의 법제정사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법제 정비 사업에 주력하면서 2005년경부터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상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국가 및 사회를 법에 의해 통제하겠다는 통치방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은 대외적으로 권력세습과 독재체제라는 비판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결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

성 강조 및 권력세습의 정당화, 그리고 사회주의 법제 시스템 강화를 통한 수령과 당의 통치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2005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에 실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이론”에 따르면,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역사상 처음으로 당의 령도밑에 법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북한식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의 령도하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행위규범으로 표현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관리, 국가관리를 해나가는 국가”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이 영도하는 법치국가로, 당의 영도 아래 법으로 다스리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제로서 제기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법치국가가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욱 강조되면서 사회주의 법제 시스템의 정비 및 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정치법률연구』에 실린 “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글을 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령도적 지위로 하여 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수령만이 헌법을 제정·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수

령이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은 권력세습 및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민대중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24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논설은, 북한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시를 소개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르주아 법치국가’와 다른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반드시 혁명적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며 ‘당 주도의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체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인민이 법을 지키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평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제도화해 나가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더욱 강조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과거의 ‘인치’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법치’ 중심의 통치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논리에 따르면, 착취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의 법치는 근로인민에 대한 소수 특권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고 착취제도를 미화하기 위

한 사상적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부르주아 법치국가’와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수령과 당의 령도 아래 건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체의 사회주의 법치국가가 진정한 인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일반적인 ‘법의 지배’보다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며, 사회주의법치 시스템 강화를 통한 수령(최고 지도자)의 통치권 강화 및 인민대중에 대한 통제·관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사회주의 상업



북한에서 소비품을 인민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위한 상품 수요 파악, 주문, 판매 및 상품의 운송을 포함한 유통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 영역을 사회주의 상업이라 정의한다.

배경 북한에서 정의하는 사회주의 상업은 상품의 주민공급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북한의 상업 활동은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1957년~1961년 진행된 제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기본적인 상업체계가 형성되는데, 주로 자본주의적 상업활동의 청산과 중앙-지방 중심의 소비품 공급시스템 구축이 이뤄졌다.

한편, 제도적으로 1992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상사관련 제도 및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상업법」을 별도로 채택함에 따라 사회주의 상업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 상품의 거래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사업이자 이윤 추구활동을 배제한 개념으로 좁게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소비품의 확보를 위한 상업 활동의 영역은 과거 국영

상점이 주를 이뤘고, 1970년대 이후 도매상업유통을 거치지 않는 직매점이 등장했다. 국가상업체계가 공고화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농민시장이 보조적으로 기능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은 국가에 의한 인민대중 중시 정책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상업이 이윤추구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착취 성격을 지니는 반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업은 인민대중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김정일 전집 9권)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상업은 소비품 생산을 위한 재화의 소유 주체에 따라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비품상업, 사회급양, 수매로 구분되며, 소비품상업은 다시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나뉜다. 상업 활동의 지도, 통제 주체는 내각이며, 중앙 및 지방 기관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원활한 상품의 공급을 위해 계획 작성에 관여한다. 지방 수매 활동에서는 농산물의 구입 단가 결정 과정이 명시되어 농민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민들이 충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급양 관련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품공급의 질 개선을 위한 유통망 정비, 상업시설 개선 및 관리 경영, 운영에 관한 조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상업의 변화 최근 북한 당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봉사시설을 확충하며 국영상업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시장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영상업 중심의 사회주의 상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상품의 공급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생산 부족이 만성화되고, 고난의 행군 이후 암시장이 합법화됨에 따라(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내각결정 27호, 내각지침 24호) 상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더불어 「사회주의상업법」이 개정되면서 국영 상업 기관에서 수입품의 판매가 공식화되었으며, 김정은 시대 이후 전자상거래가 평양 및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상점에서의 거래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적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 매우 긴절한 문제로 상정”하고, “상업봉사활동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 구축을 주문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2.1 경제관리개선 조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경영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김정은 시대의 산업 분야 경제개혁조치이다.

배경

북한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리영민 부국장이 『근로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5.30문건(5월 노작)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실 발전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생산을 적극 늘리고 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 강화와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배급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0년 후 2012년 12월에는 ‘박봉

관련검색어 ▼

국정가격/시장가격, 국정환율/시장환율,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주 내각 상무조'의 지휘 하에 공장, 기업소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인 '12.1경제관리개선' 조치(12.1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지속적인 북한경제 침체와 생산성 향상의 한계,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와 배급제 실행 여력 한계 등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 2012년의 '12.1조치'는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 실시하였던 '방권양리(放權讓利)'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방권'은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권(자재 구입과 생산물 판매, 무역 등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양리'는 기업 이득 중 국가 상납분을 제외한 기업 유보분을 늘려 인센티브를 제고한다는 뜻이다. 즉 국영기업의 소유제도는 그대로 둔 채, 관리 방법만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의 개혁적 요소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경영 권한을 현장에 대폭 위임한 것인데,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자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상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의 계획경제 방침에 따라 생산 목표량이 하달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에 의해 필요한 만큼의 인원과 토지, 설비 투자, 원부자재 확충 등을 국가에 요청하거나 자체 조달하는 기업책임관리 방식이다.

기업소는 원자재 대금 등을 계약에 따라 지불하고 수입 중 토지 이용료와 설비 사용료, 전기료 등을 국가에 납부하고, 납

은 수익금을 성과급 중심으로 노동시간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일종의 '차등임금제' 실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계획에 의해 품목을 지시받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 품종에 대해 기업 스스로 생산, 판매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장, 기업소는 스스로 원자재를 확보해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기업에 수출권을 확대해주어 외화획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다만 자율권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한 계약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하도록 했다.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조치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4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바 '5.30 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다. 더욱이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2가지 방도로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했다. 그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도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국가적으로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시범단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실시에 따른 두드러진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 등을 계획해

주지 않고 공장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장, 기업소들에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 현상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을 합법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자율권을 확대 허용하되, 결과는 여전히 당국이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산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설비와 원부자재 조달이 쉽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 확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2021년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 박정근은 “경제 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승인제도를 정리하고 간소화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 은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본주의체제의 가치사슬(value chain)과 북한의 기업제도 변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항 목	자본주의체제 경영활동의 가치사슬	북한
		경영 활동 주요 내용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제도 변화
지원 활동	기업전반관리	기획, 재무, 경리, 법무, 정보시스템 등	계획권, 관리기구 조절권, 재정관리권
	인적자원관리	인재채용, 교육, 급여업무 등	노력조절권, 인재관리권
	연구개발	주 활동과 관련된 신제품, 서비스 개발, 각종 테스트 등	제품개발권 및 품질관리권
	구매조달	주 활동을 지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입 등	생산조직권, 무역권

	항 목	자본주의체제 경영활동의 가치사슬	북한
		경영 활동 주요 내용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제도 변화
본원적 활동	물류투입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과 배송 등	생산조직권, 무역권
	생산운영	구매한 재료의 조립과 가공 등	생산조직권, 무역권, 합영합작권
	물류산출	제조한 제품의 창고 혹은 소매점 배송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
	마케팅과 판매	제품의 광고나 점포에서의 판매활동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
	서비스	판매 후 문의 대응이나 사후 A/S	

관련검색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모든 청년 및 학생층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단체이자 사회 단체이다.

배경(연혁) 북한 내에서 청년동맹은 그 전신인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고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되어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되었다. 이후 1964년 5월 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개칭되어 30여 년 동안 ‘사로청’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김일성 사후 1996년 1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다가 2016년 8월 27~28 열린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2021년 4월 말 개최된 청년동맹 10차 대회에서 다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내용 청년동맹의 중앙조직으로 노동당 근로단체부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 조직으로

도·직할시위원회, 시(구역)·군위원회와 각 단위별 위원회(공장, 기업소, 교육문화, 보건기구, 인민군대 및 기타), 그리고 산하에 초급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맹원 수는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청년동맹원의 조직적 기반은 학교와 군대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가입한다. 대학에는 대학별 청년동맹위원회와 그 산하에 학부 초급위원회, 학년과 학급별 초급단체가 있다. 인민군에는 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그 산하에 소대는 분조, 중대급은 초급단체, 대대나 연대급 이상에는 청년동맹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직장에서는 직업총동맹이 기본적인 근로단체이지만, 30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은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다만, 당원은 청년동맹에서 제외된다.

북한의 근로단체 중에서도 청년동맹은 당의 ‘후비대’로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는 혁명과 건설에서 발휘되는 청년층의 역할과 가치가 크고 북한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계승자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청년동맹을 당, 군과 함께 체제유지를 위한 ‘3대 보루’의 하나로 중시하고 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제8장에는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당의 영도 밑에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동맹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사상 교양단체로서의 사업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업 △경제건설에의 동원 △당의 통일 및 대남 정책 지원 등이다.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청년동맹은 혁명의 후비대 역할이 더

욱 강화되어 혁명전통교양 강화와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동맹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나서는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여러 건설 현장에 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등의 형태로 동원되어 왔고, 특히 ‘청년돌격대’의 속도전 캠페인은 군사체제로 조직화되어 추진되었다. 이처럼 청년동맹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청년간부 양성사업도 강화해 왔다. 1946년 11월 5일에 중앙청년간부학교가 발족된 이후, 이 교육기관이 사로청중앙학교를 거쳐 사로청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74년 11월 1일 사로청대학은 금성정치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청년동맹은 과거 김정일의 후계 구축과 정권 유지 과정에서 김정일의 중요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는데, 김정은 정권에서도 정치적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강조되며 청년동맹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2021년 현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동시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도 원래 청년동맹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1980년 이전부터 청년동맹에 들어가 1986년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올랐으며, 1998년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에서 해임될 때까지 10년 넘게 청년동맹을 이끌었다.

관련검색어 ▼

소년단, 돌격대, 속도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주체사실주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역사 발전의 합법칙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배경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 정부에 의해 주도된 예술 방향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예술창작의 방법론으로 채택된 것은 1934년 소비에트 작가 총연맹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였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이론은 1917년에 있었던 10월 혁명 직후에 시작되었고,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대에 이어 사회주의적 건설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였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성(典型性)이다.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과 시대의 방향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과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파성(黨派性)이다. 당이 채택한 노선이나 정책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 그

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여기서 당(黨)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다. 셋째, 대중성(大衆性)이다.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이익과 생활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상성(理想性)이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태도로 예술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이상을 제시한다.

북한도 정권 초기에는 소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유일영도사상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주의인 ‘주체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주체사실주의의 핵심은 사회주의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주체적인 인간을 그 중심에 놓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주체사실주의는 1980년대 북한 문예정책과 노선의 유일한 지침인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의 핵심이다. 인민이 역사 발전의 중심인 ‘주체사회’인 것을 강조하면서 주체시대에 맞는 주체사실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기본적인 창작방법론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있지만 북한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주체사상,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

사회주의적 소유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에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전 인민적 소유’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협동적 소유’가 있다.

배경(연혁)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직후부터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에 착수하여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개혁에 착수하여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월에 「토지개혁에관한법령」을 발표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1946년 8월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전체 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를 계속 확대시키고, 농업 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해 나갔다.

휴전 이후 1953년 8월에 당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58년 8월에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1961년에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였으며 지금의 협동농장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

196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면서 농업의 협동적 소유 형태를 전 인민적 소유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경지의 약 90%는 협동농장에 속해 있어 협동적 소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는 국가가 전 인민을 대표하여 소유하는 ‘전 인민적 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등의 기본적인 자연자원과 중공업·경공업 등의 중요 공장, 항만, 은행, 교통수단, 방송기관, 학교 및 중요 문화·보건시설 등이 국가 소유의 대상이다.

‘협동적 소유’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와 협동단체가 그 소유권의 담당자가 되는 집단적 소유 형태를 말한다. 사회단

체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이 있고,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농업협동농장이 있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와 그 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것이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은 시효의 제한이 없으며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북한은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는 도시와 농촌 간의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협동적 소유는 모든 산업이 국가 소유가 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국가 소유를 더 고차원적 소유 형태로 보고 있다.

평가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고 있어 개인 소유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됨으로써 극히 제한적이다. 북한의 소유제도는 북한 주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 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틀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협동농장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부르주아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이 사회주의를 가진 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과 관점을 일컫는 말이다.

배경 김일성은 1958년 전국 시·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인민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적 복무는 곧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근로인민이 국가 주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힘이 강화되어야 전 세계 노동계급의 국제적 이익을 옹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사회주의체제 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의 권력 강화, 인민대중의 조직적 동원, 계급성 및 사상성 강화, 인민대중의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 고취 등에 활용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1966년에 발표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서 첫째, 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조국과 향토, 사회주의 제도,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이며 둘째,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과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투지와 자기 희생성이며 셋째,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혁명적 전위물과 그것을 창조한 인민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의 감정”이라고 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을 인민적 사상감정, 노동계급을 위해 복무하는 계급적 사상감정, 당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당적 사상감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 과거의 어떤 애국주의와도 구별되는 ‘최고의 애국주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적 및 계급적 사상감정의 최고 표현인 당적 사상감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당적 영도체계 확립이 애국적 투쟁 전통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뛰어넘는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후반기까지 진행된 당적 유일 영도체계 확립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내용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체계화하는 시기는 중소분쟁이 심화되고 북·중갈등이 일기 시작하던 때였으며,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나타난 시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정의되는 때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민족주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던 북한 지도부는 196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냈

다. 이렇게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사상의 주체’로 나아가는 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둘째, 근로인민들에게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도록 할 것, 셋째, 근로인민들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높여 남조선 해방과 민족통일, 그리고 민족적 번영을 위해 투쟁하는 정신을 배양할 것, 넷째, 근로인민들을 혁명적 낙관주의로 교양할 것 등이다.

요컨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로 설명된다. 또한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이 연대성과 원조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전통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전통이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로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검색어 ▼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 김정일애국주의

살림집 (하모니카 주택(평집) 등)



살림집은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말로 살림을 목적으로 하는 집이다. 북한에서는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데, 살림집 이외에 ‘국수집’, ‘빨래집’ 등이 있다. 살림집 종류로는 ‘아파트’, ‘단층집’, ‘평집’, ‘평집’ 등이 있다.

주요 내용 ‘살림집’은 집의 쓰임에 따라 분류하는 용어이다. 살림집은 집의 구조와 모양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송림시아파트, 중간복도아파트, 고미집, 누계, 다락집, 단간집, 단층집, 두간집, 배집, 샷갓집, 탐시아파트, 외랑시아파트, 칠양집, 통간집, 팔작집, 평집, 포집, 뽕죽집, 오랑집, 외통집’ 등이 있다.

살림집의 형태로는 아파트 외에 ‘문화주택’이 있다. 문화주택은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된다. 문화주택이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문화주택 자체가 특정한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와 시대적 미감에 맞게 지어진 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 문화주택은 착취사회의 산물인 초가집, 토막집에 대비된 문명한 사회주의적 거주공간을 의미하였다. 즉 문화주택은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였다. 다층 문화주택, 고층 문화주택이라

는 말도 나온다. 문화주택은 현대적인 형태로 지어진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으로 단독주택을 아우르는 말이다. 특히 농촌에 세워진 살림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지역이나 노동자구와 같은 곳의 주택 형태는 다양하다. 공동작업과 주거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격자형의 3~4층 이상의 공동 주택을 비롯하여 단층으로 여러 세대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부엌 한 칸, 방 한 칸의 구조로 된 주택도 있다. 국경 지역이나 산촌 지역에는 이처럼 부엌과 방이 하나인 가구가 붙어 있는 주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생김 모양이 마치 하모니카처럼 생겼다고 하여서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한다.

평가 북한의 주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국경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는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하모니카 주택이 구성되어 있다. 하모니카 주택은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계층이 거주한다.

살림집이용허가증 (주택 입사증)



북한에서 공민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한 살림집 입사(입주)를 위해서 인민위원회 또는 살림집 배정 단위를 대상으로 “살림집이용신청” 허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살림집을 배정 받은 공민에 대하여 이름, 직장직위, 가족수, 주소, 번호 등이 기입된 살림집이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민은 이를 받은 이후 배정받은 주택에서 거주한다.

배경 북한의 주거 관련 법률은 1948년 「헌법」의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의 보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북한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한 이후 토지의 개인소유가 폐지되면서 대다수의 주택 역시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한다. 1978년 4월 채택된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자리 및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하며(5조), 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무상 제공(69조)해야 함을 성문화하였다.

공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살림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 주민은 살림집 배정 신청 이후 해당 기관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인민위원회 또는 주택을 소유한 단위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살림집이용허가증’이다.

주요 내용 국가의 살림집 제공 의무가 성문화되었음에도 일정한 허가절차가 규정되어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노동의 의무이다. 북한 주민이 살림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한다. 살림집 접수에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가운데 ‘직장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허가의 주체가 인민위원회 혹은 근로자가 속한 단체임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살림집의 이용 권리는 노동의 의무를 적극 수행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살림집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수정보충된 「살림집법」에 따르면 국가의 살림집 배정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명, 애국렬사, 전사자 및 사회주의 영웅-공로자, 로력 혁신자 및 과학자, 기술자 우선 배정 ② 격오지 근로자에 대한 살림집 배정 ③ 자연재해, 도시계획조치에 따른 이재민에 대한 살림집 우선 배정 ④ 가족 수, 출퇴근조건, 거주조건을 고려한 배정 ⑤ 협동소유 살림집의 경우 해당 협동단체 근로자에 대한 우선 배정 등이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국가 유공자 및 공로자, 근로자우선의 원칙 및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른 배정 등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살림집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20년에 공식적으로 2만가구의 주택이 신

축 보급되었다고 발표했다(제8차 당대회, 김정은 위원장 개회사). 더불어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평양에 5만 세대, 함경북도 검덕지구 에 2만 5천 세대의 주택건설을 제시했다.

평가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며 살림집 배정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제도이자 당과 수령의 애민정신의 표현이라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20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시작으로 평양 및 지방 살림집 건설을 통한 인민생활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동년 8월 은파군 대청리 수해상황 점검 현지지도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수해지역에 본보기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바 있다. 언론은 이와 같은 당과 최고지도자의 조치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현이자 당과 최고지도자의 애민정신의 표출임을 선전했다.

관련검색어 ▼

살림집(하모니카 주택(땅집) 등)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실천적 요소로서 이른바 3대 혁명역량, 즉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역량, 남한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의 강화를 내세워왔다.

배경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였으나, 이보다 앞선 1954년 11월 3일 김일성이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처음으로 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한 방면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당의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이승만 역도를 반대하여 궤기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북반부 민주기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더해 그는 북한이 “세계평화옹호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국제적인 평화역량이 성장하고 평화운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조국통일 사업에 더욱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957년 8월 25일 김일성은 송도정치경제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도 '3대 혁명역량 강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로 남반부에서 노동운동이 발전되고 양양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승리적으로 진행되어 이 진영이 더욱 강대해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인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되는 때에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김일성의 연설은 '3대 혁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통일관을 보여준다.

주요 내용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3대 혁명역량을 “첫째,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은 우선 대내적으로 민주혁명기지노선에 기초하여 남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로서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 체계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남 혁명 차원에서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침투화시키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하여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대남 혁명 역량 강화는 남한 민주주의 운동 적극 지원, 남한 주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 내 지하당 건설공작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대남선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의 혁명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 남한의 민주화 진전 등으로 북한의 3대 혁명역량 강화전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평가 북한이 이처럼 ‘3대 혁명역량 강화’를 강조하게 된 것은 6·25 남침의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대내외적 혁명역

량 부족에 있었으며, 남한의 4.19 혁명 시 노동자, 농민의 참여가 적었고 그들을 지도할 독자적인 정당이 없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관련검색어 ▼

남조선 혁명론, 민주기지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기본과업으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창된 대중동원운동이다. 또한 경제건설에 나서는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경쟁운동이기도 하다.

배경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5년 1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여 운동의 성격과 목표, 방향을 공식화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1일 함남 단천군 검덕광산 등에서 쉼기집회가 이루어진 이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한 김정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상 개조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주장하였다. 1974년에 공식적으로 선언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당시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어 가고, '수령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가장 중심에 놓인 과제였다. 김정일은 대규모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조직이 직접 지도하게 하였으며, 주체 확립

을 위한 사상투쟁을 통해 김일성 노선에 대중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김일성 노선의 전면화, 체계화,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발기 이후 주요 공업 및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문학, 예술, 보건 등 북한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 혁신운동으로 확대·전개되었다. 여기에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군부대, 의료부문, 과학, 교육, 체육, 문화예술단체, 인민반 등 북한의 거의 대다수 기관들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제하는 당과 정권기관, 그리고 출판보도기관은 운동의 도입에서 제외되었다.

북한은 3대혁명이 낳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의 창조를 위해 창설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을 경제건설에 총동원해 '우리식 사회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체제를 유지·강화시켜 나가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77년 9월에는 이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붉은기 수여판정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3대혁명 추진에 관한 일정한 결의 목표를 달성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했다. '3대혁명붉은기'는 김일성 생일(4.15)과 김정일 생일(2.16)이나 정권수립일(9.9), 당창건기념일(10.10) 등 특정 기념일에 여러 해당 단위들에게 집중적으로 수여되었고, 기타 필요한 시기에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수여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3대혁명붉은기'를 받은 해당 기관 및 대상에 대해

서는 국가적으로 특별한 예우조치를 취한다. 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의 성원들을 '3대혁명기수'로 호칭하여 '3대혁명 명예 휘장'을 달고 다니도록 하고, 축하모임·경험토론회 등을 마련하며, 각급 행사 시에는 붉은기 수여단위를 앞자리에 서게 할 뿐 아니라 모범적인 '3대혁명기수'를 주석단에 앉히고, 혁명전적지 답사와 평양 견학사업에서 우선 선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0-80년대 대중 동원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총노선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1986년 11월 제1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개최한 이래 1995년 11월에 제2차 대회, 2006년 2월에 제3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2015년 11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정은이 서한을 통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제기하고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운동"이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전인민적대중운동"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11월 18일에는 노동신문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45주년을 기념하여 게재한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강위력한 무기"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자립경제의 근간이자 사회주의강국의 추동력이라고 독려하기도 하였다.

평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당적 운동이자, 북한 노동자 및 농민들이 가진 사상의식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주로 간부정책의 일환이었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전 인민이 참여하는 대중노력동원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유일체제 확립을 위한 '3대혁명' 수행과 북한 체제의 일상적 규율 확립에 있었다. 북한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하면서 모범적인 기관과 그 종업원들에게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고 포상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결속을 끌어내고,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관련검색어 ▼

속도전, 속도창조운동, 천리마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은 사회주의 이후 공산주의를 완성할 때까지 노동계급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과업으로서 사상·기술·문화혁명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이란 기존의 혁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옛 간부들의 기술실무 수준을 제고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며,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무장하기 위하여 지식청년들을 광범위하게 생산현장으로 결합시키는 운동이다.

배경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기되었다. 북한은 그 첫 단계로 1972년 가을 당조직들에서 선발된 당핵심들과 대학생들로 '지도소조'를 조직하여 지방의 경공업 공장에 파견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작업을 점차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당시 북한이 추진하였던 '6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수십 명 규모의 소조가 지방의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노동자 및 농민을 돕거나 지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3대혁명 과제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침체된 북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3대혁명소조운동'의 공식적인 발기 이후 북한은 3대혁명소조 구성원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당원, 국가경제기관 종사원, 근로단체 종사원 그리고 과학기술자, 지식청년 등까지 점차적으로 포함시켰다.

초기에는 특정한 운동의 지도체계가 마련되지 못했으며, 주로 김일성의 교시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의 '친위대', '근위대'의 역할을 부여받은 소조원들이 주도하는 직접적인 지도 방식은 기존의 각 지역에 존재하였던 당, 행정, 경제 분야의 간부들을 위축시키고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후 1974년 2월,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를 당중앙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1975년 3월에는 중앙과 도, 시, 군에 있던 3대혁명소조 종합실을 당중앙위원회의 산하 기구인 3대혁명소조 지휘부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북한이 기존에 추진하였던 대중동원운동과 명백히 구별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도방식이다. 이전의 지도방식은 사상검열이나 경제와 관련된 지도 중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으나, 3대혁명소조의 지도는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인 실무적 지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는 지도소조원의 파견 규모와 그 시기이다. 이전의 동원운동들은 대부분은 짧은

기간에 소규모의 지도인원을 파견하여 그 지속성이 약했으나, '3대혁명소조운동'은 대규모의 인원이 장기간 머무르며 지도 하도록 했다.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기능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 목적을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타파에 두고, 이를 통해 기존의 당·행정 관료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3대혁명소조의 당위성과 이론적 전개, 그리고 그 실제적 성과를 김정일의 지도력과 결부시킴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3대혁명소조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2월 '전국 3대혁명소조원영성자회의'를 열고 김정은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저작을 강조하며 '3대혁명소조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과학 기술과 그에 기초한 자력자강이 강조되는 가운데 3대혁명소조원들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으로 칭송하고 생산현장에서 이들이 이룩한 창의와 혁신 활동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있다.

평가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 지도를 통한 '사상혁명'을 촉진하여 당조직의 역할과 행정기관인 내각(국정무원)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

한 성과는 이후 북한의 유일지도체계 형성의 사회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김정일의 후계 체제 확립에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1974년 2월 정치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직접 지도 하였으며, 김정일의 지도 이후 당에 입당한 3대혁명소조원이 1만 1,6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김정일 후계구축과 '3대혁명소조운동'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의 '3대혁명소조운동'은 2011년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2월에는 3대혁명소조 전국회의를 30여 년 만에 개최하였다. 이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와 공고화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검색어 ▼

3대혁명붉은기정취운동, 돌격대

삼지연관현악단 (삼지연극장(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만수대예술단 산하의 '공훈여성기악중주단'을 모체로 하여 2009년 1월에 설립한 삼지연악단에 가수들을 포함하여 확대한 예술단이다.

배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공연을 위해 임시로 '삼지연관현악단'을 편성하였다. 클래식 연주를 위주로 하는 삼지연악단에 다양한 레퍼토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가수들을 포함하여 임시로 편성하면서, 삼지연관현악단이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 삼지연악단과 삼지연관현악단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삼지연악단은 만수대예술단 산하의 '공훈여성기악중주단'을 모체로 하여 2009년 1월에 설립된 예술단으로, 클래식 연주를 전문으로 한다. 삼지연악단은 국제콩쿠르대회 입상자나 2·16 예술경연상을 수상한 젊고 실력 있는 예술인들로 구성하였다. 2017년까지는 '삼지연악단' 또는 '만수대예술 소속 삼지연악단'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위해 남한을 방문하면서, '삼지연관현악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후 삼지연관현악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주와 노래를 결합하는 예술단으로 활동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은 2018년 이후로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2018년 4월 7일자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삼지연관현악단을 우리 당의 음악정치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어나가는 본보기예술단체로, 세계일류급의 관현악단으로 내세워주시려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삼지연관현악단을 집중 조명하기도 하였다.

2018년 10월 10일에는 삼지연관현악단극장(현 삼지연극장)을 개관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극장은 조선인민군 소속 교예단인 모란봉교예단의 전용 극장이었던 모란봉교예극장을 음악공연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개조한 공연장이다. 2018년 1월 '세계적 수준의 관현악단 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작업을 시작하여 건축 면적 36,610㎡에 1,200석의 객석을 갖춘 관현악 전용극장으로 개조하였다.

평가 삼지연관현악단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모란봉(전자)악단의 활동이 주춤해진 2019년 이후로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모란봉(전자)악단이 세계화와 개혁을 상징한다면 삼지연관현악단은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한다. 삼지연관현악단이 주목받는 것은 개방적이고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에서 사회주의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음악정치, 보천보전자악단/은하수관현악단/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왕재산경음악단)

상업은행



예금, 계좌개설, 채권 발행, 환전 등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은행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는 북한의 은행으로, 2006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장했다.

배경 계획경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상업 활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소비재 상품 대다수는 노동자별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농업 활동을 통한 소득이 적었던 농민들 역시 농민시장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지정된 날짜에 한해 판매할 수 있었다.

제한된 시장거래와 함께, 북한의 단일은행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금융제도 또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소련이 최초 도입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확산된 이 제도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국가의 계획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은행은 대부, 저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이 함께 담당한다.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은 생산영역에서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

의 계획집행을 통제하는 것이었기에, 상업영역의 기능은 저축 등의 최소 영역에서만 발휘되었다. 결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부는 국가의 통제영역에 위치하였고, 북한은 1960년대까지 국가주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국가의 계획이 정상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금융제도 역시 변화하게 된다. 변화의 발단은 사적 영역에서의 거래를 비합성화 시켰던 배급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생활필수품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암시장에서의 거래를 단행한다. 기업소 역시 원부자재 공급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 할당된 계획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공식영역을 통한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적 영역에서의 교환이 활성화되었으나, 여전히 상업이 중앙은행에 의하여 관리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와 위안화가 중심이 되었다. 국가에 의해 계산되던 화폐의 유통은 국가의 통제 영역 밖에서 확장되었다. 계획 중심의 국가 운영은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은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경제체계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금융제도는 「상업은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영역과 민간의 금융영역으로 이원화된 은행체제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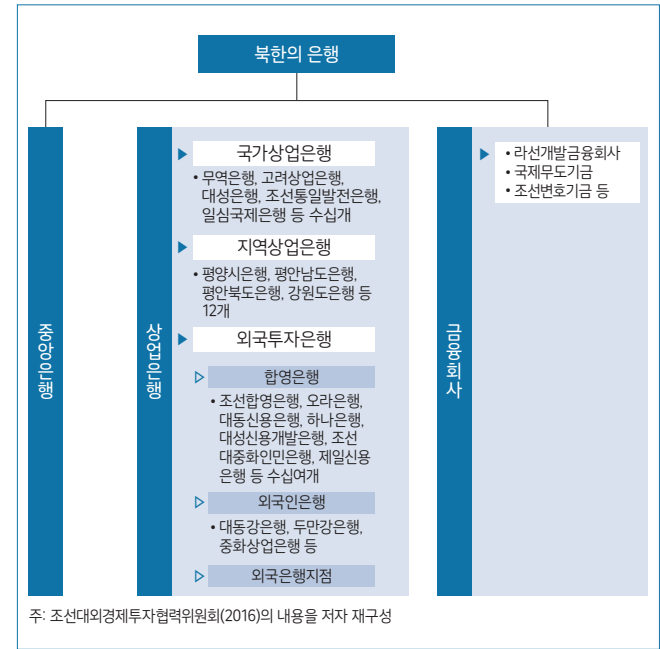
주요 내용 북한이 금융제도에서 상업은행을 공식화한 목적은 2006년에 제정된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상업은행의 업무는 12가지로, 예금, 대부, 돈자리(계좌)개

설, 국내결제, 대외결제, 외화교환, 신용확인 및 보증, 채권 발행, 귀금속 거래, 고정재산(생산수단)등록, 환전 및 기타 승인 업무 등이다.

위 공식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도가 큰 업무는 예금이다. 북한은 상업은행의 예금업무의 목적이 “유휴화폐자금의 적극 동원”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은 노동자들의 건전한 생활기풍 확립은 물론 추가 수입 확보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광명백과사전, 2010). 결국, 고난의 행군 이후 사적 영역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국가로 귀속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상업은행을 형식적으로 공식화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상업은행은 무역 등 대외금융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국가상업은행과 국내의 민간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상업은행으로 구분되며, 별도로 외국투자은행으로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으로 나뉜다.

북한의 은행체계(2016년 기준)



주: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2016)의 내용을 저자 재구성

자료: 김민정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 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서울: 한국은행, 2021).

관련검색어 ▼

나라카드/전성카드, 사회주의 상업, 새로운 경제관리개선포지(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김정일 시대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이어받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조치인 '5.30조치'를 의미한다. 두 가지 개선조치는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에서 국가중심의 중앙계획경제와 하부 경제단위의 자율성이 동시에 강화된 경제관리방법이다. '5.30조치'의 주요 정책은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분조관리제 하의 포진 담당책임제)이다. 더불어 대외경제 분야의 경제개발구 정책 역시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화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배경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제도의 중심 특징은 정치지도(당에 의한 관리)를 최우선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그것(명령)에 입각한 계획 관리운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국가주도의 중앙계획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연합기업소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추진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정일 시대에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김정은 시대에는 2014년 '5.30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조치의 의도는 고난의 행군이후 기존의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국가주도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의 한계와 비공식적으로 성장해온 민간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결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 및 평가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4년 '5.30조치'로 알려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제시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 대외경제 분야의 '경제개발구' 정책 등을 포함하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어 사용 측면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식 경제관리제도의 목표가 하부 경제단위(기업, 협동농장 포함)의 경영자율권 확대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에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상대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생산계획권, 재정권, 생산품목선택권,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권, 판매권 등에 일정한 선택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원부자재 공급이 제한되고, 근로자에 대한 배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의 주체들이 가격공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추진할 것을 허용한 것이다. 즉 비법적 영역에서 묵인되던 시장적 조정을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소유제도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 제도 개선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4인 내외의 소규모 분조로 계획 및 분배의 단위가 변화하면서 생

산에 대한 의무와 함께 생산에 대한 분배의 몫을 키워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는 정책적 유도를 꾀하고 있다. 기업소와 노동자 역시 경영 실적, 계획된 생산 지표의 달성 등에 따라 성과를 차등 배분받게 되었다.

평가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제도의 변화는 경제영역에서 중앙계획(또는 명령)비중이 줄어들고, 민간의 자율권과 시장(교환)의 역할이 국가의 공식영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체제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질서하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첫째, 소유제도에 대한 근본 변화가 없다는 점, 둘째, 중앙의 적극적 통제가 약화된 것에 비해 여전히 중앙에서 지표를 결정, 하달한다는 점과 국가가 시장과 돈주를 여전히 구속력 있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위기의 해소와 발전을 위해 개선된 경제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는 먼저, 개선된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책의 예측가능성 강화, 둘째, 국가의 자원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 내부 경제개혁 정책

	김정일 시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계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역할 축소, 내각 권한 확대 • 세부계획 하부 경제단위 위임 • 현물지표 축소, 금액지표 확대, 기업 자체 계획지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총적전략(계획)과 단계별전략 수립 - 인민경제 단위별 자체 계획수립 • 계획체계의 간소화와 기업소, 협동농장 자체 계획수립 재량권 대폭 확대 - 국가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3개로 간소화 - 기업소지표 도입으로 중앙지표 30% 수준으로 대폭 축소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지표: 생산량 → 번수입으로 전환 - 번수입의 기업소 자체 사용 허용 • 독립채산제 전체 기업으로 확대 • 계획 외 생산품 30% 시장판매 허용 •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원자재 거래 허용 • 가격결정권한 일부 이양 • 유일임금제도 폐지, 임금 상한선 폐지: 상금, 장려금 지불승인제 폐지 • 국가납부금 정액제로 전환 • 현금보유 한도 확대 • 가격결정 자율권 확대 • 원자재 현금거래 허용 • 인력운용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확대 - 기업체, 협동단체의 실질적인 경영권 보장 -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 품질관리권, 제품개발권과 인재관리권, 무역 및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의 제도적 보장 - ① 국영기업의 시장경제활동 공식 승인 ② 시장 활용으로 생산과 투자 증대 ③ 경제의 성장 및 재정수입 확충 • 기업 간 물자조달을 위한 주문제 도입 • 국가, 지방의 계획물자 지원체계 강화 - 전략 및 중요지표와 물자조달 계획 동시 작성 - 물자공급이 안될 경우, 기업의 계획달성 의무 면제 • 민간 유희자금, 저축성예금 등의 기업체 경영자금 동원 허용 • 「경제개발구법, 제정(2013.5) - 지방의 경제개발구 지정권 허용

	김정일 시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재정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수입금 폐지, 국가기업리득금 신설 • 토지사용료 신설 • 사회적 공짜 대거 축소, 식량배급제 → 구입제로 전환 • 국가재산 판매납부금, 부동산이용료(토지사용료 확대개편), 종합시장 시장이용료 등 신설 - 집금소, 외화환전소 설치(2003) - 중앙은행법 제정(2004) - 상업은행법 제정(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분배: 순소득 → 소득(매출, 판매수익)분배 방식 전환 - 국가납부 몫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와 기업의 수익분배 갈등 해소 • 기업 현금계좌, 외화계좌 허용 - 기업간 원자재의 시장가격 거래후 대금결제 - 외화계좌 허용으로 협동화폐거래소 및 협동환율(비공식환율) 인정 - 기업소지표 실행을 위한 금융의 제도화
농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조관리제 전면 확대: 분조 규모 축소, 책임영농제 도입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 허용 • 작물선택권 확대, 세부계획지표 권한 부여 • 포전담당제 시범실시: 분조 2~5가구 편성 • 협동농장에 분조규모 축소 권한 부여 • 개인경작지 30평 → 400평 확대 • 국가납부량 축소 • 분조단위 분배권한 확대 • 현물분배 → 현금분배로 전환 • 6개월 농사(부업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제 확대 - 계획수립(작물선택권, 농장지표)권, 포전담당책임제, 조직권, 재정운영권, 판매권 확대 및 분배제도의 개편 - 분조관리제하 포전담당제와 유사유별제 - 농장지표에 의한 수익의 현금 보유 허용 - 주민한 유희화폐자금 영농경영 동원 허용 • 알곡현물분배, 현금분배 병행 실시 • 잉여농산물의 판매 및 가격 결정권 강화 • 자연재해, 물자공급 미보장시 수매계획 조절 • 「농장법」 4차례 개정(2012.12, 2013.7, 2014.12, 2015.6)
유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교류시장(원자재거래 시장) 개설 • 국영상점 임대 허용 • 종합시장(소비재거래시장) 개설(2003) • 물자교류시장내 현금거래 허용 • 수입물자 교류시장 개설(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생산 소비품, 무역회사 수입품 시장판매 허용 - 무역회사, 국영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기업소, 시장, 직매점 등과 계약 판매 허용 •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관리소 설치 - 물물교환 및 현금거래 허용
가격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가격의 현실화, 변동 국정가격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가격제도의 가변가격제도 전환

자료: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4); 김일한,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발 정책』(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주: * 2004.6월 내각 상무조 개혁안 포함.

관련검색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분조담당제,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12.1 경제관리개선조치)

생활총화



생활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소속된 당이나 기관, 근로 단체에서 매주, 매월, 매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주요 내용 초창기 생활총화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엄격하게 참가를 강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7년 이후 생활총화는 엄격해졌다. 북한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국제사회의 데탕트 분위기 등에 맞서 내부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조직 생활체계를 재정립하면서 생활총화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생활 총화를 제도화 한 것이다. 김정일이 재정립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초창기 생활총화에 비해 강도가 훨씬 강하고 엄격했다.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에서 생활총화는 10명 내지 15명씩을 한 단위로 묶어 당세포와 같은 기층조직처럼 치밀하게 조직되었다. 북한 전체 주민이 빠짐없이 생활총화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생활총화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의례이지만 북한 주민의 일상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1974년 4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하나로 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정치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당원들은 소속 당세포, 비당원인 경우 청년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초급단체, 소년단원은 소년단 조직인 분단에서 여성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초급단체, 직장인은 직업동맹 초급단체, 농민들은 농업근로자동맹 초급단체 등 각자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한다. 대학생의 경우도 당원은 소속 당세포, 청년동맹원은 소속 초급단체에서 생활총화를 한다. 청년동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학급별 동맹 초급단체에서, 소년단 기간인 학생들은 분단(학급)별로 생활총화를 해야 한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들도 당생활총화에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각 대사관과 무역대표부에는 임시 당세포나 동맹 초급단체 등이 조직돼 있어 해외에 나온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해야 한다.

생활총화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당 조직이든 근로단체 소속이든 성격과 방식은 같다. 당생활총화는 세포비서가, 동맹생활총화는 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이 집행한다. 총화는 주민들 한 명씩 차례로 일어나 비판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생활총화를 하는 요일은 조금씩 다른데, 사무원이나 학생

서해갑문



서해갑문은 남포시와 황해남도 은율군 송관리 사이의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갑문이다. 본래 이름은 남포갑문이었으나, 완공직후인 1986년 9월부터 서해갑문으로 부른다.

서해갑문은 대동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1년 5월 4일 착공하였으며 1986년 6월 24일 완공했다. 영남리와 은율군 피도 사이에 폭 14m, 길이 7km의 제방(흙제방 5.2km, 콘크리트제방 1.8km)을 축조하고, 피도와 송관리 간 약 800m에 3개의 갑문(5천 톤급, 2만 톤급, 5만 톤급)과 댐을 건설하는 등 총연장 8km의 방조제를 쌓았으며, 대형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90m 정도의 90° 회전교량을 설치했다. 또 제방과 갑문 위에 4차선 도로와 철도를 부설했다. 미림갑문(美林閘門)·봉화갑문(烽火閘門)과 함께 북한의 3대 갑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갑문의 건설 목적은 27억 톤의 담수능력을 지닌 인공호를 조성하여 남포항의 접안능력을 2만 톤에서 5만 톤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비롯해, 서해안에 새로 조성하는 총 30만 정보의 간석지 가운데 평남·황남의 20만 정보에 농업용수 공급,

들의 경우 매주 토요일에 40~50분정도 진행한다. 노동자, 농민 등 생산직 근로자들은 도별로 지정된 휴일 전날에 한다. 월 생활총화는 매달 마지막 생활총화 요일에 해당 달의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을 종합적으로 분석 비판한다. 분기 생활총화는 주, 월 생활총화와 달리 기관 단위로 진행되며, 상급조직 간부의 참석 하에 당총회, 동맹총회 형태로 진행한다. 연간 생활총화는 12월 말에 하며 형식은 분기 생활총화와 같다.

평가 김일성은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잘하는 것은 당성을 높이는 최고의 무기라며 비판사업을 강화할 것을 역설해왔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이라는 맥락 속에서 비판을 정상화하는 생활총화를 제도화시켰다. 이를 통해 생활총화는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조직 속에 완전히 엮어매는 강력한 통제 기제로 활용했다.

현재 북한의 생활총화는 집단주의적 사회의 균열로 과거에 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정성도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평생을 강제로 생활총화를 비롯한 조직생활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서 생활총화가 갖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며, 전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인민반, 집단주의

남포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확보, 수량조절로 대동강 하류지역의 홍수방지, 내륙 수상운수 확충, 남포와 황남 간의 육로수송 단축, 남포·대동강 지역의 풍치 조성, 인공호수에서의 양식업 개발 등이다.

당초 3년 내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3개 사단 규모의 군병력 및 각지에서 동원된 청년돌격대와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방대하며 작업지역의 유속이 빠르고(초속 11m) 수심이 깊어(최고 30m) 작업조건이 극히 나쁜데다, 북한의 토목공사 기술수준이 낮아 두 차례 완공시한을 연기(1985년 4월 15일, 1985년 10월 10일)한 끝에 1986년 6월 24일 완공했다. 열악한 작업조건 속에서 정해진 시일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갑문이 건설됨으로써 미림·봉화·성천·순천 갑문과 함께 남포·평양·순천·덕천의 주요 공업·광업·농업 지역을 연결하는 운하망이 생겼으며, 남포는 이전보다 더 큰 비중을 지닌 국제항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서해갑문의 건설 비용으로 40억 달러 이상 소요되어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대동강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돌격대, 청년영웅도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선군경제건설 노선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란 군사중시, 군사선행 원칙하에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건설 노선이다.

주요 내용 소련,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 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남한과 체제경쟁을 해야 했던 북한도 1960년대 중반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건설 노선을 수용해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지금까지 북한의 기본정책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노선을 ‘선군경제건설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변형하여 군사선행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군수공업의 활성화와 발전 문제를 우위에 놓고,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의 정상화와 활성화 문제를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삼는 군수산업 및 군경제에도

위기가 초래하자 축소된 국가 재원을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김정은도 과거의 국방·경제병진노선과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이어받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2013.3.31)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1960년대 중반부터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북한 경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째,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정착시켰다. 중화학공업이 기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간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군수산업으로 투자 재원이 집중되어 민수산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소비생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어 오늘날까지 민생경제 부문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군수산업이 단순히 국방경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점차 민수산업의 일부도 전용하고 경제적 잉여를 얻기 위한 독자적 경제 공간의 성격으로도 발전하면서 북한 경제 내에서 군 경제라는 특권경제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과 같은 국방공업의 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왔으며, 경제난으로 전반적 국가 재원이 축소되었음에도 국방공업에 최우선적 자원배분의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채택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민생 부문이 높은 물가와 부족한 상품, 계층별 소득격차 확대, 지역 간 생활조건의 차이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은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있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평가 최근 선군경제건설 노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교체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처방이었던 선군정치가 인민중심의 정치방식, 경제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관련검색어 ▼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선군정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선군정치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다. 선군 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군이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이다.

배경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한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 등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약화된 당의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여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과 체제유지는 물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강화한 군사력과 거대한 군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당초 선군정치가 김정일이 1995년 1월 1

일 ‘다박술 초소’를 방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05년 8월 노동신문에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을 따라 105탱크사단을 방문한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영도가 시작되었다며 선군정치의 배경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선군정치의 출발점은 1960년 8월로, 선군정치 시작은 1995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개시와 더불어 군은 북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했고,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등을 통해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꾀하였다. 2002년부터는 군민일치·관병일치·군정배합의 실현을 강조하였고, 2004년에는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 군인사의 주석단 서열 상승, 사회통제기구의 인민무력부 편입,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 등을 통해 군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에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선군사상을 핵심적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있다”며 이전 헌법에 없던 ‘군인’을 추가하고 군의 기본적 사명이 선군혁명노선의 관철이며 국방위원회의 첫째 임무도 선군혁명노선 관철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

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가는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선군정치에서 군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함께 수행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기, 식량,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에 인민군대를 내세워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경제난, 에너지난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크나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군대가 그러한 정체된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전 분야에서 정상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선군정치를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으로 확대 해석했다. 또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한 것도 “군 중시정책을 실시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선군정치가 김정일 특유의 영도방식이라면서 “조성된 난국을 성과적으로 타개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영도자의 정치방식”이자, “혁명무력을 혁명의 기둥으로 키우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전반적인 사회주의 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 가는 군중시의 영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일 양국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확고부동하게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가 선군정치는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제기된 김정일의 통치방식이었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부족한 자원을 국방을 중심으로 한 특권적 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을 왜곡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가 파탄해지고 주민생활이 궁핍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펼친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무위원회의 임무에서 선군혁명노선 관철을 삭제하였다.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서 선군정치가 삭제되었고, 2021년 1월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도 선군정치가 사라짐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정상화 국면에 돌입하였다.

관련검색어 ▼

주체사상, 고난의 행군, 선군경제건설 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선군혁명문학예술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북한이 선군시대를 맞이하여 주체사실주의 문학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주장하는 문학이다. 주체사실주의 문학이 집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내세우는데 비해, 선군혁명문학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인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형상한다.

배경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회 혼란을 막고 체제 유지를 위해 군을 앞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군을 앞세워 사회 기강을 잡고, 경제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군정치’로 명명하였다. 북한은 ‘외세의 고립 압살 책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을 앞세워야 한다면서, ‘선군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선군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선군혁명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문예 분야에도 선군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김정일의 통치방식인 ‘선군혁명노선’, ‘선군영도’, ‘선군정치’ 등이 1998년 10월 공식화하면서 2000년 말에는 ‘선군혁명문학’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조선문학』 2001년 1월호는 선군혁명문학을 김정일의 사상과 이념, 영도업적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천리마』라는 잡지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북한 문단에서 2000년 하반기에 이

르는 시기까지 약 1만 5천여 편의 작품이 창작됐으며 이 작품들을 선군혁명문학이라고 지칭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이 이후 예술분야로 확대되면서 ‘선군혁명미술’, ‘선군혁명음악’, ‘선군영화’ 등이 나왔고, 각 선군예술을 종합하여 ‘선군문학예술론’으로 체계화되었다.

주요 내용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문자 그대로 김정일의 선군 영도업적, 선군정치, 선군제일주의 등 선군을 문학예술작품 전반에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선군영도를 담는 것이다.

『조선문학』 2003년 1월호 머리글은 선군혁명문학 창작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주제를 “아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더욱 완벽하게 최상의 높이에서 창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형상을 집중해야 할 미학적 문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총대철학’과 미학사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김정일의 독특한 선군정치의 산물이라고 한다. ‘총대철학’이란 군대가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총대에서 시작하여 총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인민군대의 혁명적 문학예술을 본보기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중요 주제로 강조하는 것은 ‘혁명적 군인정신’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 희생정신’ 등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반을

선전선동부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상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당내 전문 부서이다.

두고 있으며,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육탄정신’ 등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북한에서 선군혁명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는 것은 대표작으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철령>,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 소설 <영생>, <붉은 산줄기>, <역사의 대하>, <평양의 봉화> 등이 있다.

평가 선군혁명문학예술의 등장은 김정일 정권이 19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체제붕괴 위기의 극복을 반영하는 문화적 슬로건이며 수령형상문학의 김정일시대 버전이다. 심각한 경제난이 사회 전반에 불안과 위기를 불러오자 김정일은 군을 내세워 이를 통제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다.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가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자 선군문학예술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김정일 정권 시기 선군정치에 맞춘 통치 도구화를 위해 등장한 문예이론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생활 지도와 당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이 중 당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된다. 여기서 전자는 당 조직지도부가, 후자는 당 선전선동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북한체제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양대 핵심부서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이 1964년 대학을 졸업하고 당조직 생활을 시작한 부서가 조직사업과 선전선동 담당부서였다는 점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8월 ‘전국당조직일꾼강습회’에서 당사업의 개선 강화를 역설하는 가운데 조직지도부가 당생활을 장악하고 나타나는 결함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선전선동부가 결함을 고치는 데 맞는 사상교양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선전선동부는 김정일 체제하에서 당 조직지도부와

관련검색어 ▼

선군정치, 수령형상문학, 주체문예이론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 부장을 거쳐 선전 담당비서를 역임하면서 주민교양과 선전선동을 직접 이끌어 후계자로서의 정당성과 업적을 과시했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를 통해 문학예술작품 창작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당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우상화 선전, 당정책의 침투와 경제선동, 각종 정치행사를 주관하였다.

선전선동부는 공식적인 임무로서 △선전활동사업 총괄 지도 △사상교육 및 출판물 통제 △국내외 출판물 검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에 따라 당 및 중앙기관에 대한 지도업무를 비롯하여 교양, 영화, 예술, 신문, 출판, 사적 등의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각의 문화성과 출판지도국은 물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 조선노동당출판사, 민주조선, 공업출판사 등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만수대창작사 등 주요 문학예술기관단체도 전부 선전선동부 직속이다. 또한 각 도·시·군 당에도 선전부가 있어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지휘를 받아 지역 주민에 대한 체제선전과 사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노동당,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소년단



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산하에 조직된 소년 단체이다.

배경 소년단은 사회주의 혁명의 지속을 위해 혁명 후비 양성을 목적으로 1946년 6월 6일에 청년동맹산하 조직으로 결성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문맹퇴치운동을 위해 각급 학교를 신설하면서 인민학교(현 소학교)를 세우고 학교 안에 소년단 조직을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제도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은 소학교 2년부터 소년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어린 시절부터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소년단은 만 7세부터 13세에 해당되는 소년·소녀들로 이루어지고, 현재 단원 수는 3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년단 입단식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소년단 창립 기념일 등에 행해진다.

소년단의 기본 임무는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떠메고 나갈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다. 구호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이며, 활동 목표는 △정리사업, 학습회의, 행사동원 등을 통한 공산주의사상 주입 △학생규율 상태 및 집단행동 통제 △학생들의 공산주의적 도덕 윤리관 확립 △경제현장에 동원된 학생들에 대한 감독 통제 △학생들의 개인 생활 지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 6일 소년단 창립 66주년을 맞아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는 등 대대적인 전국연합행사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소년단 모범단원들 20,00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김정은이 축하연설까지 한 바 있어, 후계세대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서 소년단 행사에 최고지도층이 참석한 것은 199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소년단 제5차 대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일성은 사망 한 달 전 이 대회에 참석해 소년단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6년 6월에는 소년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평가 소년단은 전국 조직으로 북한에서 조직생활의 출발이 되는 단체이다. 소년단의 상징은 붉은색 머플러로 북한 어디에서나 붉은색 머플러를 목에 두른 소년단을 볼 수 있다. 소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빠짐없이 참여하여 국가 명절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소년단 창립일에는 별도의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소조활동



소조(小組)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예복습이나 실험실습, 연습 등을 하는 일종의 동아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배경 소조활동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소조’라는 일종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능이나 체육 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조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조 활동을 통해 재능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전문예술인이나 과학자로 육성하기도 한다.

주요 내용 소조는 글자 그대로 작은 조직이라는 뜻이다.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등 주요 학과목 소조와 각종 예체능 소조, 음악소조, 체육소조 등이 있다. 소조 활동은 매일 수업이 끝난 후 2~3시간 정도 한다.

소학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소조가 운영되며, 중학교는 예체능 소조 이외에도 문학·수학·물리 등 주요 과목별 소조가 운영되고 있다. 또 소조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소나 공장 등 모든 직장에도 조직 및 구성되어 있다.

소조 활동은 기타·하모니카·손풍금·피리 등의 악기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탁구·농구 등 각종 운동과 미술·컴퓨터 교육 및 외국어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조 활동은 음악이다. 이것은 북한이 학교에서 예술 소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수업을 마친 후에 학생 과외 교육기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선발된 우수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평양에 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16 학생소년궁전 등이 있다.

평가 북한의 소조 활동은 학생들의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소조 활동으로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단체에서의 이탈 및 개인 활동을 막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1인 1기’라 하여 각종 악기 배우기를 권장하여 연중 열리는 정치 모임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선전·선동 활동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관련검색어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소년단, 인민대학습당

속도전



북한의 속도전이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 최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 나가는 사업방식이다. 속도전은 전격전, 섬멸전을 기본원칙과 방법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인 전투형식으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조직지도사업의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 가운데 기본은 사상혁명이다.

배경 북한의 속도전은 기술, 노동력, 자본, 설비, 노동의욕의 부족을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최대한 동원하여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초는 천리마 운동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빠른 속도와 높은 질을 담보하는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였다. 이때 제기된 ‘천리마속도’에 이어 1950년대 말부터 각 부분에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를 강조해왔다.

원래 ‘○○속도’라는 명명은 어느 한 생산부문에 집중하여 높은 효율의 생산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모범으로 삼아서 북한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속도전이 모범사례를 넘어 새롭게 정의되고 전 사회의 작동원리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1974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

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속도전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북한 전 사회의 모든 사업에서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이 속도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명명했지만 늘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속도와 균형’의 관계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인민경제계획 기간에는 목표완수를 위해 속도를 강조하지만, 인민경제계획 이후 완충기 시기에는 균형을 강조한다. 따라서 속도전은 일정한 기간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북한에서 속도전이 구체적 형태로 제시된 것은 ‘70일 전투’이다. 북한은 당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제시하고 전 사회적으로 속도전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자, 1974년 10월 하순부터 12월 말까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70일 전투를 실시하였다.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추진된 70일 전투는 근로자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 사상전을 기본으로 하여 전국 2천여 개의 단위에 1만 1천여 명의 간부를 파견하였고, 12개의 중앙예술단과 48개의 지방예술단으로 구성된 경제선동대를 통해 현지 공연을 하는 등 경제사업의 높은 성과를 촉진하였다.

이 밖에도 1970년대 이후 김정일이 발기하거나 김정일과 관련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속도전식 사업방식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년)이 시작되던 해인 1978년에는 그 해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자며 10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1988년 2월에는 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주요시설공사의 기한 내 완공을 위해 200일 전투가 전개되었고, 첫 번째 200일 전투가 끝난 직후 1988년 9월에는 제2차 200일 전투를 전개하기로 하여 1989년 4월까지 속도전을 연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김정일은 2009년에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돌파구 마련과 체제 단속 및 내부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50일 전투를 전개하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가 진행되었다.

70일 전투는 북한이 2016년 2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2016.5.6~9)를 앞두고 벌인 노력동원운동이다. 노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승리의 개가”라는 5월 3일자 글에서 “노동 계급이 70일 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북한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1974년 10월 하순부터 12월 말까지 ‘70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마치고 이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

기관 일꾼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를 6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하였다. 북한은 2016년 200일 전투 기간에 함경북도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대표적 건설과제인 려명거리 건설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장에 투입되었던 인력과 장비를 수해현장으로 재배치하여 수해 복구에 진력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88년 2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정치국회의를 통해 같은 해 9월 9일(정권 수립일)까지를 기한으로 200일 전투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한 마감에도 각종 건설공사가 부진하자 북한은 ‘새로운 200일 전투’를 추진하기도 했다.

속도전식 사업의 주요 사례

실시년월	속도전식 사업의 명칭
1974. 10	70일 전투
1978. 5	100일 전투
1988. 2	제1차 200일 전투
1988. 9	제2차 200일 전투
2009. 4	150일 전투
2016. 2	70일 전투
2016. 6	200일 전투

평가 속도전 방식의 경제적 효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상전에 기초한 속도전 방식은 북한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원경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내포적 발전의 필수요인인 창의력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속도전은 계획의 양적 달성만을 강조하는 경향

을 보이게 되어 제품의 질 하락, 낭비와 비효율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속도창조운동



속도전의 개념은 '대중운동'의 운영 방침을 규정하는 기본원칙이다. 즉 속도창조 운동이란 북한 특유의 속도전 방식이 1980년대, 1990년대에 구현된 대중운동을 의미한다.

배경 김정일이 '70일 전투' 과정에서 발기한 속도전은 1980년대에 '80년대 속도창조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제3차 7개년 계획과 함께 '90년대 속도창조운동'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

1.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

1982년 7월 6~7일 직업동맹 제6기 제3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운동으로 7월 9일 김책제철소 노동자들의 집회를 시발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노력동원운동이다.

1978년부터 실시된 제2차 7개년 계획을 기한 내 완수하고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과 때를 맞춰 주체사상탑, 개선문,

관련검색어 ▼

돌격대, 속도창조운동, 천리마운동, 희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창광원, 빙상관 등의 축조물과 창광거리를 완성하였다.

1950년대의 천리마운동과 1970년대의 속도전을 계승한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일컬어 노동신문은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기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거기에 속도전의 기세를 더 가하는 위력한 속도”라면서,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근본적인 3가지 요구로 ① 당 정책에 대한 절대성·무조건성 정신 ②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③ 치밀하고 책임적인 조직·정치사업 등을 제시했다.

2. 1990년대 속도창조운동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1990년대까지 연장한 것으로 1990년 1월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제시됐다. 이것이 1993년 5월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속도창조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1993년 5월 11일 전승(휴전협정체결) 40주년 기념에 즈음해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구호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운동’이 제시되었다. 이 운동은 북한이 제국주의의 반북·반사회주의의 공세에 맞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나아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운동으로 벌여 나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내용면에서 체제 고수를 위한 주민 사상무장 강화 및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주민 노동력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이 운동은 노동력 제고를 위해 속도전 방식의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속도창조운동’

을 병행하였다.

3. 2000년대 이후 속도창조운동

2000년대 이후 북한은 80년대 속도창조운동과 9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른바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사회적 속도전을 지속했다. 김정일은 2009년 9월 희천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해 ‘희천속도’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속도전을 통한 노동집약적 건설 추진은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속도전에 따른 자원과 인력의 일부 건설 현장 편중은 당시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던 북한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경제상황의 호전을 발판으로 삼아 ‘조선속도창조’라는 새로운 속도창조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조선속도’의 성과로 내세우는 대표적 사업은 ‘마식령속도’라는 신조어의 배경이 된 마식령스키장 건설, 수산사업소를 비롯한 동해 수산기지 건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및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주택 건설, 연풍과학자휴양소 건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및 5월1일 경기장 리모델링, 10월8일 공장 건설 등이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평가

속도창조운동은 북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주민들을 건축물 축조에 이용하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노력동

원운동이다.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이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사회주의 건축물 축성을 위해 속도를 강조했던 운동이라면,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은 사회주의 체제고수와 사상무장, 그리고 3차 7개년 계획시기 기본건설을 위한 속도전 운동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체제 공고화에 필수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등을 연이어 벌이며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만리마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천리마’보다 빠른 ‘만리마’라는 표현이 북한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돌격대, 속도전, 천리마운동, 희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수령론



수령론은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된 이론이다. 이러한 정치논리 속에서 북한은 곧 수령의 체제가 되었고, 김일성과 북한체제가 등식이 되는 체제가 되었다.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화하였다.

배경 북한은 수령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을 사전적 의미를 넘어 통치이념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 승화시켰다. 이는 처음에는 김일성을 우상화하여 유일무이한 수령의 존재로 치켜세우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회적 주체인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 확립에서 핵이 된다”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그 용어 및 내용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주요 내용 김일성을 수령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때는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일단락되고 김일성 지배체제가 공고화되던 시점이었다. 1969년 4월 전국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는 수령을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 뇌수”로 정의하였다. 1974년에는 김정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를 정당화시킨 수령론은 1980년대 혁명적 수령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김정일에 의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에 기초하여 기존의 수령론을 넘어 혁명적 수령관을 재정립했기 때문이다.

수령론의 주장 및 변화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계속된 권력투쟁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에 일단락되었다. 이후 후계구도의 윤곽이 확실해짐에 따라 지배구조에 대한 논리적 이념체계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필요성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혁명적 수령관이다. 따라서 혁명적 수령관의 체계화는 자연스레 김정일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해야 하며,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영도를 무조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자세와 입장을 요구한다.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의 수령을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고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이론을 창시하는 위대한 사상이론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급의 수령은

풍부하고 세련된 영도방법과 예술을 지니고 수백만 근로인민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영도자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 공산주의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끝없는 충실성, 강직한 혁명적 원칙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혁명적 품모를 지니고 있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수령을 노동계급의 위대한 혁명가로 규정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중심 요소이기도 하다. 주체사상에서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인민대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가 북한의 수령론은 김일성의 권력장악을 위해 제시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전된 논리이다. 수령론은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보장해주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 사회가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도 북한 사회가 신격화된 수령, 즉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령론에 기초한 북한 정치체제에서 법과 제도는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주의 이념 또한 수령제 중심의 사회주의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호 속에서 그 사상이론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수령형상문학



수령형상문학은 ‘주체사실주의’ 문예이론의 핵심으로 문학에서 수령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배경 북한의 문예정책은 1967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 시기에 주체사상이 확립되면서 문예이론 또한 김정일에 의해 주체적인 것과 혁명적 투쟁의식을 중시한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수령형상문학을 중심으로 수령형상작품이 대대적으로 창작됐다. 이를 위해 1967년 북한 최고의 작가들로 구성된 수령형상 전문 문학작품창작단인 ‘4.15 문학창작단’이 설립됐다. 또 김일성과 그 일가족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이른바 혁명 활동을 각색한 수령형상 영화제작 전담 창작단인 ‘백두산창작단’이 만들어졌다.

백두산창작단은 초기에는 <피바다> 같은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항일작품들을 영화로 각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조선의 별>처럼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우상화한 영화를 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위기 상황

에서 수령형상문학이 다시 강조되었다. 이때 수령형상문학의 표현 주제는 김정일로 옮겨졌다. 김정은 시기가 시작되면서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예술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다.

주요 내용 수령형상문학은 ‘수령형상창조이론’에 근거하여 표현된다. 핵심은 수령의 위대성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그려내는 것이다. 수령형상창조이론은 수령의 혁명역사와 공산주의적 풍모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주체문학의 목적이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전 사회에 일색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령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풍모와 자질을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여 주체문학예술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령의 정신세계와 풍모를 따라 배우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적인 원칙은 ①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화 ② ‘수령·당·대중의 3위 일체’에서 수령의 형상화(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수령의 형상화) ③ 수령의 혁명역사와 업적의 형상화 ④ 수령 후계자의 위대성을 형상화(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실성, 지도자로서 풍모와 업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곧 수령형상화의 모든 원칙은 주체로부터 출발하여 주체로 귀결되며, 수령 외의 인물형상화 역시 수령형상화를 위한 인물, 즉 주체시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다하며 이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인간으로 형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형상작품으로 김일성과 그 가계를 형상한 작품은 수도 없이 많다. 김일성을 이상화한 대표적 예술영화로 <조선의 별> (1-10부)과 <백두산>,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주인공으로 김일성이 등장한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 김일성의 동생을 이상화한 <누리에 붙는 불> 등이 있다. 소설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그린 시리즈 『불멸의 역사』,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그린 『배움의 천리길』, 김정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편 시리즈 『불멸의 향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은 시기에는 후계자 시절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묘사한 단편 소설 11개를 모아놓은 <불의 약속> 초판이 2014년 발행됐으며, 이듬해에는 증보판이 발행됐다. 이 외에도 노동당 창건 70주년 준비 일환으로 진행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청년학생들이 김정은 관련 작품이 다수 포함된 1,200여 편의 문학작품을 창작했으며, 국립연극단이 ‘혈맥’이라는 작품을 제작해 김정은을 간접적으로 찬양했다고 한다.

평가 수령형상문학은 수령의 혁명역사와 공산주의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에게 수령을 따라 배우도록 하였고, 후계체제 구축에도 활용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권력체제 유지에 활용한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주체문예이론

순천린(인)비료공장



2017년 7월 16일 착공 이후 약 4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어 2020년 5월 1일 준공된 평안남도의 비료공장이다.

배경 북한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리적 특징을 보인다(통계청, 2019). 밭의 경우도 대부분이 산간지역을 개간해 확보한 농지이기 때문에 지력이 낮고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면서 화학비료를 최대한 투하해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밀식재배(주체농법)방법을 보급했다. 그러나 1990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료 공급량이 감소하고, 생산하는 비료의 성분 또한 조악해졌다. 많은 주민이 식량난을 겪은 고난의 행군기 북한의 시비율은 남한 대비 40%에 불과했다(통일교육원, 2004).

북한은 질소(N), 인(P), 칼륨(K)의 3대 비료중 질소비료가 유일하게 제한적인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을 획기적으로 증산하기 위해서는 인(P), 칼륨(K) 생산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유기비료생산을 독려하면서 부족한

화학비료를 보완해왔지만 지속가능한 식량증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었다. 결국 화학비료 생산을 통한 농업정상화 과제를 풀기 위해 2017년 7월 순천린비료공장이 착공했고, 2020년 5월 완공되었다.

주요 내용 공장 준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식량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고, 농업 현장에서도 식량증산에 제일 걸림돌이 “인비료이며 인비료만 제대로 시비하여도 알곡(곡물)을 수십만이나 증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7년 7월 공장건설 착공식 이후 3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내각총리 등 북한 지도부는 건설현장을 모두 17차례 방문했다. 또한 인비료의 원료인 인회석, 인광석 광산인 영유광산, 증산광산, 풍년광산을 8회 방문했다. 공장건설현장과 원료광산 생산정상화를 위해 방문한 회수가 총 25회였다. 특히 이들 인광산은 “수십 년 동안 침수되었던 갯들을 원상복구하고 생산공정들을 완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두 번째 많이 방문한 공장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11회였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 지도부의 순천인비료공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 주도로 2020년 6월 이후 3대 화학비료중 하나인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칼륨)비료공업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인비료공장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이 위치했던 평안

남도 순천시 역전동에 조성되었다. 보도된 북한의 기사에 따르면, 공장은 인비료는 물론 탄산소다, 촉매, 에폭시 페인트, 질소비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공정을 확보하고 있다. 부지면적은 30만㎡이며, 연간 인산암모늄 생산량은 25만톤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KDB산업은행, 2020).

평가 북한은 식량 증산을 위해 화학공업의 발전,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대중동원운동 조직을 통한 기술 보급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순천인비료공장은 그 가운데 화학공업에 대한 북한의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은 공장 준공 이후에도 당 간부들의 지속적인 현지료해를 추진하여 비료 생산 정상화를 통한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노력을 토대로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김정은 집권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20). 그럼에도 대북제재가 지속됨에 따른 기술이전의 제약과 외부 자원의 도입 중단, 지속된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는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주체농법(밀식재배), 평양종합병원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 (6.12 북미공동성명)



북미 양국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4개 항을 담고 있다.

배경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맞이한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에서 김정은이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여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교착될 때 남북 정상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날짜에 회담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수락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6.12 북미공동성명을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히고, 4개항의 합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북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셋째,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북미 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한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해당 고위인사 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북미 양국은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 다른 의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북미 양국은 힘겨운 실무협상을

거친 끝에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였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평가 한국전쟁 이후 역사적인 첫 북미 양국 간 정상회담의 결과인 6.12 북미공동성명은 기존 적대적 북미관계 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관련검색어 ▼

북일 수교협상



연합기업소

열성자 대회

영변 5MWe 원자로

예산납부금(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5대 교양

왕재산예술단(왕재산경음악단)

우라늄 농축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공장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우리민족끼리(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양덕온천관광지구),

삼지연시꾸리기사업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

유훈통치

음악정치

의사담당구역제

인간개조사업(사상개조사업)

인민경제계획

인민경제대학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민위천)

인민대학습당

인민반

인민생활공채

임남댐(금강산댐)

연합기업소



연합기업소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장을 모공장(어머니 공장)으로 삼아 업종과 지역별로 유사한 공장들(아들 공장들)을 주위에 배치하는 대규모 공장 트러스트이다. 북한에서는 1973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1984년 이후 북한의 공장체제를 대표하고 있다.

배경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진행하는 경제 단위'는 기업소로 불린다. 기업소는 일정한 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진행하며 얻은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진행한다.

북한의 기업연합체로 대표적인 것이 '연합기업소'이다. 북한에서 연합기업소는 1973년 조직되기 시작하여, 1974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선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6개의 연합기업소가 공식적으로 발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기업소가 북한 기업소 체제를 대표하게 된 것은 1984년 11월 정무원 상무회의의 방침을 통해 '관리국과 연합기업소를 새로 내오려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이다.

주요 내용 연합기업소의 도입 목적은 ① 산업생산 부문별 관리의 효율화 ② '대안의 사업체계'의 효과적 운영 ③ 분권화와 물질적 자극 강화 ④ 자재공급문제에 대한 대처의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 실시 이후 경제전문가도 아닌 당비서가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공장·기업소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유관 공장·기업소를 한데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연합기업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그중 중요한 형태의 연합기업소는 다음과 같다. ① 모공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에 종속되는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한 형태 ② 일정한 지역의 같은 제품 생산 기업소(동종 기업)들과 그에 종속하는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한 형태 ③ 전국적 범위에서 같은 제품 생산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한 형태 ④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업소 등이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③의 형태의 연합기업소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공장은 청진화학섬유공장이며 아들 공장으로 길주팔프공장, 화성탄광, 상화탄광, 화성화학공장, 길주경관지공장, 스텐트공장, 길주경제림공장 등이 하나의 연합기업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기업소 지배인과 연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연합기업소 전체를 관리하게 된다.

평가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유관기업과 동종업종이 서로 계획과 생산을 맞물려 진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산업 간,

열성자 대회



북한에서 '열성자'는 각 부문별로 일선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초급간부를 의미하며 '열성자 대회'는 이들이 모이는 대회나 회의를 가리킨다.

열성자 대회는 해방 이전 공산당 건설과정에서 소집되기도 하였으며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를 결정하기 위한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됐다. 북한은 이를 비롯해 각 부문의 열성자 대회들을 개최하면서 핵심세력 포섭과 고무, 독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각 시기 정책적으로 중요시하는 분야의 열성자 대회를 개최해 그 분야의 핵심정책노선을 설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지를 모으는 작업을 해왔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첫 해인 2012년에만 4개 분야에 걸쳐 열성자 대회를 개최했고, 2013년 4차례, 2014년과 2015년 각 2차례, 2016년 4차례, 2017년 3차례, 2018년 2차례, 2019년 1차례 등 2012~2019년까지 총 22차례의 열성자 대회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년 이후로 2021년 12월 말까

부문 간 연쇄적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서로 잘 갖추어져 있다면 유기적 연관 아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지만, 역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계획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곧바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전반적 생산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북한의 연합기업소 체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서로의 연관 고리들이 끊어지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1998~2001년 사이 대대적으로 연합기업소들을 해체했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 산업 분야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공장·기업소의 생산정상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합기업소 체제의 정상적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급기업소를 중심으로 몇몇 기업소만이 연합기업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검색어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독립채산제

지는 열성자 대회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열성자 대회 및 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에는 국토관리, 직맹 해설강사, 임업, 사법검찰 분야의 열성자 대회 및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3년에는 3대 혁명소조, 농근맹 해설강사, 적공일꾼, 군수산 부문에서, 2014년에는 노동적위군, 군인가족 분야에서, 2015년 여맹, 군수산 부문, 2016년 군대, 계획, 지질탐사, 군수산 부문, 2017년 군내 청년동맹, 농근맹, 과수 분야, 2018년 농촌청년작업반 및 청년분조, 농업 부문, 2019년에는 노동적위군 지휘성원이 각각 참여하는 열성자 대회 및 회의가 개최되었다. 총 22차례의 열성자 대회 및 회의 가운데 군수산 부문 열성자회의가 3차례로 가장 많았고, 노동적위군 지휘성원 및 농근맹 해설강사 열성자회의가 각각 2차례 개최된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열성자 대회는 각 시기별로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말단책임자들이 모여 대회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이다. 그런 만큼 열성자 대회는 정권 차원에서 핵심 지지층을 포섭하고 격려, 고무하는 한편 이들을 축으로 삼아 대중을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지 9년차에 접어든 2020년부터 열성자 대회 및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의 권력 및 리더십 등이 공고화되었다고 북한 당국이 나름 평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기 주요 열성자 행사 개최 현황(2021년 12월 기준)

시기	행사명
2019년 2월	전국 노동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2018년 12월	제4차 전국 농업 부문 열성자회의
2018년 2월	전국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 열성자회의
2017년 11월	전국 과수 부문 열성자회의
2017년 11월	농근맹 해설강사 열성자회의
2017년 9월	제4차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 열성자 대회
2016년 12월	제4차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
2016년 9월	전국 지질탐사 부문 일꾼 열성자회의
2016년 9월	전국 계획일꾼 열성자회의
2016년 8월	제3차 오종흠7연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
2015년 12월	제3차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
2015년 11월	제2차 전국 여맹 초급일꾼 열성자 대회
2014년 12월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 대회
2014년 2월	노동적위군 지휘성원 열성자회의
2013년 12월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
2013년 11월	제4차 적공일꾼 열성자회의
2013년 8월	전국 농근맹 해설강사 열성자회의
2013년 2월	전국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2012년 11월	전국사법검찰일꾼 열성자 대회
2012년 11월	임업 부문 열성자회의
2012년 8월	전국 직맹해설강사 열성자회의
2012년 5월	국토관리 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

관련검색어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영변 5MWe 원자로



영변 5MWe 원자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이다. 영변 5MWe 원자로에서 연소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영변 5MWe 원자로는 5MW의 전기출력을 내는 발전 겸 용 시험 원자로이다. 북한이 이 원자로를 만들기로 계획한 것은 1970년대 말로 추정되며, 1980년 제6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동년 7월 건설되기 시작하여 1987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다. 영변 5MWe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의 원료로 사용하며, 이산화탄소 가스를 냉각재로 이용한다.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의 에너지를 낮추는 재료(감속제)로 흑연을 사용하기 때문에 '흑연감속로'로 불리기도 한다. 영변 5MWe 원자로는 대표적 흑연감속로인 영국의 마그녹스 콜더홀(Calder Hall) 원자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콜더홀 원자로는 열출력이 268MW인데 반해 전기출력이 60MW이기 때문에 열효율이 약 22.4%로 매우 낮다. 영변 5MWe 원자로의 열효율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5MWe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의 원료로 사

용하기 때문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핵반응에 이용되는 원소는 우라늄-235이지만 자연 상태에 우라늄-235는 매우 적은 양만 존재한다. 우라늄 계열의 동위원소 가운데 자연 상태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가 우라늄-238인데, 이것이 핵반응을 일으키면 핵폭탄에 이용되는 플루토늄-239로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있어서 다른 재료를 핵연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부터 유리하다. 북한은 영변 5MWe 원자로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제1차 북핵 위기가 진행되던 1993년 말 손상되어 제거된 일부 핵연료봉을 제외하고는 5MWe 원자로가 초기발전 연료 그대로 운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로 가동 이후 초기 전력실험 동안 전력밀도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연료 배치를 수정하고, 많은 연료봉을 교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나중에 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손상된 일부 핵연료봉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해 재처리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처리에 대한 부분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지만, 재처리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견이 달라 1994년 제1차 북핵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5MWe 원자로가 저출력으로 운전될 경우 약 11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1994년까지 열출력 8~12MW에서 멈추지 않고 가동됐으므로 매년 약 5~6kg 정도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많은 어려움 속에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2005.9.19)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7년 2월 13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2.13합의)에 합의했고, 같은 해 10월 3일에는 2단계 조치(10.3합의)에 합의했다. 북한은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7일 영변 5MWe 원자로의 구성물인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4월 2일 영변 원자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감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냉각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며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검색어 ▼

핵개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예산납부금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경제무역지대수입,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예산수입 중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의 비중이 약 85%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각각 자본주의경제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한다.

배경 북한은 조세가 노동자의 재산을 수탈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 지적한다. 따라서 경제당국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예산납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및 운용은 1995년 「재정법」과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성상 생산수단은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의 생산 활동은 농민들의 농업생산 등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체제를 국가형성 초기부터 도입, 운영해 공장, 기업소의 자금집행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자본주의사회에 비해 낮았고, 재정제도의 분화 및 전문화도 상대적으로 늦게 완성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을 통한 사회적 순소득을 확보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해당 납부대상이 속한 기관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반영되어 인민경제계획 실현을 위한 경제 활동에 동원된다.

예산납부금은 먼저, 납부 대상의 형태에 따라 국가기업이익금과 협동단체이익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기업이익금은 국영 기관이 경영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주로 중앙예산기관에 납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발생한 소득에 따라 생산부문 이익금, 유통부문이익금, 봉사(서비스)부문이익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단체이익금은 주로 지방의 일용품, 식료품, 편의봉사를 제공하는 협동단체 경리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방예산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국가 예산의 중심 원천은 국가기업이익금에서 비롯된다. 일종의 법인세 성격을 가지는 납부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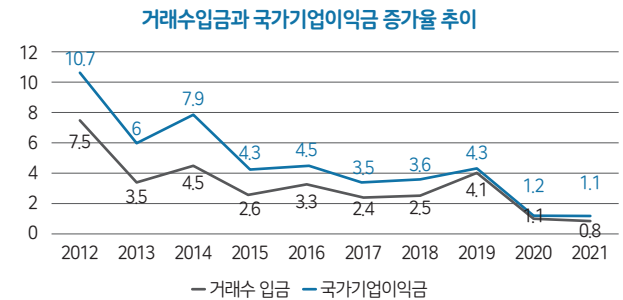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납부금으로 공장, 기업소, 기관 등의 예산납부금 항목 중 국가기업이익금과 함께 전체 예산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소유의 생산수단(기계, 토지, 보험 등)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부금으로는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 사회보험료, 부동산료 등이 있다. 특히 2020년부터 국가투자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예산 수입항목에 포함

시켜 운영하고 있다. 개인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입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형태는 시장사용료, 시장관리소 운영비 등의 형태로 납부된다.

한편, 재정 수입에 따른 지출항목은 인민경제(농업, 수산업, 경공업, 기간공업, 기본건설, 산림), 인민적시책(교육, 보건, 사회보장, 체육, 문학예술), 국방비로 구성된다.

평가 최근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중단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 2년 연속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예산수입 증가율이 급감했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국가 기간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악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자료: 최고인민회의 예산수입 발표내용, 각 년도.

관련검색어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국정가격/시장가격, 국정환율/시장환율, 기간공업(4대 선행 부문),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당재정의 유일관리제 원칙, 독립채산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5대 교양



5대 교양은 김정은 시대 들어 사상교양과 관련해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다섯 가지 항목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 등 다섯 가지를 통칭해 5대 교양으로 불렀다. 이후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5대 교양을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5대 교양은 2014년 말부터 등장한 용어로 김정은 체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상교양사업을 가리킨다. 김정은은 2014년 12월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면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의 5대 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던 것이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5대 교양을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5대 교양 중 위대성 교양은 말 그대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대 수령의 업적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북한은 학교수업을 통해서도 혁명역사 등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교양사업을 하고 있다.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에서 나타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2012년 3월 김정은이 전략로켓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그는 “아버지 장군님(김정일)의 모범을 따라 배워 김정일식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일꾼과 당원,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며 “김정일애국주의는 가장 숭고한 후대관, 인민관으로 일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념 교양은 수령의 영도와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이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가 붕괴하고 북한도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엄청난 경제적 역경을 겪은 상황에서 수령의 영도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심어주는 사상사업을 일컫는다.

반제계급 교양은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사상사업을 가리킨다. 북한은 6·25전쟁 때 미군으로부터 입은 피해 등을 부풀려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등의 교육사업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등도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미 적대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8월 1일 노동신문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은 흘러간다. 우리 대에는 기어이 복수해야 한다. 다음 세대가 더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제를 때려잡는 마지막 복수자가 되어 달라”며 “계급의 붉은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더욱 서슬 푸르게 베풀어야 한다”는 정론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도덕 교양은 북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에 대한 교양을 일컫는다. 북한은 “당원과 근로자, 청소년학생 속에서 도덕 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 새로운 권력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변화된 분위기 조성과 이를 통한 체제결속을 유도하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위대성 교양이나 김정일애국주의 교양과 같이 선대의 권위와 정통성을 차용하고 반체제급 교양과 같이 외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며 신념교양이나 도덕 교양과 같이 체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온정주의적, 가부장적 질서의 재구축 등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체제 결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10년차를 맞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을 개정하며 기존의 5대 교양 가운데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을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 교양으로 변화시켰으나, 반체제급 교양과 도덕 교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5대 교양은 김정은 정권이 활용하는 체제 정당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 애국주의, 선군정치

왕재산예술단 (왕재산경음악단)



왕재산예술단은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으로 1983년에 창단한 왕재산경음악단이 전신이다. 2011년 즈음에 왕재산예술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무용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경 왕재산경음악단은 1983년에 세계적으로 유행 하였던 경음악과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으로 창단하였다. 보천보전자악단이 가수를 중심으로 방송을 주 무대로 한다면 왕재산경음악단은 무용을 중심으로 현장공연을 주로 하였다. 왕재산경음악단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에서 현대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창단하였다.

주요 내용 왕재산예술단은 1983년 창단한 왕재산경음악단을 모체로 한 예술단으로 2011년 무렵에 무용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으로서 ‘왕재산예술단’으로 재편하여 활동하고 있다. 왕재산예술단은 종합공연을 비롯하여, 설명절공연, 경축공연에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예술단이다.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왕재산예술단의 주요 레퍼토리가 무용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공연이나 종합공연에서는 노래, 연주, 합창을 비롯하여 다양한 무대를 구성하는데, 무용이 빠지지 않는다. 2017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켓트 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는 타프춤(タップダンス) <승리의 축배>,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를 공연하였고, 2019년부터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는 설명질 공연에서는 백댄스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왕재산예술단은 지역 순회공연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예술단체이다. 왕재산예술단의 지역순회공연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16년에 있었던 순회공연이다. 2016년 왕재산예술단은 양강도 삼지연군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강도 순회공연, 청진공연,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공연, 김책시 공연, 신의주 공연, 평안남도 순회공연,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공연, 평양 공연에 이르기까지 13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평가 왕재산예술단은 파격적이고 현란한 춤동작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무용단전문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관련검색어 ▼

음악정치, 보천보전자악단/은하수관현악단/모란봉전자악단, 삼지연관현악단 (삼지연극장(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우라늄 농축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공장



우라늄 농축시설은 자연계에 0.7% 정도만 존재하는 우라늄-235를 농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수로 등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우라늄-235를 저농축(2~5% 내외 수준)하여 제작하는 반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은 우라늄-235를 90% 이상 농축해 사용한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은 원자리에 장착하기 위한 핵연료봉을 만드는 곳이다. 북한은 영변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갖춰진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라늄(U: Uranium)은 우라늄-234, 우라늄-235, 우라늄-238 등 여러 가지 동위원소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원자로와 핵무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우라늄-235인데, 이는 자연계에 0.7% 정도만 존재한다. 경수로 등 일부 원자로에서는 우라늄-235를 저농축한 핵물질을 핵연료로 사용하며, 핵무기에서는 우라늄-235를 90% 이상 농축한 무기급 핵물질을 사용한다. 북한에 있는 영변 5MWe 원자로는 우라늄-235를 농축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천연우라늄을 가공해 핵연료로 사용한다.

북한은 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험단계를 거쳐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핵연료봉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공장은 이산화우라늄(UO₂), 사불화우라늄(UF₄) 생산 및 저장 빌딩과 함께 있

으며, 1987년 전반기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1992년 당시 영변 5MWe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1/3을 제조 중이었으며, 건설 중인 영변 2호기(50MWe)와 태천 1호기(200MWe)의 핵연료 생산용으로 개조하고 있었다.

북한 핵연료봉 제조공장의 생산능력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전까지 가동하였던 영변 5MWe 원자로와 핵동결 당시 건설 중이던 50MWe 및 200MWe 원자로 등 모든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연간 200t(핵연료봉 8,8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은 2007년 6자회담에서 체결된 ‘2.13합의’에 따라 폐쇄·봉인 되었으며, ‘10.3합의’에 따라 영변의 3개 핵시설(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의 불능화 완료 조치의 일환으로 내부 관련 설비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시료 채취 등 검증 핵심요소에 대한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6자회담 재개가 계속 미루어짐으로써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 상당한 규모의 우라늄 농축설비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또는 그 이전부터 우라늄 농축설비인 원심분리기의 부품 등을 해외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11월 방북했던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S. Hecker) 박사는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1,000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직접 목격했으

며, 북한측 인사가 ‘이만큼의 원심분리기가 더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2013년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연료봉 제조공장의 지붕 면적이 기존의 2배 정도로 커진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영변 5MWe 원자로, 핵개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부강조국 건설 과정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나라의 인민만이 간직할 수 있는 숭고한 사상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인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를 공식 선포했다.

배경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노동신문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북한은 주체철, 탄소하나화학공업을 강조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면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국가의 핵 무력을 완성한 성과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국가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이를 김정은의 업적 찬양과 충성심 강화에 활용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면서, 이 새 시대를 ‘우리국가제일시대’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2021년 1월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령(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면 자체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인민을 독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우리국가제일주의라는 용어가 2017년 11월 처음 등장한 이후 별다른 공개 언급이 없다가 2019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신념화’를 강조하면서 다시 대대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했다.

노동신문은 2019년 1월 22일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기사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를 꼽았다. 신문은 북한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뿐 아니라 이민위천의 이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 시책이 구현되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신문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실현된 나라는 우리나라(북한)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라는 것이다. 신문은 제국주의의 집중적인 압살공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앞길을 개척해 왔으며, 가중되는 제재봉쇄를 자강력 증대의 기회로 반전시키며 현재의 강대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라는 것이다. 신문은 "사회주의국가 정치체제의 계승문제는 관건적이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우리 공화국은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계승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고 밝혔다. 즉, 자신들이 영도의 계승문제(세습)와 혁명전통 계승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제일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 확립'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기' 게양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국가 위에 당이 군림하는 북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당 창건일에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국가제일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선포했다. 김정은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존과 번영이다. 수령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존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핵무력 완성 등이 자존의 기반이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이를 위한 자력갱생 정신과 자강력 제일주의 등이 번영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는 북한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는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애국심을 끌어올리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이미 실현했기 때문에 경제강국을 건설하면 부강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사회주의 법치국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 해체로 체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흡수통일론을 경계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대남차원에서는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이후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적시한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 1980년대 중반부터 조선(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해 왔던 북한은 1990년대 초 냉전 해체 시기의 흡수통일론을 경계하면서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1993년 3월 이후 한층 더 강조됐다. 1993년 4월 6일,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연방제 통일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이 무렵 대두되기 시작한 남한에서의 흡수통일론을 겨냥하여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

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독일통일 등으로 냉전질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고립과 경제침체 등으로 체제위기감이 고조되어 나갔다. 이 시기 북한은 몰락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수령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강한 민족의식(우리민족제일주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이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흡수통일론을 경계하면서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를 강조한 것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1항에 우리민족끼리가 적시된 이후, 북한은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북한은 인터넷 대남선전매체의 명칭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1년 1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를 핵심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6.15공동선언 1항에 등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용어에 대해 남과 북은 강조하거나 해석하는 초점이 서로 다르다. 남정부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외세 배격과 자주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남측은 공동선언 1항의 '서로 힘을 모아'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주적으로 해결'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꼬일 때마다 북한은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2002년 10월 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라고 하면서 “민족공조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정세를 “조선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살책동을 분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세배격과 자주의 이념으로 포착하고, 1972년 체결한 7.4남북공동성명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방송은 2005년 6월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우리민족끼리라는 이 말에는 북과 남이 합의하여 공포한 7.4북남공동성명에 반영되어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집약돼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우리민족끼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핵은 우리민족끼리라며,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한다며 자주의 연장

선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였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문제에 의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을 완화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남한 사회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국제공조를 ‘외세 의존의 길’이자 ‘북남 대결의 길’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공조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논리와 결부되어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민족 전래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논리로도 활용되었다.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맞이한 한반도 평화의 봄 시기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의 어떤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남측의 남북합의 이행 및 근본문제 선행 해결 등에 따른 조건부 관계개선 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평가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을 민족공조와 대비하여 외세공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 vs 외세와 외세의존세력’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여 자신의 대외 및 대남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대단

결을 강조하지만, 자주라는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와 민족 공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끼리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산하 조직 ‘조선록일오편집사’가 2003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선전매체이다. 이밖에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로는 ‘려명’, ‘조선의 오늘’, ‘메아리’ 등이 있다.

배경 북한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사이버 상에서의 대남 및 대외 선전과 선동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우리민족끼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개념을 활용한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대남선전 및 대외홍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후 ‘려명’, ‘조선의 오늘’, ‘메아리’ 등 유사한 인터넷 매체들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인터넷 매체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만들어 활동 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개인 명의의 계정도 만들어 대외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03년 4월 1일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산하 조직 조선록일오편집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조평통의 성명과 담화의 내용,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의 기사를 게시하고, 자체로 만든 기

관련검색어 ▼

조국통일 3대 현장,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우리민족제일주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사와 사진 등도 게재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 관광 및 여행정보, 민족의상, 민속요리 등을 알리는 코너와 전자도서관 등이 함께 마련돼 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든 ‘우리민족끼리 TV’ 사이트를 통하여 동영상도 올리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에게도 선전할 목적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판도 운영하고 있다.

‘조선의 오늘’은 2014년 12월 1일 북한관광 특화 웹사이트로 개설되었는데, 당시 강조되었던 관광사업 육성 방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관광정보뿐만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와 유사하게 대남 및 대외 선전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매체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오늘’의 페이스북 계정은 2020년 6월 페이스북에 의해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는 매체로 규정되었으며, 6월 11일에는 유튜브 계정이 이용 약관 위반으로 폐쇄됐다.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TV’ 등 다른 선전매체도 수차례 유튜브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최근 북한은 유튜브에 호전적이거나 극단적인 내용 등을 배제한 「New DPRK」 등 계정을 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SNS에 개인 명의의 계정도 만들어 대외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주의)



북한은 스탈린의 정의에 기초하여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을 사용했으며,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후복구 및 체제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결속과 동원을 위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활용하였다. 이후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주체사상의 체계화 및 김일성 권력의 공고화 과정,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변화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변화의 외풍 차단, 단절과 함께 체제수호를 위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보면서 조선민족은 이들 민족과 다른 민족임을 내세우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 이념을 체계화시켜 나갔다.

배경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밖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서 개방·개혁 바람이 불어오고, 안으로는 자립경제가 흔들리는 체제위기 국면을 맞게 됨으로써 체제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정교화하여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혀 다른 민족임을 내세워 그들 나라들로부터 불어오는 변화 외풍을 차단, 단절하고자 하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1985년 무렵부터 민족주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설하는 논문이 대거 출판되었고, 1986

년 7월에는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의 담화에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용어가 공식 등장하였다. 1989년 9월에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단행본이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 사후에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민족이 제일임을 더욱 강조하면서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규정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김씨 일가의 우상화 및 권력세습의 정당화, 체제수호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의 정권 수립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의 민족 개념 역시 경제생활, 심리상태, 언어, 영토 등의 공통성을 중요시한 계급과 경제 중심의 스탈린식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을 구분하였고, 민족이 근대로부터 형성되었지만 전 세계의 공산주의 실현과 함께 소멸될 것으로 바라보았다. 항일무장투쟁을 권력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북한 정권에게 민족과 민족주의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상당한 자율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내적 동력이었으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체제건설 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담고 있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담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수령중심의 유일적 지도체계가 수립된 1970년대는 북한식

민족 개념에 있어 과도기였다. 이때에도 스탈린적 민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족 개념에 혈통을 추가하였고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0년대와 달리 민족의 형성이 근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국가의 형성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민족주의 자체를 부르주아적 민족주의로 폄하하면서 이를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배타주의로 간주하여 배격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북한은 맑스주의적 민족 개념을 비판하면서 혈통과 언어를 중요시하고 경제생활과 심리상태를 제외시킨 북한식 민족 개념을 정식화하였다. 이는 민족 개념을 통일문제, 한반도문제로 확장시킨 것으로 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 및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응 논리로 민족 개념을 변화시키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민족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 민족제일주의 정신은 민족의식 발전의 최고형태”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일시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김정일의 말처럼 민족주의에 대한 전면적 동의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계급문제에 대한 민족문제 우선의 원칙을 보다 강조하면서 “민족은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될 뿐 아니라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족 소멸론 대신 민족영원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적 도구로서의 부르주아적 민족주의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를 구분하여 민족주의의 긍정성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진보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다. 민족주의가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목적과 지향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초에는 애국심이라는 최대공약수가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무엇보다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에 있다고 하여 이전의 계급론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개념 정의와 매우 다르다. 민족의 개념에 핏줄과 언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는 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배척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과는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이상화 논리로도 연결되고 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론』에서는 우리민족이 제일인 이유로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주체사상 △노동당의 혁명전통 △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 △우리 민족의 유구한 투쟁의 역사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이러한 논리를 더욱 강조하면서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4대 제일주의’(우리 수령·우리 사상·우리 군대·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제시한 바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평가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개혁에 눈길을 돌리지 말며 북한 고유의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하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와의 차단을 합리화하는 통치담론으로 활용되었다.

북한이 다른 민족과 다르며, ‘제일’이라고 부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혁명전통이다. 이러한 논리는 김정은 정권에게도 계승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통치담론은 결국 최고지도자의 이상화 및 충성심 고취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주의적 담론이 수령론과 결합하여 헌법에서 까지 ‘김일성민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차단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개발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배경 우리식 사회주의는 1978년 12월 중국의 개혁·개방과 1980년대 중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개발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다가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자 우리식 사회주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는 김정일이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행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김일성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요 내용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통치이데올로기가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김정일은 1989년 1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의 사회주의의 좌절은 주체사상과 같은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침투해 들어온 반동적 책동의 결과”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

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 바쳐 투쟁하자”고 주민들을 학습시켰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란 ‘영원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를 구현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다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평가 우리식 사회주의는 탈냉전의 정치경제적 위기 속에서 김정일의 권력 강화와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 구호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던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복귀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 유지에 적극 활

용하였으며, 북한 스스로 외부의 변화 바람을 차단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한 방식의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우리민족제일주의, 자력갱생, 주체사상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양덕온천관광지구), 삼지연시꾸리기사업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삼지연시는 김정은 시대의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본보기 사업이자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본보기 사업이다.

배경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은 관광사업을 통하여 경제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국제관광사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였다. 북한이 국제관광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잡지인 『경제연구』의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정은 체제 이전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국제관광과 관련한 논문들이 김정은 체제 이후로는 상당히 많아졌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이 사회경제 발전에 미치는 의의’, ‘관광기념품’, ‘관광개발구 개발’, ‘생태관광지건설’, ‘관광업 확대와 환경파괴와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동향’,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에서 외국투자비용의 특성’, ‘관광광고’, ‘관광수요예측’, ‘생태관광과 관광업 발전’, ‘호텔봉사’, ‘국제관광업계 동향’ 등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관광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문화휴양지(양덕온천관광지구), 삼지연시꾸리기사업은 김정은 체제에서 집중하는 국제관광 사업의 본보기 사업으로 투자한 지역이다.

주요 내용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를 대규모 해안관광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비행장을 비롯하여 리조트와 편의시설이 있으며, 호텔직원을 비롯하여 관광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도 있다. 한편 북한의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사용할 관광용 전기차 생산 과제를 맡아서 수십 대의 관광용 전기차를 새로 생산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관광사업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2019년 4월 완공 목표였으나 두 차례나 연기되어 2020년 4월로 변경되었지만,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건축·설비 물자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코로나19로 해외관광객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완공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 휴양지구이다. 이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현지를 방문한 김정은으로부터 낡은 시설이라는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이후 양덕군 일대를 ‘인민들이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산 좋고 물 좋고 지형지세도 좋은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온천문화휴양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1년의 개발사업을 마치고 2019년 12월 7일 준공식을 열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온천을 이용한 각

중 온천시설과 스키장, 승마공원, 체육문화시설, 다층살림집 등을 갖춘 종합휴양지이다. 온천탕은 실내온천탕과 야외온천탕으로 나뉜다. 야외온천탕은 다락식온천탕, 별장식온천탕 등 30여 개가 있고, 실내온천탕은 물고기온천욕조, 박하온탕, 금은화온탕, 금당화온탕, 솔잎온탕, 은행나무잎온탕, 당귀온탕, 약쑥온탕, 측백나무잎온탕 등 10여 가지의 약온탕, 사우나실, 수영실, 당구장, 전자오락실 등이 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스키장은 3개의 주로와 어린이 썰매구역이 있다. 평양 고려호텔에 있는 평양고려국제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며, 평양-온정여객열차도 매일 운행한다.

삼지연시꾸리기사업은 ‘노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문화도시’ 개발을 목표로 양강도 삼지연읍을 현대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삼지연은 백두산을 끼고 있고, 보천보가 있어서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지만 북부 고산지대로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 중의 하나로 개발은 되지 않은 산간 지역이었다. 2016년 김정은의 지시로 삼지연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삼지연개발은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교양지구, 살림집지구, 상업봉사지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김정은도 수차례에 걸쳐 개발 현장을 방문하였다. 2019년 12월 2일 2단계 공사를 마치고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북한은 삼지연꾸리기 사업에 대해 ‘만리마시대의 위대한 창조물’, ‘우리 민족제일주의건축이념과 주체적 건축미학사상

이 빛나게 구현된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평가하였다. 삼지연꾸리기 사업이 끝난 2019년 12월에 삼지연읍은 삼지연시로 승격하였다. 이후에도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은 3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평가 북한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삼지연시꾸리기사업의 공통점은 사계절 관광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삼지연시는 모두 스키장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사계절 관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겨울철 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계절 관광에는 제한이 있었다. 북한은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토환경보호 사업을 통해 겨울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였다. 2019년 12월 4일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은 과거와 달리 도로 사정도 개선되었고, 숙박 시설도 갖추어졌으니 겨울이라고 해서 답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후 각 단위에서 ‘백두산대학’을 배우자면서 겨울철 답사를 하였다. 이는 동계 관광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삼지연은 북한의 국제관광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문명국(강국), 사회주의 문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전략), 금강산관광지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평양시 은정구역(평성시 인근)에 조성된 과학자 거주 지구로, 2014년 김정은의 국가과학원 현지도에서 은정과학지구 내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 건설을 주문한 이후 약 9개월만인 10월 17일 준공되었다.

배경 김정일 시기부터 강조되어오던 과학기술중시사상은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2016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과학기술강국 달성을 강조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이 평양에 조성됨으로서 과학자, 기술자 우대정책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2014년 10월 준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 역시 이러한 북한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후 약 9개월 만에 조성되었다.

주요 내용 2014년 1월 김정은의 국가과학원 현지도에서 조성 지시가 내려진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2개월 뒤인 3월 5일 건설을 시작했다. 위성과학주택지구는 평양시 은정구역에 군인건설자 및 청년돌격대원, 수도건설위원회, 대외건설지도국 등이 투입되는 속도전을 통해 7개월 만에 준공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최고지도자 및 당 고위급 간부들의 현지도 및 현

료해 활동을 통해 당이 갖는 관심이 매우 큰 사업임이 드러났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당 창건 기념일 이전까지 건설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이어, 건설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을 독려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선군시대의 선경”이자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안아온 창조물(박봉주, 준공사)”로 소개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준공기사에 따르면, 해당 주택지구는 24개동 다층살림집(아파트),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의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물론 공원,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 주택지구건설의 본보기로 소개되었다. 이는 2013년 9월, 7개월의 공사기간에 걸쳐 건설된(21개동 다층살림집과 마찬가지로 편의종합시설이 위치하여 1,000여 세대의 과학자, 기술자 가족이 입사) 은하과학자거리와 유사한 규모이다.

평가 2020년 수해지역 살림집 2만세대 건설이후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 세대, 김덕지구 2만 5천 세대 신규 주택건설을 발표했다.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건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주택건설경험이 인민대중제일주의, 과학자중시 정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유일사상체계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수령의 사상체계이자 영도체계이다.

배경 조선노동당은 1967년에 유일사상체계를 지도체계로 채택하였다. 유일사상체계는 맑스-레닌주의와는 사실상 결별하면서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사상을 도입하여, 주체사상만을 당과 사회 전반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며 주체사상을 유일한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명문화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중소분쟁과 경제계획의 차질, 대내적으로는 '8월 종파사건'에서부터 1969년 군부파의 숙청까지 일련의 과정은 김일성이 당 내부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한 시기와 일치하면서, 북한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당을 무장시켜 어떤 다른 사상도 용납하지 않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루어 수령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유일적 영도 밑에 혁명사업과 건설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끌 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4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②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심 ③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 ④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 ⑤ 김일성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준수 ⑥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 ⑦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 ⑧ 김일성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정치적 자각과 기술

로써 충성 ⑨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 확립 ⑩ 김일성의 혁명위업
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야 한다.

실제 10대 원칙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
고 있다. 당이 법과 인민 위에 있고, 수령이 당 위에 군림하는
북한 체제에서 10대 원칙은 모든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지침
이 되고 있다. 즉 유일사상체계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의 사
상만을 알고 그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김일성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김
일성의 유일적 지도하에 혁명과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의 유일사상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이며
주체사상인 까닭에 그 사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무장시키는 것
이 바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당
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13년 6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변경하고 ‘김일성’ 대신 ‘김일성·김정일’, ‘김
일성의 혁명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하는 등 내
용도 일부 수정하였다.

평가

유일사상체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김
일성의 반대파와 정적들에 대한 숙청을 완료하고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후 북한은 김일성의
신격화·절대화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유일사상체
계를 강조하였다.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입각한
수령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는 분석도 있다.

관련검색어 ▼

유일영도체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론, 주체사상

유일영도체계



북한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대해 영도체계가 당 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적 지도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영도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경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를 모아놓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앞선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에 의한 1인 통치가 시작된 1967년부터 추진됐으며 1974년 김정은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 김정은에 의해 제시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1974년 김정일이 제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계승한 것으로 10조 60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급으로 격상한 북한은 개정된 원칙에서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김정일’

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했다. 제3조 4항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제10조 2항을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라고 명시했다. 또 제3조에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해야 한다”거나 제4조에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기존 제4조 8항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를 제4조 7항의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로 바꿔 수령에 대한 언급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당으로 대체했다. 제9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는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로 바뀌었고 간부 선발 척도로 명시했던 제9조 7항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으로 고쳤다. 또 ‘10대 원칙’의 제6조 5항은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 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새로 명시해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 체제에서 이뤄진 일련의 숙청과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당 안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정책 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울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군에 대해서도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를 만들고 “혁명적 군풍과 강철 같은 군기가 확립”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평가 북한은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언급한 ‘당중앙’은 사실상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수령인 김정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곧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김정은으로의 권력 집중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정권의 개인 독재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로 수정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역시 같은 맥락이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김정일주의, (조선)노동당, 수령론, 유일사상체계

유신통치



유훈(遺訓)의 본뜻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나 교훈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김정일과 김정은이 유신통치를 하였다.

배경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유례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신통치 방식을 선택했다. 공식적인 정치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고 김일성의 유훈에 의존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특이한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당면한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간을 벌고 김일성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북한 지도부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일성 사후 3년을 애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명분 아래 공식 권력 승계도 미룬 채 비상체제를 가동시켰다. 이 기간 북한은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 유신통치를 지속하면서 군부 주도의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유신통치는 김정일이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상을 이유로 김일성의 유훈을 내세우며 얼굴 없이 통치하던 것을 말한다. 또한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뒤에,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이 다시 북한의 두 번째 유헌통치를 실시하였다. 김정일의 유헌통치 기간은 약 3년이었지만, 김정은의 유헌통치 기간은 4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 김일성 생전의 정책과 노선을 답습하면서 그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김정일의 독특한 통치행태를 일컬어 전문가들은 유헌통치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세상에 그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그 어떤 역경에 부딪친대도 우리 수령님이 쌓으신 업적을 0.001mm도 허물 수 없으며 수령님 한 평생 들고 오신 붉은기의 색소를 한 점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다”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노선과 김일성의 노선이 전혀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의 3주기 탈상을 마치며 유헌통치를 끝낸 뒤 1997년 10월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제도도 새롭게 정비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체계를 국방위원장 중심으로 전면 재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 사후에도 북한은 유헌통치를 채택했다. 김정은은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의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뛰어넘거나 제약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리더십을 정당화하고 권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와 위업을 이용하는 유헌통치를 통해 아버지와 자신을 일체화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평가 북한에서 유헌통치는 전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고 전임자의 유헌에 의해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이상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김정은의 이상화로 이어졌으며, 결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일체화된 백두혈통임을 부각시켰다.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자 추대와 후계 정권의 공식 출범이 사실상 김정일의 유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말 북한은 당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하면서 김정일의 ‘10월 8일 유헌’을 언급하였다.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도 김정은의 당 최고수위 추대가 “김정일의 유헌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김일성-김정일주의

음악정치



음악정치란 ‘음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정치’이다. 김정일 시대에 나온 용어로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함께 ‘음악정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음악정치’의 바탕에는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혁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노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배경 ‘음악정치’는 2000년 2월 7일 평양에서 열린 인민무력성 토론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토론회에서 당시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을 비롯하여 인민군 고위 장성들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 보지 못한 우리 식의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음악정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북한에서는 음악정치를 “음악을 통해 당면한 온갖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매진해 나가는”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 방식으로 주장한다. “음악이 때로는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 톤의 식량을 대신했다”면서 ‘음악정치’를 총대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으로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음악은 정치사상적 무기로서 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음악을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음악정치에 사용하는 노래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혁명성과 인민성, 통속성, 그리고 민족성이다.

음악정치에 사용되는 노래의 핵심 주제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수령과 군사, 인민의 혈연적 연계 강조, 혁명 찬양 등으로 정리된다. 2000년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은 노래가 많은 나라, 노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래가 갖는 사회적 힘을 강조하였다. 음악정치는 북한의 또 다른 주민세뇌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연이나 사상학습 같은 딱딱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겨내고 체제와 수령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랫말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운율에 담는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평가 기본적으로 ‘음악’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인식되어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음악’은 음악정치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음악이 대중에게 정치를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드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음악정치의 유형으로 근로 현장에서 음악으로 생산을 독려하는 방식과 중요한 정책을 노랫말에 담아 전하는 방식을 한 형태로 소개한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연설을 하는 대신 공연을 하는 것도 음악정치의 한 예로 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서 음악은 주민들에게 당국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



일정하게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의사 1명이 책임지게 하는 북한의 의료보건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1963년 처음 실시하였다. 1993년에는 의사호(戶)담당제로 발전했다.

배경 1948년 김일성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구상을 처음 제시하였다. 1961년 제4차 노동당 대회에서 시·군·리 단위에 인민병원과 진료소를 늘리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1963년 4월 평양시 중구역 경림종합진료소에서 소아과 의사담당구역제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일반화해 196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1988년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20호 담당제, 10호 담당제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5호담당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 의사담당구역제는 북한의 「헌법」 제56조와 「인민보건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다. 북한의 평양시 대동강구역 청류종합진료소장(2004년 12월 27일)의 설명에 따르면, 의사

관련검색어 ▼

보천보전자악단/은하수관현악단/모란봉전자악단, 삼지연관현악단, 왕재산예술단
(왕재산경음악단)

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며 주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주민건강 관리제도’이다.

북한의 동·리·구에는 진료소가 세워져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의사담당구역제를 운영하며 의사 1명이 대략 200~300명,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500명 내외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의사는 일정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할 뿐 아니라 직접 담당구역에 나가 위생보건,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거주지 생활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거주지 담당제와 생활 활동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직장담당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시에서는 시 구역 병원과 그 아래의 종합진료소를 기본단위로 대체로 주민 4,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의 경우, 리 인민병원을 기본단위로 인구 3,000명 안팎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의사 2~10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지역에서는 공장병원과 공장진료소가 이를 담당한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전문의 의사를 주축으로 실시하며 기타 전문과 의사는 담당구역 사업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44,760명의 가정의들이 있으며, 가정의 1명이 평균 130개 가구를 책임지고 아울러 북한의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보건체제

에는 6,263개의 리 단위 진료소, 1,575개의 군 병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 의사담당구역제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관리제도 가운데 하나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제도이다. 북한은 체제 선전 이데올로기로 무료교육과 함께 무상의료를 추진했으며, 이것이 구체적인 제도로 발현된 것이 의사담당구역제이다. 북한은 모든 주민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964년부터 모든 시, 군, 구역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1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의 숫자가 많아 효과적인 진료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대가정, 우리식 사회주의, 비상방역법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



북한이 주장하는 인간개조사업은 사상개조사업을 통해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배경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사상개조사업을 통해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간형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1946년 11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실시된 '건국 사상총동원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정권 수립 후 1950년대의 계급교양·계급사상무장운동, 공산주의교양운동, 1960년대 유일사상체계 구축운동, 1970년대의 주체사상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주요 시기별로 사상개조운동을 통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인간개조사업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이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화의 확대, 반동사상 및 문화의 확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 등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교양사업 및 통제를 강화해 왔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4월에 개최된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는 김정은이 사상교육 및 통제

의 강화를 위해 당세포들에게 “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 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 넘치게 하는 것”을 당세포의 10대 과업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북한의 사상개조운동은 1970년 11월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으로 정립되었다. 사상혁명은 사람을 개조하는 혁명, 기술혁명은 자연을 개조하는 혁명, 문화혁명은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으로, 북한은 이 3대 혁명이 공산주의 사회가 완전히 수립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하기 전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가 될 때까지 3대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상혁명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 각종 사상교육과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주체사상 및 수령제가 확립됨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변화하여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주체형 인간 양성을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운동을 전개했다. 북한은 사상사업에 대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로동계급의 관점과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워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리 하에 수령-당-대중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만들고자 하였다.

사상개조를 통한 인간개조 논리는 김정은 시대에서도 사상교양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 결속과 사상무장을 다지기 위해 인간개조사업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2021년 4월 개최된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인간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을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1950년대 “천리마 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전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청년교양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적 기풍과 도덕관 확립을 강조하였다.

평가 북한은 사상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인간의 사상만 장악하면 혁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북한은 사상개조운동을 통한 인간개조사업을 전개하면서 전체주민을 수령(아버이)-당(어머니)-대중(자식)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대가정의 일원으로 만들어, 북한의 체제와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 및 물질만능주의 등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사상교양과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들어 재차 사상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3대 혁명역량 강화, 5대 교양,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경제계획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수량적·질량적 목표를 의미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법칙들에 따라 철저하게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작성된다.

배경 계획이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주된 관심사는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북한의 계획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현물 중심의 계획과 과도한 집중화, 관료적 조정을 통한 경제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현물 중심의 계획은 생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 계획을 편성하여 이를 통제숫자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자원이용의 합리성이 무시되며, 부족재가 발생할 때마다 연관 부문에 파급되어 계획실행에 불균형을 조성한다. 이에 계획자는 부족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계획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계획경제는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의 불균형을 완화하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잉 공급되는 만성적 부족과 불균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북한은 1964년 3월 내각결정 제21호 ‘인민경제 계획화 체

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를 통하여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구소련의 현물중심의 계획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북한식 해결책은 국가계획위원회 밑에 도·시·군 계획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계획사업을 통일적으로 수립하고, 세부계획화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 북한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으로 규정된다.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노선과 정책,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만 있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정책관철원칙, 군중노선구현원칙, 과학성보장원칙, 경제적실리보장원칙이 보장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항목체계는 네 가지 부류로 이루어진다. 첫째, 물질적 생산 부문의 발전을 표현하는 항목들로 공업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등이 있다. 둘째, 사회생산물 유통과정을 표현하는 항목들로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등이 있다. 셋째, 생산과 유통과정에 공통되는 문제를 반영하는 항목들로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등이 있다. 넷째, 비생산적 부문들의 발전을 반영하는 항목들로서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있다. 또한 인민경제계획의 지표체계는 종합지표, 세부지표, 양적지표, 질적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계획항목과 지표체계는 고 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당이 제시하는 정치경제적 과업에 따라 변화한다.

이 밖에도 인민경제계획의 형태는 계획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으로, 계획 작성단위에 따라 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으로 구분한다. 또 해당 단위 앞에 내세우는 과업에 따라 부문계획과 지역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화 사업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이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인민경제계획의 주목할만한 제도적 변화는 5.30조치에 따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 주체별로 수립해야 할 지표(항목)가 중앙에서 하부 단위로 대폭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지방 및 기업소 지표는 계획지표가 70%가 증가해 전체 계획지표의 거의 대부분, 즉 17만 개 중요지표 중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적어도 양적으로는 지방 및 기업소의 계획 작성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17만개의 계획 지표 중에서 국가계획위원회와 하부단위에서 작성하는 지표가 대폭 변화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지표는 전력과 석탄, 강철, 시멘트와 식량 등 36개의 지표와 국가적 중요지표 1,100개 지표이다. 17만개의 지표 중 나머지는 지방지표와 시, 군지표, 그리고 기업소지표로 이관되었다.

중앙은 주요 핵심계획만 수립하고, 기업소 및 지방단위가 기존의 계획지표들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수립의 효율성과 간

소화가 추진된 것이다. 한편, 지방과 기업소로 이관된 계획지표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하부 단위는 경제적 자율성과 함께 계획 달성의 법적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전략지표 (36개)

전력, 화차, 유연탄, 화물자동차, 무연탄, 질소비료, 초무연탄, 목약, 갈철괴광, 소금, 자철정광, 휘발유, 토상흑연, 디젤유, 선철, 세멘트, 강철, 마그네슘크링카, 압연강재, 판유리, 전기동, 일반천, 전기연, 알곡, 전기아연, 고기(생체), 선반, 과일, 발전기, 말린고치, 트락도르, 통나무, 전기기관차(표준계), 쉰나무, 객차, 파철.

평가

위와 같이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통치자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아 통제가 이루어져 오다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여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당시 「인민경제계획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의 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동 법률의 권위를 강화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6장 48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1년, 2009년, 2010년, 2015년에 개정되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기존의 ‘통제숫자’와 ‘예비숫자’로 통제되어 있는 계획 작성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하부 기관, 기업소 간 수요에 맞물리는 방식으로 권한이 위임되었다.

법안 제정의 일차적 의미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제정을 통해 이완된 공식 부문의

규모 및 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추락한 현실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원점에서 새롭게 재작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계획안 작성과 이에 기초한 계획화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인민경제대학



인민경제대학은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 및 행정 부문의 간부양성기관으로, 중앙과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과 공장·기업소들의 경제 및 행정일꾼 양성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있다.

배경 인민경제대학은 현재 평양시 대동강구역 의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경제간부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김일성고급당학교와 금성정치대학 등과 함께 중앙당이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인민경제대학은 1946년 7월 1일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로 창립되어 초기에는 3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6개월 및 1년의 학제를 두고 중앙과 지방의 정권기관일꾼들과 경제기관, 기업소일꾼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후 1954년 정치경제대학과 통합되어 인민경제대학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국제관계대학을 흡수·통합하여 외교 및 무역 부문 일꾼 양성을 담당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 인민경제대학에는 국가 및 경제관리의 모든 부문에 요구되는 간부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여러 학

관련검색어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국가계획위원회, 예산납부금(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과가 개설되어 있다. 국가경제건설학과, 인민경제계획학과, 공업경제학과, 상업경영학과, 재정운영학과, 농업경제학과, 부기학과, 통계학과 등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300명의 교직원
에 학생은 통신학부 1천여 명을 포함해 3천여 명에 이른다.

또한 경제특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지대개발 전문학과’를 설치하고 정규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북한 웹사이트 ‘내나라’, 2016.8.4).

학제는 후비간부들(주로 30세 이하의 젊은층)을 양성하는 4년제 기본반과 일반대학 졸업생들을 대상하는 2년제 기본반, 현직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6개월반과 한 달 강습반, 경제 부문 일꾼들을 키워 내는 연구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 대학에는 혁명사상연구실, 대안의 사업체계 연구실, 농업지도체계연구실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경제 부문별 연구실과 영화강의실, 외국어녹음강의실, 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1972년 4월과 199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일성훈장을 수훈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상업은행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원칙에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옹호·보장하기 위해 멸사복무해야 한다는 뜻으로,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제시·강조하는 일종의 표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위천(以民爲天) 역시 중국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의미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김정은이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또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이민위천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우선 덕목으로 내세워왔다.

북한은 모든 당이나 관료들에게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반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강도 높은 투쟁도 촉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5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을 끝내면서 이례적으로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갑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특히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 요구”라며 “모든 당사업과 당 활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정권이 2016년 8월말 함경북도 지방에서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200일 전투의 대표적 사업인 려명거리 건설도 중단하면서 모든 건설역량을 수해복구에 투입한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 하에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움직임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당시 당중앙위원회 명의를 호소문은 북부지역 수해복구사업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기에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며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안겨줄 살림집 건설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일심단결옹위전이며 우리 인민의 귀중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는 “노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평가 모든 정책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의미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이민위천은 김정은 체제가 활용하는 핵심적인 정당화 기제로서 민심을 장악해 권력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정권이 ‘인덕정치’를 강조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시혜를 강조했다면, 김정은 정권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및 이민위천을 통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온정주의적 이념으로 정권을 정당화하면서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어려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이민위천은 기대치가 상승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검색어 ▼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대가정, 자력갱생

인민대학습당



인민대학습당은 평양시 중구역 남산재 동편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1982년에 중앙도서관을 현재의 위치에 옮기면서 '인민대학습당'이라고 하였다.

배경 1945년 11월 5일 평양시립도서관으로 처음 개관하여 1946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1973년 중앙도서관으로 개장하였다. 이 중앙도서관은 다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여 인민대학습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82년 4월 평양 남산재 위에 처음 개관한 이 건물은 1979년 12월에 착공하여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는데, 총 건축면적 10만㎡에 10개 동의 한식 1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6,000석의 좌석을 가진 23개의 열람실과 14개의 강의실, 여러 개의 통보실과 문답실, 음악감상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의실과 통보실에는 녹음기, 녹화기, 텔레비전, 영사기, 환등기 등 현대적인 교육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민대학습당은 전국의 도서관을 학술적·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 외에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주민들의 '종합적인 학습터'라고도 불리고 있다. 교육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외국어 강의 등이며 강의 내용은 매달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다. 또한 컴퓨터 교육시설도 확충하여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재교육과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 강의실과 열람실에는 열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적 과학기술 기재와 특수교육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통보, 문답, 녹음 강의를 배합하고 있다. 또한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조직하며 과학이론 강연, 과학기술 강습, 요청강의, 집중강의, 외국어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과학기술정보급기지, 정보기지로도 여겨지며 자료 조사와 과학기술정보사업을 진행하여 100만여 건의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김일성종합대학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발명총국을 비롯한 전국의 100여 개 단위의 과학 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컴퓨터 망을 연결하여 과학기술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원격 강의도 하고 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주말에도 개방하며, 휴관은 매달 격주로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북한에서는 단일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로 북한 주민을 인텔리로 키우는 중심기지, 전 인민 학습의 대전장으로 불린다.

인민반



인민반은 북한의 행정 조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다. 우리의 동, 반과 같은 말단 행정조직으로 전업 주부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주로 소속된다.

배경

우리도 주민 거주지에 ‘동’ 단위 밑에 통·반이 있는데 서로 형식은 비슷하다. 북한의 인민반은 1946년 토지개혁 초기에 인민위원회의 사회적 협조단위로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당시 토지 면적 통계를 인민반 단위, 부락 단위, 리 단위, 면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요 내용

북한에는 광복 직후부터 최말단 행정 통제조직으로 ‘인민반’을 설치하여 인민들을 조직화하였다. 인민반은 반장에 의해 지도된다. 반장은 소속 주민들의 추천형식을 거쳐 시·군(구역) 인민위원회 동사무소에서 지명한다. 대체로 충성심과 신분이 좋은 집안의 여성 중에서 선택된다. 이외 구성원으로는 세대주 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등이 있다. 원래 20~30가구로 구성됐으나 아파트 건설 등 도시의 인구 밀집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1994년 이후 20~40가구로 10가구 늘려 조직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광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4.25문화회관

인민생활공채



인민생활공채란 재정확보와 시중의 통화량 조절 등을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북한에서 발행된 공채는 2003년에 발행한 10년 만기 채권 3종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공채는 본질상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적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축적금을 동원하는 한 형태이며 저금의 성격을 띤다(경제사전, 1985).

배경

북한은 전쟁 발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950년 10월에 ‘인민경제발전채권’이라는 이름의 공채를 발행했다. 당국은 채권을 통해 수입된 자금은 ‘국영기업소 관개시설’과 ‘문화기관’의 건설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수립한 북한에서 주식과 채권은 노동 가치가 투입되지 않은 채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수단이었기 때문에(광명백과사전, 2010) 1951년 ‘조국보위복권’의 발행 이후 북한에서 공채는 발행이 중단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요 내용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국가 채권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2번째 발행이자, 1차 발행 이후 53년 만에 등장한 2003년 인민생활공채이다. 북한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2002년 7.1 조치 이후 늘어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인민생

북한은 인민반에 대해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 사회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가구를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반은 생활총화 등을 거치면서 양육문제, 청소 노력동원, 공공질서 유지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현안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체제가 점차 완화된다고 주장하며 인민반 제도를 통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민반 안에 인민반장 외에 세대주 반장도 두고 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전체 주민의 동태 감시를 맡고, 세대주 반장은 남편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은 덜하지만 평양시 같은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세대주 반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세대주 반장은 인민반 회의, 인원 동원, 강연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특히 거주민들의 퇴근 후 동태까지 파악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져 주민들 사이에 권력자로 통한다.

평가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 인민반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기관아파트를 기피하고 있다. 또 국가 배급제가 여의치 않고 시장이 확산되면서 조직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어 인민반의 역할 체계도 과거에 비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관련검색어 ▼

생활총화, 집단주의

활공채를 발행했다. 2003년 3월 27일 “2002년 국가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며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선언하고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북한이 발행한 인민생활공채는 액면가 500원, 1천 원, 5천 원 등 3종류로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0년 만기 무이자 적금이었다. 북한 당국은 인민생활공채 판매대금을 발전소 건설과 현대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평양 중심지역의 주택 및 거리 정비,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경지정리, 백두산지역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건설에 사용한다고 발행 목적을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일반적인 국채와는 달리 1등 당첨 시 액면가의 50배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북한 주민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채권 구입을 유도했다.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1등에서 7등까지 당첨권과 원금을 일시 상환해주는 방식이라 채권인 동시에 복권의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도·시·군과 리·동·읍까지 총망라하는 운영조직을 설치해 전 주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2003년 발행 이후 재발행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던 가운데, 2020년 남한의 대북관련 언론매체기사와 이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해외 외교전문 매체 기고문은 북한이 2020년 경제상황 악화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평가 공채발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중앙은행 차입이나 화폐증발 없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내부의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다. 2020년 북한이 공채를 발행했다는 정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 및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돈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외화를 흡수해 확보하겠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공채 발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가 2009년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경제적 효과보다는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경험을 안고 있고, 또한 공채발행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반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화폐개혁,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

임남담 (금강산담)



임남담(금강산담)은 북한의 강원도 창도군 임남면에 있으며, 금강산수력발전소의 조업용 댐으로 계획되어 1986년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에 12월 완공하였다.

배경 임남담은 자갈을 쌓아올려 만든 사력댐으로 길이 710m, 높이 121.5m, 발전용량 81만kw 규모로 최대 저수용량은 26억 2,000만t이다. 1986년 10월 착공하였고 1996년 6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방 19km 지점에 본격적으로 본담인 금강산담(임남담) 축조에 착수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 임남담은 1단계가 완공되기 전인 2000년 4월부터 댐에 물을 채우고 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2002년 1월 댐 상층부의 균열과 훼손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임남담의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평화의 댐을 증축(최대 저수량 26억3천만t)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임남담(금강산담) 축조로 인한 홍수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해 1987년 2월~1989년 5월 기간 중 금강산담 남쪽 24km 지점에 ‘평화의 댐’ 1단계 건설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2년 1월 금강산담 정상부에 훼손부위가 발견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2002년 9월 2단계 증축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6월 완공하였다.

임남담은 남북 공유하천인 북한강의 수리권(水利權)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북한강의 상류 유역을 점하는 북한이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을 위하여 임남담을 건설함으로써 하류 유역의 남한은 하천 관리와 용수 공급 등에서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 6월과 2004년 8월, 2013년 7월 등 금강산담의 방류를 한국에 통보한 바 있지만, 2005년에는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 한국의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수해가 난 적도 있다. 이에 남북한의 공유하천 공동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돌격대



자강력 제일주의
 자력갱생(자력부강, 자력번영)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재자원화
 전민군사복무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정찰총국
 정치범수용소
 제2경제위원회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5대 강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구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신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조선중앙은행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혁명박물관
 조직지도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종자론
 종파주의
 종합시장(장마당, 통일거리시장 등)
 주식
 주체농법(밀식재배)
 주체무기/주체철/주체비료/주체비날론
 주체문예이론
 주체의 사회역사관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지방예산제
 직통생
 집금소
 집단주의

자강력 제일주의



김정은 체제가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 건설을 반드시 자신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이룩해야 한다며 내세운 혁명과 건설 노선 중 하나로 자력갱생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15년 12월 ‘자강력’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는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정신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에 대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정신”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 건설대업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이 2016년 1월 ‘자력자강에 존엄도 부흥도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기의 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다”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나선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남에 대한 환상, 외세 의존만큼 유해롭고 위험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부의 지원이나 협력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시키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산화를 강조하고 국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등장한 자강력 제일주의는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력갱생’ 구호와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자력갱생에 대해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해 왔다. ‘자기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력갱생과 자강력 제일주의는 상통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도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라고 규정하고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뿐이라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도 자력갱생과 자강력을 강조하면서, 자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건 및 건설을 추

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평가 북한이 2016년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연이은 핵실험과 각종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저항하면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실제로 내부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불굴의 정신력을 가져온다고 선전하면서 사상무장과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력갱생이 자원의 낭비와 경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 데다 선진기술과 외부 자본의 도입을 가로막으면서 저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등장한 자강력 제일주의도 성장과 개발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검색어 ▼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자력갱생

(자력부강, 자력번영)



북한에서 자력갱생이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혁명정신과 투쟁원칙을 말한다.

배경 ‘자력갱생’은 본래 중국공산당의 중요 지도방침의 하나로, 1959년부터 계속된 3년간의 자연재해와 1960년대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중국 내에서 제기되었던 혁명적 슬로건이다. 북한 역시 1960년대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어 5개년 계획(1957~1961)에 차질이 생기자, 주민의 노력 동원 일환으로 이 슬로건을 차용하였다. 이후 자력갱생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원칙적 요구로 정식화되었으며, 경제 정책 수행의 기본자세와 태도로, 혁명적 기본노선의 원칙적 입장으로 강조되고 있다.

주요 내용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란 글에서 자력갱생이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상정신과 사업원칙으로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자력갱생은 다음

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자력갱생은 독자성과 함께 자주적 입장이 주가 되는 내용 구성을 이룬다.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주인다운 입장’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원칙이 자력갱생이다. 이로부터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자력갱생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둘째, 자력갱생은 혁명적 입장, 노동계급 입장과 관계되어 내용 구성을 이룬다. 자력갱생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원칙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국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자력갱생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도반단(中途半斷)하지 않는 강한 희생정신을 요구하며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는 애국정신을 의미한다.

넷째, 자력갱생은 모든 일꾼들이 정치적 자질과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일 것을 요구한다.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자력갱생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사상적

정수이자, 원칙적 입장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방법의 근본 열쇠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자력갱생은 자기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긍심을 갖고 강성국가를 자신의 힘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자강력 제일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사상의식의 강조를 통해 헌신성, 희생성, 절대성, 무조건성을 강조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 순응적 태도를 내면화시키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은 실리를 강조하고, 지도일꾼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21세기형 자력갱생, 개방형 자력갱생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자력갱생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관련검색어 ▼

우리식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자강력 제일주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에 대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경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은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북한은 1960년대에 ‘대내 지향적·수입 대체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화하여, 북한 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형 경제체제로 만들었고, 산업 구조도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된 내적 산업 구조로 고착시켰다. 즉 내부자원에만 의존한 산업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세계기술 발전 추세와 격차가 큰 경제구조가 조성되었으며,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이후 경제 건설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표방해 왔다. 여기서 자립적 민족경제란 ①

자립성과 주체성을 본성으로 하는 경제 ②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③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춘 경제 ④ 모든 부문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경제 ⑤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 ⑥ 자체의 민족기술 간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경제로 정의된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에는 네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을 관철하여야 한다. 셋째, 자체의 민족기술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일부 완화하고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매개로 한 선진 기술도입을 시도하고, 1980년대에는 「합영법」의 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대외개방 정책은 어디까지나 전술적 변화에 그쳐 대외경제 부문은 여전히 보완적으로만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북한 경제를 국제 분업질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다. 북한은 1991년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재자원화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설물 및 부산물, 재활용 가능한 자재들을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장 가동을 위한 에너지로 재처리하여 이용하는 북한의 내부예비를 활용한 생산 방침을 뜻한다.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내부예비를 활용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것에 한정된다면 재자원화사업은 해당 예비를 통해 생산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생산 활동을 포괄한다.

배경 장기 지속되는 북한사회의 경제 악화는 인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성장 역시 제약을 걸었다. 공장과 기업소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및 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었다. 북한 정권은 이렇듯 기업소의 생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계획의 달성을 위한 현물 지표를 액상지표로 전환하고, 기업소가 자체의 노력으로 생산재를 구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합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재자원화 정책은 이러한 경제 당국의 대응 가운데 하나로, 내부예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의 증산을 달성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재자원화 사업을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법으로 채택하여 구속력을 부여했다.

중반부터는 체제경쟁 상대인 남한 자본의 제한적 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06년 김정일은 경제일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만들려하기보다는 외국에서 사다 써서 노력과 자재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며 국제 분업을 강조하는 유무상통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평가 북한은 대외무역 방면에서는 변화된 언술과 교역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며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립경제노선, 자력갱생노선은 2017년 하반기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2017년 하반기는 고강도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된 시점으로 자력갱생 기조가 심화된 것이다.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2020년 국경봉쇄와 대외무역의 중단으로 ‘강제된’ 자력갱생과 국산화 드라이브, 제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을 강조하는 등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자력갱생,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자강력 제일주의

주요 내용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20년 신설된 북한의 「재자원화법」을 비교적 상세히 해설했다. 해당 법은 4장 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재자원화사업을 법으로 규정된 것에 대하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폐기폐설물과 생활오물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하는 의미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북한은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을 수립하고 중앙집권적 재자원화계획의 수립 및 하부 기관, 기업소, 단체를 동원하도록 제도화했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은 재자원화 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생활오물을 품종별로 분류하고, 단위별 회수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가 구매,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에 개별 단위는 오물 수집통을 설치하고, 지방정권기관은 모인 자원들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사업적 의무가 부과되었다. 재자원화 사업이 ‘의무’로 해석되는 것은 해당 법령에 「재자원화법」을 준수하지 않은 단위에 대한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자원화 정책과 유사한 성격인 ‘8.3인민소비품운동’과의 차이점은 재자원화 정책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의 관리기구 통제를 받는 차이점이 있다.

‘재자원화’, ‘8월 3일 인민소비품’ 정책비교

	재자원화	8월 3일 인민소비품
목적	- 경제발전과 생태환경 보호	- 자원 재활용
참여 대상	- 기관, 기업소, 단체 & 공민 - 의무참여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 공민 - 희망참여
업종	- 모든 업종	- 일용세소상품, 식품품 가공, 편의서비스업종 등
국가 투자	-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등 재자원화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등 우선 보장	- 없음
중앙지도 감독기관	- 내각 지도하의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	- 없음 - 단,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 봉사업의 허가 및 지도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 관할
인민 경제계획	- 재자원화계획수립 및 생산, 유통 - 계획 미실행시 인민경제계획 미달	- 계획의 생산, 유통
원자재 수급	- 원자재 자체 조달 및 이관, 교환, 구매, 판매	- 참여대상 각각 수급
생산 시설	- 지방인민위원회의 공장 건설 및 생산	- 단위별 자체 생산시설 설치 -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반
가격 제정	-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 국가가격기관의 수매가격 책정	-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협의가격 - 단, 가격승인신청서의 지방가격제정기관 제출
품질 보증	- 환경오염방지대책 포함 국가 품질기준 준수	- 없음
혜택	- ‘경제적실리에 따라 평가’	- 상업부과금 제외, 이익금 분배 (생활비의 50%)
제재	- 재자원화법 위반시 행정적, 형사책임을 부과	- 벌금 또는 영업중지, 허가취소 등
법령/ 규정	「재자원화법」 (2020.4.1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 채택)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989.5.27. 정무원 결정) 「가내작업반, 부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에 관한 규정」 (1989.8.11. 정무원 결정)

평가 북한은 재자원화사업을 통한 국가적 생산, 건설, 경영활동의 ‘생산소비적련계’와 ‘순환생산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간 유지되고, 코로나 19로 외부자원 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년 현재 북한의 당, 내각 기관지는 물론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등에 관련 기사가 꾸준히 연재됨에 따라, 북한의 재자원화 사업 강조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민군사복무제



전민군사복무제는 북한이 2003년 채택한 사실상의 징병제이다. 북한은 「군사복무법」에 따라 기존에 ‘초모제’라 부르며 명목상으로 유지하던 지원병제, 모병제를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로 바꿨다.

배경 북한은 2003년 이전까지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왔다. 북한에서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는 지원병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모 연령이 되면 신체 불합격자, 사회 중요직 근무자 및 산업 필수요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복무를 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른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군대에서 복무한 뒤에야 노동당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대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북한 주민들은 ‘먹고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먹고사는 것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함으로써 과거처럼 입영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의 징병제인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한

관련검색어 ▼

재자원화, 8.3 인민소비품,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3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3년씩 단축했다. 또 징집 연령층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28세 미만의 남성은 무조건 징집하도록 했다.

북한에서 남성은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는 두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는다. 시·군 군사동원부에서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한다.

이후 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사병으로 입대한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에,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 대상으로 한다. 1995년까지는 중학교 졸업 시기인 8~9월에 75~80%를, 3~4월에는 20~25%를 징집했지만, 1996년 중학교 졸업 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그해부터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병력 충원 필요시에는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사회안전성보안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유망 예술인과 체육인,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 ‘적대계층’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행복무자 등의 성분 불량자는 의무징집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평가 북한은 식량난 및 군 기피 풍조 등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는 군입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병력의 세대교체를 단행해 군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고자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낮은 나이에 군에 입대함으로써, 이들이 군의 규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검색어 ▼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군사동원국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김일성이 직접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1993년 4월 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강성산 총리의 보고를 통해 공식 제시되었다. 정식 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다.

배경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남북 대화 시기 때 처음 제기한 민족대단결론을 유난히 강조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긴장상태 완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 등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면서, "전체 조선 민족은 계급적 차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해야한다"며 민족대단결론을 내세웠다. 김일성은 3개월 뒤 범민족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이듬해 1월의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대단결'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조는 1993년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간 김일성이 민족 통일과 관련하여 내놓았던 1972년의 '조국통일 3대 원칙', 1973년의 '조국통일 5대 강령', 1980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 각종 통일 관련 제안을 종합하여 10개 항의 '강

령' 형태로 요약하였다. 이 강령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안된 북한의 통일 강령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제1항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되풀이했다.

제2항에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해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는 특히 "주체 의식을 쪼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항에서는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종래 주장했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이 항에 포함했다.

제4항에서는 동족 사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자고 제안했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항에서는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신뢰하고 단합하자고 주장했다.

제6항에서는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7항에서는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고, 이를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쓰자고 주

장했다. 고려연방제를 제안할 당시 내놓았던 “통일된 이후에도 국가 소유, 협동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제8항에서는 남북한의 접촉, 왕래, 대화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일성은 이 항에서 “접촉이나 왕래를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왕래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항에서는 남과 북, 해외 동포의 연대성 강화를 역설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의 마지막 항에서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 열사와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함께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식화하였다.

평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여 통일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외세 통일 투쟁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강령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와 이로 인한 내부 경제 붕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과거의 공세적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민족대단결’을 내세워 흡수통일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세 의존적 경향을 비판하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 논의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5대 강령,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북한의 의무교육은 12년이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9월 25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11년에서 12년으로 의무교육이 늘어났다.

배경 북한은 21세기를 지식경제 시대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기존 의무교육 기간이었던 11년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초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늘렸다.

주요 내용 북한은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교육체계를 크게 바꾸어 4년제 소학교 과정을 5년제로, 중학교 6년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했다. 소학교 과정이 1년 늘어남에 따라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던 11년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모든 지역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② 12년제 의무교육 대상은 5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③ 12년제 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 전 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12년제 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구분해 운영하고,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법령에서 부족한 교원 보충 및 교육 자질 제고, 교육방법 개선 대책 수립, 교수·실험 실습의 정보화, 교육행정 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전국 교육기관 간 정보통신망 연결 등과 같은 조치뿐 아니라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통학버스 등의 정상화 및 교육비품 등의 정상 공급, 교원 및 학생 동원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 통제 강화 등을 명문화했다.

평가 김정은 시대의 학제 개편은 북한이 「보통교육법」 제정(2011.1.19) 및 「고등교육법」 제정(2011.12.14)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

에서 12년제 의무교육체계 시행을 교육부문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찰총국



북한에서 군대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총참모부 예하의 대남·해외 정보 수집·분석 및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2009년 2월 신설되었다.

배경 정찰총국이 신설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과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던 기관은 대남·해외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노동당 35호실 및 침투공작원의 호송·안내를 담당하는 작전부, 그리고 군의 정찰국이였다. 그리고 2009년 2월 이 기관들이 통합되어 정찰총국이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 대남 및 해외 공작과 정보 수집·분석이라는 예민한 기능 및 역할 때문에 정찰총국은 북한 매체 등에 드러난 적이 많지 않다. 북한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정찰총국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29일 긴급 소집한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 작전회의에 김영철(육군 대장)이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는 김영철을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이라고 호명하

고 있는데, 이로 미뤄 정찰총국이 총참모부 예하 조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작전회의에서 김영철이 ‘미제 침략군 핵타격수단들의 행동성격에 대한 걱정조회’를 보고했다는 점에서 정찰총국이 해외 공작 및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2015년 8월 20일 이뤄진 당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총참모부 정찰총국은 “전선 중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 경위와 진상, 전반적 걱정”을 김정은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정찰총국이 해외뿐 아니라 대남 공작 및 정보 수집·분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2015년 8월 21일 이뤄진 북한 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 관계자,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긴급통보모임’이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철 육군 대장’이 당시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정찰총국은 대남 및 해외 공작과 정보 수집·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게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벌이거나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대남 군사 도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김정남 암살, 각종 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정찰총국이 자행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킹그룹들을 총지휘하는 기관으로 정찰총국을 꼽고 있으며, 미

국 법무부는 2021년 2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총참모부, 국방성, 통일전선부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관리소', '통제 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며, 현재 반당반혁명분자 등 체제위해분자 약 20여만 명을 재판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집단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시원은 1947년경에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특별 노무자수용소'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6년 이전까지는 주로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6·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등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집단으로 강제 격리수용하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탄압의 강도는 비교적 약했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처형을 면한 김일성 반대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격리 수용함으로써 현재는 체제 위협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반혁명 및 반체제 활동을 했거나 잠재적인 체제 위협세력으로 판단된 간부 및 주민들을 제거 및 격리 수용하는 곳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해방

이후 시기별로 수감대상과 탄압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체제 위협세력 제거 및 격리수용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왔다.

정치범수용소는 수용인들의 탈주·소요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통제체계를 갖춰 운영하며, 외곽 경계선에는 3~4m 높이의 4~6중 철책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고 탈북민 등은 증언한다. 그뿐만 아니라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전기철조망, 지뢰밭, 함정 등을 설치하고 망루를 통해 외곽의 울타리를 감시하고 있다.

입소 즉시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선거권과 교육권 등도 제약 받는다. 또한 식량·생필품 배급은 물론 결혼·출산 등도 금지 시키고 있으며, 면회 및 서신 연락 금지 등 외부와 연락을 일체 차단당한다. 주식은 강냉이와 감자, 밀, 보리로 수확기에 각 1회 배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소는 대체로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등 지형과 산세가 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함남의 요덕·단천·덕성, 함북의 화성·청진, 평남 개천·북창, 평북 천마, 자강도 동신 등 10여 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용소는 수용자들의 죄상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완전통제구역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나 해외로 도주하려다 잡힌 정치범들이 종신 수용된다. 혁명화구역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이 수용되며 3~10년이 지나 체제에 충성할 만큼

사상개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내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수용소의 관리는 현재 이분화되어 있는데, 총괄조정과 통제는 국가보위성에서 담당하되 경비는 사회안전성 산하 인민경비대에서 맡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거의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 북한편’에서 북한 정권이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관리소’에 가두고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살인과 고문 등을 자행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식량 부족, 구타,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구금 중에 사망하거나 석방 직후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가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체제에 의한 반인륜적 인권유린의 실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언제든지 죄목을 붙여 제거 및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체제 위협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반대세력 및 저항세력의 형성을 봉쇄하는 데 정치범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계각층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으며, 강제 착취를 통한 생산력 증대 효과도 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권단체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사

회의 정치범수용소 해체 압력이 커졌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수용소가 실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외부의 압력은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관련검색어 ▼

국가보위성(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제2경제위원회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생산·분배 및 대외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배경 북한에는 크게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일반경제와 제2경제라고 부르는 군수경제가 있다. 형식적으로 내각이 경제계획과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 북한에서 내각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제1경제(제2경제의 상대적 반대말), 즉 인민경제에 국한되어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의 군수산업이 명실공히 북한의 제2경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것을 재천명하면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확고히 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수공업에 필요한 물자예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수공업의 강조와 확장에 따라 1960년대 말 내각에 군수공업만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부를 따로 신설하였고, 당중앙위원회에 군수공업 담당 비서를 두어

군수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하였다. 그 후 군수생산이 더욱 방대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에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였다고 한다.

본래 제2경제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내각 전신) 소속이었으나, 1993년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내각(일반경제)과는 상관없이 독자적 조직체계 및 생산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8개의 총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원(구 제2자연과학원)과 자재공급을 위한 자재상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무기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생산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무역회사와 은행 등 많은 기관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제2의 정무원(내각)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여 내각과 상관없이 인민경제에 우선하여 계획, 재정, 생산, 공급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하의 경제기관뿐만 아니라 내각의 일반생산기관까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등의 명칭하에 군수생산시설을 갖추어 놓고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다.

민수생산 기업소에 ‘일용분공장(직장)’을 차려놓고 군수품을 생산하게 하는 북한의 목적은 제2경제위원회가 단독으로 모든 군수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민수생산 기업소에 일찍부터 군수생산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생산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신속하게 군수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 때문이다. 무기생산과 관련이 있

는 모든 공장에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이 들어있으며, 설비가동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현재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군수공업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계획, 생산, 분배,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군수 공장 및 기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이러한 공장과 기업소를 통해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조국통일 3대 헌장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일컫는다.

배경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표현을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 표현에 대해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헌장’, ‘3대 기둥’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 이후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는 1990년대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면서, 김일성 통일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정책을 계승한 김정일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규정하고 주요 계기마다 이

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으며, 2001년 8월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2명의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의 높이 30m, 폭 61.5m 규모의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97년의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에서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 3대 기둥, 3대 현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이를 정식화하였다. 김정은도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현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며 이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대 현장 중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세 가지 통일원칙을 말한다. ‘7·4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3대 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보고를 통해 제시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1991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 통일의 점차적 완성’을 주장했다. 김일성은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느슨한 연방제’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 사회의 민주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웠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5차 회의에서 당시 강성산 총리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통일강령이다. ‘10대 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민족대단결로 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창립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 △

동족 간 분열·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 중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족대 단결 도모에 이롭게 사용 △민족대단결과 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 높이 평가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의지 표명 △외국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평가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은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맞춰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통일’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난과 식량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결속과 통제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5대 강령,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5개 방침은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통일 방침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 완화 및 평화적 환경 조성, 남북 간 자유왕래와 전면 개방,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의 발전,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이다.

배경 1980년대 말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개방과 개혁으로의 노선 전환과 세계적인 탈냉전의 물결 속에서 북한은 대외시장을 잃었으며, 동맹국들의 현물성 지원도 사라졌고 내부 경제는 투자재원 부족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 생존이 급선무였으며, 남북관계에서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방향의 대처를 시도했다. 하나는 우리 정부로부터 체제공존과 불가침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리 당국과 고위급회담을 진전시켜 불가침선언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일본에 접근하고자 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의 공간을 넓혀 공세적인 도전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리 내부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고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연석회의를 제시하고 남한의 일부 인사들을 방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1989년 문익환, 문규현, 황석영, 서경원 등 인사들이 불법 방북하는 사건들이 잇따랐으며, 이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요 내용(경과) 조국통일 5개 방침의 주요 내용은 ①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완화 및 평화적 환경 조성 ② 남북 간 자유왕래·전면개방 ③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④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대화 ⑤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이다.

첫째,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의 불가침선언 채택,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 무력의 감축, 남한에서의 핵무기·외국군대 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분단의 장벽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자유 왕래 및 전면 개방을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한 주민과 각계 인사들의 북한 방문 환영 및 신변안전 보장,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방문 적극 보장, 콘크리트 장벽 제거, 접촉과 상봉에 장애가 되는 악법 폐지 등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원칙에서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지양, 단일의식에 의한

유엔 공동가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통일을 위한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의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하는 전민족적인 대화를 촉구하였다.

다섯째,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형성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과 남북한, 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김일성은 남북 간에 전면 개방을 하자면서도 콘크리트 장벽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남한에 책임을 전가했다. 1990년 7월에도 북한은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각계각층 사람들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며 판문점을 개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남한이 기간을 정해 누구나 남북한 전 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전면적인 개방을 하자며 ‘민족대 교류’ 실시를 제안하자 수세로 돌아섰다.

평가 조국통일 5개 방침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의 대남노선을 되풀이하면서,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이라는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내적 논리를 내포하고 있으

며, 통일 논의가 조국통일 5개 방침의 틀 안에서 북한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지시켜 북한 주민의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조국통일 5대 강령



조국통일 5대 강령은 김일성이 1973년 6월 23일 체코 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발표한 통일 강령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 완화, 남북 간 다방면의 합작과 교류 실현,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로 유엔 가입 등이다.

배경 북한은 1970년대 세계적 대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자 유엔에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그동안의 외교정책을 바꾸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5개국과 수교하였고, 각종 유엔 산하기구와 WHO 등 전문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이 종결단계로 접어들고 미국이 대아시아 개입정책으로부터 전환을 추진하는 데 따라, 한반도 문제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얻어내고 '남조선 혁명'의 여건을 성숙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무력 경쟁 중지와 군대 감축 등 평화공세를 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그 이

관련검색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5대 강령,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전까지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던 ‘과도적 연방제’를 수정하여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이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조국통일 5대 강령의 주요 내용은 ①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② 남북 간 다방면적 인 협력과 교류의 실현 ③ 남과 북의 각계각층 사람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⑤ 단독 유엔가입 반대 및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다.

특히 ①항과 관련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반입 중지, 서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때까지도 북한은 평화협정을 남북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구하고 ‘평화문제는 북·미 간에, 통일문제는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화한 것은 1974년에 들어와서이다. 또 하나는 1960년대와 내용이 달라진 연방제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어지고 그 대신 군중집회 형태의 ‘대민족회의’를 전면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호만 제시되어 있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단일국호로 대외활동을 제안한 것으로 볼 때 지역정부의 독자적 활동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후 남한의 ‘6.23선언’이 ‘2개 조선’을 획책하는 분열주의 노선이라고 맹비난을 하였다. 그러면서 ‘6.23선언’을 빌미로 남한이 ‘7.4남북공동선언’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고 주장하고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의 대화를 중단시켜 버렸다.

북한은 1970년대 내내 대민족회의 개최 등 조국통일 5대 강령에 입각한 조치들을 남북대화를 재개시키는 조건으로 내 걸거나 대남 제의를 해오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8·15 경축식장 대통령 저격사건, 대남침투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 다시 대남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평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동서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는 한편, ‘남조선 혁명’ 투쟁을 지속하는 양면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국통일 5대 강령은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화해·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제의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통일 5대 강령은 남한의 유엔 동시가입 주장을 비난하고,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통일지향적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대민족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며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하 조국전선)은 1946년 박헌영,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등이 만든 북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1949년 통합하여 만든 조직이다. 이후 조국전선은 북한 내 정당·사회단체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주로 남북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배경 1946년 2월 남한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정당·사회단체가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을 조직하였고, 북한에서는 1946년 7월 북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13 개의 정당·사회단체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1949년 6월 평양에서 두 단체가 조국전선으로 통합하였으며, 이후 대남 제의나 비난 등의 대남선전활동 등을 펼쳐왔다.

주요 내용(기능) 결성 당시 북한은 조국전선의 성격을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하였다. 그 임무에 대해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반부의 애국 역량을 단합시키므로 조국통일

관련검색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조국통일 5개 방침, 조국통일 3대 헌장,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조국전선은 결성선언에서 미국과 국제연합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 통일을 표방하고 통일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1단계로 남북의 애국적 정당·사회단체 대표 협의회를 통해 평화통일 계획을 토의하고, 2단계로 전국적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1949년 9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약 1년 후 6·25전쟁 직전인 1950년 6월에 또다시 이전에 제의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주장하였다. 이 방안은 남한 정부와 지도자를 배제하고 있어 출발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조국전선은 6·25전쟁 이후 주요 계기마다 성명·담화·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남 비난이나 대민족회의, 전민족대회 소집 등을 요구하는 선전활동 등의 대남 공세를 벌여왔다. 조국전선은 △평화통일방안(1963.12.10) 제안 △정당·사회단체와 해외교포단체가 참여하는 대민족회의 소집 요구(1973) △비방방송 중지, 휴전선상에서의 군사활동 중지, 전민족대회 소집 요구(1979) △고려연방제안 관련 대남서신 발송 공세(1980)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위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1983) 등을 하였다. 또한 199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을 맞아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남 비방·선동을 하였다.

북한 정치사전(1973)은 조국전선을 “로동계급과 농민의 공

고한 동맹에 기초한 우리의 전체혁명력량을 단결시킨 강력한 조직체”로 규정하고, 기본임무는 “로동계급이 영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모든 혁명력량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국전선은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등과 같은 노동당의 외곽조직, ‘조선기자동맹’ 같은 직능단체, 지역친선단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같은 종교단체 등 24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표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무위원회·서기국을 두고 있다.

관련검색어 ▼

통일전선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1961년 5월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남한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전선 형성, 남한 내 친북여론 조성, 대남 선전선동 및 성명, 담화 발표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2016년 국가기구로 승격하면서 남북 당국 간 공식 대화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배경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부수상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하여 북한의 각 정당·사회단체를 대표하는 33명의 준비위원들이 모여 노동당 외곽단체의 하나로 조직되었다. 북한이 이 조직을 결성한 배경은 4·19 혁명 직후 우리 내부에서 학생·재야 등을 중심으로 남북협상 및 통일논의 열기가 고조되자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내용(기능) 조평통은 결성 이후 노동당의 통일문제 및 남북 대화와 관련한 입장을 대변 또는 옹호해왔으며, 우리 내부의 각계각층 인사 및 해외인사들을 대상으로 연방제 통일 실현투쟁을 고취하였다. 또한 남한에서 주요 사건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서기국 보도’를 발표하는 등 북한 측의 반응과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성명과 제의는 물론 고발장·공개질문장·백서·비망록 등을 통해 대남 비방과 규탄 등

의 선전·선동 활동을 벌여 왔다.

조평통의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된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무위원회와 서기국을 두고 있으며, 중앙위원회 산하에 조직부·선전부·회담부·조사연구부·총무부와 자료종합실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남북회담 시 북측 회담대표들은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름을 갖고 나오는 사례가 많았다.

북한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당의 외곽조직이었던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격상하고 서기국을 폐지하였다. 이는 조평통의 실체와 성격, 서기국장의 격 등을 둘러싼 남북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대남정책과 대화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현재 조평통은 남북 당국 간 공식대화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관련검색어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전선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은 기독교 단체로서 1946년 11월 28일 창립된 '북조선기독교연맹'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창립 후 활동이 드러나지 않다가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999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해방 전에 기독교, 천주교 등이 남한지역보다 먼저 전파되어 전통 종교인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주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분단 후 북한은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의 종교는 유일사상체계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분단 후 10년 쯤 흐른 1955년경에는 북한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 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이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 내에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했던 이른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이 단체는 현재 중앙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 사무위원 등의 직책을 두고 있다. 그 산하 부서로서 국제부, 조

직부, 종교부, 평양시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1988년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건립하였고, 1992년에는 칠골교회를 신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을 완공하였다.

종교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부를 개설했으며, 1995년에 중단되었던 평양신학원을 2000년 9월 개원하고 목회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에는 앞서 언급한 2개의 교회와 500여 개의 가정교회, 교역자 300여 명과 신도 1만 3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내역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 기독교계와 북한 그리스도교연맹 간에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접촉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특히 대북 구호 지원을 계기로 양측 단체 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남북한 공동예배, 공동기도문 교환 등의 방법으로 교류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남한 기독교계로서는 교파 간 접촉과 북한선교 목적에서 대북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대외 정치선전과 지원 획득의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어 진정한 교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검색어 ▼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과 함께 북한의 4대 근로단체의 하나로 북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사회단체이다.

배경(연혁) 북한은 광복 직후인 1946년 1월 31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1945년 12월 8일 결성된 전국 농민조직)의 분맹으로 '북조선농민동맹'을 조직하였고, 6·25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11일 '북조선농민동맹'을 남측의 '농민조합총연맹'과 통합해 '조선농민동맹'으로 승격하였다. '조선농민동맹'은 1950년대 말 토지 개혁 및 농업 협동화와 관련하여 해체되었다. 이후 1964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년 2월 발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개편키로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9개월 동안 각 도와 군 조직 구성을 마치고 1965년 3월 25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재출범하였다. 북한은 농근맹 결성일을 북조선농민동맹이 조직된 날인 1946년 1월 31일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기능) 농근맹은 동맹의 규약에서 '당과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근로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규정되고 있어 농민층에 대한 당노선과 사상교양을 규율·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른 농근맹의 주요 임무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 촉진 △농촌에서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 적극 추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노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한 투쟁 △비당원 사상교양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농근맹은 1965년 재출범 때부터 1971년 중앙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까지 당의 지도하에 활동하는 가운데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에 있어서 주된 도구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1972년 농근맹 제2차 대회에서부터 중앙위원회 제18차 전원회의까지 여타 외곽단체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후계준비와 관련하여 대를 이은 혁명사업 계승과 완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농업자원 형성을 위한 당의 도구로서 활동하였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사상교양사업 등 당이 부과하는 농촌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전사업을 지속하였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농장 수입 증대 등 실리 위주의 방식을 시도하는 등의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농근맹 역시 농민층의 이익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당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좌우되는 외곽단체로서의 '방조자' 역할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근맹은 농·축산 근로자, 농업기관의 사무원 등 기존 회원이었던 협동농장원뿐만 아니라 국영 목장과 농촌 경리에서 직

접 복무하는 기관·기업소(공장)의 노동자 및 사무원 중에서 노동당원이 아닌 만 30세 이상이 포함된다. 이 분야의 종사자라도 노동당원이면 농근맹 소속이 아니다. 농근맹에 가입된 인원은 13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은 북한에서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단체인 직업 문학·예술인들을 총망라한 조직이다. '문예총'은 이른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경 북한 정권수립부터 문학예술인들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화 사업이 있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예술총연맹'으로 발족하여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조선문학예술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1953년 9월 남로당계 숙청과 함께 해체하였다가, 1961년 3월 현재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으로 재조직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문학과 예술은 주체사실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따르는 주체문예이론만을 신봉해야 하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에서 유일 기준과 입장을 집단적으로 구현하자면 획일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문예총은 당 교시와 노선을 침투시키는데 강력하고 효율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예총에 소속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 단체가 있다. 각 동맹의 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도에 문예총 시·도 위원회와 부문별 동맹 시·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 동맹에 가입하고 있다. 문예총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문학예술의 결정 및 지도 ②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교양사업 실시 ③ 문학·예술의 대중적 발전 ④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사업 지도 ⑤ 작가, 예술인들의 등용 및 탈퇴 결정 등이다.

평가 문예총은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망라하는 북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조직이지만 구체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소속 창작단과 예술단 당조직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활동하기 때문에 당의 지도가 더 중요하다.

관련검색어 ▼

만수대창작사, 주체문예이론

조선불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은 1946년 12월 26일 결성된 '북조선불교도연맹'을 모체로 한 불교단체이다. 1971년까지 활동이 거의 없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1972년 현 명칭인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해외교포 종교인들을 초청하여 이들과 종교인 회담 및 반한 종교인 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전략에 치중하였고 북한 내에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대외용의 종교인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조선불교도연맹도 조선종교인협의회와의 가입단체이자 대남 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구성 단체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 남북 불교접촉·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대외선전용 성격이 강하다.

1988년 5월 최초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석탄절 기념법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불교의 3대 기념일인 열반절(음력 2월 15일), 성도절(음력 12월 8일), 석탄절(음력 4월 8일)에 각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중앙위원회와 지역 사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 승려양성을 위한 불교학원을 설립했다. 주요 사찰로는 묘향산의 보현사, 평양대성산의 광법사, 금강산의 표훈사 등이 있다. 북한지역에는

사찰 60여 개, 승려(대처승) 300여 명, 신도 1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 측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 바는 없다.

불교 분야에서도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 등이 대표적이다. 각급 불교단체에서는 식량구호 등 인도적 지원사업도 전개한 바 있다. 조계종은 2008년부터 신계사 복원(10.13)기념 남북합동법회를, 천태종은 2007년부터 개성 영통사 복원(10.31) 남북합동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창립된 조선민주당(초대 당수 조만식)을 모체로 하고 있고 천도교청우당과 함께 노동당의 우당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복수정당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명목상 내세우고 있는 정당이다.

조선민주당은 1950년대 말 군당 이하 조직이 해산돼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1년 1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당 강령과 규약도 새로 채택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대남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대남 집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 비난 활동에 역점을 두어왔다.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꾼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 사회주의 세력 및 제3세계권 민족주의 세력 등과 연대를 꾀하는 한편, 한국 내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는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목적으로 명목상 내세우고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은 대남 비난성명이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담화·성명 등을 발표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뿐인 외곽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구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은 북한정권이 해방 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계몽·개조하고 그들을 근로전선에 동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여성해방이라는 명분하에 만들어 졌다.

배경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돼 1951년 1월 20일 남북의 여성동맹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여맹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을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여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단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계층과 대상에 따라 해당 사회단체 속에 의무적으로 묶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별, 성별에 따라 사회적 조직체가 존재하고 있어 일생을 조직에 매여 있게 된다. 각각의 사회 근로단체들은 당의 지도하에 소속 구성원을 조직화·의식화함으로써 수령과 당의

노선 및 정책을 관철시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여성전위조직으로 활약하는 여맹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업과 조직동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맹은 여성들을 철저한 공산주의 어머니로 만들며 사회주의 건설에 여성들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초급단체와 인민반 단위에서 강연회, 예술소조 활동, 영화관람, 선동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여맹은 건설 및 생산 현장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여맹의 가입 대상 범위에는 창립 이후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여맹의 구성원은 당초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었지만, 1983년 여맹 제5차 대회 이후로는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을 동맹원으로 한다. 조직체계는 노동당의 근로단체부 지도를 받는 여맹 중앙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도·시(구역), 군 위원회와 리(동) 위원회, 그리고 인민반별로 초급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여맹의 전원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관지로 <조선여성>을 발행하고 있다.

여맹은 특히 1976년부터 여성의 결혼연령을 종전의 23~26세에서 28세로 높이고 「어린이교육보양법」을 제정(1976.4)한 것을 계기로 여성노동력을 생산노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경제난의 지속과 배급제의 붕괴, 정치·사상적 이완과 조직 이탈 등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여맹의 위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12년 들어 북한은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고 제4차 어머니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여맹의 역할을 상기시키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18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대회 결정서를 통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에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소년단

조선신보



『조선신보』는 일본에 근거지를 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기관지이다. 1945년 10월 10일 창간된 「민중신문」을 모태로 해서, 1946년 「해방신문」, 1961년 「조선신보」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 조국(북한)의 정치·경제 및 인민생활 소식, 남한 소식, 시사해설, 조총련 사업과 민족교육·문화체육소식, 재일교포들의 생활 등이다.

『조선신보』는 조총련 조직원들과 조총련 계열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북한의 정책 홍보를 주요 임무로 삼아왔다. 최근에는 평양에 특파원을 두고 제한적으로나마 북한 내부사정을 외부에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을 탐방하여, 이 조치가 북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대외 접촉 매체가 많지 않은 사정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조치가 취해질 때 북한 당국의 의도와 배경을 설명하는 채널로 『조선신보』를 활용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편집 방침으로 사회주의 조국(북한) 옹호 및 재일교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 수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처음에는 격주간, 주간으로 발행되었다가 1961년 9월부터는 일간으로 발행되었다. 이후 1999년 10월부터

주 3회(월, 수, 금), 8면(조선어 4면, 일본어 4면)으로 발행되고 있다. 조선신보사에서는 영문지인 『인민조선(The People's Korea)』과 잡지 『조국』, 일본어 잡지 『이어』도 발행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총련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1994년 5월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단체로 설치된 민간 대외활동 단체이다.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수교 국가(특히 미국, 일본)들과의 민간차원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확대 및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험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아태’는 형식상 민간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외활동 단체로서, 1994년 7월 김용순(대남담당 비서 겸 ‘아태’ 위원장)이 방북중인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나카마루 가오루와 만난 사실을 전할 때 조선중앙방송이 김용순을 ‘아태’ 위원장으로 호칭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아태’는 미국과 일본 등 미수교 국가들과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 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험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주로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관계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사업을 담당하였다.

‘아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95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행사의 주관, 1997년 7월 북송 일본인 처의 일본방문을 허가하는 담화 발표,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1998년 5월) 실현, 현대그룹의 협상 파트너로 정주영 현

대 명예회장의 방북(1998년 6월) 초청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주관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2000년 현대그룹과 ‘아태’ 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아태’는 남북관계 전반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2011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아태’ 명의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 독점권 취소와 금강산 지역 남측 재산 몰수 조치를 할때도 북한 당국은 ‘아태’를 내세웠다. 또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아태’ 대변인 담화(2013.4.9) 형식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아태’가 주관하는 등 화전 양면으로 남북관계에 관여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아태’는 남북 간에 사회문화 분야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오고 있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의 유적 발굴, 공동학술회의에도 관여하고 있다.

‘아태’는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창구역할과 함께 유력 외국인사에 대한 방북초청,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서 당국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민간기구의 모습으로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중요한 경제협력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

다. 조직체계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이 있으며 그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종교 등 부문별 부서들과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북한이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설치한 기관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정전협정의 준수를 감독하고 그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해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로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 대표 각 5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한 직접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압박인 동시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닌 한국군이 유엔군을 대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정전위원회 폐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대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북한은 1994년 5월 24일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개성에 설치한다고 통보했으며, 닷새 뒤인 29일 군사정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폐쇄 통보 당시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停戰)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수립’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개

설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4년 4월 한국군 장성이었던 황원탁 소장이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북한은 1994년 6월 “정전협정이 빈 종이장이 되고 군정위가 유명무실해진 현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의 이유를 밝혔다. 같은 해 9월에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 보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일은 1996년 11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대표부 군인들은 계급교양을 강화하고 정치·군사 기술적으로 전군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남북 간 군사문제나 비무장지대(DMZ)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통해 협의에 나서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및 협의 업무도 이 기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등 한반도 군사 대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방성

조선중앙은행



소련의 단일은행체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북한의 중앙은행으로, 화폐 발권과 현금유통의 조절, 국가 계획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 통제, 개인의 예금 등 상업은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배경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0월 소련군정이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설치한 ‘계산소’를 기반으로 ‘북조선 중앙은행’을 신설했다. 계산소는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정이 사회주의적 금융제도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은행을 장악하고자 설치한 금융기구이다. 신설된 북조선 중앙은행은 신용개혁과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1959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76년에는 산업은행이 조선중앙은행에 통합되어 완전한 단일은행체제가 확립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은 주권 국가의 화폐발권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기능과 사회주의국가의 제도적 특성인 원에 의한 통제에 입각한 경제관리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은행이다. 여기서 원에 의한 통제란 국가가 수립한 계획이 개별 기업의 경제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을 바탕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조선중앙은행의 기능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광명백과사전 2010). ① 화폐발권 및 통화조절을 담당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을 조절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은 현금계획과 재정계획 등 ‘계획’을 중심으로 화폐 유통을 조절한다. 화폐의 발행 역시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한 생산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② 기업소를 대상으로 은행돈자리(결제 계좌)를 개설하여 계획에 입각한 거래가 추진되도록 금융을 통제한다. 이때 기업소의 결제 계좌에 있는 화폐는 계획의 집행 이외에는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회계상 결제문서 형태이며, 북한은 이러한 제도를 “무현금류통”이라 정의한다. ③ 사회의 모든 고정재산(자산, 건물, 기계설비 등)을 파악하고, 개별 단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하며, 재산 가치를 평가한다. ④ 재정계획에 따른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집행하고 관련된 제도(규율)를 수립한다. ⑤ 개인의 저금, 협동적 소유에서 발생하는 유희자금에 대한 대부업무 등 제한적으로 상업은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국가 전체의 금, 은 등 귀금속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평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계획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현금유통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의 기능에도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개정된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은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이 과거의 단일은행제도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업은행이 지역별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앙은행-상업은행의 위계적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불투명하며, 현금 유통이 과거에 비하여 늘어났다고는 하나, 그것이 전통적인 북한의 원에 의한 통제를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북한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검색어 ▼

인민경제계획, 상업은행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공장 및 기업소 등에 소속된 비당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양과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별 총괄단체이다.

배경 북한의 사회단체에는 당원이 아닌 북한 주민을 연령별, 직업별, 성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직하는 4대 근로단체, 즉 조선직업총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 있으며, 이 외에 고유영역별로 활동하는 단체조직이 존재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북한의 근로단체는 훨씬 강도 높은 조직규율과 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직맹은 북한에서 1945년 11월 30일 최초의 노동조합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북조선 총국이 결성된 것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1946년 5월 25일에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은 직맹의 임무를 크게 △산업의 복구와 증산 운동에의 참가 △노동 규율의 엄수와 생산 능력의 제고 △

노동자 권익 옹호와 노동 조건의 감독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문화 교양과 같은 당정책 교양에 두었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던 기존 직총 간부들이 모두 숙청되고, 1950년 후반 이후의 공장과 기업소 국영화와 1960년대 초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되면서 당의 외곽단체로서만 기능하게 되었다. 결국 직맹은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실현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상교양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 유지와 생산과 건설 동원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직맹은 노동당 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모든 직장의 노동자와 기술자, 그리고 사무원들이 해당되며, 맹원수가 약 160만 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단체는 산하에도·직할시 및 시·군 직맹위원회 등 하부조직과 금속화학공업, 전기석탄공업, 경공업 및 상업, 기계공업, 수산, 교통, 체신, 교육, 문화, 보건 등 산업별 조직을 두고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은 1919년 김기전이 창당한 천도교청년당의 후신으로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토대로 한 북한 정당으로 북한 노동당의 우당 역할을 하고 있다.

배경 해방 후 1946년 2월 1일 소련 군정의 인가를 받은 ‘천도교북조선총무원’이 북한 지역에 세워졌는데, 소련 군정 측에서 당시 천도교 고위 간부인 김달현을 내세워 1946년 2월 8일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을 창당하였다.

주요 내용 북조선청우당은 1950년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세력을 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하고 위원장은 김달현, 부위원장은 남조선청우당 김병청을 비롯해 박윤길, 리용규 등이 맡았다. 6·25전쟁 내내 청우당은 조선민주당과 같이 고위당직자는 노동당 당원이었으나 일반신도들은 반공대열에 참가했다. 이에 북한 정권의 박해가 심화되었고, 김달현도 1959년 말 ‘조국전선 간첩사건’으로 숙청되었다. 1959년 시·군 이하 조직이 모두 해체되며, 1960년 도 당조직까지 해체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전술적 필요에 따라 천도교청우당을 내세웠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에 북한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당시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강장수는 실제로 노동당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북한으로 망명한 최덕신이 1989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연방제 지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 비난 선전에 이용당하는 대외 간판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때 당시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이었던 류미영(2016년 사망)은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다녀가는 등 남북 공동행사에서 북한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관련검색어 ▼

조선사회민주당, 통일전선부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창전동 만수대언덕에 있는 박물관으로 '김일성의 혁명역사와 인민들의 혁명투쟁 역사' 자료들이 있다. 혁명전통 교양의 가장 핵심 기관으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이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불린다.

배경 조선혁명박물관은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인민들에게 교양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이다. 1948년 8월 1일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61년에 조선혁명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김일성의 60회 생일이었던 1972년 4월에 현재의 위치인 만수대 언덕으로 이전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혁명박물관은 주민에 대한 혁명전통 교양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이다. 북한은 다른 문화시설보다 사상교양 시설을 중요하게 관리한다. 여러 혁명박물관 중에서도 핵심 기관이 바로 조선혁명박물관이다.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만수대 언덕 위에 자리한 조선혁명박물관 앞은 천연색화강석을 붙여 만든 길이 70m, 높이 12.85m의 백두산벽화가 있다. 이 벽화의 한 가운데를 배경으

로 북한에서 가장 큰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있고, 동상 좌우에는 만수대 대기념비가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건물의 위치와 구성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만수대 대기념비와 함께 북한의 '혁명 역사', '혁명의 수도'를 상징한다.

조선혁명박물관의 부지면적은 240,000㎡이며, 건평은 53,700㎡이고, 1930년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대부터 1948년 9월까지의 자료가 총길이 4,500m의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다. 진열·전시관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주주의혁명시기 및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투쟁시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시기' 등 혁명과 건설의 주요 시기별 진열실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관', '총련관', '수령님과 전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전시물은 혁명역사 자료 발굴·수집사업을 통해 수집된 것이라고 한다.

1948년 개관 당시에는 총론실과 전시실 93개 및 부대시설에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1,8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1959년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1959년 3월의 내각명령 제14호에 따라 자료를 확충하는 등 자료도 더 많아졌고, 시설도 확장하였다. 1991년 2월 김정일의 50번째 생일에 맞춰 전시실 7개가 증설되었다. 1999년 '동지애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와 유물 708점으로 된 '수령님과 전우관'을 개관하여 김일성, 김정일과 김책, 안길, 강건, 최광, 허담, 리찬선, 심창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전

시하고 있다. 현재 전시실 100개가 있다.

평가 혁명수도 평양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의 역사를 전시하고 교양함으로써 혁명교양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직지도부



조직지도부는 노동당의 전문부서 중에서 핵심부서로 당조직을 통제하고 당조직들을 통해 국가기관의 전 행정과정을 지도·감독한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지도부는 최고지도자의 직속부서로서 다른 전문부서와 다르게 '지도'라는 명목으로 중앙당 안 당기관(본부당위원회)을 두어 당중앙위원회 내 모든 부서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최상의 권력 기능까지 수행한다. 특히 조직지도부는 핵심기관의 간부당원에 대한 간부 인사권과 관련된 주민등록문건을 보관하고 이들에 대한 검열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안기관들에 대한 당조직 생활을 감독 및 통제한다. 이처럼 조직지도부가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심권력기관들을 통제하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는 바로 조직지도부를 통하여 북한의 모든 당·군·정 고위간부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는 하위 경제 부문 간부(당원)들까지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북한은 조직지도부의 중요한 임무를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라고 규정하고,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경영학학습,

금요노동, 2일 및 주 당생활총화, 매일 2시간 자체학습을 정규화·습성화하며 모든 당조직 생활에서 무조건 참가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세우는 일"에 조직지도부가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73년 31세의 나이에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오른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기본 기능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조직체계를 직접 지도·통제하기 위해 조직지도부를 체계적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조직지도부에 검열과를 신설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 확립 현황을 검열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 당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비서, 부장들에 대한 독자적인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전반까지 거의 모든 중요 회의들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이 참석하여 결정에 참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조연준 제1부부장과 김경옥 제1부부장(군사 부문) 등이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조용원 제1부부장이 부각되고 있다.

조총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1955년 5월 결성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 단체이다.

배경 해방 이후 처음 생긴 재일동포단체는 1945년 10월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이었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일본 공산당의 지도 아래 활동을 했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우익인사들은 1946년 10월에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을 결성하였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9년 9월 일본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해산 되었다. 이들은 다시 1951년 1월 재일조선민주전선을 결성하였고, 재일동포를 “공화국의 해외국민으로 한다”는 북한 남일 외무상의 성명 이후인 1955년 5월 25일에 재일조선민주전선을 해체하고 조총련을 결성하였다. 조총련은 재일동포의 민주적·민족적 권리 옹호, 민족교육 실시, 조국의 평화통일 등도 내세웠으나 우선적으로 재일동포의 북한 주위로의 결집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결성 이후 조총련은 북한의 지도를 받았다.

주요 내용 조총련 설립 당시 북한은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북한은 1957년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149차에 걸쳐 총 451억 616만 3,000엔을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선중앙방송, 2003.4.15). 또한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187차에 걸쳐 총 93,342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송시켰다(조선중앙연감, 1985). 그런가하면 1967년 제4기 최고인민회의부터는 조총련 대표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북한이 조총련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조총련의 도움을 받았다. 1983년 합영법 제정의 주목적이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조총련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헌납 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총련은 1998년 5월 22일 제18차 전체대회를 열어 한덕수 의장-서만술 제1부위원장-허종만 책임부위원장 체제를 정립하고,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위원장단을 4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 정비를 단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서만술 제1부위원장 방북 시 ‘조총련을 일본 실정에 맞게 개혁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동년 9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동포생활과 권익옹호를 최우선시하는 사업방침을 확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다.

2001년에 취임한 서만술 의장은 그해 7월 일본 각지에서 열린 각 지부별 정기대회에 참석하여, 조총련의 기층조직인

지부와 분회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조총련의 ‘애국사업’은 앞으로 “동포밀착, 동포복무, 동포주인형으로 혁신될 것이다”라면서 동포 중심의 조총련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총련의 돈줄인 조은(朝銀)신용조합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2001년 11월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일본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조직이 약화되었다. 특히 일본이 1972년부터 외교기관에 준해 면제해주던 세금을 200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학교에서의 학습조 폐지 등 조총련의 조직과 교육을 개혁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정치·사상·경제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은 북한의 대외선전기구 및 대남혁명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기능에서 일부 벗어나 동포권익옹호 단체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등 현실 적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총련은 ‘조선학교’로 불리는 교육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중·고등교육기관인 ‘초급학교’, 중·고등교육기관인 ‘중급학교’와 ‘고급학교’, ‘대학교’를 갖추고 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에 펼쳐져 있고, 대학교로는 조선대학교가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조총련 견제는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왔으나 아베 내각 시기에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2019년 5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파괴활동방지법(1952년 공포)’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총련이 ‘향후 정세에 따라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조치 대상에서 조총련계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조선학교 역시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법원(우리의 헌법재판소격) 판결이 나오자 북한 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종자론



종자론은 김정일이 1973년 제시한 문예이론이다. 종자론에서 말하는 문예창작에서의 종자는 결국 수령체계 및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의 전일적 관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배경 종자론은 김정일의 『영화예술론』(1973.4)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사업에서 근본을 이루는 핵을 틀어쥐고 근원적 문제부터 혁명적으로 풀어 사업전반에서 변혁을 이룩해 나간다”는 종자중시 사상이다. 『영화예술론』에 따르면, 문학작품에서의 종자를 ‘작품의 핵’이며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주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규정하고 있다.

종자론이 등장한 시기는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가 세워지면서 주체사상의 이론적·실천적 틀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시기였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 강조한 종자란 북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체계, 즉 수령과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의 전일적 관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 종자론의 바탕을 이루는 두 요소는 사상성과 이를 형상화하는 예술성이다. 사상성이란 당의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사회·정치적 과제에 올바른 사상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성이란 예술적 형상화를 잘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며,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고, 창작자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며, 창작자를 속도전으로 추동하는 요인’이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 문학예술 분야의 종자론이 전 사회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종자론에는 예술적 형상의 비결, 종자혁명의 방도,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영도예술, 군사적 지략도 있다는 것이다. “종자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자”(노동신문, 2001.3.4)를 보면, 종자론을 ‘김정일의 사상이론’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론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평가 종자론은 주체문예이론과 함께 북한의 문학예술 정책의 핵심적인 두 기둥에 해당된다. 주체문예이론이 김일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선전되는 미학의 원리라고 한다면, 종자론은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종자론에 의거한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통치이념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북한은 혁명과 건설 투쟁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핵심은 종자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낡은 관점을 타파하고 자주적으로 현실에 맞게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자론은 2000년대 초반 제기된 신사고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등장한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주체문예이론, 유일사상체계

종파주의



기존의 신앙이나 신념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을 종파주의자라고 하며 이들이 모인 단체를 종파, 이들의 사상을 종파주의라고 한다.

주요 내용 북한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지배체제를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종파주의는 유일지배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독자적인 세력의 사상이나 행동을 폄하해서 일컫고 있다.

북한은 종파주의를 ‘당의 통일과 단결을 와해시키며 노동운동을 파괴하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으로 규정하고 종파주의자를 반혁명적이고 반당적인 세력으로 취급한다.

특히 북한은 종파주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고 수령의 영도와 당의 역사적 뿌리인 혁명전통을 거부하는데 있다’면서 종파주의의 사상적 근원을 개인영웅주의와 출세주의에서 찾고 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김두봉, 박창욱, 허가이 등을 숙청한 것이나 1967년 5월 박금철, 이효순 등 갑산파 숙청과 1969년 1월의 김창봉, 허봉학 등 소위 군벌주의자 숙청을 비

롯해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 숙청의 대부분이 종파주의자라는 이유로 이뤄졌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2004년에 장성택이 종파주의자와 권력남용 혐의로 측근 수십 명과 함께 숙청되기도 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종파주의라는 죄명으로 처형했다. 특히 2013년 12월 노동당 정치국은 확대회의를 열어 장성택을 출당 조치해 처형하면서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쪼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장성택 이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최고위급인 김용진 내각 부총리도 죄목이 ‘현대판 종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종파주의는 김일성이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반대파를 제거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공고화·독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도 이를 답습하여 권력의 독점적 지위와 사유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였다.

관련검색어 ▼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 8월 종파사건

종합시장 (장마당, 통일거리시장 등)



장마당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이 확대되면서 불법적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1990년대 북한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2003년 북한은 이 같은 불법적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했다. 내용적으로 북한의 농민시장, 장마당, 종합시장은 경계와 구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시장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요 내용

1. 형성과 발전

이론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소유의 사회화와 배급제로 인해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 물질생산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 공급 이외에서도 주민들 간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존재해 왔다. 북한 역시 1958년부터 개인들이 부업을 통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민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즉 농민시장을 통해 계획체계 밖의 상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농민시장은 1970년대 후반까지는 대체로 합법적 비공식 경제 활동 공간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 공산권의 붕괴와 중반의 대기근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농민시장은 합법적 공간을 넘어 마비된 계획경제를 대체해 소비경제를 해결해주는 불법적·비계획적 공간으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당시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의 와해된 물적 토대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체계(1991)를 도입해 대외무역을 통해 부족한 재화 유입을 도모했다. 이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밀무역과 대외무역기관들의 불법 무역활동 확대를 초래하여 농민시장이 장마당화 되어나갔고, 비공식 경제가 유통 부문을 넘어 생산 부문으로 확대되어나가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중 공식무역과 밀무역을 통해 유입된 재화들은 장마당 유통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고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결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농민시장의 ‘단순 거래자’에서 점차 대외무역 및 국가재산의 전유·탈취 등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장마당으로 유입시켰고, 수십 번의 교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와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원리를 깨닫고 상업자본을 축적해나가기 시작했다. 장마당의 개별주체들도 처음에는 ‘등짐장사’로 출발했으나 점차 지역 간 부족한 물자를 유통해 이익을 얻는 ‘되거리 장사’와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관 장사’ 등으로 전문화·분화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상설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정착해나갔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에 종합시장 상설화를 담은 「내각조치 제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공식적인 국가경제 일부로 편입되어 합법화되었다.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시장은 공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단속과 통제가 더욱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2. 변화와 확산, 영향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어 온 장마당에 대해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묵인 내지 양성화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종합시장의 개장시간과 장사 연령 제한, 매대 장사 품목 수 제한과 메뚜기 장사꾼 단속 등을 통해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통제하고자 했다.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계획경제로의 복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장은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활성화되었으며, 결국 시장통제정책은 주민들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공식 임금은 있으나마나 한 금액이므로 시장을 매개로 한 개인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세대주(남편)는 사회주의를 하고, 아내는 자본주의를 해야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평가 시장의 발달과 확산은 북한경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의 발달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재정확충과 물가 안정 기여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제 북한에서 시장은 생계형적 형태에서 부의 축적공간으로 변화되었고,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중간계층들도 형성되었다. 자본가 계급 형성에 따른 지역별·주민 간 빈부 격차 확대와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 시장화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정보 유입과 지식 교류, 당국에 대한 의존과 집단 의식 약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상업의식 증대 등 주민들의 사회의식 구조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권력층들은 시장에서 자본을 형성한 돈주들과 결탁하여 각종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작동의 ‘보조 기능’에서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 혹은 상호의존 및 공생관계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의 속도조절은 있을지언정 시장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 장마당 변천사

시기	주요 내용
1958	- 농촌시장 폐지, 농민시장으로 개설
1984	- 농민시장 외 일일시장 개설(시군별 3~4개)
1987~1992	- 매일장 폐지 시도했으나 실패
1999	- 장마당 폐지 시도, 장마당 관리 기관 사회안전성 → 보위부로 이관
2001	- 장마당, 북한 전역에 300~350개 추정(군 단위 1~2개, 시 단위 3~5개)
2003	- 2002.7.1. 조치 이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곡물 및 공산품 판매 공식 허용)
2010	- 2005년 하반기~2007년 시장억제 정책으로 전환 추진 -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통제를 통한 계획경제로의 복원 시도 - 화폐개혁 실패 이후 2010년부터 장마당 통제·억제 정책이 크게 감소
2011	- 사회주의 계획가격체계에서 시장가격체계로 전환
2012~현재	- 2014년 5.30조치(인센티브 인정) 이후 시장 규모 급속 확대 - 통일연구원(2016), 종합시장은 전국에 400여 개 이상 존재

주석



북한의 주석은 김일성 시대의 국가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직위였다.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주석직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 주석직을 공식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며 주석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배경 북한은 1972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동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사회주의헌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고 국가기관체제도 재편했다.

사회주의헌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독재구조’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1949년 헌법이 부여했던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의 권한이 1972년 신설된 주석과 주석의 지도를 받는 중앙인민위원회에 배분되었고, 내각은 단순히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개편되어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관체제는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서, 전반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

관련검색어 ▼

농민시장, 배급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국정가격/시장가격, 국정환율/시장환율

는 국가정치지도체계”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제를 기본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기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사업과 국가활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를 가장 철저히 보장하는 기구적 담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통제와 집행을 위해 주석직을 신설하였다. 주석은 종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권한과 내각 수상 권한 중 중요한 권한 대부분을 이관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서는 특사권,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권, 조약 비준 및 폐기권 등을 이관 받고, 내각 수상에게는 군 통수권, 행정적 집행기관(정무원)의 지도권 등을 이관 받고, 더구나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까지 직접 지도하게 되었다. 이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주석직에 의해 주석은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의 주석은 당연직으로 국방위원장직을 겸직했으나 김일성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에게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이양하면서 군에 대한 김정일의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직을 독립시켜 군 통수권을 분리시켰다. 이로써 주석의 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에게 이관되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부대표권은 내각 총리가 분담하게 되었다. 북한의 주석제는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김일성은 사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면서 김정일은 신설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올랐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2012년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다가 2016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관련검색어 ▼

국무위원회, 북한 헌법, 노동당 총비서

주체농법 (밀식재배)



북한에서 정의하는 주체농법이란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다. 화학비료에 의한 밀식재배를 그 특성으로 한다.

배경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기후 조건을 극복하면서 농업생산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법을 모색했다. 그러 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주체농법’이다.

김일성은 1973년 1월 17일과 22~24일 황해남도·평양시·평안남북도 농업일꾼협의회에서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농사가 잘되지 못한 기본 원인이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나 기후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급 당조직들이 농촌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고, 국가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간부들이 농촌경리 사업을 관료주의·주관주의·형식주의적으로 지도한 데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김일성은 1년 동안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 하면서 토양 관리부터 품종 배치, 파종, 모

판 관리, 모내기, 영양단지에 의한 강냉이 재배, 물 관리, 비료 주기 등 모든 영농공정에 직접 관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체농법이 탄생되었고 체계화되었다.

주요 내용 주체농법이 추구하는 것은 단위면적당 수확률을 높임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증산을 이루는 것이다. 부족한 경작지와 농사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수확 알곡작물의 품종을 끊임없이 개량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체농법이 지향하는 집약농법의 핵심이다.

주체농법은 토지를 가장 효과적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포전별로 세밀히 분석하고, 모든 논밭에 많은 유기질 비료, 다량원소비료, 미량원소비료를 투하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일컬어 자연 그 자체가 줄 수 없는 새로운 비옥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라 칭한다.

그러나 주체농법에 의해 북한의 농업 생산구조는 기존의 다각적 영농에서 다수확 작물인 강냉이와 벼 중심의 단작 영농형태로 점차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알맞은 땅에 알맞은 작물을 심는다’는 적지적작(適地適作)의 원칙 역시 점차 작물에서 품종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또한 품종 배치가 전국적 범위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작물의 품종은 내각결정과 명령에 의해 지대별·도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단작 영농 구조는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평가 북한은 주체농법에 의해 다각적 영농에서 쌀과 옥수수 중심의 단일작물 영농 형태의 농업 생산구조로 바뀌고, 이러한 방식의 영농이 지속됨에 따라 화학비료의 대량 투입으로 인한 지력(地力) 약화와 심각한 토지의 산성화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서 급격한 농업생산력의 저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전후시점에 밀식농법이 소식(疎植)농법으로 전환하는 작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 농업과학원 과학지도처장 전석조는 조선신보(2006.2.22)와의 인터뷰에서 “농업 분야 다수확 품종 개발 성과”가 “소식재배 보급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밝히면서 논벼 등 일부 작물에서 소식재배로 영농방법이 전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식재배의 구체적인 사례로 평양시 강남군 신흥협동농장 최성옥은 “오랜 세월 굳어진 관점에서 벗어나 밀식재배 대신에 큰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2019.5.6, 노동신문)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벼농사를 제외하고, 옥수수, 밀, 과수 등 작물들은 여전히 밀식재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주체무기/주체철/ 주체비료/주체비날론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의 기술로 개발했다는 의미로 이들 제품 앞에 ‘주체’를 붙이고 있는 것들에는 주체무기,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주체섬유) 등이 있다.

배경 북한은 경제 건설의 전 분야에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어 대외지원이 감소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의 주체화와 자립경제노선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는 국제사회 고립 심화 속에 외화부족으로 원부자재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 기술’을 통한 ‘경제주체화·국산화’ 실현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외세의 도움 없이 주체적 공격·방어, 주체적 통일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김일성은 ‘주체무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북한에서 강철, 비료, 비날론을 3대 공업이라고 하며 이 분야의 자력갱생을 강성국가의 가장 큰 동력으로 내세웠다.

자체 원료와 자체 기술, 그리고 자체 노동력으로 산업기술을 발전시켜나가자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상징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과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밀화·경량화·무인화·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에 있어 양질의 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주체철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주체철 공법은 철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해 철강을 만드는 방식으로, 북한은 이를 위해 철광석에 무연탄과 산소, 석회석을 혼합해 선철을 뽑아내는 공법인 ‘산소열법용광로’를 개발했다.

주체비료는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나프타 대신 무연탄의 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요소비료이다. 2010년 4월에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기업소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주로 흥남에서는 갈탄을 원료로, 남흥에서는 무연탄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모두 인근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석탄종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체비날론은 북한 내 다량 매장되어있는 석회석과 무연탄

을 이용하여 비날론섬유를 얻는 것이다. 북한은 비날론은 다른 섬유보다 당김 세기, 쏘림 세기가 크며 열이나 화학약제, 햇빛과 바닷물에도 안전하고 합성섬유 가운데 물세탁이 가장 용이한 섬유라고 주장한다.

평가 북한은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을 공업, 농업, 경공업 발전과 연관시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내세우고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 내용과 달리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등은 생산에 필요한 촉매 등 중간재 수입 감소와 소재 및 설비의 국산화 과제가 분야별 속도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석탄이 주요산업의 에너지원이자 산업별 기초 원자재라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인데, 주체철과 주체비날론의 경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막대해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체비료 생산에서도 고열탄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열탄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비료를 사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 역시 생산의 비효율성에 기반하고 있다.

즉,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 외부로부터 수입해야하는 철강산업의 ‘코크스’ 및 화학산업의 ‘석유’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이를 각각 무연탄과 석탄으로 대체해 사용하려는 연구와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진다.

한편, 최근 북한 언론에는 ‘주체’라는 용어 사용빈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라는 상징성보다는 당면한 생산과제를 우선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계획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



주체문예이론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체계이다. 주체문예이론의 핵심은 사실주의 원칙을 적용하되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 북한은 1967년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사상적 일체화를 추진해 나갔다. 문예 분야에서도 ‘주체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주체문예이론이다. 1970년대 이후 이 이론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보다 우위의 창작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이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2월 김정일이 ‘전국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것”을 제창한 이후이다.

주요 내용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서 주체 확립의 본질적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시대의 현실적 조건과 문학예술

관련검색어 ▼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주체사상

자체 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조·발전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주체의 중심에 수령을 두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주체문예이론에 따른 창작방법이다.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을 중시하는 문학예술의 형식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예술적 형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문예형식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체문예이론은 이러한 예술성만을 중요시 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뚜렷하게 표현해야만 그 의미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민족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삼고 거기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인 형식이란 김일성에 의해 일제시대에 지도·창작됐다는 ‘혁명적 문예형식’을 의미한다.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이 모두 혁명적 문예형식의 대표적 작품들이다. 민족적인 형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요건도 사실상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즉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문예사상과 김정일의 문예방침을 모든 문학예술 창작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모든 문예작품과 이론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장이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평가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체가 되는 인

물의 전형으로 수령을 중심에 두며, 사회주의적 내용을 기반으로 창작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매 시기마다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예술작품에 반영하도록 문학예술인들을 추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문예이론은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예관’을 잘 드러내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수령론, 종자론

주체의 사회역사관



북한의 '주체의 사회역사관(이하 주체사관)'은 노동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된 역사관이다.

주요 내용 주체사관에 의하면, 역사는 합법칙성을 가지고 발전하며,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인민대중'이다. 그리고 인류역사는 역사의 주체인 인민이 스스로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역사, 즉 혁명의 과정에서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근거한 북한의 역사 연구대상은 혁명투쟁의 역사이다. 이러한 역사연구의 방향은 일정한 과정과 단계를 거쳤다. 먼저 해방 이후에는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생산력 발전에 의한 사회구성체와 계급투쟁, 당·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의 원칙을 핵심으로 보았다.

역사 연구 분야에서 '혁명 역사 분야'가 분화된 과정은 김정일이 실권을 장악해 간 과정과 일치한다. 1966년 김정일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

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1973년 김정일이 조직·사상비서로 발탁되면서 역사학의 방향도 본격적으로 변화하여, 1974년 '김일성주의'를 선언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관철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역사학은 주체사상에 복무하는 사회과학, '주체과학'으로 재정립되었다.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최고핵심은 '지도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투쟁의 성공은 영명한 지도자의 존재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지도자를 수령 또는 최고지도자에 한정시켰다.

평가 결국 주체사관은 김일성 일가의 지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유일사상체계, 즉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관련검색어 ▼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를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이 자립경제의 토대가 중공업에 있다고 보고 산업 간 발전의 우선순위를 중공업 부문에 놓고, 이 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원배분, 우선적 발전보장을 원칙적 요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이다.

배경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수립 이후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공업 우선발전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건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발전을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북한이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막대한 자본과 생산설비 및 기술 인력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 했던 것은 중화학공업의 우선적인 성장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생산재와 자본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할 때에만 경공업과 농업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거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정의하는 중공업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의 총체”이며, 중공업 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 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 부문들과 임업이 포함된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한정된 재원을 중공업 부문에 집중투자하게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산업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의 불균형과 경제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농업과 경공업, 무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북한이 1989년에 ‘경공업발전 3개년 계획’(1989~1991년)을 발표하고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 것이나, 제3차 7개년 계획의 완충기(1994~1996년) 중점과업으로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부터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우면서 기존의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을 변형하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노선을 선택했다. 다른 한편,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선행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전력, 석탄, 금속 등의 부문과 철도운송 등을 매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과거에 비해 농업과 경공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공업 우선의 노선에 따라 그간 중공업과 경공업-농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실제적인 인민생

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평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북한 경제는 산업부문 간의 구조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경공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부문 간 유기성을 상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공업 우선정책은 1966년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표방하고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국방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더욱더 중공업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인민 경제생활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중공업 우선정책은 농업과 경공업의 이익이 중공업으로 넘어가며, 재투자를 받지 못한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어느 순간 만성적인 식량 및 소비재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은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간 불균형과 경제의 왜곡을 초래하여 북한의 경제가 저효율과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계획의 기초를 전환했는데, 기존의 4대 선행 부문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5개년 계획의 4대 중심 과제는 ① 금속, ② 화학, ③ 농업, ④ 경공업 분야의 집중투자 계획이다. 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②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③ 경공업 부문에 원료, 자재 보장과 국산화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2020년대 경기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인지, 중장기 경제정책 로드맵에 의한 지속 가능한 전략인지는 추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검색어 ▼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지방예산제



북한 「재정법」에 규정된 사회주의 국가예산제도 가운데 하나로, 국가경제운영 및 지역 경제 운영에 관한 비용의 수급, 집행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배경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른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규정(35조)하고 있다. 이에 1995년 8월 30일 채택된 「재정법」은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는 국가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최고 인민회의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명문화했다(「재정법」 9, 10조). 북한은 세금이 폐지됨에 따라(「사회주의헌법」 제25조) 국가예산납부금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지방예산제는 예산 납부의 주체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토대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순소득이 지방예산기관에 납부되고, 이를 지방 기관이 지방 경제 및 문화생활의 발전과 지방 거주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되는 제도 전체를 포함한다. 북한에서 지방예산제는 관련 법령이 채택되기 이전인 197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지방예산제도는 지방 행정 기관의 규모에 따라 도(직할시), 시, 군(구역)예산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도아래 지역 기관이 직접 편성 및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지방 예산제도의 실시는 군을 기본단위로 이뤄진다. 지방예산 수입의 원천은 중앙예산제와 동일하게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에 더하여 지방 정권 기관 및 기업소가 납부하는 지방 유지금 등으로 구성된다(광명대백과사전, 2010). 지방정권은 국가예산납부제도에 따라 확보된 지역예산을 바탕으로 지방 산업 및 농촌경리, 지방상업, 도시경영, 사회 문화 및 보건의료 부문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역에서 집행된 예산이 확보된 수입보다 적을 경우, 군 예산은 도 종합예산으로, 도 종합예산은 다시 중앙예산으로 이관되는데 북한은 이를 “웃예산납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 지방예산제도는 지방정권의 예산 수입의 확보 및 집행을 하부 단위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제도가 중앙의 지도와 통제를 바탕으로 체계화 되어 있고, “웃예산납부항목” 등의 조항을 볼 때, 이러한 기능은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예산납부금(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인민경제계획, 독립예산제

직통생



북한에서 '직통생'은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전적으로 다른 데 들르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직통'이란 의미와 '학생'을 결합한 용어다.

'직통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공식 용어가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중용어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북한에서 대학생이라는 통칭 외에 직통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학생의 인적 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대학생은 크게 세 부류, 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군 복무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간 경우로 나뉜다.

군 만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을 '제대군인 대학생'이라고 부르며, 2~5년 정도의 군 복무를 한 뒤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다시 군에 가는 '의탁교육 학생'을 '현역'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입학했다는 이유로

'현직생'으로 부른다.

직통생이란 군 복무나 사회생활을 하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이다. 직통생은 예비시험에서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가 추천되고, 각 대학의 본시험을 통해 절반 정도가 선발된다고 한다.

관련검색어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집금소



국가예산수입금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수입금이나, 경영-생산 활동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금 가운데 일부를 수급하는 지역 단위 재정기관이다.

집금소와 관련된 북한의 법령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매체의 소식통,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집금소가 설치되었으며, 중앙집금소와 지역(군 인민위원회) 집금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재정제도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신뢰성 있는 구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간한 2020년 북한무역월간브리프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집금소는 ‘재정성 지시 29호’인 “집금소 관리운영규정세칙”(2004.5)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는데, 주 운영 목적은 사용료 및 소득세의 징수이다.

위 문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집금소와 관련된 내용은 2011년 수정보충된 「국가예산수입법」의 조항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세금을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자 착취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제도의 폐지를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으로 홍보했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수입금”으로 규정한다. 「국가예산수입법」은 이러한 국가예산수입의 의미와 구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령이다. 북한은 노동자의 사회를 위한 로동을 통해 사회순소득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을 토대로 국가예산수입이 구성된다고 밝혔다(2조). 북한의 재정은 무현금유통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관련 돈자리(계좌)를 통하여 국가예산수입을 납부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을 별도로 징수할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낮다.

그런데 해당 법령의 31조(지방유지금의 납부)와 62조(개인수입금의 납부)는 이러한 무현금유통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구역 및 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수입금이나 공민이 시장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소속된 지역 재정기관에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집금소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반영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의 계획 외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수급이나 개인의 시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지역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단

위 기관들의 수금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재정기관은 중앙집금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



모든 주민들이 조직과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복종해야 하며 개인보다 사회와 집단이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한다는 생활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체제 결속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념이다.

주요 내용 북한의 곳곳에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볼 수 있다. 이 구호는 북한에서 1950년대 말 생산증산을 위한 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 나온 뒤 현재까지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간다고 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 가치 척도이자 활동 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철저히 배척되고 집단주의적 인생관만이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신조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집단주의적 인생관을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결시키면서 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주민들을 의식화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정치·사회제도는 집단주의에 기초

관련검색어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예산납부금(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지방예산제

하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 집단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 일과 후 생활총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생활총화가 집단주의 생활방식의 하나이다. 협동농장을 통한 농업의 집단화, 노력경쟁운동, 군중집회 등도 집단주의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들이다. 학습활동에서도 ‘집체학습’과 ‘집체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체가 참가하는 ‘집체적 지도’를 강조한다.

북한은 집체적 지도를 “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앨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지도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문학예술 창작에서도 ‘집체작’이라는 방식으로 집단주의가 반영된다. 우상화 문예물인 ‘수령형상작품’이 1960년대 이후 양산되기 시작하며 여러 종류의 집체작이 제작되고 있다. 수령의 위대성을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창작할 수 없으므로 여러 창작가들의 힘과 재능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있다. ‘4.15문학창작단’, ‘백두산창작단’, ‘만수대창작사’ 등이 집체작 창작을 위한 분야별 전문창작단이며, 각각 문학작품, 영화, 미술작품을 맡아 창작하고 있다.

평가 북한의 집단주의는 이렇듯 사회구조와 주민 의식 속에 뿌리박혀 체제 유지의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 사회도 북한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은 하나의 생명체이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집단주의 원리도 침식되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국가배급 체계가 사

라지고 주민 개개인이 장마당 경제를 통해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 경제활동이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 정보의 유입 등으로 북한 주민의 개인주의 의식은 더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사상중심주의와 집단주의 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련검색어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 생활총화, 협동농장



창성연석회의
 천리마운동
 침입식 사상사업
 청년영웅도로
 청산리정신·방법
 초급당(위원회), 초급당비서대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최고인민회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창성연석회의



1962년 8월 7일과 8일 김일성의 주재로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열린 지방당 및 경제일꾼 연석회의를 의미한다.

배경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군(郡)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라는 연설을 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창성군을 지방경제 발전의 본보기로 내세웠다. 창성군은 북한의 오지로 가장 못하는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조선중앙통신도 2012년 8월 “김일성 동지는 궁벽한 산골로 버림받던 창성 땅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리실 뜻을 지니시고 생애 전 기간 무려 100여 차례나 이곳에 헌신의 자욱(자국)을 새기셨다”며 ‘창성 사랑’을 전했다.

또 노동신문은 “장군님(김정일)은 2년 전 창성군을 본보기로 하여 지방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길을 지펴 주셨다”며 김정일 역시 창성을 내세워 지방경제 발전을 추동

하려 했음을 밝혔다. 또한 2010년 11월 창성군을 현지지도하면서 “창성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키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라”고 격려했다.

창성군에서는 식료공장, 직물공장 등이 최신 기계설비 등으로 개선되었으며, 식료가공공장과 피복공장이 큰 규모로 새로 건설됐다. 군 소재지 중심거리에는 창성각과 국숫집이 증축되고, 은덕원(목욕탕 등 편의시설), 소년회관, 유치원, 탁아소가 새로 건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김정은도 2013년 6월 창성군을 직접 현지지도했다.

평가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경제개발구 지정 등을 통해 지방산업 발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창성군의 사례를 내세워 지방발전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발전도 기본적으로는 지방 자체의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자력갱생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이 지방에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발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천리마운동



천리마운동이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형태로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 되었다.

배경 북한에서 천리마운동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였다. 당시 북한은 전후 복구건설 시기를 막 벗어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였으나, 1950년대 말부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원조가 줄어들어 경제 건설의 자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경제 건설노선을 둘러싸고 소련의 간섭이 계속되었는데, 소련은 1955년 김일성의 소련 방문 당시 경제 건설 방향을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경공업과 소비재 생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소비재 부족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1956년 당시 김일성은 전원회의를 통해 “당 일꾼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창발성을 최대한 발동시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기한 내에 완수하자”고 제기했으며, 직접 강선제

강소에 현지지도를 나가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열의를 강조했다. 그 결과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당초 6만 톤의 생산계획을 생산경쟁운동을 통해 12만 톤으로 초과달성하게 되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천리마운동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주요 내용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강선제강소에서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평남청년탄광돌격대, 강계청년발전소돌격대, 청년철도건설돌격대 등 노력동원과 속도경쟁을 통한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었다. 특히 이들 돌격대의 노동강화 운동을 모범으로 삼아 발달된 이 운동은 195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생산혁신자대회’를 계기로 북한 전체근로자의 노력경쟁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천리마운동을 단순한 증산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의 창조를 목표로 한 사상개조운동으로 활용했다. 공장·기업소·협동조합 등 좁은 의미의 생산현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당의 총노선으로까지 격상시켰으며,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닌 작업반·직장·공장단위의 집단적 경쟁과 혁신운동으로 발전시켜 이후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연결시켰다.

이 운동의 전개로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년)은 전 부문에 걸쳐 예정보다 빠른 2년 6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였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람에게는 ‘천리마기수’, 성과를 낸 집단이나 조직에는 ‘천리마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며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영웅 칭호가 주어졌다. 천

리마운동 과정에서 ‘천리마작업반’뿐만 아니라 ‘천리마학교’, ‘천리마직장’도 생겨났다. ‘천리마체조’, ‘천리마조선’ 같은 조어들도 탄생했다. 천리마처럼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 듯한 느낌의 글자체 ‘천리마체’까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천리마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체를 관통하는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운동의 한계성에 따라 천리마운동이 퇴색하는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1976년부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라는 이름의 경쟁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80년대 속도’, ‘90년대 속도’ 등의 구호가 내걸리기도 했다. 1999년부터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구호로도 변형되기도 하였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 천리마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높은 창의성, 그리고 자기희생의 헌신성을 끌어내는 운동이다. 이런 대중적 열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은 도덕적 자극이었다. 즉 유인동기를 물질적 보상보다는 노동자의 명예심과 도덕적 양심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삼았다. 결국 이것은 천리마운동이 사람의 의식을 교양·개조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단한 정치사상교양만으로 노동생산성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방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투자와 기술혁신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력동원과 속도경쟁에

기초한 경제 건설방식은 초기에는 비약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점차 피로도 증가와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의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천리마가 만리마로 대체되는 등 운동의 상징성이 변화하다가 제8차 당대회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사로 ‘전후복구시기’와 ‘천리마정신, 천리마운동’이 다시 언론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속도창조운동, 청산리정신·방법, 회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침입식 사상사업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2016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상사업 및 선전선동 방식이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침입식 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고 밝혔다.

‘침입’의 사전적 의미는 ‘더 보태어 넣는다’는 것으로 침입식 사상사업은 여러 군데에 선전선동사업을 벌여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상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상사업을 펼치는 방식이다.

노동신문은 2016년 3월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사대상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여 선전선동역량과 수단도 분산적으로 전개되어 있었다”며 “이러한 때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할 데 대한 당의 의도에 접한 도당위원회에서는 사상공세작전을 다시 펼쳤는데 중심고리에 화력을 집중하는 사상공세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에서 중심고리이며 기본전

선인 물길굴 건설장에 모든 선전선동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침입식 정치사상사업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평가 북한은 그동안에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선전선동사업을 벌였지만 침입식 사상사업방식에 따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을 정하고 이곳에 선전선동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선전선동사업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현장을 선정해 집중하는 침입식 사상사업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검색어 ▼

선전선동부,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 속도전

청년영웅도로



청년영웅도로는 평양시와 남포시를 잇는 고속도로이다. 구간 46.3km, 왕복 12차선이며, 기존 일반도로 구간을 개간·확장했다. 공사 중에는 평양-남포 고속도로였다가 완공 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년영웅도로는 1998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해 북한의 청년동맹 산하 조직인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의해 건설됐다. 전국의 2백여 개의 시, 군에서 동원된 10만여 명의 건설자들은 40여km의 고속도로를 1년 11개월 만인 2000년 10월에 노동당 창당 55주년을 기념하여 완공하였다. 같은 날 북한은 정령을 통해 도로의 이름을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했다.

청년영웅도로는 평양시 광복거리 만경대 갈림길을 기점으로 남포시 천리마구역→남포시 강서구역→남포시 용강군을 거쳐 남포시 청년다리를 종점으로 한다. 이 도로 주변에는 공공건물들과 아파트 등이 들어섰으며 풍치림이 조성되어 있다.

북한은 청년영웅도로를 '강성대국 건설의 대통로'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이 도로가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리와 천리마구역 고창리의 주요 협동농장과 남포시 천리마구역 강선동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천리마뜨락또르공장 등의 주요 공장, 그

리고 주변의 경공업지대를 통과하는 만큼 물류운반을 위한 산업도로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 등 체제유지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을 군과 함께 북한체제의 유지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설비·자재가 부족한 현실에서 경제건설을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특히 건설 현장에 청년과 군인을 대거 동원했다.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청년영웅도로 건설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이를 중장비 없이 청년과 군인들의 힘으로 기적을 이루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서해갑문, 돌격대, 속도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산리정신·방법



청산리정신·방법은 1950년대 후반 제시된 북한의 경제 분야의 기본적 지도방법이다.

배경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듬해인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이를 일반화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즉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라는 명칭은 청산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하여 붙여졌다. 청산리정신은 사상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청산리방법은 구체적 실천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요 내용 북한은 청산리정신의 기본 내용으로 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인민의 생활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원칙에서 당적·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 ②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돌레에 묶어 세워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

끌어나가는 원칙에서 당적·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 ③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청산리방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서로 합심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것 ②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는 것 ③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의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④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는 것 ⑤ 사업에서 선후를 가려 중심 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⑥ 모든 사업을 계획화하여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 등을 들고 있다.

평가 이처럼 북한은 일선간부들이 범하기 쉬운 관료주의·형식주의·명령주의의 오류를 퇴치하고 당과 대중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간부들의 실무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지도방법으로 청산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당의 지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관련검색어 ▼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조선)노동당

초급당(위원회), 초급당비서대회



2021년 1월 열린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초급당은 당원이 61명 이상 있는 단위에서 구성되는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이며, 초급당위원회는 초급당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다. 초급당비서대회는 초급당의 책임자인 비서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2016년 12월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최됐으며, 당중앙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초급당비서대회를 소집하도록 당규약에 규정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은 가장 말단인 당세포를 시작으로 부문당, 분초급당, 초급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급당은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 가운데 최상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북한의 당규약은 당원이 30명까지 있는 단위에서는 당세포를, 당원이 31명 이상인 단위에서는 초급당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문당과 분초급당은 당원 규모와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해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은 당원이 30명까지 있는 단위에서는 당세포를, 당원이 31~60명인 독립 단위에서는 분초급당을, 당원이 61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급당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당규약은 초급당 또는 분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이 31명 이상인 생산 및 사업 단위에서는 부문당을 조직하며,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만으로 기층조직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초급당과 부문당 사이의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당원이 60명이 넘도록 분초급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다소 유연했던 북한 노동당의 기층조직 구성 기준이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당규약에 따르면, 당총회 또는 당대표회는 노동당 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초급당 총회 또는 초급당 대표회를 대체로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초급당 총회 또는 초급당 대표회는 1년에 한 번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초급당위원회를 선거하며, 초급당위원회는 초급당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상급당의 승인 하에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초급당에서는 1개월에 초급당위원회를 1회 이상, 집행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한다.

북한에서 노동당의 최상위 기층조직인 초급당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개최된 것은 2016년 12월 말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가 처음이었다. 대회의 명칭이 '초급당비서'가 아니라 '초급당위원장'이었던 이유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노동당의 단위별 책임자의 직책이 비서가 아닌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

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을 다시 개정하며 당중앙위원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초급당비서대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총정치국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인민군도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노동당 기관을 당과 군대에 모두 두고 있다. 노동당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군대에는 총정치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인민군 총정치국은 북한에서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군대 내의 당기관인 것이다.

배경(연혁) 북한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 내에 당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6년 4월부터 1961년 9월까지 군대 내 정치기관과 당조직을 재정비해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1958년에는 인민군 당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한 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군대 내 당조직과 관련한 규정을 당규약에 명시하였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당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이며, 대대급 이상에는 당위원회를, 중대·소대급 단위에는 당세포를 조직하여 군대 내 사상교육 등 정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집행방향 등을 토의·결정하는 회의체 기구이다.

주요 내용(기능) 인민군 내 당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인 총정치국은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연대급 이상은 정치위원을, 대대급 이하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각급 군사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결과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특히 1969년부터 도입된 인민군 내의 정치위원 제도는 교육계획, 명령서 등에 군사지휘관과 정치위원이 함께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이 막강하여 군 내에서 정치장교와 군사지휘관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총정치국장은 주요 군 간부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쥐고 있다. 총정치국의 업무는 전군의 주체사상 무장, 군대 내 당의 유일사상 확립, 군대 간부·당원들의 당생활 조직·지도, 공산주의교양 실시, 군대 내 당 및 청년동맹조직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사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 각종 운동 및 군 사기 대책 수립과 추진, 장교 보직·보충·이동·승급·제대 등이다. 이 같은 업무수행 결과는 정기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된다. 또한 군대 지휘관이 당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하고 시정시킬 권한도 갖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터 총정치국은 군 간부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및 종파주의 제거를 위한 핵심역량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총정치국의 역할은 김정일 시대에서도 정치교양사업으로 군대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 왔으며, 그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 왔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총정치국의 군대 내 위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총정치국이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성, 총참모부

총참모부



북한의 총참모부는 북한 무력의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집행기관으로 육해공군의 군사작전 종합계획을 지휘·관리·통솔한다. 북한군에 대한 군령권을 갖고 있어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배경(연혁) 총참모부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로 개칭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민족보위성(현 국방성)과 총참모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편제상으로는 민족보위성 예하에 총참모부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부터 김일성은 최고사령관 직책으로 인민무력부(현 국방성)를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해 군을 직접 지휘·통제하였다. 이러한 군에 대한 지휘는 김정일 시기에도 이어져 김정일 역시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참모부를 통해 군을 직접 통제하였다. 이러한 총참모부에 대한 지휘관계는 김정은으로 바뀐 지금도 최고사령관에서 총참모장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지휘·통제 방식에는 변화가 없어 총참모부는 국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휘체계상 상하 관계라 하기 어렵다.

주요 내용(기능) 북한의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군사집행기관으로서, 인민군의 각 군종·병종 사령부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인민군 무력은 국방상이 아닌 총참모장 예하에 각 군종·병종별 부대가 편제된 통합군 체제로서, 인민군의 모든 정치·군사 제대 및 부서들은 군사적으로는 총참모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 정치사업, 보위사업, 간부사업 등에 대해서만은 총참모부라 할지라도 전혀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 등 해당 전담기구에서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총참모부 산하에는 10개의 정규 군단, 91수도군단(구 평양방어사령부), 1개의 고사포 군단, 1개의 기갑사단, 6개의 기계화보병사단, 포병사단, 특수작전군(11군단 등), 해군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전략군사령부 등이 속해 있다. 또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령되는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군을 지휘·통솔한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움직이는 실제적인 군령기관이며, 산하에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작전국 등 군령권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검색어 ▼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성, 총정치국, 경찰총국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 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위원, 내각 총리 등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내각 등의 국가기관은 헌법 등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장 등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법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경제발전 계획 심의·승인, 예산 등에 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폐기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의 국회와 비교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로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거의 한 차례씩 열리며 회기도 단 하루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와 같은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정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대체로 당, 사회단체, 내각, 군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의원의 직책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로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며, 2019년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개정, 기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등의 의제가 상정되어 채택되었다. 2017년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에서는 1989년 설치되었다가 1998년 폐지하였던 외교위원

회를 19년 만에 다시 설치하였다. 2019년 3월 10일에는 최고 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이전과 동일한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340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9년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1개 조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71개조로 개정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분야 호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14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 2020년 4월에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고, 제3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각의 경제정책 과제에 안건이 집중되었다. 2020년 11월 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금연법」을 제정하고 「기업소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에는 제8차 당대회 직후인 1월 17일에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 임명 등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등 내각사업 보고, 국가예산 집행 결산·예산 등이 토의되고 채택되었다.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는 9월 28~29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시정연설을 하였고, 여

리 기관의 인사 이동을 시행하고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이 채택되었고 「인민경제계획법」이 수정 보충되었다.

한편, 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하였다.

관련검색어 ▼

만수대의사당, 민주조선, 북한 헌법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란 북한이 2002년 7월 1일 발표한 가격 및 임금현실화,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성 확대, 근로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는 기존의 계획경제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외화 및 원유·원자재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량부족과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외부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하여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암시장이 번성하여 공식경제체제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북한의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국정가격으로 치솟는 인플레이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국가의 재정적 통제와 자원배분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은 당·경제기관 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일의 지시를 계기로 북한은 2002년 7월 1일자로 가격과 임금 인상안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7.1 조치'이다.

주요 내용 '7.1 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물가와 임금 인상이다. 북한은 계획가격제에 의해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물가를 책정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부자재의 수입가격, 제품 생산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갈수록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은 활성화되고, 국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높은 격차, 즉 인플레이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량, 공산품, 주택 및 전력사용료 등 전반적 물가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올렸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임금도 평균 18~25배 올림과 동시에 임금지급방식도 노동생산성과 공장기업소의 수익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둘째, 독립채산제 강화와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이다. 북한은 물가와 임금을 인상한 만큼 공급(생산) 증대를 위해 공장·기업소의 평가체계를 변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장·기업소는 이전의 계획목표량 달성방식이 아니라 수익성이 기준인 번수입 지표(공장기업소 총수입-원가(생활비 제외)=국가기업이득금+기업소 자체 총당금+생활비(임금))에 따라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독립채산제 강화방침에 따라 이전에는 공장·기업소에서 초과달성한 이윤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에서 기업 자체로 재투자 재원이나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자재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업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했다. 또한 공장·기업소 내 당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배인 책임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어 공장·기업소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영을 위주로 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 각종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셋째, 사회보장 및 배급제 가격보조 혜택의 개편이다. 북한은 과거 식량, 소비재 등을 거의 무상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낮은 국정가격으로 공급해왔으나, '7.1 조치'를 통해 전반적 물가를 인상하여 식량, 소비재의 가격, 주택사용료에서 국가 가격보조를 배제시켰다. 물론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 이른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회보장제도는 공식적으로 유지했다.

평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생산 증대를 통한 물자 공급을 위해서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7.1 조치'는 북한이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일부 경제 부분에서만 실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한 조치였다. 즉 시장경제 요소의 허용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 경제와 계획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7.1 조치'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을 통한 제한적 개혁정책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7.1 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2002년 7.1 조치	추가 보완조치	임무
계획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역할 축소, 내각 권한 확대 · 중앙계획대상 축소 · 세부계획의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지표 축소, 현금지표 확대 · 기업 자체의 계획지표 확대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지표: 생산량→ 번수입 전환 · 번수입의 자체 사용 허용 · 독립채산제 전 기업으로 확대 · 계획외 생산품 30% 시장판매 허용 · 물자교류시장 내 원자재 거래 허용 · 가격결정권한 일부 이양 · 유일임금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수입 사용권한 확대: 임금상한선 폐지 · 국가납부금 정액제로 전환 · 경제단위의 현금보유 한도 확대 · 국가재산판매 납부금, 부동산이용료 등 조세 확대 · 가격의 자율적 결정 권한 확대 · 물자교류시장 내 현금 거래 허용 · 상금, 장려금 지불승인제 폐지 · 인력운용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수입 지표→ 사회순소득 표 변경 · 2012년 12.1 방침 · 5.30 조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
농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조관리제 확대: 분조 규모 축소 · 이종곡가제 폐지, 배급제→구입제 전환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 허용 · 작물선택권 확대 · 세부계획지표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전담당제 시범실시: 분조 2-5가구편성 · 협동농장에 분조규모 축소권한 부여 · 개인경작지 30평에서 400평 확대 · 국가납부량 축소 · 분조단위 분배권한 확대 · 현물분배에서 현금분배로 전환 · 6개월 농사(부업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수입 지표→ 사회순소득 지표 변경 ·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 도입 · 6.28 방침: 포전담당제 강화 · 5.30 조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 (농장책임관리제)

구분	2002년 7.1 조치	추가 보완조치	임무
유통 부문	· 물자교류시장 개설 · 국영상점 임대	· 종합시장 개설 · 물자교류시장 내 현금 거래 허용 · 수입물자교류시장 개설	· 종합시장 확대: 2010년 200여 개→ 2016년 400여 개
가격 부문	· 국정가격의 현실화 · 변동 국정가격제 도입	·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 등 가격 제정방식 다양화	

관련검색어 ▼

독립채산제, 배급제, 종합시장,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타도제국주의동맹(ㄷ·ㄷ 동맹)

탄소하나 화학공업

태양질

토지정리사업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전술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타도제국주의동맹 (E·C 동맹)



타도제국주의동맹은 김일성이 1926년 10월 17일 만주 화성의숙에서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는 혁명조직이며, <E·C>라는 약칭으로도 쓰인다.

배경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1926년 화전현의 화성의숙에 입학하였고,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과 투쟁방법에 회의를 느껴 맑스-레닌주의를 독학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은 이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만이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뒤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려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결집하여 1926년 가을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비합법적 혁명조직(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북한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목적을 “장차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노동당은 “영광스러운 <E·C>의

발전

발전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노동당과 주체사상의 시원을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 전기는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나올 때마다 이전의 책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추가 혹은 변조되어 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 사항은 1968년 출판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에 비로소 등장하는데, 점점 내용이 부풀려지면서 10여 년이 지난 시점의 『조선전사』에는 한민족의 현대사 기점으로까지 승격화 되어 있다. 이 전집은 현대사의 기점을 1926년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제시한다.

‘E·C’는 1968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역사를 정당화, 신화화할 목적으로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E·C’가 북한에서 김일성 역사의 기점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수령제가 성립되고,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의 역사가 유일적 혁명전통으로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2012년 10월 9일자 노동신문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나라에서 노동계급의 새 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역사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김일성의 이상

화뿐만 아니라 후계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하나 화학공업



화학공업 분야에서 북한이 원료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석탄을 이용한 대체 원료 및 합성, 화학제품(유기화학제품)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배경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핵무기를 통한 국방의 자위권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간의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국면을 버티겠다는 국가운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북 제재의 강화로 원유 도입이 원할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북한의 국가운영에 있어 사활적 목표로 설정되었다. 탄소하나 화학공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7차 당대회 결정서를 통해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려는 의의를 지닌 대상건설로 부각되었으며 김정은 시대 화학공업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관련검색어 ▼

주체사상,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혈통, 백두산 밀영, 보천보전투, 항일 빨찌산 정신

주요 내용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은 석탄을 활용한 다양한 화합물 생산에 돌입했다. 탄소하나 화학공업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탄소(C1)로 이뤄진 메탄을, 일산화탄소 등의 화합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기화합물(화학섬유와 합성수지, 탄산소다,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석유를 활용한 다양한 화학제품 및 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용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원유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북한은 원유의 가공을 통한 화학제품의 생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북한은 충분한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석탄을 활용하여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섬유, 자재 등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화학공업의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2017부터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하나 화학공업의 창설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메탄올생산공정(메탄올생산공정) 개발 및 시설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탄올 생산의 핵심 기술인 촉매의 국산화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덕훈, 박봉주 등 당과 내각의 관료들 역시 지속적인 현지요해를 통하여 대상건설 공사 및 관련 기술개발 활동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평가

북한의 대체에너지, 대체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부문의 국산화 전략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 및 대외관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원자재의 수입과 그를 바탕으로 효율 높은 공업의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기술 및 공정의 개발을 통해서라도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탄소하나 화학공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효율 높은 촉매제의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메탄올 합성을 위해선 석탄의 촉매 반응을 활용해야 하며, 대체휘발유의 생산 역시 일산화탄소 촉매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촉매 개발에서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화학 부문에서의 발전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노동신문은 탄소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국산 촉매제 개발을 강조하는 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촉매제 개발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이 2016년에 2020년 내에 실현하겠다고 계획한 수십만 톤 능력의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목표의 달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검색어 ▼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국가과학원

태양절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해 열병식,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기념하고 있다.

배경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이후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지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태양'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유일한 지도자'를 태양에 빗댄 것이다.

주요 내용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김일성 탄생 5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1968년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김정일이 북한 내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된 지 2개월 뒤인 1974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김일성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했다. 그렇지만 1997년까지는 북한에서 이날을 '4.15절'로 불렀다고 한다.

김일성의 생일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김일성의 3년 상이 끝난 1997년 7월부터이다. 북한은 1997년 7월 8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내각의 전신) 등 5개 기관 공동 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주체' 연호를 채택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생일인 4.15절을 '태양절'로 격상시켰다. 북한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돼 있던 '금수산기념궁전'도 김정일의 시신을 안치한 이후인 2012년 2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중앙보고대회, 열병식, 불꽃놀이, 기념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일성의 100회 생일이었던 2012년에는 연례적 행사 외에도 4월 15일을 전후해 평양민속공원 개장, 광명성-3호 인공위성 발사, 평양 만수대언덕에 설치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인민군 무장장비관 개관, 희천1·2호 발전소 준공식 등이 이뤄졌다. 특히,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연설을 통해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검색어 ▼

광명성, 명절, 기념일

토지정리사업



토지정리는 올망졸망한 논밭을 규격화해 바둑판처럼 펼쳐 정리하는 경지정리의 북한식 표현이다.

토지정리사업은 1998년 5월 김정일이 최전방 시찰을 위해 강원도 창도군을 지나던 중 거미줄 같은 뚝배기를 보고 현지에서 ‘관계 부문 일꾼 협의회’를 조직하여 강원도 토지정리를 지시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이후 전역으로 확대된 사업이다. 토지정리사업은 당초 감자농사, 종자 개량, 이모작 확대와 함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등고선처럼 늘어선 논두렁과 밭둑, 뚝배기와 같은 자투리땅을 정리함으로써 농지를 확대하고 곡물생산을 늘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자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다.

실제로 북한은 강원도에서 토지정리가 끝난 후 첫해 농사에서 종전보다 2.5배의 증산효과를 거두게 되자 토지정리사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북한의 토지정리사업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평안북도를 거쳐, 황해남도로 이어지는 점진적 사업으로 수년간 꾸준히 지속되었다.

토지정리사업은 강원도에서 1998년 10월에 처음 시작하여 1999년 4월까지 3만 정보의 토지정리사업이 마무리된 후 2차로 평안북도 지역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0년 5월까지 5만 1천 5백 정보의 토지정리를 마쳤다. 이후 3차로 황해남도 지역에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0만 정보의 토지정리를 마쳤다.

북한은 또한 토지정리를 위해 각 도(道) 단위로 돌격대를 조직해 1개 군(郡)씩 맡겼고, ‘기계화군단’으로 불리는 불도저·굴착기 등 각종 중장비를 집중 투입했다. 또한 공병부대와 인근지역 군부대에서 군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조선컴퓨터센터도 토지정리와 계획작성 프로그램인 ‘천지개벽’을 개발하여 토지정리를 강조했다. 한 마디로 국가적인 지원 아래 토지정리가 추진되었다.

이후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의 대상이었던 뚝배기가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사상 이완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토지정리 명분하에 협동농장에 합병시켰다. 북한 농민들도 북한 당국이 토지정리사업을 핑계로 협동농장 주변 2~3채 규모의 살림집을 헐고 문화주택 구역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살림집 부근의 소토지들을 뺏기 위한 조치라고 불신을 표출했다고 한다.

관련검색어 ▼

국토환경보호사업, 뚝배기, 협동농장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북한 노동당의 대남 사업 중심기관이다.

통일전선부는 대남전략전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북회담, 경제협력, 해외교포·외국인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정책·교류·회담·연고자·총련·조직 담당 부부장들이 있으며 약 3,000여 명이 남북회담 정책수립, 해외 반한 교포단체 지도육성, 대남심리전, 대남자료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일전선부 요원들은 사실상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2016.6.29)에서 국가기구로 격상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등 통일전선부 외곽단체의 일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고, 다수의 부서들이 대외적으로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한 정계, 사회계, 문화계, 종교계 등 각 단체인사들로 구성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라는 통일전선단체를 구성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통일전선을 추진해왔다.

통일전선부는 남한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를 분석·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1954년 4월 제3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1959년 ‘남조선연구소’가 설립됐으며, 1978년 1월경 노동당 대남사업 담당부서로 통일전선부가 생기면서 이 부서의 산하단체로 흡수된 후 1990년경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연구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아래 종합정세연구실을 비롯해 인물자료, 군사정책, 종합편집실 등을 두고 있으며 500~6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임무는 △남한의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정세연구를 통한 대남정책 자료작성 △남한 주요 인사 정보분석 및 평가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가 정책수집과 연구 등이다.

관련검색어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전선전술

통일전선전술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혁명단계에서 자력으로 적을 물리치기 어려울 때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잠정적인 동맹관계를 확보하는 전술이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남사업의 기본전술로 사용하고 있다.

배경 및 주요 내용 북한은 전조선혁명을 위해 해방 직후부터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대남사업 부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 각 당 책임일꾼들을 대상으로 행한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 대열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에서 통일전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체계화시켰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주적(공동원수)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의 당(공산당)과 제 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를 보조역량의 편성문제로 성격지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조역량의 강화를 통해 주력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통일전선운동을 통해 남한혁명의 동

력인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 혁명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승리의 필수적인 담보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데 남한 내에 존재하는 공산(좌익)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공산세력이 아닐지라도 미국과 현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나 세력을 규합하여 이들의 힘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그들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전술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통일전선 조직원칙으로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군중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①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 ②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으로부터 전반적인 연합 실현 ③ 전략적 동맹대상과 전술적 동맹대상을 엄격히 구별하여 양자와 적절히 연합 ④ 통일전선 대상이 보잘것없이 영세한 역량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한사람이라도 더 쟁취 ⑤ 정세변화에 따라 조성된 여건에 맞게 신축성 있게 적용 ⑥ 반미·반파쇼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포섭 ⑦ 지하당 사업과 통일전선 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공작하는 것 등이다.

평가 통일전선전술은 정권 초기부터 북한 정권의 정당성과 더불어 언제나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특히

북한은 현 시기의 남한 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은 ‘민족민주주의 전선(민민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전에 내세웠던 반미구국전선, 반파쇼민주전선, 전민족통일전선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북한은 민족민주주의전선의 기본 구호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화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기본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발전 등 제반 환경의 변화로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특수경제지대 (경제개발구)



북한은 무역을 포함해 대외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경제지대를 지정,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서 모두 10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현재 총 29개의 중앙 및 지방급개발구를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경제지대는 대외경제무역지대가 창설될 당시 법에 명기된 명칭에 따라 경제특구(1991. 12)와 경제개발구(2013. 5)로 구분된다.

배경 경제개발구는 북한 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 경제정책사업이다. 「경제개발구법」 제1조에서 경제개발구의 사명은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말에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 도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후 5월 29일에 「경제개발구법」을 마련하고 11월 21일에는 신의주경제특구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발표, 같은 해 7월 23일 6개 경제개발구 추가 지정 등으로 경제개발구 설립을 추진했다. 2015년 1월 14일에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 총계획이 작성되었으며,

동년 10월 8일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최근에는 2017년 12월 평양시에 강남경제개발구, 2021년 4월 함경북도 무산군에 중앙급 경제개발구인 무산수출가공구를 지정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들어 새로 지정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는 무려 23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조의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경제활동, 장려 및 특혜,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재산과 소득, 신변,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받으며 토지는 북한 현행 법상 최장기간인 5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물자 등을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외화와 이윤, 재산도 자유롭게 외부로 송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북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용료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현황 도표 참조)는 10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그리고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또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유형별·특성별로 종합적 개념의 경제개발구를 비롯하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적 개념의 경제개발구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자강도의 만포, 함경북도의 청진과 경원, 양강

도의 혜산, 평양의 강남 등 6개가 있다(강남경제개발구 역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로 추정).

공업개발구는 중공업과 경공업 분야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그 시설, 즉 하부구조 시설들과 창고 등이 집중 배치되어 수입대체, 수출지향, 산업구조 개선형의 공업생산이 함께 진행되는 개발구이다. 자강도 위원, 강원도 현동, 함경남도 흥남, 평안남도의 청남 개발구 등이 공업개발구에 해당한다.

농업개발구는 채종, 작물재배, 가축사육, 양어 등 높은 가치의 생산성을 가진 현대농축산, 어업 분야의 고리형 생산체계를 갖추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기지와 식료품 가공 및 포장 기지를 결합한 경제개발구이다. 함경남도 북청, 함경북도 어랑, 평안남도 숙천의 개발구가 이에 속한다.

관광개발구는 자연생태환경과 여행자들의 수요를 결합한 특색 있는 관광제품 생산기지와 관광시설들을 건설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경제개발구이다. 황해북도 신평과 함경북도 온성섬, 평안북도 청수의 개발구가 관광개발구이다. 무봉국제관광특구는 백두산관광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개발이 끝난 삼지연시를 포함하고 있다.

수출가공구는 경제무역지대와 가공제조업지대의 결합체로서 수출지향형 공업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무역활동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로서, 황해북도 송림, 남포시 와우도, 함경북도 무산지구 등 3곳이다.

북한은 특히 첨단기술개발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개발구는

과학연구와 생산공정이 밀접해지고 선진기술의 투자와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는 경제개발구로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선진기술의 도입, 기술무역의 발전, 지식경제시대의 경제일꾼 양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대표적이다.

평가 경제개발구 정책의 목표는 무엇보다 ‘전국토의 경제개발구화 혹은 개발구의 전국적 확산’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북한 외곽 5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점(點) 개방에서 선(線) 개방 방식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와 개별 기업소 참여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적극성과 자율성을 부과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개발구의 개발 성과는 부진하다. 2015년 초 기존 북한 당국은 각종 특구와 개발구에 해외 306개 기업에게 총 14.4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4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나진-하산 지역에 밀집됐거나 이미 경협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기업 자금으로 알려진다(2016년 기준). 경제개발구 정책 성공의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열악한 산업·물류교통망 등의 근본적 제약 외에 핵심협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개성공단 단의 반복적인 중단 위기 사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최대투자국이 될 수 있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중앙급경제개발구(경제특구) 현황

구분	명칭	위치	면적(km ²)	주요 개발 산업
경제 무역지대	라선	특별시	470.0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서비스 등 4대 분야
	황금평·위화도	평안북도	52.5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국제 경제지대	신의주	평안북도	40.0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국제 관광지대	원산·금강산	강원도	440.0	휴양, 치료관광 등
국제 관광특구	금강산	강원도	225.0	해양관광, 농업, 어업, 녹색산업 등
국제 녹색시범구	강령	황해남도	3.5	녹색산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첨단기술 개발구	은정	평양 은정구역	2.0	정보기술, 나노 및 신소재, 생명공학연구개발, 첨단제품 생산 및 수출, 첨단기술전시 및 교류
수출가공구	진도	남포시 와우도 구역	1.37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화학제품 보세가공무역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 북한이 발표한 상기 자료에는 개성공업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이후 발표된 경제개발구(경제특구)로는 2021년 4월 함경북도 무산군에 지정된 중앙급 무산수출가공구가 있다.

북한의 지방급경제개발구 현황

구분	명칭	위치	면적 (km ²)	주요 개발 산업	투자액 (억달러)
경제 개발구 (6)	압록강	평북 신의주시	6.3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4
	만포	자강도 만포시	3.9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2
	청진	함북 청진시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중계수송, 무역	2.0
	혜산	양강도 혜산시	1.0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0
	경원	함북 경원군	1.9	전자, 수산물가공, 정보산업, 의류 및 식료이공, 관광	-
	강남	평양 강남군	3.0	육종, 사료, 첨단제품임가공	-
	위원	자강도 위원군	2.3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산물가공,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	1.5
공업 개발구 (4)	현동	강원도 원산시	2.0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생산	1.0
	흥남	함남 함흥시	2.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	1.0
	청남	평남 문덕군	2.0	채취설비, 공구, 석탄화학, 무역	-
	북청	함남 북청군	3.5	과수업,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1.0
농업 개발구 (3)	여량	함북 여량군	5.1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
	숙천	평남 숙천군	3.0	육종, 채종, 농축과수, 채소, 버섯 가공	-
	국제관광 특구 (1)	무봉	양강도 삼지연시 무봉로동자구	20.0	백두산관광, 관광서비스, 관광상품개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km ²)	주요 개발 산업	투자액 (억달러)
관광 개발구 (3)	신평	황북 신평군	8.1	체육, 문화, 오락 등 현재 관광지구	1.4
	온성섬	함북 온성군	1.7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서비스 등	0.9
	청수	평북 삭주군	20.0	압록강관광	-
수출 가공구 (2)	송림	함북 송림시	2.0	수출가공업, 창고보관, 화물운송	0.8
	와우도	남포 와우도구역	1.5	수출가공조립업	1.0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투자액은 북한의 경제개발위원회 자료.

관련검색어 ▼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법



8.3 근로자

8.3 인민소비품

8월 종파사건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평양 표준시(時)

평양국제상품전람회

평양종합병원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8.3 근로자



노동이 「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소속된 직장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출근을 면제받고 장마당에서 장사 등 부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

배경 북한은 「헌법」 제30조와 「사회주의로동법」 제4, 5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일 8시간 노동을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절차에 따르지 않는 가운데 직장을 이탈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사회주의로동법」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 역시 근로자의 무단 해고(제적) 및 노동 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데(「사회주의로동법」 34, 35조) 이러한 제도에 따라 북한에서의 고용 유연성은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게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임금은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로동보수원칙’에 근거하여 책정되는데, 근로자의 노동 시간 및 노동 업무의 질적 수준에 따라 북한사회에 물질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됨을 의미한다. 이때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비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은 국정가격이다. 근로

자는 노동을 통해 제공받은 임금과 공급카드를 바탕으로 국영상점에서 생필품을 국정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그런데 국영상점 및 양정사업소에 근로자가 구매할 쌀과 생필품의 공급이 경제사정 악화로 중단됨에 따라,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생존이 가능하던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에 위기가 초래된다. 국영상점의 운영이 중단되는 가운데 생필품을 거래하기 위한 사적 영역에서의 비법적 거래활동이 증가되면서, 국정가격은 형해화 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이 거래의 기준이 된 것이다. 문제는 기존 직장에서 받던 보수금액으로는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양곡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업소로의 원부자재 공급마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공장의 가동이 제한되는 사회적 위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보수 지불 역시 어려워졌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소는 할당된 계획(금액지표)을 충당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었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에서 노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8.3 근로자’이다.

주요 내용 ‘8.3’은 8월 3일을 의미한다. 해당일은 1984년 김정일이 평양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현지지도하며 계획에 의해 공급되는 원부자재 이외에 부산물, 폐기물들을 활용하여

자체 상품 생산을 확대하라는 교시를 발표한 날짜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원료가 계획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점에서, '8.3'이란 북한사회에서 계획에서 벗어난 활동에 대해 지칭하는 은어로 기능한다. '8.3 노동자', '8.3 부부', '8.3 벌이', '8.3 한다' 등의 표현은 모두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8.3 근로자'로 활동하기 위해선 직장 내 지배인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8.3 근로자'로 등록한 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8.3' 등록을 마친 근로자는 집에서 폐자재를 활용해 경공업 소비품을 생산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 부업, 장마당 장사, 임노동 등을 하며 생활을 영위한다.

평가 북한의 '8.3 근로자'는 북한 경제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해왔다. 특히 북한의 공급 부족, 계획의 붕괴, 국가경제의 약화 등을 실증하기 위해 꾸준히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가 학계에 수집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경제체계가 계획과 시장의 공존형태로 분석됨에 따라, 단순히 '8.3 근로자'의 확대가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약화나 붕괴의 지표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검색어 ▼

8.3 인민소비품, 독립채산제

8.3 인민소비품



'8.3 인민소비품'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에서 유휴자재와 폐기물, 폐설물,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소비품으로 국가계획상에는 없는 제품을 뜻한다. 이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라는 대중운동 방식으로 전개되어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부족한 소비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배경 1984년 8월 3일에 김정일은 평양시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며 폐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확대·실시하라는 지시를 했다. 당시 김정일은 도시 내 구역·군에서는 전문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세소상품'(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용상품)들을 많이 만들도록 지시했다. 김정일이 8월 3일에 지시했다는 것을 계기로 '8.3 인민소비품'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이 같은 김정일의 지시는 곧바로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이란 군중운동으로 발기되어 북한 전역에 확대되었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 소비품은 '8.3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이 책임지게 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이 승인하고 장려한 '8.3 인민소비품'은 근로자, 가정주부가 생산주체가 되어 자체의 생산조직을 만들고,

부산물, 폐기폐설물 등 자체의 원료와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만든 사적 생산제품이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에 따라 부족한 인민소비품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기업소 안에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을 조직하고, 도시와 노동자구, 협동농장들에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하여 일용잡화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생산 제품은 도시 곳곳에 ‘8.3 인민소비품 직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생필품 및 소비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가계획 밖의 사적 생산단위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주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노동자구·동·리 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후에는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받은 이들은 해당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면 ‘8.3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이 증가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집안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수공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공장·기업소의 원부자재를 빼들려 개인적으로 생산판매하거나, ‘8.3 인민소비품’ 직매점에서 다량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농촌에 나가 2~3배의 높은 가격으로 팔아 중간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적인 상행위와 연계를 맺는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는 ‘8.3 노동자’로 등록된 후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8.3 노동자’란 직장에 매

월 얼마간 돈을 내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현재 북한 공장·기업소의 배급 사정은 전혀 배급이 안되거나 간혹 된다 하여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최대 15일, 최소 3일밖에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장사에 나서기 위해 공장·기업소와 결탁하여 ‘8.3 노동자’로 등록한다. 이들은 부족하고 필요한 경공업 제품을 집안에서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하면서 북한 내 상업과 시장 활동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평가 북한이 사회주의 부족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8.3 인민소비품’ 생산방식은 1980년대 말 일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질 낮은 소비품 공급과 함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8.3 인민소비품’ 단위들은 개인 단위들로 변화하며 북한의 자생적 시장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결국 북한 공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관련검색어 ▼

8.3 근로자, 배급제, 종합시장

8월 종파사건



'8월 종파사건'이란 북한 내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 세력들이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김일성 중심의 정치세력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주도하였던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지배의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배경 1950년대 북한은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북한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은 전후 복구건설 노선과 사회주의 개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면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중심의 핵심지도부는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과 농업협동화를 제시하였고, 최창욱, 박창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경공업과 농업 우선의 발전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당시 반대파는 연안파와 소련파 계열이었으며 권력의 핵심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었다. 초기의 연안파와 소련파의 반대 움직임은 북한 경제재건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김일성의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 개최된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의 스탈린 우상화 비판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개인숭배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전면적인 반김일성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연안파와 소련파는 소련, 중국과 연계된 정치세력들로 소련의 스탈린 우상화 비판을 계기로 권력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김일성 중심의 정치세력을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일성은 반대파에 대해 소련의 지도노선을 추종하는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파의 힘을 약화시켰다.

주요 내용 당시 반대파의 핵심은 연안파의 실세였던 최창욱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내각 부수상이었던 그는 당내에서 교조주의자로 낙인찍혀 있던 소련파 박창욱 부수상 등을 끌어들었다. 이들은 '집체영도의 강조와 개인숭배 반대'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은밀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한 1956년 6월 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반김일성운동을 본격화하였다.

1956년 8월 30일 김일성에 대한 반대파의 공개적인 도전이 평양예술극장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원래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대표단의 보고를 청취하고 인민보건사업의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 첫날 김일성의 사회주의 국가 방문보고가 끝난 뒤 토론에서 상업상 윤희흥은 첫 토론자로 나서서 의제와는 관계없이 김일성 지도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은 김일성을 옹호하

였고 반대파의 행위를 반당적 행위로 규정하고 나섰으며, 윤공흠은 곧장 단상에서 끌어내려졌다.

이후 8월 전원회의는 반대파의 움직임을 ‘반당종파행위’로 규정하고 “최창익, 윤공흠,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윤공흠과 서휘, 리필규를 출당시켰으며 최창익과 박창옥의 당직과 내각 부수상직, 정부 직위를 박탈하였다. 이렇게 해서 반대파의 소요는 무마되었으나 사태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알려졌고 소련은 부수상 미코얀을, 중국은 국방부장 펑더화이를 급히 평양으로 파견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8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반복하도록 종용하였다. 당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으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일성과 지도부는 소련과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1956년 9월 23일 9월 전원회의를 열어 8월 전원회의의 결정을 반복하였다. 이에 따라 최창익, 박창옥은 당중앙위원으로 복귀하였으며 윤공흠, 서휘, 리필규의 당적도 원상회복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세력이 약화된 연안파, 소련과 계열의 정치세력들을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하면서 김일성의 권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 일련의 사건은 훗날 ‘8월 종파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평가 ‘8월 종파사건’이 북한 권력구조의 재편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간섭으로 김일성 세력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으나, 곧이어 대다수의 반대파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축출하였다. 이후 당은 종파 여독을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종파에 반대한다는 이른바 ‘반종파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주요 회의마다 해당 종파인사 또는 김일성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숙청해왔다. 결국 김일성계 정치세력은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반종파투쟁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비판세력을 거의 완전하게 소멸시키면서 명실상부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확립시켜 나갔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창전거리는 모두 김정은 시대 평양에 새롭게 조성된 대표적인 거리이다.

주요 내용 김정은은 2013년 8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며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살림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2014년 5월 21일 리설주 등과 함께 김책공대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며 이 거리를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했다. 북한은 대동강 기슭에 위치한 미래과학자거리의 준공식을 2015년 11월 3일 개최했다.

한편 김정은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를 비롯한 과학자, 연구자들이 거주할 ‘여명거리’도 금수산태양궁전과 용흥사거리 사이에 새로 조성했다. 또한 김정은은 2016년 3월 18일 용흥사거리 주변에는 고층 건물을 건설하고, 금수산태양궁전 주변에는 ‘아담한 다층건물’을 배치하라며 조명과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전지를 설치했다.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모두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은

의 경제적 치적을 만들고 과학자들을 우대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추진된 건설 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를 김정은 체제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은 군인 건설자들을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건설에 투입하도록 지시했으며, 여러 차례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준공식에도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이처럼 건설 붐을 통해 김정은이 주민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경제적 치적을 주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존경과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2012년 6월 평양 만수대거리를 재개발해 최고 45층까지 14동으로 이뤄진 고층 아파트촌 ‘창전거리’가 준공되었다. 이곳에는 약 3만 명 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 창전거리는 김정은 시대에 준공되었지만, 건설은 2011년에 시작되었다. 창전거리 재개발은 2008년부터 진행된 평양 10만 세대 건설사업의 결과물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2년 10만 세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 이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북한은 2011년 4월 사업목표를 2만 5천 세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사업을 추진했다.

평가 2020년 자연재해의 여파로 신축된 2만여 가구의 살림집, 제8차 당대회의 평양 5만 세대,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주택 신축 계획 등 주택건설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살림집 건설 드라이브는 인민대중제

일주주의의 가시적인 결과물이자, 건설경기 부양을 단기 경기부양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양 표준시(時)



북한이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표준시를 동경시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로 바꾸어 사용했던 표준시간이다. 2018년 원래의 시간으로 복귀하였다.

북한은 2015년 8월 7일 표준시간 제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공개하면서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반도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를 표준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표준시 변경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삼천리 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조선 민족 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동경시 기준 0시 30분 인민 대학습당 시계탑과 평양역 시계탑의 타종을 시작으로 ‘평양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날부터 북한은 새 표준시에 맞추어 라디오와 TV방송들도 방송 시작 시간을 일제히 30분 뒤로 늦췄다. 이에 따라 오전 6시에 시작하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30분에 방송을 시작하였다.

남한은 1908년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의 동경 표준시에 맞춰졌다. 이후 1954년에 동경 127.5도로 복귀하였다가 1961년 8월에 동경 135도로 다시 돌아가면서 서울 표준시로 정해졌다.

평양 표준시의 사용으로 남북이 각각 다른 표준시를 갖게 되면서 남북 간에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중업원 및 관계자 출퇴근 시간,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남북회담 시작 시간 등에 있어 남북한이 적용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서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8년 5월 5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표준시로 돌아가면서 남과 북의 표준시는 시차가 없어졌다.

관련검색어 ▼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우리민족제일주의(민족주의), 자강력 제일주의, 주체사상

평양국제상품전람회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평양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로,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와 EU 소속 국가, 주변국 바이어들이 참가하며 그 규모가 점차 성장하고 있다. 1996년 최초 기획시 대내행사로 연 1회 개최되었으나, 2000년 10개국 이 참가하며 국제박람회 성격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가을 박람회가 열리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봄철 전람회는 1996년에, 가을철 전람회는 2005년에 각각 시작되어 2019년 9월 기준 봄철 전람회는 22회, 가을철 전람회는 15회 개최됐다.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전람회는 별도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 또는 중단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행사에는 중국과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가, 유럽 일부 국가 등의 기업들이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 설비, 운수기재(차량 등),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을 출품하였는데, 최근 들어 농업, 정보통신 분야의 상품 또한 출품되고 있다. 전람회는 통상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다.

통상 북한이 개최하는 국제상품전람회의 주요 참가대상은 중국 기업이다. 그 예로 2007년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는 참가 외국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협력과 상품전시회

의 공동 참여 등도 빈번해 지고 있다. 중국과는 ‘2005년 중국 국제특허기술 및 제품교역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해 환경, 건강, 의료, 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협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 이외의 주요 참가국으로는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참가했다. 다만 최근에는 싱가포르 회사들이 식료품 부문에서 출품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내부의 부족한 상품수급을 보충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평양국제상품전람회는 이의 한 과정으로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핵실험 및 투발수단 성능 고도화로 인하여 제재 국면이 강화되면서 대외 무역은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본 행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무역 부문 등 일부 전문가들을 위한 자리였던 전람회가 2005년 이후 종전과 달리 일반 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7.1 조치’ 이후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공장·기업소 관계자들과 일반 주민들도 전람회장을 찾아 외국회사의 제품을 살펴보고 무역 거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전람회는 참가국과 출품 기업들의 양적인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개최된 제3차 전람회의 경우 해외 13개국이 참

가하고 22개 업체의 상품이 전시되는데 그쳤으나, 2019년 22차 전람회의 경우 약 450여 회사가 참석한 것으로 소개 되었다. 한편 2019년 청진에서 경공업, 의약품, 식료품 중심의 새로운 전람회가 개최되고, 중국 등 210여 단위가 참가함에 따라 이러한 형식의 무역박람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검색어 ▼

특수경제지대(경제개발구),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외교, 북-중조약, 북-러조약

평양종합병원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건설중인 종합병원이다. 2020년 3월 17일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병원 건설을 시작하여 2020년 10월 10일에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식적인 준공은 미루어진 상황이다.

배경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17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다. 처음 목표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추어 2020년 10월 10일 완공하는 것이었으며, 김정은도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서 공사를 독려했다. 그러나 자재와 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는 해를 넘겼다. 외부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의료장비나 병원 기자재로 인해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에 관련 설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우방국 역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사회주의 문명국의 하나로 보건의료 혜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내의 보건의료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김정은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검색어 ▼

비상방역법, 탄소하나화학공업, 순천린(인)비료공장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를 세분화해 4~5명의 인원으로 축소된 가족단위 규모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배경 포전담당제 시범도입은 2002년 ‘7.1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1 조치’는 기존에 국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많은 부분을 하부 단위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부 단위들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위에서 분배받던 자재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협동농장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고, 점차 ‘최소 노력에 최대 효과’라는 생산성과 이윤 창출에 힘을 쏟게 되었다. 이에 2004년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분조가 영농방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율을 갖는 ‘포전담당제’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포전에서 수확된 농산물 분배는 국가 납부 몫을 제외한 초과 생산물에 한해 국가와 농민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산 증대를 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3~2007년 당시 2배의 증산을 목표로 하

는 ‘800만 톤 식량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국은 농민의 노동의욕 향상이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전담당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포전담당제를 설명하면서 “같은 노동력으로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실리주의”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실리주의 원칙에서 곡물 증산을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범적 조치로 실행되었던 포전담당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 실시와 배급제 정상화 조치로 중단되었다.

주요 내용 2002년 7.1 조치 이후 잠시 시범 도입했다가 중단되었던 포전담당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다시 강조되었으며, 2015년 ‘농장법’이 개정된 이후 법령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추가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농업관리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2012년 6.13방침, 2014년 5.30조치, 2015년 6월 25일 수정보충된 ‘농장법’ 등이 그것이다.

북한 경제당국은 2014년 4개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운영했으며, 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농업 부문 제도 변화와 공식 활동들을 지속 보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대회, 2019년 농업 부문 총화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전국단위 확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수확 선구자 따라 배우기 사업 등을 조직하고 있

다.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하고 있는 농업관리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분조 규모도 한 개 분조가 종전의 7~8명에서 4~6명(2~3명 분조도 존재)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단위의 축소는 계획의 현실화 및 분조원이 추가 생산량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 배분으로 생산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② 농민들에 대한 분배체계가 달라져서 2012년 소위 6.13조치 이후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3:7제에 의한 분배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국이 세금 등의 비용으로 30%, 국가수매 40%, 그리고 농민 분배 30%로 사실상 농민들은 현금과 현물로 전체 생산의 약 30%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2014년 5.30조치 이후에는 4:6제가 시행되어 농민들이 국가보다 많은 6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농장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농장원들의 부업생산조치가 공식화되고, 이를 통한 농장내 경영활동에서 오는 '번수입'은 농장원 복지 제공 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장원의 자체 식량조달은 물론 인센티브를 통한 저수확지 개간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④ 농장원별 계획은 생산지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해당 지표는 분조의 관리 토지의 상태, 수확 작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농장원의 분배는 과거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국정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농장원의 기능 급수에 따른 분배 몫을 구분하는 것도 인센티브 가운

내 하나로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포전담당제와 분배체계의 변화는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농장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제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산업 분야 개혁조치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함께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인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적인 경제개혁조치이다.

포전담당책임제 관련 기사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박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이런 일꾼들의 표준은 본래에 의거한 포전담당제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이런 일꾼들의 표준은 본래에 의거한 포전담당제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이런 일꾼들의 표준은 본래에 의거한 포전담당제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이런 일꾼들의 표준은 본래에 의거한 포전담당제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이런 일꾼들의 표준은 본래에 의거한 포전담당제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포전담당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성과가 높아질수록...



자료: 『노동신문』, 2017년 10월 11일자, 5면.

평가 포전담당제는 집단영농제에서 개별영농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영농 형태로서 중국도 개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농업개혁이 농업생산과 분배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화되면 될수록 탈(脫)사회주의화 되는 것이라고 할 때, 포전담당제 및 개인영농의 실시 여부는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을 진단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관련검색어 ▼

분조관리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간단히 말해서 부르주아 정치권력을 무너뜨리고 국가가 소멸하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과도기적 정치체제이다. 북한은 이를 “노동계급이 국가기구를 통하여 반혁명요소를 진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본래 맑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에 성공한 이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함께 대두된 개념이다. 초기 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혁명사상과 혁명 이론이 적용되었으나, 사회주의 각국의 상황과 조건의 차이로 인해 이론의 현실적 적용 간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은 결국 소련과 중국 간의 이념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중·소의 이념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북한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라는 혁명 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요 내용 북한은 김일성이 1967년 5월에 발표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와 1968년 9월에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글을 통해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와 관련된 북한 자체의 독자적 이론을 정립했다. 이는 중·소의 이념 대립 속에서 북한 스스로 독자적인 혁명과 건설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서 과도기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역사적 시기”이다. 즉 과도기는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세울 때부터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혁명적 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에 대해서 과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의 모든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생산력 수준이 생산에 의한 분배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않으면 남아있던 제국주의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과도기론은 사회주의의 완

전한 승리의 기간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과도기의 기간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과도기에 대해서는 일국적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설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의 멸망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과도기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 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의 건설과정에서 미국의 위협과 남한과의 대립에 의해서 정치적 동요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1992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다시 바꾸었다. 인민민주주의란 공산당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의해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공산당 독재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주의가 급격하게 몰락한 시기인 1992년에 인민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주민들을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검색어 ▼

우리식 사회주의, 노동당 규약, 노동당 대회



항일 빨찌산 정신
핵개발(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핵실험
혁명가극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현지지도
협동농장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호위사령부
화폐개혁
황색바람
후방(공급)사업
희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항일 빨찌산 정신



항일 빨찌산은 1930년대 중국 북동부 또는 소련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펼쳤던 유격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 우상화를 진행하면서 항일 빨찌산을 항일유격대로 부르고, 김일성이 창조한 항일유격대식 혁명정신, 사업방법, 학습방법, 생활기풍 등을 강조해 왔다.

배경 빨찌산(partisan)은 일정한 조직체계에 의하지 않는 비정규군을 일컫는 말로 게릴라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빨찌산은 적의 배후에서 통신소, 병기, 탄약 등 물자를 저장하는 곳, 교통의 요지 등을 주로 공격하며, 주로 기습작전을 수행하고 인민대중 속에 숨어 반격을 피한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수적이며, 활동 지역의 지리, 지형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주요 내용 1930년대 중국이나 소련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펼쳤던 유격대들이 빨찌산 방식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북한은 이러한 항일 빨찌산을 항일유격대라 부르며, 1930년대 초 김일성이 결성한 항일유격대가 항일투쟁 과정에서 모범이 되는 활동방식을 창출했다고 하면서 이를 항일유격대식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따르면, ‘항일유격대식’이라는 말은 김일성이 창조한 노동당의 전통적인 활동방식의 총체를 이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항일유격대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인민적인 군중사업방법,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학습방법 등을 말한다.

항일유격대식은 김정일이 1974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면서 항일유격대식 정신과 방식을 더욱 강조하며 주민들의 결속과 위기극복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이후 김일성 우상화를 진행하면서 항일 빨찌산을 항일유격대로 대체했던 북한이 2019년 12월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 등정 이후 백두산 혁명정신과 함께 항일 빨찌산 정신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는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빨찌산 정신(항일유격대 정신→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수령(김정은)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검색어 ▼

타도제국주의동맹(=·C 동맹), 백두산 혁명전통, 보천보전투

핵개발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법령)),**

핵실험



1960년대 영변을 중심으로 핵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한 북한은 1980년대 5MW 원자로를 가동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2000년대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에서 체결한 「9.19 공동성명」 등을 일정하게 이행하며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소강상태를 유지했지만 2008년 12월 사실상의 마지막 6자회담이 개최된 이후 핵무기 개발에 다시 진력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13~2018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한 직후 사실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노선을 추진했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시험 발사 직후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하며 폭발력을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와 함께 '핵무기 병기화 실현', 다음날부터 핵실험 등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했으며, 2018년 5월 전격 폭발 방식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향후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임을 선언하는 등 여전히 핵무기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배경 북한은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며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등을 통해 '세계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핵보유를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80년대 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관련 지원을 받던 소련으로부터 경수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소련은 1985년 북한에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경수로 4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NPT 상 핵무기 비보유국의 의무인 18개월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NPT 가입 6년여만인 1992년 1월 30일에서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을 상대로 첫 사찰을 실시하였고, 사찰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핵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IAEA는 1993년 2월 9일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였다. IAEA의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NPT 탈퇴를 비난하며 탈퇴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

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벌여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발효 하루 전인 그해 6월 10일 NPT 탈퇴를 유보한다는 북한의 발표를 끌어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은 1994년 10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북·미 간 이른바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로 제1차 북핵 위기는 일단락됐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의 재확인 △북한의 핵활동 동결 △이에 따른 미국의 컨소시엄을 통한 대북 경수로 제공 지원 및 핵활동 동결에 따른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중유 지원(난방 및 전력 생산용)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비협조와 이에 따른 미국의 경수로 공사 지연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으며,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부인하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 'NPT정신'을 위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2003년 북·중·미 3자회담을 거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은 협상의 속도를 높여 2005년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으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상당한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미국이 제재하자 6자회담은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9.19 공동성명」의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6자회담은 다시 탄력을 받았으며, 2007년 들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합의」 및 「10.3합의」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하고, 일부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불능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6자회담이 사실상 중단되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핵무기의 다종화·소형화·경량화'를 강조하였으며, 동년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 국가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뒤 동결·불능화되었던 핵시설들의 재가동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핵보유국 지위 천명 △핵보유 정당화(미국의 적대정책에 대처한

방위수단) △세계 비핵화 실현 때까지 핵보유 지속 △핵능력의 질량적 강화 방안 수립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핵을 사용 △비핵국가들에 대한 선제 핵 불사용 및 불위협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 및 핵실험 관련 안정성 보장 규정 준수 △비확산 관련 보관체계 수립 △비확산 관련 국제 노력에 협조 △핵군축 위한 국제 노력 지지 등이다.

북한은 영변 5MWe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ELWR: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실시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수소탄 시험’, 동년 9월 9일 감행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해 ‘핵탄두 위력 판정 시험’, 2017년 9월 3일 단행한 제6차 핵실험에 대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현황

구분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 10:36	2009.5.25 09:54	2013.2.12 11:57	2016.1.6 10:30	2016.9.9 09:30	2017.9.3 12:29
지진파 규모 (mb)	3.9	4.5	4.9	4.8	5.0	5.7
추정 위력 (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출처: 국방부, 『2020 국방백서』(2020), p. 295.

특히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 약 3개월 뒤에 진행한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은 1,000kg의 탄두를 10,0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른바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선언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논의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가장 먼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이 명시돼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했고, 동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사항을 약속했다. 2018년 8월 중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의 우선적인 영구 폐기’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동년 6월 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로 만나 약속한 북·미

간 실무협회가 3개월 여 뒤에 스웨덴에서 개최됐지만 북한이 일반적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20년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등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핵을 통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향후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평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가시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단행되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08년 6월 말 냉각탑이 폭발된 영변 5MWe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향이 간헐적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핵물질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핵개발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검색어 ▼

미사일 개발, 영변 5MWe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싱가포르 수뇌회담 공동성명(6.12 북미공동성명)

혁명가극



혁명가극은 북한식 오페라인 가극을 북한식으로 개량한 형식의 공연예술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종합한 형식에 항일혁명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주제로 구성한다.

배경 북한의 주체예술은 1970년대에 들면서,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고, 주체문예이론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을 개발한다. 이 시기에 문학예술의 핵심 주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작품들을 영화, 가극, 소설과 연극 등에 옮기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 파는 처녀> 등의 작품이 혁명예술의 본보기 작품으로 영화와 가극 예술로 재탄생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미화한 문예작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도 혁명가극 창작 전반을 지휘했다. 특히 북한의 혁명가극 중에서 가장 작품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 5대 혁명가극은 김정일이 직접 현지에서 가극 창작 전반을 감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의 예

술적 취향과 정치적 야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가극 <피바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가극은 1960년대 중후반 이후 가극 <피바다>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혁명가극 <피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 작품의 양식이 ‘피바다식 가극’으로 확립되었다. 피바다식 가극은 혁명가극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며 다른 가극들로 확산된다. 이른바 혁명적 내용을 가지면서 형식을 혁명적으로 개혁한 것을 일컬어 불리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여러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주요 내용 대표적인 작품으로 5대 혁명가극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바다>(피바다가극단, 1971)는 김일성이 1936년 8월 만주에서 만들었다는 <혈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명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꽃파는 처녀>(피바다가극단, 1972)는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꽃분이 일가가 겪는 고난을 반일, 반봉건의 계급투쟁으로 연결시키고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을 미화했다. <당의 참된 딸>(조선인민군협주단, 1971)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 간호원인 강연옥이 목숨을 걸고 중환자들을 후송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희생되기 직전에 당증과 당비를 바친다는 내용이다. <금강산의 노래>(평양예술단, 1973)는 일제 때 가난 때문에 생이별했던 황석민 일가가 북한 체제하에서 다시 만난다는 줄거리이다. <밀림아 이야기하라>(평양예술단, 1972)는 길으로는 일제의 앞잡이인 마을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의 항일 빨찌산과 연계해 활동하는 주인공 최병훈의 항일투쟁을 줄거리로 한다.

혁명가극은 음악, 무용, 연극 등이 종합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악극이나 서양의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사상계몽과 선전, 선동을 위해 예술성보다는 규모와 무대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 작품에 200명 이상의 배우들이 등장해서 군중음악과 군중무용을 통해 주체사상에 의식화된 주민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서사시 형식으로 전개한다.

평가 북한의 혁명가극 작품들은 북한이 내세우는 혁명사상을 고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도자의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수단의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검색어 ▼

주체문예이론, 수령형상문학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



북한에는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중앙급 국립묘지로 대성산 혁명열사릉(革命烈士陵)과 신미리 애국열사릉(愛國烈士陵)이 있다. 혁명열사릉은 주로 해방 이전 이른바 혁명원로들인 항일 빨찌산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묘지이고, 애국열사릉은 해방 이후 북한의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묘지이다.

주요 내용

1. 혁명열사릉

혁명열사릉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항일열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1973년 8월에 착공하여 1975년 10월 13일에 준공되었으며, 1985년 9월 현재의 규모로 확장됐다. 혁명열사릉은 중심축을 따라 능 대문까지 입구구역, 기념문주까지 중심계단구역, 조각군상구역, 교양마당구역, 반신상구역 등의 구획으로 설치되었다. 입구는 등근 기둥위에 합각지붕으로 만들어졌다.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오르면 정면에 대형 ‘공화국영웅메달’이 있고, 왼쪽에는 김일성의 친필비가, 오른쪽에는 헌시비가 있다. 묘비 앞에는 반신상과 분묘 및 비석이, 각 개인 앞에 하나씩 놓여있고 이 반신상과 비석에는 문헌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약력이 새

겨져 있다. 혁명열사릉에는 현재 약 100여 명의 항일 빨찌산 출신들이 묻혀 있는데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최광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일성의 가족인 김정숙, 김철주, 김형권 등의 묘역도 이곳에 조성되어 있다.

2. 애국열사릉

애국열사릉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9월 17일에 건립되었다. 신미동의 지명이 종전 신미리여서 일명 신미리 애국열사릉으로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당 및 국가, 군대의 간부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 등 여러 부문의 공로자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묘비구역 안에는 추모비가 있는데,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열사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묘비구역 안에는 개인별로 묘비를 세웠으며 묘비에는 돌사진을 새겨 붙였다.

한편 북한은 2008년 말부터 열사릉을 평양 중심에서 벗어나 각 도 소재지(도 행정중심지)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12월 평안남도 평성열사릉 준공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함경남도 함흥, 12월 황해남도 해주와 황해북도 사리원, 2010년 6월 양강도 혜산, 7월 강원도 원산, 8월 자강도 강계와 함경북도 청진, 2011년 4월 평안북도 신의주에 잇달아 완공했다. 또 2010년 7월 평양시 낙랑구역 장교리에 평양열사릉을 별도로 조성해 현재 10여 곳에 열사릉이 조성돼 있는 것

현지도



북한에서 현지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지도자가 군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학교 등의 현장에 직접 내려가 행하는 특유의 정책지도방법이다.

배경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따르면, 현지도를 “현지에 직접 내려가서 하는 지도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 지도방법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현지도라는 정책지도방식을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북한은 현지도라는 표현을 최고지도자의 활동에만 사용한다.

북한 지도자들이 현지도를 행하는 목적은 생산현장의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격려하고, 현지 실정 파악 후 현지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근로인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자상하고 세심한 ‘인민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고려된 것이다. 김일성의 현지도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현지도’라는 용어

으로 알려졌다.

평가 북한이 각 도 행정중심지에 애국열사릉을 준공한 것은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각지에 애국열사릉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충실성 교양사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 주요 명절이나 기념을 맞이하여 애국열사릉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북한 훈장, 기념일, 보천보전투, 만경대혁명학원

는 당초 김일성의 공개적인 정책지도 활동에 국한된 표현이었으나,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활동에도 쓰이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 김정일의 현지도는 그가 후계자 시절 ‘실무지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는데, 김일성의 현지도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생전에 그의 리더십을 ‘유일영도체계’로, 김정일의 리더십을 ‘유일지도체계’로 구분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실무지도를 시작한 것은 그가 후계자로 공인된(1980.10, 제6차 당대회) 이후인 1981년경부터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1984년 8월 3일 평양경공업제품전시장을 둘러보고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제창한 것은 김정일의 대표적 실무지도로 꼽히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에 대해 실무지도라는 말 대신 현지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1988년 4월부터이다. 1980년대 말 들어 부쩍 강화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일에 대해 현지도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에 의한 북한 통치가 사실상 시작된 1990년대 들어서이다. 1990년 1월 7일 노동신문에서 김정일에 대해서도 현지도라는 표현을 쓴 이후부터 모든 선전매체에서 김일성과 똑같이 현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김정은의 경우에는 2011년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2012년 초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극하면서 곧바로 현지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평가 북한은 현지도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정책지도 활동에 한정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상화를 심화시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용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이 행한 현지도 사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한다는 이유로 북한 전역에 세운 ‘현지도 사적비’가 이의 구체적 사례이다. 현지도가 끝난 후에는 현지에서 내린 지시나 방침에 대한 관철을 다짐하는 ‘충성 결의 모임’을 진행하며, ‘현지도 사적비’와 ‘현지도 말씀관’ 등을 건립해 혁명 사적지로 조성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수령론, 주석, 노동당 총비서, 유일영도체계, (조선)노동당

협동농장



협동농장은 토지를 비롯한 그 밖의 생산수단들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를 뜻한다.

배경(연혁)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 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 편입시키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인 농업협동조합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이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협동농장은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말단 행정단위인 리(里) 단위로 통합하여 그 규모를 크게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생산체계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 농·목장으로 이원화되었다.

북한은 1964년에 채택한 ‘농촌테제’와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는 등 농업 단위의 국유화 방침을 기본입장으로 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협동농장의 운영방식은 점차 생산 분배단위

의 축소, 농업생산의 자율적 권한 강화 등 개인영농방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주요 내용 협동농장의 규모는 보통 농가호수 80호 내지 300호까지, 경지면적 130정보 내지 500정보로 조직되어 있다. 협동농장은 내각의 농업성,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체계로 이어진 농업지도 관리체계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협동농장의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모든 농업경영활동을 계획화·조직화하며, 협동농장 내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원 총회(또는 대표자회)에서 1년을 임기로 하는 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은 리(里) 인민위원장이 겸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또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지원을 받는다. 협동농장들은 국가로부터 농기계와 생산설비, 영농자재를 공급받고 있으며 농장 내 모든 기본건설과 농촌문화주택건설, 무상치료, 무상교육, 정·휴양을 비롯한 국가적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등급별 작업정량에 의하여 수행된 작업 실적에 대한 노력일로 평가·계산 된다. 그리고 농장원에 대한 노동지분은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즉 각 농장원은 농장가동률과 작업능률에 따라 노력일이 확정되고, 이 노력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개최되는 협동농장 총회에

서 현물 및 현금으로 분배받는다. 농장에서의 결산분배는 보통 수확 후인 11~12월에 진행한다.

이때 각 협동농장에서는 생산·노력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결산분배에서 농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총 수확고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한다.

평가 사회주의 농촌의 협동화 방식은 집단경영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이론 아래 대단위로 조직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영 기술상의 필연성이 없는 대규모 농장은 농민의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한 역시 협동농장 운영의 1차적 목적은 적절한 행정구역 단위 편제를 통해 농민들을 관리하고, 사상·문화적 측면에서 농업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 주체농법 등 협동농장 운영에서 중앙-도-군으로 연결되는 관료적 통제는 경영효율성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농업도 공업 부문과 같이 기업적 운영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토지 비옥도, 농장 위치, 작물 종류 등 농업적 특성을 무시하고 공업생산방식과 같은 기계적 노동을 계획함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정체와 저하를 초래했다.

관련검색어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적 소유, 주체농법, 집단주의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1958년까지 진행된 토지국유화, 농업협동화 조치 이후 국가가 농업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을 지도, 감독,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 단위의 농촌경리 관리기구이다.

배경 토지 국유화와 농업협동화를 추진한 북한은 1961년 12월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하여 (내각 결정 제157호)’를 발표하며 농업지도, 관리체계의 중앙 집중화 조치를 단행했다(청산리 방법).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국가 행정 지도 기관은 상급 기관인 농업성과 하부 인민위원회(도, 군, 리 급)가 담당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로 인하여 농업에 관한 지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독립적 기관을 군 단위에 설치했다. 이렇게 등장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 당위원회의 지도, 감시를 직접 받게 되며 그에 기초한 농업지도 활동을 수행했다. 즉 국가에 의한 농업 분야의 당적 지도가 강화된 것이다.

주요 내용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과 협동경리의 실현(국가가 제공한 물적 지원에 대한 이용)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지도기관이다(광명백과사전, 2010). 북한에 의하면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① 김일성이 강조한 청산리 방법에 입각하여 협동농장 현지에서 농업기술자와 농촌경리와 관련된 국가기업소를 포괄적으로 지도하고, ② 농촌경리에 대한 물질적 방조(지원)를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는 기사장의 책임 아래 생산기술 지도체계, 기계기술 지도체계, 관개기술 지도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또한 농촌경리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기업적 지도시스템(당적 지도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대안의 사업체계)을 농업에 적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평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 북한에서는 1964년 2월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지침으로 농촌기술혁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추진과 농민의 사상교육 강화를 포함하는 경영, 지도관리사업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당시 농촌테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국가적 조정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농업종사자들의 생활개선 등과 군 관련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도입은 당적 지도의 신속한 추진

과 농업 분야에서의 적극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1960년대 농업협동화 이후 북한의 단기적 농업 분야에서의 증산을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농기구, 기계, 비료의 부족과 농민생활의 더딘 개선, 인센티브제도의 부족 등은 농촌지도관리체계의 변화로 완전히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 분야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자연재해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었다.

관련검색어 ▼

협동농장, 청산리정신·방법, 대흥단정신, 분조관리제,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경호업무와 반체제 쿠데타 및 폭동 등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이다.

배경 1945년 9월 소련에서 귀국한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빨찌산 출신 김좌혁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경호담당 기관인 호위국을 창설하였으나, 김일성에 대한 암살음모가 수차례나 발각되는 등 테러가 빈번해지자 호위국을 확대하고 경호기능을 강화하였다. 1958년 김일성은 연안파와 일부 소련파 등을 제거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당 중앙을 철저히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호위국을 확대하고 항일 빨찌산 출신인 오백룡을 호위국장에 임명하였다. 1983년 4월에는 빨찌산 출신인 전문섭을 호위국장에 임명하면서 호위총국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인원도 5만여 명으로 증강하였다.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김일성에게 호위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호위총국 병력은 10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기갑, 포병, 공병, 기계화 부대 및 해·공군 병력까지 포함시키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켰다. 이후 호위총국을 호위사령부로 격상시켰다.

주요 내용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데타 진압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물론 그 일가에 대한 안전 확보, 숙소경계와 관리, 전용농장·목장·과수원 운용, 반출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최고지도자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도 하고 있다. 특히 호위사령부는 정권 위해 요소들을 사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권 보위조직인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등 핵심기관에 군부 엘리트들을 배치해 조직의 동태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최고지도자의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내용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국가보위성(국가안전보위부), 보위국(보위사령부)

화폐개혁



북한은 해방 이후 1947년, 1959년, 1979년, 1992년, 2009년에 걸쳐 5차례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 1차 화폐개혁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30호에 의해 1947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화폐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화폐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보조화폐를 제외한 100원, 10원, 5원, 1원 등 4종의 신권을 발행하고 1: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한도는 계층·계급별로 차별을 두었는데, 한도초과금액은 예금으로 동결했다. 1949년 5월에는 50전, 20전, 15전 등 보조화폐를 발행하여, 1949년 8월 15일부터 기존 화폐의 유통을 전면 중지시켰다.

2차 화폐개혁은 내각결정 11호에 의해 1959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누증을 방지하고,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로운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0전 등 6종의

지폐와 10전, 5전, 1전 등 3종의 주화를 발행하고, 100: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한도는 없었으며, 기관·기업소들은 보유중인 구 화폐를 반드시 은행에 전액 입금하도록 했다.

3차 화폐개혁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해 1979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개인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화폐를 회수하여 급격한 물가 인상을 방지하고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지폐와 유통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50전짜리 주화를 새로 발행하여 1: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교환 한도는 없었으며,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는 4월 8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지불받았다. 10전, 5전, 1전 등 소액 주화는 교환하지 않고 이미 발행한 것을 그대로 유통시켰다. 액면가가 가장 높은 100원 권에는 김일성의 초상이 들어갔으며, 김일성 생가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김일성의 우상화에 활용했다.

4차 화폐개혁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해 1992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를 통한 재정 확충이었다. 북한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지폐를 발행하고, 1:1의 비율로 교환해주었다. 1가구당 399원이라는 한도를 두고 한도초과금액은 예금하도록 하였으며, 30,000원 이상은 예금으로도 받지 않았다.

5차 화폐개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그 집행

을 위한 내각결정에 의해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확충, 시장 활동 억제를 통해 계획경제를 복원하여 북한 당국의 사회적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등 9종의 지폐와 1원, 50전, 10전, 5전, 1전 등 5종의 주화를 발행했다. 교환비율은 현금의 경우 100:1, 은행에 저금한 몫의 경우 10:1이었다. 교환 한도는 최초 1가구당 1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북한 주민의 극심한 반발 등 부작용으로 인해 1인당 5만 원, 1가구당 20만 원으로 한도를 완화했다. 화폐교환 후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2002년 7월 1일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장·기업소에서 받는 임금은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보장했다.

평가 화폐개혁 조치는 7.1 조치 이후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자금을 끌어내는 한편, 시장과 시장세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폐개혁은 시행되자마자 북한 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북한 당국이 추진해오던 경제정책들에 많은 차질과 타격을 주게 되었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 원화가치가 추락하고 북한 경제의 위안화, 달러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북한 주민들은 화폐개혁 이후 장마당, 종합시장에서 북한 원화보다는 위안화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 원화가치 하락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북한 화폐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다.

화폐개혁으로 북한의 시장 물가는 마치 주가변동 곡선처럼 심하게 변동하고 급속한 물가상승이 야기되었다. 이후 화폐개혁 1년이 되는 2010년 11월말에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었고, 그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시장환율이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 현황

1947년 12월	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	· 일제시대 발행·통용되던 화폐 중 보조 화폐를 제외한 전화폐를 1:1 비율로 교환 · 1949.5 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 1949.8.15 이후 조선중앙은행 발행 화폐만 통용
1959년 2월	내각결정 11호	·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목적 · 구 화폐 100원: 신 화폐 1원 비율로 교환
1979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금액의 제한 없이 1:1 비율로 교환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화폐를 은행에 입금시킨 후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지불받음.
1992년 7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목적 · 신·구권 교환 비율은 1:1
2009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각결정	· 시장경제 통제 강화, 인플레이 해소, 재정능력 회복 목적 · 교환비율 100:1, 교환한도 최초 1가구당 10만원 · 화폐교환 후 가격수준은 2002년 7.1 조치 수준

관련검색어 ▼

종합시장,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국정가격/시장가격, 국정환율/시장환율

황색바람



황색바람이란 북한에서 저속하고 퇴폐적인 풍조를 일컫는 말로 보통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란 표현으로 등장한다.

배경 북한은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유입된 자본주의 문화생활양식을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라 규정하며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경계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복장 불량, 미신을 믿는 행위, 불륜 등 집단적 사회주의 규범의식과 가치관에 반하는 일탈행위 ② 불법 경작, 뇌물수수 등 경제난으로 인한 위법행위 ③ 밀수, 도박, 마약 등 범죄행위 ④ 남한 영상물 시청 등 반체제·반사회주의적 행위 등이다.

주요 내용 북한 언론매체들은 제국주의 사상문화, 자본주의 문화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때 이 용어를 자주 쓴다. 북한 언론은 황색바람이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저해”하며, “퇴폐적인 행위를 물들인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황색바람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것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이 북한체제를 위협하고, 사회균열을 야기하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것은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황색바람”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황색바람을 단속하고 차단하기 위해 '비사회주의의 그루뵀'을 조직해 주기적인 검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각종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관련검색어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비사회주의의 그루뵀, 노동당 규율조사부·법무부

후방(공급)사업



후방(공급)사업이란 생산품을 비롯한 각종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군인 등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배급망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당국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후방공급사업’에 관해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지어(만들어) 주고 물질문화 생활을 높이기 위한 국가 및 경제 기관들, 사회단체들과 기업소들에서의 봉사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후방공급사업은 노동행정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부식물 공급사업, 연료 공급과 노동보호물자의 공급을 비롯해 합숙과 식당, 이발소,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 관리, 탁아소, 유치원 관리 등이 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후방공급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규정하며,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과 노동생활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해 깊이 체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북한은 후방공급사업이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

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국가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일꾼들이 항상 큰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후방공급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국가 차원에서 후방공급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각 기관과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군부대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및 군인 등이 본연의 업무와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해 식량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각 단위는 후방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 부족한 식량을 자급하는 현상이 증가했다. 김정은은 경제현장 현지지도 및 군부대 시찰 등과 같은 공개활동 시에 각 단위의 후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후방사업에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

관련검색어 ▼

군수동원총국(군수동원지도국)/군사동원국, 국방성, 제2경제위원회

희천속도/평양속도/만리마속도



김정은 정권도 대외여건 악화와 내부자원 고갈 상황 속에서 가시적인 단기 성과 달성의 방안으로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사용했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희천속도', '평양속도', '만리마속도' 등이 대표적이다.

배경 북한은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계기별로 특색 있는 속도전 구호들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속도전 구호는 건설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용어로 사용한다. 1950년대 후반에 실시한 '천리마운동'이 대표적이다. 이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 빠르게 이룩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균중적 노력 동원의 속도전은 경제 성과 달성 목적 외에, 사회주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체제결속을 강화하자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정치적 필요에 의한 속도창조 구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 '만리마속도' 등이 있다.

주요 내용 '희천속도'는 2009년 9월 17일, 김정일이 2001년 3월 착공된 희천발전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며 언급한 것을 '희천속도'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희천속도'를 새로운 천리마속도라고 설명하며 인민대중의 사상의 힘, 신념과 의지의 힘이 최대로 분출될 때 대혁신, 대비약의 사회주의건설속도가 창조된다고 독려하며 100일 전투, 150일 전투를 함께 내세웠다. 희천발전소(30만 kW) 건설은 2012년 4월 완공되었으며, 북한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이 3년 만에 끝났다고 선전하고 있다.

'평양속도'는 전후복구 당시 평양에서 '14분에 살림집 1대를 조립할 정도'의 속도와 '7천 세대 자재로 2만 세대를 건설'했다고 강조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평양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새로운 평양속도'로 재사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제7차 당대회 이후 '만리마속도'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 만리마는 천리마보다 빠른 말이라는 뜻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또 만리마속도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공업발전 등을 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도 사용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독려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을 강조하며 만리마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평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로 이어져 오면서도 기존 용어를 재사용 혹은 변형하며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치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속도전을 강요하고 균중적 노

력동원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장과 전력, 기계 등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노력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책임 집필

김갑식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집필

전영선

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북한연구학회 2023년 회장
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거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

김일한

현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전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이무철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 북한연구학회 연구위원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장철운

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연합뉴스 기자

북한지식사전

비매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1~6 / 팩스 02)901-7088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발간물 등록번호

11-1250557-000006-10



북한
지사
식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